연구보고서 2005-12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김 승 권
전광희 김민자 이연주
김유경 서문희 조애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급속한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및 도시화, 전통적 가치관의 쇠퇴와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과 함께 교육수준 향상에 의한 여성의 자아욕구 및 경제활동참가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가족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변화는 인구전환기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그 구성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더군다나 2003년부터는 15~49세의 가임여성층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향후 출산율이 다소 상승한다 하더라도 인구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출생아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더욱 강하게 대두될 것이며, 이는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정책욕구의 효율적 충족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가치관변화와 가족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가진다. 특히, 후기산업사회에 진입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과 가족의 변화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속발전이 가능할 것인가의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수행은 당 원 김승권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원내·외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전체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연구수행 및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기획 및 총괄 (김승권)
제 1장 서 론 (김승권)
제 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과 선행연구 (김승권)
제 3장 한국사회 혼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김승권)
제 4장 한국인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과 기혼여성의 출산행위 요인분석 (김민자)
제 5장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자율성, 그리고 이혼태도 (이연주)
제 6장 자녀가치관 및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김승권)
제 7장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결정요인 (김유경)
제 8장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유형별 관계 및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김유경)
제 9장 자녀규모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전광희)
제10장 기혼여성의 가족주기와 취업결정요인 (조애저)
제11장 자녀양육 실태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서문희)
제1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김승권)
제13장 결 론 (김승권)

본 연구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가족에 기반을 둔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양옥경 교수와 강남대학교 이성용 교수, 당원의 김미숙 부연구위원과 박세경 책임연구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 17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 론 ····· 9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95

제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과 선행연구 ····· 98
제1절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 ····· 98
제2절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선행연구 ····· 108
제3절 이론과 선행연구의 시사점 ····· 117

〔제2부 한국사회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요인〕

제3장 한국사회 혼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123
제1절 문제제기 ····· 123
제2절 결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124
제3절 이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130
제4절 재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136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 141

제4장 한국인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과 기혼여성의 출산행위 요인분석 ··· 146
제1절 문제제기 ····· 146
제2절 결혼·출산 수준 및 가족형태의 변화 ····· 147
제3절 미혼남녀의 결혼·가족·취업 가치관 ····· 151
제4절 기혼여성의 결혼·출산 태도 ····· 157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 164

제5장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자율성, 그리고 이혼태도 …… 169
제1절 문제제기 …… 169
제2절 이혼의 원인 …… 171
제3절 이혼 가치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가설 …… 173
제4절 자료와 분석방법 …… 176
제5절 이혼태도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의 다변인 분석 …… 190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 192

제6장 자녀가치관 및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197
제1절 문제제기 …… 197
제2절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198
제3절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206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211

제7장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결정요인 …… 215
제1절 남아선호 관련 영향 및 선행연구 …… 216
제2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와 논의 …… 221
제3절 남아선호가치관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22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246

[제3부 한국가족의 변화양상과 요인]

제8장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유형별 가족관계 및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 253
제1절 이론적 논의 …… 254
제2절 가족구조의 변화와 논의 …… 260
제3절 가족유형별 가족관계 및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267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310

제9장 자녀규모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 317
제1절 문제제기 ····· 317
제2절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관점 ····· 319
제3절 자녀규모와 출산행태의 변화 ····· 326
제4절 코호트 출산율 변천의 개관 ····· 341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 356

제10장 기혼여성의 가족주기와 취업결정요인 ····· 364
제1절 문제제기 ····· 364
제2절 이론적 논의 ····· 365
제3절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변화 ····· 370
제4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 ····· 373
제5절 기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 375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 395

제11장 자녀양육 실태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 399
제1절 이론적 논의 ····· 399
제2절 자녀양육의 변화 ····· 408
제3절 미취학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 412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437

[제4부 결론부]

제1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 443
제1절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전망 ····· 443
제2절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 448

제13장 결 론 ····· 457

참고문헌 ····· 458

표 목 차

〈표 2- 1〉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 가치관 ····· 109
〈표 3- 1〉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24
〈표 3- 2〉 기혼여성의 연령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25
〈표 3- 3〉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27
〈표 3- 4〉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28
〈표 3- 5〉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28
〈표 3- 6〉 기혼부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129
〈표 3- 7〉 기혼여성의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1
〈표 3- 8〉 기혼여성의 연령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1
〈표 3- 9〉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2
〈표 3-10〉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4
〈표 3-11〉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4
〈표 3-12〉 기혼부부의 이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135
〈표 3-13〉 기혼여성의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6
〈표 3-14〉 기혼여성의 연령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7
〈표 3-15〉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8
〈표 3-16〉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39
〈표 3-17〉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 140
〈표 3-18〉 기혼부부의 재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141
〈표 3-19〉 기혼부부의 혼인가치관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B 값) ·· 142
〈표 4- 1〉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 151
〈표 4- 2〉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152
〈표 4- 3〉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 153

〈표 4- 4〉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154
〈표 4- 5〉 미혼남녀의 기혼여성 취업희망 여부 …… 155
〈표 4- 6〉 미혼남녀의 기혼여성 취업희망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156
〈표 4- 7〉 15~5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 158
〈표 4- 8〉 15~5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91~2003년) …… 158
〈표 4- 9〉 20~39세 유배우부인의 결혼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159
〈표 4-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추가자녀 계획 …… 161
〈표 4-11〉 20~39세 유배우부인의 자녀를 더 낳겠다는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162
〈표 4-12〉 20~39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추가자녀에 대한 태도: 로짓모델에 의한 추정치 …… 163
〈표 5- 1〉 순차 로짓 다변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 177
〈표 5- 2〉 18~59세 기혼여성 표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 181
〈표 5- 3〉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초혼 유배우 18~59세 여성(Ordered Logit) …… 185
〈표 5- 4〉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8~59세 기혼여성 (Ordered Logit) …… 187
〈표 5- 5〉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초혼중단 18~59세 여성 (Ordered Logit) …… 189
〈표 5- 6〉 18~39세 초혼 유배우부인의 자녀를 더 낳겠다는 태도의 로짓모델 … 191
〈표 6-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3년) …… 199
〈표 6-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 201
〈표 6-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 202
〈표 6- 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취업여부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 203
〈표 6-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204
〈표 6- 6〉 기혼부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205
〈표 6- 7〉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 207
〈표 6- 8〉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 210

〈표 6- 9〉 아동의 연령단계별 양육비용(2005년 기준) ····· 212
〈표 6-10〉 아동의 연령단계별 양육비용 ····· 212
〈표 7-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1991~2003년) · 222
〈표 7- 2〉 연도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1991~2003년) ····· 223
〈표 7-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1991~2003년) ····· 224
〈표 7- 4〉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수 및 남아수별 추가자녀에 대한 태도 ··· 225
〈표 7- 5〉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수 및 남아수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 227
〈표 7- 6〉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수 및 남아수별 피임행태 ····· 228
〈표 7- 7〉 분석대상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 230
〈표 7- 8〉 분석에 사용된 변수 ····· 233
〈표 7- 9〉 부부특성별 남아선호도 ····· 235
〈표 7-10〉 가족 특성별 남아선호도 ····· 237
〈표 7-11〉 경제적 특성별 남아선호도 ····· 238
〈표 7-12〉 결혼특성별 남아선호도 ····· 239
〈표 7-13〉 출산특성별 남아선호도 ····· 240
〈표 7-14〉 남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245
〈표 8- 1〉 가구수 및 가구원 변화(1960~2000년) ····· 261
〈표 8- 2〉 가족의 세대구성 및 가족유형 변화(1960~2000년) ····· 262
〈표 8- 3〉 가족형태의 변화(1970~2000년) ····· 263
〈표 8- 4〉 핵가족의 구성(2000년) ····· 263
〈표 8- 5〉 1인 가구의 변화(1970~2000년) ····· 264
〈표 8- 6〉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세대구성 변화(1985~2000년) ····· 265
〈표 8- 7〉 한부모 가족의 변화(1970~2000년) ····· 265
〈표 8- 8〉 소년소녀가정의 현황(1990~2004년) ····· 266
〈표 8- 9〉 가족관계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 269
〈표 8-10〉 가족 삶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 271
〈표 8-11〉 가족유형별 가족관계 만족도 ····· 274
〈표 8-12〉 부부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 278

〈표 8-13〉 가족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 280
〈표 8-14〉 경제적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 281
〈표 8-15〉 결혼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 283
〈표 8-16〉 출산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 284
〈표 8-17〉 가족부양 형태별 가족관계의 만족도 ····· 285
〈표 8-18〉 가족유형별 가족 삶의 만족도 ····· 287
〈표 8-19〉 부부의 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 290
〈표 8-20〉 가족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 292
〈표 8-21〉 경제적 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 294
〈표 8-22〉 결혼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 295
〈표 8-23〉 출산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 296
〈표 8-24〉 가족부양 형태별 가족 삶의 만족도 ····· 298
〈표 8-25〉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02
〈표 8-26〉 가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08
〈표 9- 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 327
〈표 9- 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자녀수의 분포 ····· 329
〈표 9- 3〉 초혼 유배우여성(15~49세)의 혼인연령 및 첫째 자녀와 막내 자녀의 출산연령 ····· 332
〈표 9- 4〉 15~44세 유배우여성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의 변화(1976~2003년) ·· 334
〈표 9- 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자녀수의 분포 ····· 338
〈표 9- 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별 연령별 자녀수의 분포 ····· 340
〈표 9- 7〉 코호트별 모든 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치: 1950~1989년생 ·· 347
〈표 9- 8〉 코호트별 첫째 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치: 1950~1989년생 ·· 348
〈표 9- 9〉 코호트별 둘째 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치: 1950~1989년생 ·· 349
〈표 9-10〉 코호트별 셋째 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치: 1950~1989년생 ··· 350
〈표 9-11〉 코호트별 넷째 자녀 이상의 연령별 출산율 추정치: 1950~1989년생 ···· 351
〈표 10- 1〉 남녀 근로자의 자녀수별 노동시장 참여율 및 주당 노동시간 : 미국 ··· 369
〈표 10- 2〉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의 평균연령 ····· 371

〈표 10- 3〉 가족주기 각 단계별 기간 ····· 372
〈표 10- 4〉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374
〈표 10- 5〉 교육수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375
〈표 10- 6〉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 377
〈표 10- 7〉 기혼여성의 지역별 가족주기 단계별 분포 ····· 378
〈표 10- 8〉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별 특성 ····· 380
〈표 10- 9〉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 및 취업여부별 특성 ····· 382
〈표 10-10〉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여부 ····· 384
〈표 10-11〉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현 취업직종 및 종사상 지위 ····· 385
〈표 10-12〉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부인의 취업이유 ····· 386
〈표 10-13〉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부인의 향후 계속 취업의향 ····· 387
〈표 10-14〉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부인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가장 어려운 점 ··· 387
〈표 10-15〉 가족주기 단계별 현 비취업부인의 향후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 ····· 389
〈표 10-16〉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 남편의 현 취업직종 및 종사상 지위 ····· 390
〈표 10-17〉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 남편의 현 직장유형 ····· 391
〈표 10-18〉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392
〈표 11- 1〉 영유아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 ····· 410
〈표 11- 2〉 모(母)의 취업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 ····· 411
〈표 11- 3〉 현재 이용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 412
〈표 11- 4〉 15~49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0~5세 자녀수 백분율 분포 415
〈표 11- 5〉 분석대상 미취학 아동 연령 특성(2004. 5. 30 기준) ····· 415
〈표 11- 6〉 가구특성별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 417
〈표 11- 7〉 제 특성별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차이 ····· 419
〈표 11- 8〉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 421
〈표 11- 9〉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요약 ····· 423
〈표 11-10〉 가구특성별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 424
〈표 11-11〉 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 426

〈표 11-12〉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요약 ····· 428
〈표 11-13〉 연령별 보육·교육비용 지출여부 ····· 429
〈표 11-14〉 모(母)의 취업여부별 보육·교육비용 지출여부 ····· 430
〈표 11-15〉 가구소득별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출여부 ····· 430
〈표 11-16〉 가구소득별 영아 및 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출여부 ····· 431
〈표 11-17〉 미취학아동 1인당 소요되는 총 보육·교육비 ····· 432
〈표 11-18〉 모(母) 취업여부별 연령별 월 총 보육·교육비 ····· 433
〈표 11-19〉 소득수준별 아동구분별 월 총 보육·교육비 ····· 434
〈표 11-20〉 아동연령별 1인당 소요되는 보육·교육비 비율 ····· 435
〈표 11-21〉 모(母) 취업여부별 아동의 월 보육·교육비 비율 ····· 436
〈표 11-22〉 월 보육·교육비 비율 ····· 437

그 림 목 차

〔그림 2- 1〕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4대 체계 ····· 100
〔그림 4- 1〕 30～34세 여자와 35～39세 남자의 미혼율 추이 ····· 148
〔그림 4- 2〕 미혼율에 의한 평균 혼인연령(SMAM)의 변화 ····· 148
〔그림 4- 3〕 합계출산율 추이 ····· 149
〔그림 5- 1〕 조혼인율과 조이혼율(1990～2003년) ····· 170
〔그림 9- 1〕 코호트별 모든 자녀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 1950～1989년생 ···· 352
〔그림 9- 2〕 코호트별 첫째 자녀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 1950～1989년생 ···· 352
〔그림 9- 3〕 코호트별 둘째 자녀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 1950～1989년생 ···· 353
〔그림 9- 4〕 코호트별 셋째 자녀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 1950～1989년 ···· 353
〔그림 9- 5〕 코호트별 넷째 자녀 이상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1950～1989년생 ·· 354
〔그림 11-1〕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변화 추이: 2002～2005년 ····· 410

Abstract

The Age of Demographic Transition: Social Values, Changes in the Family,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n society over the last half a century saw rapid changes in its demographic structure. Of late, in particular, the country has moved into an age of low fertility. Korea's fertility rates have been in decline ever since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1960's, now bringing the population aging to the fore of social concerns.

The rapid decline in fertility rates is thought to have been occasioned by changes in socioeconomic environments involving increas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ocial values regarding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increases in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insufficient maternity protection mechanism.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ovide family policy options by analyzing changes that took place in social values and in family structure, cycle, and functions and also by making a forecast of changes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literature on the issue of changes in the family, social values, and life style, and analyzes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such changes, and discusses what can be done in response.

As such,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iority setting regarding family policies and provide basic materials for policymakers as they seek ways to strengthen and stabilize the family structure.

요 약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은 변화되어 결혼 및 자녀출산이 선택적이라는 견해가 증대되는 등 공동체적 의식이 약화되고 있음.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1년 30.6.%이었으나, 2000년 26.2%로, 2003년 25.7%로 감소하였으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1997년 73.7%에서 2000년 58.1%, 2003년 54.5%로 감소하였음.

— 핵가족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구조의 다양화, 가족기능의 약화, 그리고 가족생활양식의 다양화 등 가족변화가 지속되고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여성취업의 증대로 맞벌이 가정은 날로 증대되어 여성의 생활능력 향상과 연결되어 가족해체의 증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출산율 저하에 의한 자녀수의 감소, 가치관 변화 등으로 부모의 부양실태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부모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부부만의 독자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경향임.

— 결혼, 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가족주기도 변화하며, 이에 따라 가족

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양상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가족형성기의 시발점인 결혼과 함께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또한 자녀출산기인 가족확대기에도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 연구의 목적

— 결혼 및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 남아선호가치관, 부부관계가치관 등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양상을 전망함.

—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주기, 가족생활, 여성경제활동, 자녀양육 등 다양한 가족관련 변화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양상을 전망함.

— 이를 통하여 인구전환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과 선행연구

— 가치관 변화와 가족생활
  - 한국사회 혼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한국인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 변화와 기혼여성의 출산행위 요인분석
  -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자율성, 그리고 이혼태도
  - 자녀가치관 및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결정요인

— 한국가족의 다양한 생활양식 변화
  -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유형별 관계 및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 자녀규모의 결정요인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 기혼여성의 가족주기와 취업결정요인

- 자녀양육 실태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와의 대응방안

-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 연구방법

— 기존문헌 고찰

- 인구변동 및 가족변화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기존 전국 조사자료 재분석

-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 2003년 미혼남녀 실태조사 자료
- 2003년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조사
- 통계청 인구 및 가족관련 조사자료

— 통계분석 방법

- 빈도분석
- t-test, ANOVA에 의한 유의도 검증
- 다중회귀분석(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

— workshop 및 정책자문회의 개최

제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과 선행연구

제1절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

□ 생태이론

— 생태이론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임.

- 따라서 생태이론에서 강조되는 주요 개념은 개인과 가족의 생성과 사용, 자원관리와 적응, 인간발달, 그리고 환경유지 등이라 하겠음.

— 가족생태이론(Family Ecology Theory)은 생태이론과 체계이론의 주요 개념과 논리를 포괄하는 이론으로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를 가족체계 및 가족자원의 관리적 차원에서 포괄하고 있음.

- 즉, 개별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전체체계로서 접근하면서,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련의 생활전체를 포함하여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연구 및 가족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틀로서 평가받고 있음.

□ 교환이론

— 교환이론은 사회적 관계를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확대된 '시장'으로 봄.

- 즉, 가족원간의 교환은 부부간 및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광역 사회와의 관계로 확대된다는 것임.

□ 가족발달이론

— 가족발달이론(family development theory)은 가족의 생애과정(family life course)의 단계가 이동할 때 경험하게 되는 체계적이고 유형화된 변동과정'에 초점을 둠.

- 이는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사회제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개인적 시간(individual time)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족시간(family time)이 있음을 말함.

□ 가족체계이론

— 일반체계이론은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에 따른 체계모형에 기반을 두어 자연 및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모든 지식·이론을 통칭함.
- 일반체계이론은 ① 체계이론들은 모두 과학으로 통합될 수 있고, ② 체계는 구성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전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리고 ③ 인간체계는 독특하게 자기성찰적인 체계라는 세 가지 주된 가정에 입각해 있음.

□ 여권주의 이론

— 여권주의 이론은 구조기능 이론에 대한 반대 이론으로 맑시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본질적 모순인 계급적 대립과 갈등의 재생산 기제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차별적 성(gender)간의 갈등과 착취를 구조화하는 기제로 규정하였음.
- 여권주의 이론에서는 가족이 단일한 이해와 목적을 가진 하나의 행위체가 아니라 가족원간에도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場)으로 보았음.

□ 포스트모더니즘

—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의 가족변화가 전통적 이론으로 적절히 논의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가족에 대한 논의는 구조기능론적 가족에 대한 반대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비판이론과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가족을 개념화하고 있음.
- 확실성, 불연속성, 비결정성, 다원주의 등을 사상적 특징으로 하는 포스

트모던 가족론자들은 가족을 총체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무의미하며(조은, 1995), 현실의 무한한 다양성의 인정을 핵심적 주장으로 함.

제2절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선행연구

□ 가치관 변화의 가족변화의 선행연구

—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임신 및 출산관련 제반 행태뿐만 아니라 가족생활방식과 가족구성원의 개별행위 등에 영향을 줌.

— 저출산 시대에 혼인가치관이 중요시되는 것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임.

— 이혼가치관은 최근에 이를수록 관용적인 입장이 더 많았으며 이혼사유로는 폭력,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 등이 제시되었음.

— 재혼가치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선행연구에 의해 살펴본다. 최근일수록 재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음.

— 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음.

-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음.

— 이상자녀수를 연도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고 있음.

— 유배우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에서 2003년 14.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음.

— 남아선호가치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가치관 15~44세 유배우부인의 78.6%가 성감별후의 인공임신중절행위를 반대하였으며, 3.7%만이 찬성하고 있었음.

□ 가족변화의 선행연구

— 우리나라의 초기 가족연구는 196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가족구조나 가족가치·의식, 부모-자녀관계, 가족제도 일반에 초점이 있었으며, 가족연구는 1970～8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음.
  • 대표적으로 가족유형 및 기능, 가족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관계, 가족복지·정책, 가족법 등을 들 수 있음.

제3절 이론과 선행연구의 시사점

□ 논의

— 교환이론에 대한 비판은 가족이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회집단간의 관계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임.
  • 이는 개인의 행위가 어떤 보상을 반드시 기대하여 이루어지지 만은 않으며, 교환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가족발달이론은 이론적 개념이 논리적 적합성보다는 경험적 기술로 편향되어 가족발달의 단계구분이 모호하고 특정한 가족유형 즉, 핵가족형에만 적합하다는 한계 때문임.
  • 따라서 동 이론이 가족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갖춘 이론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용한 기술적 틀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합의되지 않고 있음.
— 가족체계이론은 애매모호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론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 그리고 실제적 관계를 기술하는데 부적합하여 설명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특히 가족치료에 적용되는 체계이론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 사회의 가부장제적 특성을 간과한 채, 중립성과 합리성을 내세워 여성

의 경험과 불평등한 위치를 '체계적으로' 은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관점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 여권주의 이론의 기본가정은 많은 부분 갈등이론으로부터 나왔는데, 가족 내의 권력의 문제를 과도하게 중요시함으로써 성차별적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임.

-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기본기능의 하나인 사랑, 희생, 조화 등이 지나치게 무시 또는 간과되었다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음.

— 포스트모던 가족론의 관점에 내재된 이러한 민주적 성격은 실제 이질적인 가족가치관들이 혼재되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현실을 생각할 때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렇지만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갈등과 논쟁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라 판단됨.

□ 시사점

— 우리 사회에서의 가치관 변화는 가족형성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미혼여성이 많이 있으며,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인이 있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미성년자를 둔 부인의 이혼으로 인하여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의 이혼가정 미성년자가 양산되고 있음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임.

— 혼인가치관의 변화로 증가하게 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문제가족으로 낙인 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가족의 적응력을 강화하여야 함.

〔제2부 한국사회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요인〕

제3장 한국사회 혼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제1절 문제제기

— 한국 사회는 최근 보편혼의 결혼관이 점차 변화하여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는 달리 여전히 '결혼'이란 사회제도를 통한 '출산'이 일반화(결혼⇒출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됨.

— 전통사회에서는 금기시하였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결혼, 이혼, 재혼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

제2절 결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결혼가치관의 변화양상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는 2000년 55.6%에서 2003년에는 54.4%로 감소한 반면, 소극적 및 부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43.6%에서 4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결혼가치관의 영향요인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타 지역거주자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장 높게 보였으며(-.230, $p<.001$), 중소도시 거주자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143, $p<.05$).

—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903, p<.001),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034, p<.001).

—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부부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129, p<.01), 유배우자와 사별자도 결혼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유배우 .972, p<.001; 사별 .876, p<.001).

—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다 많이 갖고 있었음(-.103, p<.05).

•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001, p<.001).

제3절 이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이혼가치관의 변화양상

— 전체적으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 45.7%에서 2003년 48.9%로 증가하여 이혼에 대해 점차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이혼가치관의 영향요인

—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타 지역거주자보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장 높게 보였으며(.331, p<.001), 중소도시 거주자도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290, p<.001).

— 남편이 부인보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657, p<.001),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041, p<.001).

—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부부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이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089, p<.010). 그렇지만 유배우자와 사별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유배우 -.971, p<.001; 사별 -.982, p<.001).

—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음(-.080, p<.010).

-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000, p<.001).

제4절 재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재혼가치관의 변화양상

— 재혼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 태도(2000년 16.8%, 2003년 20.7%)와 소극적인 태도(2000년 46.5%, 2003년 47.2%)는 2000년 보다 2003년이 모두 높았음.

- 부정적인 태도는 2000년(30.3%)이 2003년(27.4%) 보다 높아 최근으로 오면서 재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 재혼가치관의 영향요인

— 15~59세 기혼부부의 재혼가치관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성, 혼인상태 중 유배우자, 취업여부 등의 변수는 재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수준이 높았음.

- 그렇지만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중 사별자, 가구소득 등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전체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7.1%를 차지하며, 그 중 81.6%가 여성 한부모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도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양상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부장적 전통에 기반을 둔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임.

— 재혼가족의 경우 형성단계에서부터 초혼가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데, 배우자의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결혼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초혼생활의 여파가 재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무자녀 재혼은 초혼과 가족구조측면에서 거의 유사하고, 유자녀 재혼에 비해 가족문제가 적게 발생하지만, 이와는 달리 유자녀 재혼은 새로운 결혼의 적응과정을 복잡하고 악화시킬 수 있음.

□ 시사점

— 전반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결혼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이혼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가족불안정은 증대됨과 동시에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가족형태를 불문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혼의 증가와 함께 발생되는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이 갖지 않는 특수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에서 분명히 논의되어야 할 점임.

— 많은 이혼가정이 미성년자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자녀가 경험하는 교육 및 심리·정서적 발달상의 어려움은 지난 수년간 빈번하게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혼의 증가에 따라 재혼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혼가족의 구성의 상호 적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미성년자녀를 가진 많은 이혼가정이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함.

— 여성이 결혼 및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와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사료됨.

- 따라서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족과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혼인가치관의 약화는 전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장래의 불투명성이 증가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함.

- 따라서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와 부모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양육은 부 또는 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4장 한국인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과 기혼여성의 출산행위 요인분석

제1절 문제제기

□ 한국의 합계 출산율

— 2002년도 이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임.
  • 이는 유럽, 미주의 여러 나라, 일본과 비교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출산율 감소의 결과임.

— 196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계속되어온 출산력의 감소는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임.
  • 계속되는 극저출산율은 더욱 심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얼마 후에는 인구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게 함.

제2절 혼인·출산 수준 및 가족형태의 변화

□ 결혼수준의 변화

—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의하면 혼인은 모든 남녀가 성인으로써 당연히 거쳐야 되는 인생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음.
  • 1980년 센서스에 의하면 45~49세 여자 중 미혼율은 0.3%에 불과 하였고 30~34세 여자 중에도 미혼율은 2.7%로써 혼인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그 후로 모든 연령에서 미혼율이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센서스에서는 30~34세 연령층의 미혼율이 10.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음.
  • 남자의 경우 35~39세의 미혼율이 1980년 1.7%에서 2000년 10.6%로 증가하였음.

— 한국에서의 결혼연령의 상승은 교육수준, 특히 여성들의 교육수준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평균 결혼 연령은 교육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또 한편, 모든 교육수준에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평균 결혼 연령이 2년 정도 증가하였음.
  • 이는 모든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경제활동참여,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의 이유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출산수준의 변화

— 한국의 출산력은 1960년경 부인 당 6명이라는 높은 수준의 합계 출산력이 1983년에는 대체 수준으로 저하되었음.
  - 그 후에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 1990년에는 1.6, 2000년에는 1.47, 2003년에는 1.165 까지 저하되었으며, 2003년의 합계출산력은 1.19로 집계되었음.
  - 한국의 2002년, 2003년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가족 형태의 변화

— 전통적인 가족체제는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역할과 분명히 구별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에 국한하였음.
  - 최근에는 여성역할의 변화가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증가함.
  - 경제활동이 여성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

제3절 미혼남녀의 결혼·가족·취업 가치관

□ 미혼남녀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하여 여자의 경우 11%에 불과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29%로 나타났음.
  - 즉, 결혼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은 남자 78%, 여자 57%로 “결혼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부합하는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남녀별 로짓모델에 의한 분석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35~39세 연령층이 남녀 모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이는 그들이 대체로 결혼 적령기를 지난 사람들인 점 때문임.

— 직업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음.

— 거주지역이 결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인 경우 대도시 거주자에 비하여 농어촌 거주자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여자인 경우 중소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들은 대도시 거주자들 보다 훨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 미혼남녀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자 80.3%, 여자는 76.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음.

— 30세 이상의 미혼 여자들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보다 젊은 여자들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이는 그들의 나이가 이제부터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남자들 중에는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자들 중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 남녀 모두 농어촌 거주자들이 대도시 거주자들보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 미혼남녀의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 미혼 여자의 86%가 결혼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한편, 미혼남자 중에는 58%만이 결혼 후 부인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음.

- 남자들 중 24%가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태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혼남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가 결혼 후 부인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결혼 후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요인은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비하여 남녀간의 차이가 적었음.
- 35세 이상의 여자들은 34세 이하의 여자들보다 부인취업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 남녀 모두 대학 이상 학력자들이 부인취업에 대하여 대학 미만의 학력자보다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 여자인 경우, 현재 대학생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제4절 기혼여성의 결혼·출산 태도

□ 기혼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15~59세 기혼여성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2003년 조사에서 26%에 불과 하였고, 2000년 조사 때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음.

-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4%이었음.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지난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음.

- "반드시 가져야한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0년 90%에서 2003년 55%로 크게 감소하였고, "없어도 무관" 하다는 부인은 1997년 9%에서 2003년 13%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자녀의 필요성은 결혼의 필요성보다 긍정적 태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가족은 자녀를 통한 가문 계승의 역할이 부부관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계획에 대한 태도

— 15~44세 유배우부인 중 추가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인은 매우적은 18%에 불과함.
  • 특히 생존자녀가 없는 부인의 경우, 83%, 생존자녀가 1명인 부인의 경우, 42%만이 추가자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첫째로 이들의 태도가 전통적 가족제도가 요구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자들 중에 반이 조금 넘는 정도이며, 남자들 중에는 4분의 3 정도로 남녀의 큰 차이는 주목 할 만함.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훨씬 더 전통적이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남녀 모두 4분의 3이 넘음.
  • 그 요인들도 남녀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고학력자가 조금 낮은 정도, 농어촌 거주자들이 조금 높은 정도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
— 결혼후 부인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는 그 정도에서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 요인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 없음.
  • 고 학력자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외에, 다른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음.

□ 시사점

—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취업의 중단을 최소화 하고, 출산 후 재취업의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모든 미혼남자들이 직업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결혼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취업의 기회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택 마련의 기회가 직업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함.

— 결혼·출산과 함께 오는 가사, 자녀양육의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 부담하여, 결혼과 출산이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행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모든 취업자들이, 남녀의 구별 없이 취업과 자녀양육 중 한 가지만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즉, 취업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휴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취학자녀들이 방과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서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제5장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자율성, 그리고 이혼태도

제1절 문제제기

□ 우리나라 이혼율 급속한 증가

—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건수)이 1980년 0.6이었다가 조금씩 증가하여 1991년 1.1을 기록하였음.

- 그 후 매년 0.1씩 증가하여 1995년에 1.5에 이르렀으나 1995년 이후 삼

년동안 해마다 0.2, 0.3, 0.5씩 증가하였음.

-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정체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해마다 0.3, 0.2, 0.5씩 증가하여 2003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5에 이르렀음.

—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이혼과 결혼에 관한 사회적 가치, 즉,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기혼자들의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이혼자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줌.

- 이혼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도 이혼 당사자들의 가족형성 과정이 중단되는 것 이외에 이혼가능성의 기대가 가져오는 결혼이나 출산행동의 변화도 포함됨.

제2절 이혼의 원인

□ 이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

— 이혼율 증가와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됨.

- 즉, IMF 관리기간 등의 경제적 충격이 이혼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약화될 것임.

— 부정적인 견해의 약화는 또 다시 이혼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 이혼에 대한 규범의 변화와 결혼의 불안정성을 잇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결혼결정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임.

제3절 이혼 가치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가설

— 부부관계 만족도는 이혼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

- 앞서 언급한대로 이혼은 결혼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을 택하겠다는 선택이므로 부부관계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일 것임.

—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태도들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임.
  - 가족을 개인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혼에 대해 비허용적일 것이고 동시에 결혼과 자녀가, 특히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임.
  - 한편, 가족의 유지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면 대체로 반대의 태도들을 보일 것임.

— 사회규범의 일반적인 결정요인들도 이혼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연령이 적을수록 연령이 많은 사람에 비해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 이혼에 대해 허용적일 것이며,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임.
  - 도시거주자가 농촌거주자 보다 더 이혼에 대해 허용적일 것임.

—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허용적일 것임.
  - 여성의 자율성은 경제적 독립성, 사회적 자율성, 의사결정의 권한 등을 포괄하는데 어떤 측면이든지 자율성이 강할수록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취업은 이 모든 자율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여겨짐.

— 결혼 중 형성된 부부공유의 자산이 많을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일 것임.
  -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이혼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함.

— 유배우 여성의 경우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일 것임.
  - 남편의 교육, 수입,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의 이혼에 따른 기회비용이 늘어나므로, 이혼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것임.

— 여성의 결혼력과 이혼에 대한 태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임.
  -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여성은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

제4절 자료와 분석방법

□ 자료

—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음.

□ 분석방법

— 다변인 분석을 위해 순차로짓(ordered logit)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였음.
  - 순차로짓의 결과에 나타난 계수 해석은 보통 로짓(일명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와 정확히 같음.
  - 다만 보통 로짓의 경우 종속변수가 두 가지 사건으로만 분리되는데 순차로짓에서는 둘 이상의 순차적인 경우들로 나누어지며, 그 순차적 경우들을 가지고 모든 가능한 이분적 조합들을 만들고 그 조합의 수만큼 보통 로짓을 실행한다는 원리임.

— 본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정(+)의 계수는 보다 비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부(-)의 계수는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함.

— 본 논문에서는 로짓계수의 반로그(anti-log 즉 exponential)를 취하여 odds ratio를 구하였음.
  - odds ratio는 독립변수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에 사건의 odds가 몇 배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숫자임.

□ 분석결과

— 표본의 특성
  - 15~59세 전체 기혼여성 표본뿐 아니라 결혼상태별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예상된 바와 같이 평균연령은 사별여성이 50.8세 가장 높고 초혼지속중인 여성이 40.7세로 가장 낮음.

— 이혼에 대한 태도의 다변인 분석
  - 초혼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18~59세 여성표본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순차로짓 분석한 결과 첫째모델은 이혼결정에 혹은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인 부부관계만족도와 일반적으로 가치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포함함.
  -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에 이혼을 용이하게 하거나 혹은 억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수들을 첨가하였음.

— 부부관계만족도: 가설에서 예측한대로 전반적으로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비허용적임.
  - 즉, 전반적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여성은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여성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짐.

— 다른 가족태도: 가설에서 예측한대로 가족주의이념을 반영하는 태도들은 이혼에 대한 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임.
  - 결혼, 자녀,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 사회규범의 일반적 결정요인: 예측한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비허용적임.
  - 결혼관계가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가정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해 이혼을 더 바람직한 선택으로 생각할 것임.

— 부인의 사회경제적 자율성: 앞서 연구가설에서 부인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일 것이라는 가설에 대하여 대체로 지지하였으나 일부 상충되기도 함.
  - 결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이 이혼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이며, 부인의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강할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임.

— 결혼중 형성된 자산: 서구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중 형성된 자산은 이혼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 이는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며, 자가 소유 여성이 비소유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더 비허용적임.

제5절 이혼태도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의 다변인 분석

□ 이혼에 대한 태도가 가족행동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 출산계획 변수는 “낳겠다”는 응답에는 1을, “낳지 않겠다”와 “생각중이다”라는 응답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음.
- 연령이 적을수록,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농촌거주자가, 비취업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낳겠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음.
- 현존자녀수와 자녀의 성별 구성이 출산계획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현존자녀수가 3명 이상일 경우에 비하여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낳겠다”는 odds가 무려 137배에 달하였음.

— 두 번째 모델에는 이혼에 대한 태도, 자녀와 아들의 필요성, 부부관계만족도가 포함되었음.
- 이혼에 대한 태도가 비허용적일수록 앞으로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음.
- 자녀와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음.
- 부부관계만족도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다변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항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음.
-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낳겠다”는 응답확률이 높았고, 부부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낳겠다”는 응답확률이 낮았음.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비허용적임.

—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와 아들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임.

—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거주일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임.

— 결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과 가정 내 의사결정권이 강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서 여성의 자율성이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을 나타냄.

- 그러나, 현재 취업중인 유배우 여성은 취업하지 않은 유배우 여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더 비허용적임.

—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상 고소득이면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임.

— 가족의 순재산이 많은(즉 1~3억원) 여성, 남편 수입이 높은 유배우여성의 경우에도 여성자신의 수입이 높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해 허용적임.

□ 시사점

— 사회규범 혹은 이혼태도가 이혼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임.

- 수입, 재산 등 일부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 변수들의 경우 이혼태도와 행동의 유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확증하기는 어려우나 이혼태도는 출산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본 연구는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만족도 등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이혼태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음.

- 여러 객관적인 조건과 별개로 결혼만족도가 결혼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임.

— 여성의 취업은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임.
  • 현재 이혼이나 별거중인 여성에게 있어서만 취업이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함.
— 수입, 교육 등 사회경제적인 자원에 관한한 이혼에 대한 태도보다는 객관적인 여건이 실제 이혼확률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임.
  • 수입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아서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할 충분한 자원을 가진 여성들이 이혼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만 실제 이혼확률은 낮음.

제6장 자녀가치관 및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제1절 문제제기

—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자녀양육의 형태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음.
  • 이는 자녀양육부담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 시간적 측면에서 지대해 졌기 때문일 것임.
—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규명함.
  • 아울러 최근 자녀양육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제2절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

— 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1991년 90.3%, 1997년 73.7%, 2000년 58.1%, 그리고 2003년에는 54.5%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였음.

-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 그리고 2003년 44.9%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음.
-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 그리고 2003년 12.6%로 증가하고 있었음.

□ 최근 자녀가치관의 영향요인

—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 현존자녀수, 현존아들 수 등의 변수는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수준이 높았음.

- 그렇지만 응답자의 성과 교육수준 등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3절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

—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 졸업 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2.1%, 취업할 때까지 11.5% 등의 순이었음.

- 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3%, 언제(까지)라도 6.3% 등이 있었음.

□ 최근 자녀양육관의 영향요인

—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중 사별여부, 취업여부, 가구소득, 현존자녀수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응답자의 성은 유의수준이 다소 낮았지만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지의 여부는 무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가치관 변화에 더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적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 한국사회 특유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책임감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자녀양육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기 때문임.

— 자녀양육비는 출생후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비용은 약 1억 6,561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출생후 대학 졸업까지는 2억 1,905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부담이 매우 심각한데 이는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 학력 및 학벌 중심의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교육정책의 오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시사점

— 영아~대학생까지 소요되는 전체 자녀양육비용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하여야 겠음.

— 공제규모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녀양육비 전체금액이어야 할 것이며, 세부 내용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교육급여의 지급확대 및 교육을 위한 부대비용(교재, 학용품, 급식 등) 등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여야함.

-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질적 교육급여 지

급이 교육비는 물론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서비, 필기도구비, 과제물비 등이 포함된 수준으로 교육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용돈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특수보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서민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보육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보육욕구가 높은 지역과 공급이 미흡한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함.

— 전체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함.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호, 교육, 놀이, 오락 등을 제공하는 지역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제7장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결정요인

제1절 남아선호 관련 영향 및 선행연구

□ 남아선호가 미치는 영향

— 일부연구에서는 남아선호가 출산력 저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녀의 성구성의 차이는 피임 및 다음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됨.

— 남아선호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음.
  • 출산율이 높거나 피임률이 낮은 사회는 강한 성 선호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출산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남아선호가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성감별 인공임신중절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임.
  •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선호의 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였다는 비판을 받음.

□ 남아선호와 출생성비 불균형

— 소자녀관과 남아선호관, 초음파기와 같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이용의 보편화 등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남아선호도는 성 선택적 출산행위로 이어져 출생성비 불균형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

— 출생성비 불균형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지역에 따른 남아선호가 다른데서 기인함.
  •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높은 출생성비는 1차적으로 유교문화의 특성인 남아를 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의식구조에 기인함.
  • 2차적으로는 남아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 의료기술을 이용하는데 기인함.

□ 남아선호 관련 선행연구

— 국외연구는 남아선호가 출생성비 원인중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 국가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사회경제발전, 인구정책, 출산력의 급속한 감소, 문화적 배경 차이에서 기인됨.
  • 남아선호가치관은 아랍 및 동남아시아에서 강하며, 종교적으로는 동양의 유교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세계 여러 국가의 남아선호 경향은 노후의존에서 발견되며, 인도에서도 종교, 관습과 노후의 경제적 이론 때문에 남아선호가치관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짐

— 국내연구동향을 보면 남아선호관련 연구는 출생성비, 유래, 역사적 배경 및 원인, 태도와 관련하여 연구되는 경향을 보였음.

- 김일현(1990)은 출생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자녀수, 현존 아들수, 현존 딸수, 거주지를 지적함.
- 지하룡·박재용(1988)과 박경애(1993)는 남아선호가치관은 출생시의 성비 불균형, 남녀별 이상자녀수, 가족계획실천율 등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함.
- 남아선호의 원인은 가계계승과 노후보장, 경제적 도움, 심적 든든함, 가문계승과 제사 등에서 딸·아들의 양육희망 등으로 나타나 가부장제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이유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 남아선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연령, 교육수준 및 현존 자녀수, 현존 남아수, 취업, 직업, 사망자녀 유무 및 사회·심리적 요인 등으로 나타났음.

제2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와 논의

□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 1991~2003년까지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아들이 '있는 것이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와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1991~2003년까지 출생순위별 출생성비는 1991년 112.4, 1995년 113.2, 2000년에 110.2, 2003년에 108.7로 정상적인 출생성비인 106으로 접근하고 있음.

- 출산순위와 출생성비의 관계를 보면, 완만하던 출생성비는 세 번째 출산부터 급격히 높아져서 네 번째 이상에서는 남아대 여아 출생수가 1.5배 수준까지 격차를 보임.

□ 남아선호가치관의 원인 변화

— 1991~2003년까지 남아선호가치관의 원인은 가계계승과 마음이 든든하다는 정서적 유대가 강하였으나, 노후의존에 따른 기대는 약하였음.

• 남아선호는 가부장제적인 이유에서 점차 심적인 안정 같은 정서적인 질 때문으로 나타나서 내적인 동기가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함.

□ 남아선호와 출산·인구자질과의 관련성

— 우리나라 부부의 추가자녀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인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였음.

• 아들 수가 많을수록 추가자녀에 대한 욕구가 적게 나타나서 남아선호가치관과 출산력은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음.

— 인공임신중절

• 우리나라 부부의 인공임신중절횟수는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늘어나며, 아들을 1~2명 가질 때까지는 증가하여서 남아선호로 성 선택적 출산행위가 일부 행해지고 있음.

— 피임행위

• 우리나라 부부는 일정 수의 아들을 가진 후에는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하나, 아들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출산을 위하여 피임이 소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제3절 남아선호가치관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남아선호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선택적인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원인도 가문유지나 제사 같은 가부장제적인 이유에서 심리적 만족, 가족 행복 같은 내적인 동기로 바뀌어 가고 있음.

• 최근 남아선호가치관의 양상을 이해하고, 향후 남아선호가치관을 전망하기 위해 남아선호관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규명하는 것

이 필요함.

— 연구목적은 남아선호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부의 경우 남아선호가치관을 선택하는 데 어떤 특성들이 작용하는지 파악함.

□ 분석자료

— 가임연령층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15~44세 유배우부인임.

□ 분석방법

— 분석방법으로는 부인 및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특성, 결혼·출산특성, 자녀가치관별로 남아선호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으로 유의도를 검증함.

-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함.

□ 분석변수

—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남아선호가치관으로 2개의 범주로 측정하였음.

- 독립변수는 부부특성변수, 가족특성관련 변수, 경제관련 변수, 결혼·출산관련 변수, 가족부양관련 변수, 부부관계 변수, 부모-자녀관계 자녀가치관 변수 등 총 25개 변수를 사용하였음.

□ 주요 분석결과

—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남아선호도

- 우리나라 부부는 남아선호도는 55.9%, 남아비선호도는 44.1%로 나타나서 남아선호도와 남아비선호도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음.
- 남아선호도가 높은 부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연령이 많고, 교육수

준이 낮으며,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 가족 및 경제특성별 남아선호도

- 남아선호도가 높은 부부는 자녀, 조부모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형태,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음.
- 동산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음.

— 결혼 및 출산 특성별 남아선호도

- 남아선호 태도는 초혼연령이 낮고, 결혼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높은 남아선호도를 보였음.
- 남아선호는 현존자녀수와 현존 아들수가 많은 경우, 현존 딸수는 적은 경우, 자녀가 사망한 경험이 있는 경우, 추가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나 추가아들을 희망하는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음.

—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부부의 거주지역, 부인교육수준, 부인직업, 남편직업, 가구총소득, 의사결정형태, 이상자녀수 등으로 검증되었음.

-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인의 교육수준이었고, 다음은 가구총소득, 이상자녀수 순으로 나타나서 남아선호관은 부인의 사회적 배경, 경제요인, 자녀가치관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남아선호가치관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으나, 부부관계, 자녀관 등과도 관련이 높았음.

- 남아선호관이 우리 사회의 남아출산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압력 보다 부부의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이 높음을 의미함.

- 가족단위 특히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함.

□ 시사점

— 남아선호도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가치관을 수용하며 살아온 고연령층인 부모를 대상으로 양상 평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교육 정책 등이 개발되어야 함.

— 남아선호도는 여성의 학력수준과 직업과 관련이 높았는데 이들 요인은 경제력과 가정에서의 위치와 역할, 부부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저학력 및 무직,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양성평등 가치관 증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여성의 결정권을 제고함.
- 여성에게 경제적 권한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개발의 일원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
- 여성의 양육 및 가사 등을 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남편의 직업과 가구총소득은 남아선호도와 관련이 높아서 남편의 학력수준이 높을 경우 부부의 의사결정은 남성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중장년층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모든 남성, 특히 중장년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가사부터 가정 대소사의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결정하는 가치관과 문화를 조성함.

— 부부의 의사결정 형태가 한쪽 배우자에 의하여 결정될 때 남아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부부의 개인적인 배경과 함께 세대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의 영향과도 밀접함.

- 전 근대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도 즉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 고용 등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여성을 차별하

는 모든 제도와 법률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의 고용을 비롯한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녀양육 정책 등이 뒷받침 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 이상자녀수가 많을 때 남아선호가치관이 높았는데, 이는 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 일시적 피임행위를 통하여 여성의 생식보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선택적 인공인신중절의 감소를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취시키는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력히 추진함.
- 태아 성감별에 따른 불법 의료에 대한 처벌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를 통하여 적합한 피임방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올바른 부부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 및 계몽이 요구됨.

〔제3부 한국가족의 변화양상과 요인〕

제8장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유형별 가족관계 및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제1절 이론적 논의

□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 개념

— Hudson, Acklin & Bartosh(1980)은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구성원간의 갈등의 심각성 정도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음.

-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에서 겪게 될 갈등과 스트레스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함.

— 가족 삶의 만족도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므로 전체적인 생활만족, 생활의 질, 복지감 등으로 표현됨.

- 생활의 질 개념은 물질적·객관적 생활조건과 심리적, 주관적 모두를 포괄하고 있음.

□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 관련 이론

— 교환이론

- 가족원간의 교환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관계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광역사회의 관계로 확대되며, 가족원간의 교환은 관계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되나 점차 가족간의 교환적 특성이 감소함.
- 부부관계에서는 부부권력, 의시소통, 결혼의 안정성, 성역할, 성행동 가정폭력 등에 적용되고 있음.
-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취업문제, 세대간 유사성이나 동일시에 보상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 사회계층별 부모행동이나 가치관에서의 비용 개념 등이 관련됨.

— 일반체계이론

- 체계적 접근으로서의 가족은 가족 개개인의 행동보다는 상호의존적 관계와 유형을 바탕으로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는 전체로서의 의미를 가짐.
- 가족체계는 부부, 부모자녀, 형제들의 여러 개의 하위체계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원의 특정 행동유형은 인간관계속에서 분석되고 전체적인 체계의 입장에서 이해됨.

— 갈등이론

- 가족 내의 이해관계나 권력 또는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 반복될 때 가족체계가 구조화됨.
- 갈등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등의 강도와 지속성이 결정되며, 가족갈등의 처리 과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자원과 권위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함.

□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 가족관계 연구는 결혼만족도나 의사소통, 부부관계 및 가족역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결혼만족도 즉 배우자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역할분담과 의사결정, 의사소통, 여가시간의 할당과 공유, 배우자의 애정·이해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 성생활,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배우자의 소비성향, 문화생활 등으로 나타났음.
- 성장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화, 문화생활,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 등으로 검증되었음.
-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가족구조적인 측면, 관계의 감정적 만족도, 애정과 보살핌, 보살핌의 부담과 긴장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음.
-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지역, 연령, 성, 취업 여부 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의 삶의 만족도

— 가족 삶의 만족은 전체가족, 중년기 부부, 확대기 가정, 주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임정빈·고보선(1992)은 가족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식생활, 교육, 주생활, 가족관계, 가사노동 환경, 여가, 경제, 친구와 이웃, 지역사회 등을 활용하였음.
- Hays & Stinnett(1971)는 중년기 부부의 생활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결혼관계, 건강, 직업, 자녀와의 관계, 여가와 사회참여, 자아개념 등을 지적하였음.
- 이종숙(1989)은 확대기가정의 가정생활만족도과 관련 높은 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경제적 상태, 생활표준일치, 의사소통, 가사노동참여, 건강상태, 자기평가, 여가활동, 직장생활 등을 제시하였음
- 임정빈(1988)과 조미환(1990)은 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는 생활표준일치,

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가사노동영역, 여가, 경제, 주거 등과 관련이 높다고 밝히고 있음.

제2절 가족구조의 변화와 논의

□ 소가족화와 가족규모 축소

— 가족규모는 1960년 이후 1인 가구는 7배, 2인 가구는 3배 증가하였으며, 3~4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도 약 2배 증가함.

-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60년 5.6명에서 1970년 5.2명, 1980년 4.5명, 1990년 3.7명, 그리고 2000년 3.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임.

□ 가족세대의 단순화와 핵가족의 증대

— 1960년 이후 1세대 가족과 2세대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다소 정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3세대 이상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향은 핵가족의 증가와 확대가족의 감소를 의미하며, 1세대 가족의 증가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형제들로만 이루어진 가족의 증가층에서 발견됨.

□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면, 1970년 3.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15.5%에 이르고 있음.

— 노인가구의 형태는 독신가구 및 1세대 가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독신가구는 1985년~2000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하였고, 1세대 가족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00년에 다소 정체하는 추세를 보임.

— 한부모 가족은 1970년~2000년 사이에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실제로 편모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새싹가정은 매년 증가하다 200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에 3,504세대로 1995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제3절 가족관계 및 가족원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

□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가족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세대가 단순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음.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고 향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전망하기 위해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및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목적은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의 만족도와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
  -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건강가정을 실현하는 데 있음.

□ 분석자료 및 방법

— 가족형태별로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음.
  - 분석대상은 15~59세의 기혼가구의 가구주나 배우자가 해당됨.

— 분석방법으로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특성, 결혼·출산 특성, 가치관별로 가족관계 만족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으로 유의도를 검증함.
  - 가족형태별로 가족관계의 만족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함.

□ 분석변수

—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 삶의 만족도로 각 2개의 범주로 측정하였음.

- 가족관계 만족도 측정을 위한 독립변수는 부부특성변수, 가족특성관련 변수, 경제관련 변수, 결혼·출산관련 변수, 가족부양관련 변수, 부부관계 변수, 부모-자녀관계 변수 등 총 31개 변수를 사용하였음.
- 가족 삶의 만족도 측정을 위한 독립변수는 부부특성변수, 가족특성관련 변수, 경제관련 변수, 결혼·출산관련 변수, 가족부양관련 변수, 가족관계 관련 변수, 가정생활관련 변수 등 총 32개 변수를 사용하였음.

□ 주요 분석결과

— 제 특성별 가족관계의 만족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 중 3.20점으로 높지 않았으며, 부부(3.36점)보다 자녀관계(3.40점)에 만족하는 정도가 약간 높았음.
-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을 포함하여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중심(3.20점)의 핵가족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족(3.06점)은 낮은 경향을 보였음.
- 부부관계는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3.42점)가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3.04점), 부부간의 문화생활(2.84점)은 만족도가 낮았음.
- 자녀관계는 대화정도에 대한 만족도(3.50점)가 가장 높았고, 문화생활(2.96점)은 만족도가 낮았음.

— 제 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가족 삶의 만족도는 5점 중 3.30점으로 높지 않았으며, 부부가족(3.36점), 노인가족(3.28점), 기타 가족(3.21점) 순으로 높았으나, 한부모가족(3.00점)과 1인 가족(2.74점)은 낮았음.
- 지표별 만족도 수준은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3.42점)가 가장 높았으나,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2.91점),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2.86점)은 낮았음.

- 가족유형 및 지표별 만족도 수준은 부부가족과 한부모가족은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가 높았고, 노인가족과 1인 가족은 이웃 또는 친인척관계가 높은 편이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지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 전체 가족의 삶 만족도의 결정 요인은 부인연령, 부인의 현 취업여부, 남편 연령, 가구총소득, 주택소유형태, 주관적 경제자립도, 정서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었음.
- 부부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 취업여부, 남편연령, 가구총소득, 주택소유형태, 주관적 경제자립도, 정서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었음.
-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신체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분담 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었음.
-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도의 결정 요인은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가구주의 장남여부, 배우자의 장녀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재산, 가구총소득, 주관적 경제자립도, 자녀수, 아들유무, 정서적 부양여부,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 포함됨.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가족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 전체 가족 및 부부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구성하는 요인 외에 경제요인, 결혼시기 등에 따라서도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음.
- 노인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 요인, 자녀관계 요인 외에 부인의 교육수준 같은 사회적 요인, 가족간의 신체적 부양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서 전체 가족과 부부가족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음.
- 기타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 요인과 자녀관계 요인 외에 거주지역, 부인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등의 사회적 요인, 배우자의 장녀 여부인 가족 특성이 가족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 전체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요인 외에 부부의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요인, 가족관계 등에 따라서도 가족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음.
- 부부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관련 요인들 외에 부부의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 부양, 가족관계 등이 가족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생활 관련 요인과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 같은 가족특성 요인, 가족간의 부양 교류인 신체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음.
-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가족생활 관련 요인, 부부의 교육수준의 사회적 요인, 가구주 및 배우자의 장남(장녀)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같은 가족특성 요인, 경제요인, 출산요인, 정서적 부양여부 등으로 나타났음.

□ 시사점

— 전체 가족과 부부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의식주 수준을 비롯하여 건강수준, 가족간의 대화 및 친밀도, 가족원간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과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중요한 것들의 성취

도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아야 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및 부부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족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적 지원,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단위의 문화와 여가 활동 등 가정생활 향상을 위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생활의 만족도와 비례적인 관계를 보였음.

- 노인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의 제고를 위해서 지역사회내의 기관을 중심으로 노인부부교육, 노부모-자녀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고 노인부부, 3세대 노인가족을 위한 세대간 통합적인 여가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저소득층 노인가족을 위하여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노인수발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가사도우미 등의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내의 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며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의 건강수준을 비롯하여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 가정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을 때 비례적으로 높게 작용하고 있음. 그

- 기타 가족의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제9장 자녀규모의 결정요인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제1절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 1980년대의 전반부터, 여성 1인당 2.1명이라는 대체수준 이하를 기록
  • 최근에 이르러 출산력 저하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초(超) 저출산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관련된 영역

—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코호트별 자녀규모, 특히 완결 가족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검토함.
  • 여기에는 시계열적 자녀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데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등 노동참가나 양성평등에 관련되는 대체변수들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임.
  • 또 자녀규모의 결정에 관련하는 출산간격이나 이상자녀수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로 함.

— 둘째, 우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총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코호트 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고자 함.
  • 여기서의 관심영역은 기간 출산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역출로서의 코호트 출산율을 추정/추계하여 자녀규모의 변천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출산력의 측정, 특히 양(quantity)과 템포(tempo)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일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제2절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관점

□ 경제학적 관점-수요이론

— 이론의 핵심은 효용의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로서, 추가자녀의 대안에

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커지면, 그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임.

- 결국, 자녀규모의 축소는 (1) 자녀의 상대적 가격이 증가하거나 (2) 부부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3) 타 재화 대비 자녀에 대한 부부의 효용함수가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사회학의 관점-위험과 기회의 이론

— 사회학의 위험과 기회의 이론은 출산력의 수요이론에 새로운 독립변수의 추가적 고려를 요구하고 있음.

- 수요이론의 가정은 사람들이 추가자녀의 비용과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가정함.
- 위험이론은 자녀의 편익이나 비용은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을 말하지 현재, 그 편익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임.

□ 문화인류학의 관점-탈물질주의 가치이론

— 탈물질주의 가치이론은 제2의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어왔던 이론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패러다임은 사회적·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는 개인적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의 만족,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전통적 권위(특히 종교)로부터의 자유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함.

□ 여성학의 관점-양성평등이론

— 여성학의 입장에서 전개된 양성평등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선진국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은 사회제도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양성평등 수준의 일관성 부재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음.

-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에서 여성이 남자와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게 되지만, 이 기회가 자녀출산으로 심각한 제약을 당하는 경우, 여성들은 자녀수를 제한하여, 대단히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영속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제3절 자녀규모와 출산행태의 변화

□ 자녀규모의 변화

— 2003년 출산력 조사에 나타난 15~44세 유배우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으로, 1994년과 1997년 출산력 조사와 같은 수준임.
  - 이는 2000년의 결과보다 0.1명이 증가하였음.

□ 출산간격의 변화

— 우리나라의 15~49세 초혼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본 2003년 출산력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23.9세이며, 첫째자녀의 출산연령은 25.2세 막내자녀(곧 추가자녀를 원하는 여성을 제외하는 경우)를 출산하거나 단산한 연령은 28.2세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결혼 후 첫째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1.3년, 첫째자녀 출산시기부터 막내자녀 출산시기까지의 기간은 3.0년에 이르러, 결혼시점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한국의 현재 여성들은 결혼 이후 약 4년 만에 출산을 완료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가족의 최종 규모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이상자녀수

— 2003년 출산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15~44세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00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상자녀수의 연도별 시계열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는 지속되고 있음.
  - 곧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

에는 2.0명으로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명이었다가 2000년 2.2명으로 감소하여 200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제4절 코호트 출산율 변천의 개관

□ 코호트 출산율의 추정/추계방법

— 출산모형에서 실제 출산력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함.

- 우선, 1950~1989년생의 40개 코호트에 대하여 전체 4개의 파라메타를 동시추정하고, 각 출산순위에 대하여, 재생산을 종료하였다고 생각되는 출생코호트, 곧 1950~1960년생의 11개의 코호트에 대해서는 이 추정치를 활용함.
-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메타를 위의 동시추정에서 구한 값으로 고정하여 다른 파라메타를 재추정하는 절차를 채택함.
-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첫째자녀에서 넷째자녀 이상의 출산순위 각각에 대하여, 1950년부터 1971년까지의 22년간의 출생코호트에 대하여 추정치를 구하도록 할 것임.

□ 코호트 출산율 변천의 개관

— 로그감마분포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추계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양상을 검토하여 봄.

- 먼저 자녀규모, 곧 합계출산율을 보면 1950년생 코호트는 2.58명에 이르고, 1989년생 코호트는 1.28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자녀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956년생 코호트부터 자녀규모가 대체수준인 2.2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1960년 중반에 태어난 코호트부터는 자녀규모가 2.0명 이하로 줄어들어, 1970년부터는 자녀규모가 1.5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음.

— 첫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은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코호트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1.0이었지만, 그것이 1970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70년 0.91, 1975년 0.80에 이르렀고, 1980년대에도 약간 둔화되면서, 1980년 0.75, 1985년 0.70에 이르고 있음.

- 이것은 평생 동안 무자녀로 지나게 되는 여성의 비율이 코호트별로 볼 때, 1970년 9%, 1975년생 20%, 1980년 25%, 1985년생이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임.

— 둘째자녀를 낳을 확률을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1950대 코호트는 1.0명이었으나, 1960년대 코호트에 이르러 1960년생의 경우 0.86, 1965년생의 경우 0.81로 격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1970년대 코호트에서도 계속되어 1970년생의0.67, 1975년생의 경우 0.59에 이르고, 1980년대 코호트에서는 그 속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1980년생의 경우 0.56 1985년생과 1989년의 경우가 0.51에 이르고 있음.

- 이것은 출생연도별로 코호트를 볼 때, 둘째자녀가 없는 여성들의 비율이 1960년생의 경우 14%, 1965년생의 경우가 19%이었다가, 1970년생의 경우가 33%, 1975년생의 경우가 41%에 이르렀다가, 1980년생의 경우 44%, 1985년생과 1989년생의 경우가 49%에 이르면서, 둘째자녀의 합계출산율이 첫째자녀의 합계출산율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줌.

— 셋째자녀를 낳을 확률을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1950년생의 경우에는 0.30이었으나, 이것이 급격히 떨어져서 1958년생 코호트부터는 0.20 이하로, 1970년생 코호트부터는 0.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환언하면, 출생코호트별로 볼 때, 셋째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들의 비율이 1950년생의 경우 70%였으나 이것이 1958년생의 경우 80%이상으로, 그리고 1970년생의 경우 10%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음.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 기간관점의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대한 정책방향

— 저출산 대응정책방향을 인구정책과 가족정책(family policy)에 두고 이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출산지원정책도 그 효과가 불분명한 직접적 지원의 경우에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등 출산순위가 낮은 경우에도 출산에 따라 여성과 가족의 불편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해소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 출산지원정책 중에서는 보육지원정책이 외국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육아비용이 주로 시간비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고학력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염두에 둘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육아휴가/보육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야 함.

— 이러한 정책은 본질적으로 가족정책 또는 복지정책이므로 출산율의 상승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단할 정책은 아니며, 그렇다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과도하게 추진하여 할 정책도 아님.

제10장 기혼여성의 가족주기와 취업결정요인

제1절 문제제기

— 남성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요 측의 여건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데 비해,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여건만큼이나 노동공급 측의 요인, 그 중에서도 학력, 연령 등 개인적인 속성 이외에 가계소득이나 자녀양육 등 가구관련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음.
  - 또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

고, 결혼, 자녀출산 등 가족주기의 단계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특징을 갖고 있음.

—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인이 속한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족주기 단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부인 및 가족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결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제2절 이론적 논의

□ 여성경제활동참가 관련 이론

—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임금상승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들의 크기에 의해 개인의 노동공급행동이 설명됨.

- 즉,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결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임금이 요구임금보다 클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선택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합리적 선택을 함.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해 Becker(1965)는 다음과 같이 주장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노동, 순수한 여가, 그리고 다양한 비시장활동(non-market activity)에 대한 시간배분으로 구성됨.
-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타 노동력에 비해 시장활동을 대신할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함.

□ 여성경제활동참가 관련 선행연구

— 홍경희(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에 있어서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은 낮았음.

-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은 높았으며, 자녀수는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경제활동참가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음.
-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높지는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현송(1996)은 여성의 취업여부는 현재의 자녀수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계획된 수의 자녀출산을 완료한 경우 미취학 아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인의 교육수준 및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취업을 삼가는 경향을 보였음.

— 장지연(1997)의 연구결과는 첫 자녀 임신 후의 노동시장 이탈은 임신시점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출산시기에 절정에 달하며 이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의 향상은 응답자의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은 낮아졌음.

— 김영옥(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배우 상태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달라지며, 또한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현저히 감소함을 보여줌.

- 한편 타 가구원 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가 뚜렷함.

— Jacobsen(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수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반면에 남성의 참여율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약간씩 상승함.

— 황수경(2003)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제1주기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율은 45.1%이나 육아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2주기에는 25.7%로 급격히 감소함.

- 영유아 자녀가 없어지는 3주기의 취업자 비율은 48.3%로 크게 증가하였음.

제3절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변화

□ 가족주기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의 변화

—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과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짐.
-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과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
- 남편사망시 부인연령과 부인사망시 연령도 평균수명 연장으로 각각 증가 추세임.

□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

— 형성기는 결혼에서 첫 자녀 출산까지의 젊은 부부만의 생활기간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확대기는 한 가족의 전체 출산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자녀출산기는 짧아지고 있으며, 확대완료기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임.
— 축소기는 자녀의 결혼시작 시점부터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축소기는 확대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짧아짐.
—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후 노인부부만이 남는 빈 둥지시기로,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인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임.
— 해체기는 결혼년도별로 볼 때 일관된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추세임.

제4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

□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

— 연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에 42.8%에서 2004년 49.8%로

7.9%포인트 상승하였음.

- 연령별로는 15~19세는 1980년에는 34.4%이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낮아져 2004년에는 11.0%로 23.4%포인트나 감소하였음.
- 이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따라 노동시장을 퇴출하였다가 육아기 이후 재진입하는 전형적인 M자형 유형임을 의미함.

□ 교육수준별 경제활동 참여율

— 여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으로 오면서 교육수준의 상승과 함께 경제활동참가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할 경우 연도에 따라 성별 차이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

제5절 기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 분석자료 및 방법

—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로 분석대상은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 초혼유배우부인 9,605명임.
— 가족주기 단계별 취업 부인과 비취업 부인간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을 비교하고,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를 위한 종속변수로는 부인의 취업여부를, 그리고 독립변수로는 부인 개인특성변수, 가구관련 변수, 자녀관련 변수, 취업관련 변수, 가족생활 관련 변수 등을 사용하였음.
  - 본 분석을 위한 가족주기 단계는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의 5단계로 구분하였음.

□ 주요 분석결과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확대완료기에 73.0%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축소기, 확대기 순으로 비율이 높았음.

□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특성

— 연령은 확대완료기까지는 취업부인이 높으나 축소기 이후는 비취업부인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수준은 형성기와 확대기는 취업부인이, 그리고 확대완료기 이후는 비취업부인의 비율이 높았음.
— 현존자녀수는 비취업부인보다는 취업부인이 더 많았음(취업부인: 1.9명, 비취업부인: 1.8명).
  •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도 취업부인은 19.1%, 비취업 부인 35.8%이었음.
— 핵가족인 비율은 비취업 부인(88.2%)이 취업부인(82.4%)보다 높았으며, 가구원수도 취업부인 보다 비취업부인의 경우 더 많았음.
— 평균 가구소득원 수는 부인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취업부인들이 더 많았고, 가족주기 단계별로도 차이를 보였음.
— 자가소유율은 형성기와 확대기 및 확대완료기는 비취업 부인들이 높았으나 축소기 및 축소완료기는 취업 부인이 높았음.
— 혼전 취업경험률은 축소완료기를 제외한 전체 주기단계에서 비취업 부인보다는 취업부인들이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남편의 평균 연령은 취업부인의 남편이 45.0세, 비취업부인 남편이 43.0세이었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은 비취업부인 남편(85.0%)이 취업부인 남편(72.7%)보다 높은 편이었음.
— 남편의 취업률은 확대완료기를 제외한 주기단계에서 모두 취업부인 남편의 취업률이 높았으며, 남편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취업부인 남편보다 비취업부인 남편의 비율이 높았음(취업부인: 56.3%, 비취업부인: 72.3%).

— 비전통적 양육 및 가사부담 형태에 있어서는 취업부인이 10.1%인데 비해 비취업 부인은 2.8%이었으며, 시부모로부터의 도움은 비취업부인 보다 취업부인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주기 단계별로도 모두 같은 양상이었음.

□ 분석대상 기혼여성 및 남편의 취업양상

— 본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률을 보면, 축소기에 취업률(55.7%)이 가장 높았으며, 확대기에 취업률이 가장 낮았음.
  • 부인들의 취업이유는 생활에 보탬이 가장 높은 비율(72.9%)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자녀교육비 충당(11.9%) 순이었음.
— 현 취업부인 중 89.7%가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가족주기단계별로는 형성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및 축소완료기에는 가사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확대기에는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현재 비취업중인 부인들의 향후에도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37.9%)을 보였음.
  • 가족주기 단계별로는 확대기에는 자녀양육 때문이 85.5%로 다른 가족주기단계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음.
— 기혼여성 남편의 종사상 지위는 전체적으로 상용고가 47.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9.9%), 임시·일용직(12.3%), 그리고 고용주(10.4%) 순이었음.

□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형성기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과 부인의 혼전 취업여부, 가사분담 형태, 친정부모의 도움여부 및 시부모의 도움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확대기 부인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6세 미만 자녀유무, 가족유형, 총가구원수,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혼전 취업여부, 가사분담

형태, 시부모의 신체적 도움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확대완료기 부인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역, 부인의 교육수준, 6세 미만 자녀유무, 가족유형,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혼전 취업여부, 남편의 교육수준 및 취업여부, 가사분담 형태, 시부모 도움여부 등이었음.

— 축소기에는 부인의 개인적인 특성 즉, 연령이나 교육수준보다는 가구특성이나 배우자 특성에 의해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거주지, 가족유형, 가구소득, 남편 교육수준 및 남편의 직장유형, 가사분담 형태 등이었음.

— 축소완료기에 부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 부인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취업여부, 가사분담 형태 등이었음.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 논의

—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기혼여성이 자녀양육에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 기혼여성의 시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임.

-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하게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자녀의 집중양육기를 지난 확대완료기에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그리고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축소기 이후에는 자녀의 결혼비용 등 가구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단계로 부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여성의 가족주기단계별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가족주기단계별 접근이 요구됨.

□ 시사점

— 형성기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없어 가족 내 역할로 인한 여성의 실질적인 시간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어 여성자신이 경제활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배우자의 부인 취업에 대한 인식이 부인의 경제활동의 참여 및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임.
  - 따라서 형성기에는 배우자의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사분담에 대한 근대적 사고를 가진 경우 부인의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가 요구됨.

— 확대기와 확대완료기와 같은 자녀양육기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6세 미만 자녀로서 이 단계의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취업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 시간대의 탄력적 운영,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기업들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확대완료기의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임금근로자일 경우 부인의 취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이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축소기와 완료되는 축소완료기의 기혼여성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이들에 적합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였던 일시적인 경력 단절이후 다시 재진입하려는 기혼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동시장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됨.

제11장 자녀양육 실태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제1절 자녀양육 관련 이론적 배경

□ 자녀양육 관련 이론

— 자녀양육과 애착에 관련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은 자녀의 원만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을 어머니가 양육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반드시 어머니가 아니어도 질 높은 탁아 서비스는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임.

— 취업모 자녀에게 있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의 애착관계 만큼이나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부모에 의한 양육에 대한 찬반 논의보다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됨.
- OECD 선진국들이 육아휴직의 확대 장착으로 영아의 양육을 부모가 직접 담당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 정책 모두에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음.

— 산업화 사회에서 사회육아는 필연적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권, 아동의 이익 최우선, 차별금지 등 아동의 권리보장 사상에 기초한 아동복지적 접근이 강조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이러한 사상은 1989년에 채택된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에 잘 나타나 있음.

— 1990년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들은 보육서비스의 공급 증가나

보육비 지원 등이 취업모의 고용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도구임을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중임금을 낮추었을 때 시장참여가 늘어날 수 있고, 시간 집약적인 양육을 휴가나 사회화 방식을 통해 지원해 주었을 때, 시장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임.

— 출산력도 보육지원의 영향을 받는데 OECD 국가의 경우 영아보육 서비스 이용률 1% 증가시 출산력이 0.01명 증가된다고 보고하였음.

- 최근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육아지원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약 38%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음.

— OECD에서는 OECD 국가들의 보육 지원 접근방식을 공공제공방식, 책임공유방식, 자유방임방식의 3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제공형은 북유럽국가들처럼 시설설치부터 운영을 주로 국가가 책임지는 유형임.
- 책임공유형은 독일, 스페인처럼 부모와 정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유형임.
- 자유방임형은 자녀보호를 기본적으로 가정의 책임으로 보는 유형으로 미국이나 호주를 예로 들고 있음.

□ 보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첫째, 보육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침.

-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애착관계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기재로 인식되고 있음.

— 둘째,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줌.

- 특히 발달적 자극이 부족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학습경험이 인지발달에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셋째, 사회성 발달은 유아의 전반적인 생활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지적 능력과 활동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됨.

— 이상과 같이 결과는 보육서비스와 아동발달과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보육서비스의 확충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한 보육시설이 중요함을 시사함.
  - 양질의 보육환경은 아동이 인지발달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제시함.
  -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은 열악한 가정환경이 유발할 수 있는 발달장애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임.

□ 자녀보육 관련 선행연구

— 보육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유형과 가구소득을 들 수 있음.
  - 가구형태, 특히 가족 내에 친·외조모 등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에 보육시설의 이용률 및 이용시간을 떨어지며 영아에 경우 그 영향이 더 큼.

— 모의 특성 중에서는 여성의 취업, 근로의 유연성, 근무시간, 교육수준,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의 가치 등이 보육 유형에 영향을 줌.
  - 아동보육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취업임.

— 아동 변수 중에서 보육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아동의 연령임.
  - 아동의 연령이 3세 미만이면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이웃에 의한 가정 내 보육을 선호하게 되고 3세 이상이면 시설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2002년 자료 분석결과는 거주지역은 읍·면부에 살수록 3세아 보육이용이 높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가구유형이 3·4세대인가 하는 점은 2세아 보육시설 이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친인척에 의한 보육 이용률에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함.

— 가구소득은 많을수록 3세 이상아의 기관 이용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학원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

은 가정의 아동이 이용함.

— 모의 학력은 중학이하이냐 아니냐하는 기준은 가구소득과는 반대로 3세 이상 아 중 모의 교육수준이 중학이하이면 그 이상인 가정에 비하여 보육시설을 더 이용하고 학원과 유치원을 덜 이용함.

— 모의 결혼상태가 유배우상태인 경우 유치원을,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모의 자녀는 보육시설, 선교원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서 미취업모의 자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2절 자녀양육의 변화

□ 사회 변화와 자녀양육

— 자녀양육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와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변모되어 왔음.

- 농경사회, 부계중심의 확대가족 속에서 여성은 엄청난 가사노동과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아동 양육의 일정 부분이 자연스럽게 친조모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었음.

—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가족은 노동력의 재생산 및 소비기능만을 하게 되고,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구조로 변모하게 되면서 가족 내에서 성별 역할구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 즉, 남성은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소득을 올리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과 육아를 전담하는 일을 당연시하게 되었음.

—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가정 내 이분법적인 역할 구분에 커다란 의식 변화가 오게 됨.

-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당연시되었던 가족 내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면서 다른 양육지원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음.

—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보육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됨.

- 보육의 사회화는 출산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여성취업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현황

— 2004년 말 현재 보육시설수는 25,319개소임.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던 1991영 3690개소에 비하면 크게 증가되었고, 보육아동 수도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여 1991년도 89,441명에 비하여 2001년은 93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이용비율은 2002년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증가된 것임.

- 영아는 10.1%에서 19.3%로 증가하였고, 유아는 28.4%에서 41.1%로 증가하였음.
-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54만명이므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약 147만의 아동이 제도화된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 이는 아동대비 비율로 보면 0세는 5.3%에 불과하고 아동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만5세아는 78.9%가 됨.

—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취업모의 영아는 보육시설 25.8%를 포함하여 28.5%가 기관을 이용하고 혈연, 비혈연 등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율이 71.5%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육시설이 취업모 영아 보육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유아의 경우는 비혈연으로부터의 지원은 상당수가 기관 이용과 함께 이용하는 중복 이용이지만 36.8%로 미취업모 5.3%에 비하여 높다.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 15.9%, 친인척 13.9% 및 선교원 2.6%로 주요한 보육·교육 수단임을 나타내고 있음.

제3절 미취학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 한 가정에서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하여 특정 서비스를 보육·교육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 데 관한 것임.

- 보육·교육서비스의 선택에는 보육시설 등 보육·교육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기능,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소요비용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임.
- 또 한편으로는 대체인력이 있는지 등의 아동 가정의 특성, 취업 등 모의 특성 및 연령과 같은 아동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별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차이를 밝혀서 각 서비스의 이용자의 특성을 규명함.

- 아울러 이들 보육·교육서비스이용에 대한 소요 비용과 이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파악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 첫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모의 특성 및 아동특성을 규명함.

- 즉, 거주지역, 가구형태, 가구소득 등 가구특성, 모의 연령, 학력, 결혼상태, 취업여부, 취업형태, 소득 등 모의 특성 및 아동의 성과 연령 등 특성별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보육·교육서비스별 이용률 결정요인을 규명함.
-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출산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 종전 분석 결과와 연도별 비교를 실시하여 이용요인의 변화를 파악함.

— 둘째, 보육·교육서비스별 소요비용을 분석하고, 소요비용이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함.

—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이용행태의 변화를

추정하고 앞으로의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

□ 분석자료 및 방법

— 본 분석은 '2003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심층분석으로 보육관련 자료 중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관련 자료임.

- 보육관련 문항은 한 가구에 대하여 초등학교 이하 연령 아동 3명까지를 대상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을 조사하였고, 아동 각각에 대하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최대 3가지까지 응답하였음.
- 본 분석 자료는 미취학아동이며, 아동 개인 단위 및 기구단위의 두 가지 형태로 이용되었음.

— 서비스 결정요인 분석

- 먼저 이용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에 관련 변수는 본 출산력 조사 1차 분석 결과(김승권 외, 2004)와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서문 희 외, 2002)와 2004년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요구조사 결과(서문희 외, 2005)를 참고하여 본 분석에 이용 가능한 조사 자료 중에서 아동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선정하였음.
- 선정된 독립변수는 거주지역, 가구특성 변수로 거주지역, 가구형태, 주택유형, 주택소유여부, 가구소득, 모의 특성변수로는 학력, 결혼상태, 취업유무, 부의 학력, 그리고 아동 변수로는 연령임.
- 한편 종속변수는 각 서비스 이용여부임.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독립변수에 의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및 분산분석 검증을 실시하였음.
-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실시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 중 노미날 변수는 더미화하였음.
-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는 소요되는 비용 및 비용 지불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아동연령,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임.

-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독립변수에 의한 보육·교육비용의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 분석 및 분산분석 검증을 실시하였음.

□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결정요인을 보면 핵가족보다는 3~4세대 가족이, 거주지역이 읍부가 동부에 비하여, 모의 특성은 이혼·사별·별거가 유배우에 비하여, 취업이 미취업에 비하여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음.
  - 연령은 어릴수록 보육시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Wald 값은 연령, 모 취업, 혼인상태, 가구유형의 순이고, 특히 연령과 모 취업의 값은 매우 높음.

— 보육시설 이용 결정요인을 보면 거주지역이 읍부가 동부에 비하여, 모의 취업이 미취업에 비하여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음.
  - 아동의 연령도 많을수록 보육시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음.
  - Wald 값은 연령, 모 취업, 거주지의 순이다. 가구소득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 자가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아직도 중산층 이하가 보육시설을 선호함을 반영하였음.

□ 미취학 아동 보육·교육비용

— 보육과 교육에 비용을 들이는 비용을 지출한다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65.5%임. 아동 연령이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특히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증가함.

— 연령별로는 0세아 33.4%로부터 연령과 함께 정적인 관계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음.
  - 0세아는 단지 9.6%만이 보육교육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세는 26.5%, 2세아는 53.4%로 증가하면, 3세아가 되면 84.1%로 증가하고 5~6세아는 96%에 이르게 됨.

— 취업모 자녀가 보유교육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미취업모에 비하여 4.8% 포인트가 높음.

— 아동을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보면, 영아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9.4% 포인트가 높고, 유아는 4.9% 포인트가 높음.

— 가구소득별로 보육교육비용 지불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99만원 이하인 가구 중 아동 보육교육비용을 지출한다는 비율은 49.7%로 과반수 정도이지만 250만원 이상은 이 비율이 70% 수준으로 증가함.

— 영유아 전체 평균은 12만 5800원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교육비용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영아는 0세아 1만 6100원, 2세아 4만 2000원, 2세아가 평균 8만 1300원임.
- 유아는 3세아 13만 9300원, 4세아 18만 7700원, 만5세아 21만 1800원, 만6세아 22만 1700원임.

—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비용은 차이가 달라지며,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높아짐.

- 0세아는 460명 중 10%미만인 44명만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만 6세아는 151명 중 145명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이 지불하는 비용은 월 평균은 19만 1800원이고 아동연령별로는 0세아 16만 7500원, 1세아 15만 8600원, 만2세아 15만 2600원, 3세아 16만 5700원, 만4세아 20만 300원, 5세아 22만원, 만6세아 23만 1300원의 순으로 연령이 많아지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짐.
- 또한 표준편차나 최대값을 보면 아동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0세아도 최대는 50만원, 1세아 최대 94만원 등임.

— 영유아에게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대한 비율을 보면 평균 52%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 비율은 아동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비율도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0세아는 33.4%이고 영아인 만2세까지는 50%미만인데 유아가

되면서 50%를 넘게 됨.

— 교육비가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로 분석되었음.
  - 이는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아동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비율도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냄.
  - 교육비가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미취업모는 8.3%, 취업모는 7.4%로 나타났음.

— 가구소득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 비용 대비 비율이나 가구소득대비 비율 모두, 영아나 유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먼저 전체 아동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보육교육비용의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경향이고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한데, 유아보다는 영아에게서 그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남.
  - 특히 99만원 이하는 소득대비 약 32%를 보육·교육비용으로 지출하고 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4.6% 수준으로 낮아짐.
  - 영아는 99만원 이하는 12%로 소득수준에 따라 점차 낮아져서 4%까지 낮아지며, 유아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는 31.9%이고 500만원 이상은 4.7% 임.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 특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 첫째, 가구 유형은 2000년 자료 분석과 비교하여 보육시설 이용에서 가구 유형은 유의성이 없어졌음.
  - 이는 외가 등 별거하는 조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둘째, 가구소득은 유아의 경우 유치원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2000년 자료나 2003년 자료 모두 마찬가지임.
  - 이는 보육시설이나 학원 이용이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보편적 이용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됨.

— 셋째, 모의 취업은 영아보육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임.

- 그러나 유아는 모의 취업변수는 본 분석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넷째, 학력은 유아의 경우 모의 학력 변수는 대졸 이상이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고, 부의 학력 대졸 이상은 학원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줌.

-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나 학력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차별적 이용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음.

— 이외에 아동연령은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은 늘고 비혈연에 의한 보육은 감소함.

-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 일반주택 거주가 보육시설과 친인척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며, 동 지역에서는 친인척 이용이 높음.

□ 보육비용

— 가구소득수준별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가구소득에 따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냄.

- 영아는 99만원 이하 11.3%부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하여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은 44.8%가 됨.
- 유아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8.0%부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한다. 가구소득 350만원 이상에서 98%까지 높아지고 500만원 이상은 91.1%로 다소 낮아짐.

〔제4부 결론부〕

제1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제1절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가치관 변화전망

— 혼인가치관은 지금까지의 변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자녀가치관은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선호가치관은 현재의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임.

—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모두 취업에 대한 가치관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의 지속적 향상,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 자녀교육비의 증대, 가구경제측면에서의 필요성, 가족생활의 질 향상 욕구 등으로 인하여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가족 변화전망

—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미혼남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새로운 가족형성이 감소될 것이며, 반대로 미혼가정은 증대될 것임.

- 이는 가치관 변화에서 기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가족형성에 요구되는 결혼기 미혼남녀의 직장안정, 적정 경제력 유지, 주거안정 등이 불안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됨.

— 이혼가정이 증대되어 미성년자녀 양육문제, 가족기능 약화로 연결되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따라서 이혼가정이 가족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기능이 약화된 이혼가정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여야 함.

—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점진적 약화로 가족구조는

다양하게 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질(質)은 가족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형태에 따라 매우 상이하였으며,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특성을 적극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만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 가족형성의 지원정책 강화

— 모든 미혼남녀가 직업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결혼생활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취업의 기회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결혼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결혼생활에 요구되는 주거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가족형태를 불문한 가족기능 강화정책

— 이혼의 증가와 함께 발생되는 이혼가족의 생활안정과 가족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혼가족의 가족생활과 구성원간의 상호 적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재혼가족원의 가족생활 및 구성원간의 적응과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한 재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인구전환기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될 노인가족의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노인가족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지원, 가족관계 증진, 건강보장 서비스 및 '건강한 삶' 교육, 노후 '행복한

삶' 교육, 통합적 여가문화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것임.

—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가족부양 기능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거나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함.

— 노인부양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정보를 노인부양 가족원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공함.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발전 장애요인 제거 방안

—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를 개선하여야 함.

• 이는 가정생활의 돌봄 노동과 가사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축되어야 함.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취업의 중단을 최소화 하고, 출산 후 재취업의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분만휴가,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양성평등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가족형태 및 혼인형태를 불문한 아동양육의 책임성 강화 방안

—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함.

•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함을 의미함.

— 방과후 학습의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취학자녀들이 방과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 영아~대학생까지 소요되는 전체 자녀양육비용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함.

• 아동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자녀양육비는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유아 보육에 국한된 사회적 지원을 아동의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여야 함.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및 부대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대학수학의 기회를 확대하여 빈곤의 세대전이를 차단함.

□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방안

— 양성평등 및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으로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부부관계모형, 부모-자녀관계 모형 등 '적정 가족모형'을 제시하고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등을 실시함.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과거의 수직적, 소유적, 종속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인격적, 독립적 관계의 정착을 위한 가족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함.

— 기혼여성의 취업증대에 따른 가족내 여성역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 임신·출산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care services)를 대폭 확충함.

- 기혼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및 가구경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증대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를 고려하여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돌봄 서비스를 사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함.

□ 가족친화적·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근로자가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모두 중요시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조성되고 기업내규가 변화되어야 함.

- 취업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휴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결혼·임신·출산과 관련 있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함.

□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체 학교 및 사회 교육과정과 정보매체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극복을 위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함.

제13장 결 론

□ 인구전환과 가족환경의 변화

—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변동과 함께 인구관련 사건들(events)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어 지대한 영향을 줌.

- 특히, 한국사회에서 최근 사회문제도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민 개개인과 개별가족, 전체 사회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지속적 가치관 변화와 급격한 사회변동에의 적응을 위한 가족의 체질강화를 유도하고, 가족친화적 복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임.

— 과도한 복지재정지출은 국민의 세(稅) 부담을 과도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 효율적 가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족과 사회'가 분담하는 형태의 국가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즉, 가족의 기능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구현'은 복지재정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임.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 론

제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과 선행연구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급격한 인구변동을 경험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어 본격적인 저출산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즉, 1960년대의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의 출산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고,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더군다나 2003년부터는 15~49세의 가임여성층이 축소되어 출산율이 다소 상승한다 하더라도 출생아수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변동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어울려 국가의 구성요소인 인구의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쇠한 한국'을 조장하여 국가생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게 될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를 야기할 것이며, 고령사회는 2019년,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 나타난 출산율의 지속적 저하현상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에 의한 경제활동참가의 증가, 모성보호제도의 미흡 등 가족을 둘러싼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실업, 가구경제의 불안정, 과도한 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한 자녀양육비 부담 등이 가세되어 낮은 출산수준 상태에서 안정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으며, 조만간 '재앙'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은 변화되어 결혼 및 자녀출산이 선택적이라는 견해가 증대되는 등 공동체적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1년 30.6.%이었으나, 2000년 26.2%로, 2003년 25.7%로 감소하였으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은 1997년 73.7%에서 2000년 58.1%, 2003년 54.5%로 감소하였다. 또한 핵가족화와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구조의 다양화, 가족기능의 약화, 그리고 가족생활양식의 다양화 등 가족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여성취업의 증대로 맞벌이 가정은 날로 증대되어 여성의 생활능력 향상과 연결되어 가족해체의 증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출산율 저하에 의한 자녀수의 감소, 가치관 변화 등으로 부모의 부양실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모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부부만의 독자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경향이다.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들의 부양실태 파악은 가족복지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실태 및 노부모 부양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노부모 부양가족의 지원대책 등 사회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이다.

결혼, 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가족주기도 변화하며, 이에 따라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양상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형성기의 시발점인 결혼과 함께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또한 자녀출산기인 가족확대기에도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주기 단계별 취업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녀양육 부담은 저출산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여성경제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 가정 및 기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비 지출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정책차원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전환기에 있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주기, 가족생활 등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여 효율적인 인구 및 가족관련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결혼 및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 남아선호가치관, 부부관계가치관 등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양상을 전망한다. 둘째,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주기, 가족생활, 여성경제활동, 자녀양육 등 다양한 가족관련 변화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양상을 전망한다. 셋째, 이를 통하여 인구전환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전망에 따른 가족안정화 및 건강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효율적 가족정책 개발 및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과 선행연구

나. 가치관 변화와 가족생활

- 한국사회 혼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한국인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 변화와 기혼여성의 출산행위 요인분석
-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자율성, 그리고 이혼태도
- 자녀가치관 및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결정요인

다. 한국가족의 다양한 생활양식 변화

-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유형별 관계 및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 자녀규모의 결정요인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 기혼여성의 가족주기와 취업결정요인
- 자녀양육 실태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라.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와의 대응방안

-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2. 연구방법

가. 기존문헌 고찰

- 인구변동 및 가족변화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나. 기존 전국 조사자료 재분석

-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 2003년 미혼남녀 실태조사 자료
- 2003년 자녀양육 및 비용부담 실태조사
- 통계청 인구 및 가족관련 조사자료

다. 통계분석 방법

- 빈도분석
- t-test, ANOVA에 의한 유의도 검증
- 다중회귀분석(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

라. workshop 및 정책자문회의 개최

연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고서 검독자를 포함한 원내·외 전문가와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여 세 차례의 workshop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workshop은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두 번째 workshop은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당초 계획된 대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workshop은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가족관련 각계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참여한 정책자문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외에 다른 연구결과에서 나온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가치관 및 가족변화를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책적 및 학문적 대응방안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기 위해서였다.

제 2 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과 선행연구

제 1 절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이론

가치관 및 가족변화 관련연구에 적용되는 이론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 중요성을 달리한다. 가치관은 매우 주관적이고 문화적,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환경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은 구성원들의 생물학적, 심리적 특성 등 내부적 다양성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외부세계와 맺는 다양한 상호연관성으로 인하여 접근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 역사적 변화를 경험하는 매우 복합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가족연구의 개념 틀은 사회학, 가정학, 심리학, 여성학 등 각 학문분야에서 정립된 일반이론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가치관 및 가족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생태이론, 교환이론, 가족발달이론, 가족체계이론, 여권주의 이론,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7가지 이론 또는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생태이론

생태이론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과 사회적 존재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동 이론에서 가족은 물리·생물학적 환경, 인간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환체계(transformation system)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생태이론에서 강조되는 주요 개념은 개인과 가족의 생성과 사용, 자원관리와 적응, 인간발달, 그리고 환경유지 등이라 하겠다.

생태이론은 본래적으로는 가족과정(family process)이나 가족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아니지만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가족 내 과

정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즉, 인간발달을 설명하는 생태이론이 가족의 발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가족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태이론이 가족연구에 접목된 것은 사회개혁,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행, 공교육의 확대, 가족보건 및 가족복지에 대한 관심이 팽창하던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1960년대부터 인간행동과 질적 환경과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현상을 전체주의적·체계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하겠다. 사실 가족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태이론을 응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가정학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개인, 집단, 사회전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을 강조하였다.[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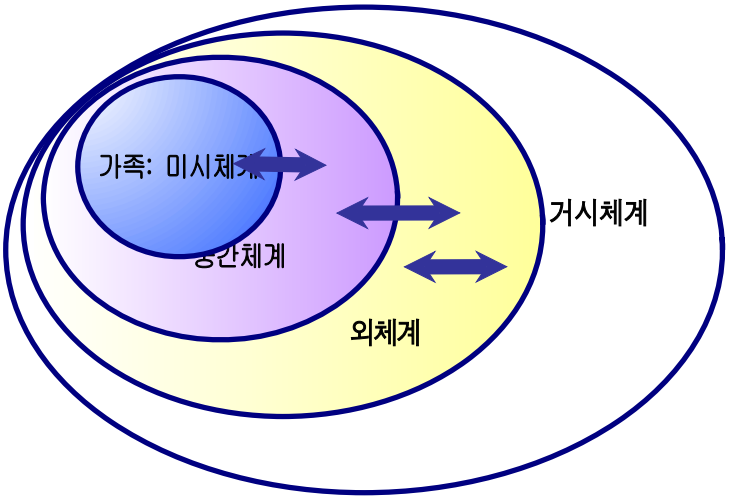
한편, 가족생태이론(Family Ecology Theory)은 생태이론과 체계이론의 주요 개념과 논리를 포괄하는 이론으로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를 가족체계 및 가족자원의 관리적 차원에서 포괄하고 있다. 즉, 개별 가족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전체체계로서 접근하면서, 가족을 둘러싼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련의 생활전체를 포함하여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연구 및 가족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틀로서 평가받고 있다.

Bronfenbrenner(1979)는 생태이론을 가족과 인간발달에 적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개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생활의 장(場)으로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인간발달의 과정에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생활의 직접성(immediacy)의 정도에 따라 4대 생활체계로 분류하였다.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개인이 경험하는 일차적 물리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역할 및 대인관계 유형 등을 포함하고, 중간체계(mesosystem)는 개인 또는

주1)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인간과 가족의 생존, 그들의 삶의 질, 환경보호 등의 개념이 주요 관심이 되었음. 더 나아가 의식, 가치관, 의사결정, 적응을 위한 인간행동 등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되어 사회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가족학, 보건의료학, 가족치료학 등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학제적(interdisplinary)으로 접근되었음.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주2) 외체계(exosystem)는 개인이나 가족이 적극적 참여자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이들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손위 형제가 다니는 학급, 부모의 친구관계, 조직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macrosystem)는 기본적인 신념체계가 이념과 함께 하위체계들(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에서 나타나는 일관성(consistencies)으로서 하위체계의 문화수준이나 문화전반의 수준에 존재한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4대 체계



한편 이들 4대 체계를 관통하는 또 다른 체계는 시간체계(chronosystem)인데,

주2) 아동가족원의 경우는 가정과 학교, 동료와 이웃 사이의 관계이며, 성인의 경우는 가족, 직장, 사회생활 사이의 관계를 중간체계로 볼 수 있음.

이를 생태이론에 도입함으로써 이들 체계간의 상호작용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발달과 함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가족생태이론의 주요 이론적 전제는 다음과 같다. ①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생태체계의 내적작용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② 인간조직으로서 가족은 인간생활체계의 집합체이며 가족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③ 가족은 부분적으로 외부환경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으며, 목표 지향적이고, 역동적으로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부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며, 특히 가족의 적응과정은 가족체계 내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다양한 외부체계는 상호 연결되어있거나 영향을 주고받는다. 또한 물리적·생물학적 환경은 인간생활에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사회문화적 환경 및 인간환경과도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진행한다. ⑤ 가족은 에너지 변환체계로서 자원의 관리, 상호작용, 그리고 적응을 위한 창조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⑥ 가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2대원칙은 물리적·생물학적 원칙과 사회적 관습과 같은 규칙들이다. ⑦ 외부환경은 인간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행동을 제약할 수 있으며, 가족을 위한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한다. ⑧ 가족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양한 조정과 자율의 권한을 갖고 있다. ⑨ 의사결정은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조정역할을 수행하며, 가족의 의사결정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생태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족관련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가족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가족체계 내에서 그리고 외부체계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족의 연령, 성역할구조, 가족구조에 따르는 가족체계과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족은 외부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며 자원을 변형하여 환경에 적응하는가? 가족과 환경의 관계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규명하는가?

둘째, 개별 가족구성원과 가족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은 가용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가? 가족자원의 활용 형태는 가족생활의 질과

외부환경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셋째,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가족의 의사결정이 외부환경 특히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넷째, 다양한 형태의 외부환경의 변화는 가족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인간유전자와 외부환경의 유기적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가?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새로운 외부환경에 적응할 때 가족체계는 어떠한 적응기제를 활용하는가? 가족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무엇이며 이들이 인간발달에 주는 영향 및 효과는 무엇인가?

다섯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환경을 관리하고 창조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외부환경체계를 변화시킬 것인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를 위해 가족체계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체계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여섯째, 가족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제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들 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

2.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사회적 관계를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확대된 '시장'으로 본다. 즉, 가족원간의 교환은 부부간 및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광역 사회와의 관계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동 이론은 인간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가정(假定)하였다. 인간은 '보상 추구-처벌 회피'하려고 노력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익 극대화-비용 최소화'를 추구하고, 합리적 행위자로서 행동하기 전에 그들이 소유한 제한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보상과 비용 계산-대안 마련'을 한다. 또한 보상 및 비용의 평가기준은 사람에 따라, 시간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보상가치는 개인의 기대가 클수록 크며 점차 보상가치는 낮아진다. 논의의 핵심인 보상과 비용의 개념은 가장 보편적인 물질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 측면과 육체적 측

면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김승권 외, 2000b; 김승권 외, 2003; 최경석 외, 2003).

교환이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가족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중요한 개념적 틀이 되었다. 이들 연구는 미국사회학계에서 주로 발전된 개인주의적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가족연구에서 동 이론은 배우자 선택, 결혼여부 및 결혼시기, 출산시기, 부부관계, 부부권력관계, 부모자녀관계, 이혼결정 등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배우자 선택과 관련해서는 상호간에 소유한 제반 자원에 의해 보상정도가 평가되어 선택행위가 일어남을 전제한 것이다. 이때 각자가 지닌 자원은 심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 이는 많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결혼이 동질혼(homogeneous marriage)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서 엿볼 수 있다.

한 개인이 결혼여부 및 결혼시기를 결정할 때 결혼으로 인한 보상이 없거나 더 큰 손실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킬 것이고, 반대로 손실이 없거나 보상이 있다면 '손실-보상'을 고려하여 보상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는 합리적 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결혼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면 동거, 독신 등의 대안적 형태의 관계보다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4b).

한 부부가 출산시기를 고려할 때 출산으로 인한 보상이 없거나 더 큰 손실이 있다면 자녀 갖기를 포기하거나 늦출 것이다. 즉, 한 개인은 출산에 의해 자녀를 갖는 것보다는 출산을 지연시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이고 보상이 크다면 무자녀로 생활하거나 적은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

교환이론은 의사소통, 결혼의 안정성, 성역할 및 성평등, 가정폭력, 부부권력 등의 부부관계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취업, 세대간의 보상문제 등의 부모자녀관계를 규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한 부부가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환이론이 적용 가능하다. 즉, 한 부부의 쌍방 또는 일방이 결혼생활의 대안적인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즉, 남편과 부인이 공정한 교환관계를 이루

고 있음이 일반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상태가 불공정하게 되거나 불균형을 이룰 때 이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Klein & White, 1996).

3. 가족발달이론

가족발달이론(family development theory)은 가족의 생애과정(family life course)의 단계가 이동할 때 경험하게 되는 체계적이고 유형화된 변동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는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사회제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개인적 시간(individual time)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족시간(family time)이 있음을 말한다(정창수 외, 1997).

가족발달이론은 '가족생활주기의 개념'과 '발달과업의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였다고 보겠다. 가족의 각 단계별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도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 동 이론은 가정과 개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과 동일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시간을 통한 가족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상이하다. 또한 가족연구에서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가족사건의 흐름을 중요시한다. 이는 친족구조내 성별, 결혼, 혈연관계 및 세대관계 등으로 규정되는 지위(position), 집단과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회적 규칙으로서의 규범(norms), 그리고 친족 지위에 수반되는 모든 규범으로서 가족역할(family roles) 등의 개념을 갖는다.[주3)]

대표적인 가족발달이론가는 Duvall(1977)은 가족발달과업을 "가족생활의 특정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장에 대한 책임으로 성공적으로 달성되면 만족을 가져오고, 그 이후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지만, 달성이 실패하면 가족이 불행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그 이후의 발달과업의 수행에 어

주3) 그 외에도 가족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는 가족이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한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변환(transition), 가족경로상의 특별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범의 집합으로서 발달과업(development tasks), 초기 가족생활주기의 개념을 대체하여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간의 시간간격과 사건 모두를 합쳐 비목적론적으로 기술하고자 한 가족경로(family career), 그리고 일정한 출생집단과 역사적인 시기 내에 규범의 강도를 나타내는 변형(variations) 및 일탈(deviations) 등이 있음(Klein & White, 1996).

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가족발달이론에 의한 부부관계에 대한 주제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역할변화, 부부의 지위 및 권력 변화, 부부의 취업과 가족생활주기와의 관계, 취업자녀 및 자녀결혼과의 관계, 성인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하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저출산 시대의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의 관계는 가족발달의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건(events)에 따른 개별과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

4. 가족체계이론

가족에 대한 체계이론은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 Theory)에서 유래되었다. 일반체계이론은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에 따른 체계모형에 기반을 두어 자연 및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모든 지식·이론을 통칭한다. 일반체계이론은 ① 체계이론들은 모두 과학으로 통합될 수 있고, ② 체계는 구성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전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리고 ③ 인간체계는 독특하게 자기성찰적인 체계라는 세 가지 주된 가정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체계이론의 개념과 사고체계는 정신병리학의 통로를 통해 가족학에 도입되었다. 많은 정신병리학자들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고, 가족치료의 기초를 그러한 전제에 기반 하도록 하였다.

가족에 대한 체계이론은 일반체계이론뿐 아니라 정보이론 및 인공지능학의 영향도 받았다. 이들 이론은 모두 정보의 획득과 전달, 통제 및 그 효과, 그리고 이들과 체계의 조정·유지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중심주제로 하였다. 이는 가족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에 많은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가족체계이론의 주요 학자인 Bowen(1977)은 가족문제는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가족체계적 증상이며, 개별가족원의 지적 체계와 정서적 체계가 잘 분화되어 있으면 긴장에 잘 대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적절히 분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서적 체계가 지적 체계를 지배하여 감정에 의존하게 되고 적응력이 없으며, 융통성이 낮아지게 되어 결과

적으로 가족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가족원은 가족 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각기 하나의 집단 또는 체계로서 작용하는데 기초하여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원에게 발생되는 모든 것이 모든 가족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본다. 체계이론에 기반을 둔 가족연구의 대부분은 가족치료에서 보이는 임상훈련 및 실제와 관련되는 것들인데, 부부와 가족의 상호작용,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 등 가족의 역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부부와 가족유형의 분류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5. 여권주의 이론

여권주의 이론은 구조기능 이론에 대한 반대 이론으로 맑시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특히 동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본질적 모순인 계급적 대립과 갈등의 재생산 기제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차별적 성(gender)간의 갈등과 착취를 구조화하는 기제로 규정하였으며(Elliot, 1986), 그 모순의 지양을 위해 끊임없이 비판되고 혁신되어야 할 사회적 실천의 대상이라 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억압 및 차별은 가족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회정책 또는 복지정책은 여성이 제공하는 무급 또는 저임의 노동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성차별적 사회질서는 국가 및 기업 등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조장·유지되는 측면도 있다(Daly, 1997). 여권주의적 시각은 특히 가족의 전통적 부양체계에 사회보장의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반복지국가적 성격(성경륭, 1998; 이미경, 1999)을 규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여권주의 이론에서는 가족이 단일한 이해와 목적을 가진 하나의 행위체가 아니라 가족원간에도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場)으로 보았다(Hartmann, 1981). 따라서 여성운동의 이념적 근거이자 실천적 전략으로서 여성의 의식변화 및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가족 내에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노인봉양 등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가족

과 사회(생산관계)에서 남성권력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은 현대 사회의 가부장적·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족은 성별분업의 역할분리 개념 하에 남성을 위한 가족서비스를 보장하고, 자녀들을 성에 따른 역할로 사회화시켜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제도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인구전환기의 가치관 및 가족 변화'와 관련하여 여권주의 이론은 가족의 구조와 역할구성에 있어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 전통적 성별분업의 부정, 여성취업의 중요성, 출산 및 자녀규모 결정에 대한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중요시 한다.

6.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의 가족변화가 전통적 이론으로 적절히 논의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동 이론에 기초한 가족에 대한 논의는 구조기능론적 가족에 대한 반대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비판이론과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가족을 개념화하고 있다.

불확실성, 불연속성, 비결정성, 다원주의 등을 사상적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가족론자들은 가족을 총체적인 사실로 보는 것이 무의미하며(조은, 1995), 현실의 무한한 다양성의 인정을 핵심적 주장으로 한다. 이는 가족의 생산과 재생산 작업이 감퇴하면서 핵가족 형태가 약화되었고,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가족변화가 정상적 가족생활에 대한 현재의 문화적 정의에 의해 결코 설명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파괴적이거나 혁명적이라기보다는 단지 그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공식문화 또는 지배문화의 규범에 저항함으로써 가족문화 영역을 보다 넓게, 그리고 보다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구자순, 1994).

'특정한 가족'은 그 역사가 비교적 짧고, 또 그러한 가족이 뚜렷한 사회형식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데도, 윤리적·규범적 처방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여러 측면에서 '특정한 가족'의 담론에 동조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능력뿐만 아니라 제약도 강조하게 된다. 그 말의 사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what actually exits)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야만 하는 것'(what ought to be)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키기도 한다(Gubrium & Holstein, 1990).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이 일반적인 핵가족이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비정상적' 가족으로 규정되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은 그 자체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즉, 한 사회의 필연적 구성물로서 특정한 형태의 가족형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편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소위 (핵가족의)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가족형태들에 대한 비의도적 억압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가족론자들은 가족개념에 대한 해체작업을 그들의 주과제로 규정하였다.

제 2 절 가치관 및 가족변화의 선행연구

1. 가치관 변화의 선행연구

인구전환기의 가치관 변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족가치관, 혼인가치관(결혼가치관, 이혼가치관, 재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이상자녀수, 남아선호가치관, 양성평등가치관,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 등이 핵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치관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임신 및 출산관련 제반 행태뿐만 아니라 가족생활방식과 가족구성원의 개별행위 등에 영향을 준다. 특히, 가족관계의 핵심인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관련된 가치관은 우리나라 가족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아 왔다. 즉, 전통적 가족이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직계가족이었다면, 현대가족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생활양식이나 구체적 가족관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김승권 외, 2000b).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이러한 가치관 변화의 결정적 원인이자 또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가족관계 가치관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8개 지표에 의하여 15~64세 기혼여성의 가족관계가치관을 살펴보았다(김승권 외, 2000a). 그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및 부부관계 가치관

내용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반대	절대 반대	모르겠음	계(수)
•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	13.0	61.9	6.2	16.0	1.2	1.6	100.0 (10,320)
•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영역이 있어야 한다	17.9	50.4	10.7	16.7	2.9	1.4	100.0 (10,315)
•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	2.2	24.9	13.6	39.9	8.4	11.0	100.0 (10,255)
•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6.4	33.6	7.0	44.7	8.3	-	100.0 (10,222)
• 부모라도 매사에 자기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를 대해야 한다	23.4	72.9	2.1	1.4	0.2		100.0 (10,256)
•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기르는 것이 좋다	16.8	53.0	5.0	22.5	2.7		100.0 (10,263)
•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부모님보다 자식에게 더 잘해야 한다	1.3	13.1	7.1	60.6	16.4	1.5	100.0 (10,304)
•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	14.3	57.1	10.5	15.1	1.3	1.7	100.0 (10,298)

자료: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표 재구성.

첫째, 결혼을 개인간의 관계로 보는지, 아니면 양가의 관계로 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란 부부개인보다는 남편가족과 부인가족간의 관계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74.9%가 동의를, 17.2%가 반대를 하였다. 즉, 많은 부인이 결혼은 개인당사자의 관계보다는 가족과 가족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둘째, 부부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영역이 있어야 한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기혼여성의 89.5%가 (매우)동의하여, (절대)반대 4.7%보다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부부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셋째, 확산되고 있는 부부관계 중심의 핵가족상이 부부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가장 우선시하는 서구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생활의 불만족은 이혼사유로 충분하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응답부인의 27.1%가 이에 대하여 (매우)동의를, 48.3%가 (절대)반대를 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의 성생활만족 여부가 결혼관계 지속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기혼여성의 40.0%가 찬성을, 53.0%가 반대를 하여 자녀의 성취를 통한 부모의 대리만족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녀를 통한 부모의 대리만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도 낮이 않음으로 보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부모-자녀관계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서 '부모라도 매사에 자기 자녀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여 자녀를 대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의 96.3%가 (매우)동의하였으며, (절대)반대하는 경우는 1.6%에 불과하였다.

여섯째, 성 역할에 기초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또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기르는 것이 좋다'에 대한 의견은 69.8%가 찬성을, 25.2%가 반대를 나타내어 성 역할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이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부모님보다 자식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기혼여성의 77.0%가 (절대)반대를, 14.4%가 (매우)동의를 하고 있어 자녀 부양책임과 별도로 부모 봉양의 책

임을 중요시주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근대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부인일수록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별도로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독립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자신의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자식보다 배우자에게 더 잘해야 한다'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71.4%가 (매우)동의하였으며, (절대)반대하는 경우는 16.4%이었다. 따라서 많은 부인들은 남편이 자녀보다 자기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의하여 가족가치관을 측정한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나타난다. 15~59세 유배우부인이 있는 11,217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행복요인으로서 가족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의 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였다. 그 밖의 조건들을 가정행복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즉,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은 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김승권 외, 2004a).

한국 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변화하여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통사회에서는 금기시하였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결혼,

---

주4) 노후 독립생활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통계청(1997, 1999)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해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1994년 87.3%(여성의 경우 85.8%)에서 1998년 89.9%(여성의 경우 89.1%)로 증가함. 단, 사회변화에 따라 노부모부양 태도는 장자중심에서 아들·딸 모두 또는 능력있는 자녀 등으로 그 부양주체가 보다 다원화, 양성평등화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이혼, 재혼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00a).

혼인가치관은 결혼가치관, 이혼가치관, 그리고 재혼가치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저출산 시대에 혼인가치관이 중요시되는 것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즉, 가족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은 출산의 기회가 감소됨을 의미하며, 이혼의 보편화는 가족불안정을 초래하여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지지한다. 즉,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독신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으나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고연령층 일수록 결혼이 성인의 기준이 되는데 대한 비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문화방송, 2004).

이혼가치관은 최근에 이를수록 관용적인 입장이 더 많았으며 이혼사유로는 폭력,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 등이 제시되었다. 또 이혼을 꺼리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영향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 거주자들이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이혼에 대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이정화, 2002; 김승권 외, 2003; 문화방송, 2004).

마지막으로 재혼가치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선행연구에 의해 살펴본다. 최근 일수록 재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김승권 외, 2000a; 김승권 외, 2004a). 또한 김연옥(1999)은 우리나라 40세 이상 중년남녀들은 혼자 남게 되었을 경우 남자는 53%, 여자는 50%가 재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의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자녀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이효재, 1989), 자녀가 주는 보상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부모 됨에 대한 수용과 실제적인 자녀양육과는 별개이므로 그로 인한 신체적 긴장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DINK족의 출현과 같이 자녀를 갖는 것에도 선택의 개념이 들어오며, 사회 일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하나로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도 등장하는 등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체도 변화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옥선화 외, 2000).

전통적인 한국 가족에서는 결혼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가계계승이다. 따라서 자녀, 그것도 아들을 출산하는 것은 결혼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관은 오늘날 남아선호사상이나 결혼에 있어 출산의 보편화를 강요하는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의 의미도 전통 사회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거나 세대 재생산, 노후 부양자 사회화의 의미로 보았지만, 현대에 오면서는 개인적으로 갖는 기쁨이나 즐거움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국내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연구는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연구(이효재, 1973)에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조남훈 등, 1997; 차재호 등, 1975)와 가족가치관내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박인덕, 197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옥선화 외, 2000)되기도 하였다. 박성연(1986)은 자녀양육 경험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세대차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통해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조성남(1998)의 연구는 과거의 자녀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과거와는 달리 자녀를 꼭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률이 20대와 30대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20~40대에서는 매우 소수의 의견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자녀관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최근 문화방송 가족조사의 결과(2004)를 보면, 유교적 가족이념이 드러나고 있는데, 즉, 부모세대가 교육이나 직업과 관련해서는 아들·딸의 차이를 부정하지만, 사생활 관리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딸들에 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에서는 서구와 달리 자녀를 부모의 소유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녀부양의 책임기간이 긴 편이다. 특히 오늘날 전반적으로 만혼의 경향과 소자녀화의 영향으로 부모로서의 책임 기간이 상당 기간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부모세대의 노후 대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방송 가족조사의 결과(2004)를 보면, 부모세대는 다음 세대에 비해 자녀양육의 의미를 '대 잇기'와 '노후봉양'에 강하게 두고 있어 유교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도구주의 가족이념을 드러내는 조사결과로, 자녀의 대학 학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대다수 부모세대가 갖고 있었다.

자녀가치관의 측정을 위하여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시계열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율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는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큰 변화가 소자녀관의 정착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필요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공세권 외, 1992; 홍문식 외, 1994; 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a, 2004a).

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녀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전술한 자녀 가치관 외에도 '이상자녀수'(ideal family size)가 있다. 실제로 이상자녀수는 자녀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지표이며, 응답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한다. 자녀가치관과 마찬가지로 이상자녀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상자녀수를 연도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즉,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7년 2.3명, 2000년 이후에는 2.2명을 유지하고 있다(공세권 외, 1992; 홍문식 외, 1994; 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a, 2004a).

자녀가치관 및 이상자녀수와 마찬가지로 남아선호가치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시계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배우부인 중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인은 1991년 40.5%에서 2003년 14.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의 의견은 1991년 28.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43.3%이었다(공세권 외, 1992; 홍문식 외, 1994; 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a, 2004a).

남아선호가치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가치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7년과 2000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서에 제시되었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78.6%가 성감별후의 인공임신중절행위를 반대하였으며, 3.7%만이 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의 동일한 질문에서 보여준 부인의 태도인 반대 73.5%, 찬성 8.3%와 비교하여 상당한 태도변화를 보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a).

자녀양육가치관에 대한 관심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대되었다. 이에 '2003년 전국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였다. 응답자의 74.8%가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자녀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25.2%나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가족변화의 선행연구

가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가족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관련된 주요 연구의 동향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의 초기 가족연구는 196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가족구조나 가족가치·의식, 부모-자녀관계, 가족제도 일반에 초점이 있었다. 가족연구는 1970~8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가족유형 및 기능, 가족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관계, 가족복지·정책, 가족법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가족유형에 대한 연구는 가구구성형태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최재석의 제주도 가족에 대한 연구가 주의를 끈다.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1962년부터 시작된 인구증가억제정책 차원의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가족크기, 유형 등 가족의 외형적 모습 일반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선호를 파악하

기 위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1960년대부터 지속되다가 이 시기 후반부터는 자녀관, 아동관 등 가족관계와 관련한 태도연구가 증가하였다(김승권 외, 2000a). 가족복지정책의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연구활성화 시기가 늦었다. 그리고 1970년대 수행된 가족문제 및 가족정책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청소년 비행이나 이혼 등 사회문제 발생의 온상으로 지목된 소위 '비정상 가족'의 구조 및 가족관계, 그리고 요보호대상에 대한 시설수용중심의, 사후해결적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문제의 예방 및 실제적 문제치유를 위한 가족정책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양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반 가족구조에 대한 연구는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분거 장남가족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 가족변화에서 '핵가족화' 현상의 보편화에 대한 학문적 반응으로 판단된다. 후반기에는 산업화와 가족형태 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이 시기 연구는 핵가족 유형에 대비, 노인부양 문제를 중심으로 3세대 동거가족의 가족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경제적 기능이나 우애·정서적 기능, 자녀 출산과 양육기능 등 가족의 기능 일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가족가치관 및 가족의식이 한국 사회의 거시적·구조적 측면과 어떤 식으로 관계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 시작되어 가족주의 연구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근대적 가족가치관의 비교가 주 내용이었다. 보다 특화된 가족가치관 관련 연구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효(孝)'를 주제로 한 연구가 많았고, 고부관계에 대한 가치관 연구가 특징적이었다. 특히, 신구(新舊) 세대간 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세대간의 가치의식 비교연구도 등장하였다. 가족형성은 결혼을 전후한 과정과 의식에 대한 연구와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성 관련 행태·의식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1990년대 한국 가족연구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는 추세가 특징이다. 가족유형·구조 연구는 구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가족관계 등 다른 연구영역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였다. 가족가치관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대 들어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의식이 더욱 진전되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의식 조사나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조사 등이 보다 활발해졌다.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가족가치관 영역에서도 1980년대부터 등장하여 이 시기 후반엔 일반적인 노인공경의식 등 연구문제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다. 전반적으로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측정을 통한 가족의 결속력 예측 또는 가족주의와 노부모부양 행동 등 미시적인 가족현상과 가족주의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는 가족복지·가족정책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가족 일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정한 사회복지적 관점의 가족정책을 주장한다(박민자, 1995)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00년대의 가족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연구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경제위기 이후 가족관계 및 빈곤가정에 대한 여국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주가정(移住家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많은 가족학자가 무엇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점이다. 예를 들면, 가족기본계획 수립, 매 5년주기의 가족실태조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건강가정사의 양성교육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심층적이며, 다학제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제 3 절 이론과 선행연구의 시사점

1. 논의

본 장에서는 다양한 가족이론 중 가치관 및 가족변화 관련 이론들과 가족관

련 주요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교환이론에 대한 비판은 가족이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회집단간의 관계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행위가 어떤 보상을 반드시 기대하여 이루어지지 만은 않으며, 교환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가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성'은 교환이론으로서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심리적 만족'만을 보상으로 획득하지만 자녀양육비용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관계의 핵심개념인 '비용과 보상'의 가치측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술한 자녀양육에서의 비용과 보상에서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으로 얻는 부모의 '심리적 만족'이 부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결혼생활의 질(質), 부부관계 만족도, 행복감 등은 계량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가족발달이론은 최근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론적 개념이 논리적 적합성보다는 경험적 기술로 편향되어 가족발달의 단계구분이 모호하고 특정한 가족유형 즉, 핵가족형에만 적합하다는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동 이론이 가족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갖춘 이론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용한 기술적 틀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저출산 시대의 가치관 및 가족 변화'와 관련해 가족발달이론의 개념 중에서는 변환(transition)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변환은 결혼을 하고, 일정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자녀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거나 못 둘 수 있으며, 또한 이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일찍 사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발생 가능한 사건들(events)에 의하여 많은 가족들은 일련의 새로운 대안적 변환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체계이론은 다양한 대상과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통합성의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애매모호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론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 그리고 현상을 개념화할 수 있는 방식은 제공되나 실제적 관계를 기

술하는데 부적합하여 설명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족치료에 적용되는 체계이론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 사회의 가부장제적 특성을 간과한 채, 중립성과 합리성을 내세워 여성의 경험과 불평등한 위치를 '체계적으로' 은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관점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여권주의 이론의 기본가정은 많은 부분 갈등이론으로부터 나왔는데, 가족 내의 권력의 문제를 과도하게 중요시함으로써 성차별적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기본기능의 하나인 사랑, 희생, 조화 등이 지나치게 무시 또는 간과되었다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측면에서는 실재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본질화된 가족(the family)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들(families)'임(Barrett & McIntosh, 1980)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의 요구이며, 안정되지만 획일적인 가족문화 대신 개인의 자발성에 기반을 둔 보다 유동적인, 더 큰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가족문화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나아가 그것은 다양한 가족형태들 간의 위계나 일방적 독백을 지양하고 대화와 담론을 통한 상호인정과 이해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가족영역에서의 민주주의 함양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포스트모던 가족론의 관점에 내재된 이러한 민주적 성격은 실제 이질적인 가족가치관들이 혼재되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가족현실을 생각할 때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가치관의 변화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갈등과 논쟁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라 판단된다.

2. 시사점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동시에 사회구성원인 가족 개개인의 의식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소자녀관의 정착과 지속적인 저출산 초래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 특유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책임감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이지

만 자녀양육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로 변하여 전통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누구나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개인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가치관도 점차 변하여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 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이후 자녀를 키우면서 일생을 홀로 보내기 보다는 재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도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치관 및 가족변화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은 변화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들은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인층과 많은 남성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치관의 향수에 젖어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문화지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갈등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 더 나아가 전체 사회구성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가치관 변화는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가족형성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미혼여성이 많이 있으며,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인이 있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미성년자를 둔 부인의 이혼으로 인하여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의 이혼가정 미성년자가 양산되고 있음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다. 더군다나 혼인가치관의 변화로 증가하게 될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문제가족으로 낙인 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가족의 적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들 가족이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을 둘러싼 제반 환경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부 한국사회 가족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요인〕

제3장 한국사회 혼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제4장 한국인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과 기혼여성의 출산행위 요인분석

제5장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자율성, 그리고 이혼태도

제6장 자녀가치관 및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제7장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결정요인

제 3 장　한국사회 혼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제 1 절　문제제기

인구전환기에 있어서 혼인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결혼가치관, 이혼가치관, 재혼가치관 등이 핵심이다. 특히, 결혼가치관이 중요시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족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은 출산의 기회가 감소됨을 의미하게 되는데, 특히 한국 사회는 모든 남녀가 일정 연령에 달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혼의 특징을 갖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결혼관이 점차 변화하여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개인에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여전히 '결혼'이란 사회제도를 통한 '출산'이 일반화(결혼⇒출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된다.

아울러 전통사회에서는 금기시하였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재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결혼, 이혼, 재혼 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00a). 그런데 이혼의 보편화는 가족불안정을 초래하여 결혼 및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저출산 시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혼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하여 논의한다. 동 조사는 동일한 조사방법과 조사기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시계열상의 일관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 2 절 결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1. 결혼가치관의 변화양상

가. 전반적 변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혼여성은 2000년 26.2%에서 2003년에는 25.7%로 감소하였고,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29.4%에서 28.7%로, 그리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8.2%에서 37.1%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5.4%에서 7.9%로 2.5%포인트 증가하였다. 따라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는 2000년 55.6%에서 2003년에는 54.4%로 감소한 반면, 소극적 및 부정적 태도는 같은 연도에 43.6%에서 4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0a; 김승권 외, 2004a).

〈표 3-1〉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연도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26.2	29.4	38.2	5.4	0.8	100.0(10,601)
2003년	25.7	28.7	37.1	7.9	0.7	100.0(11,145)

주: 2000년 자료는 15~64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2003년 자료는 15~5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나. 연령별 결혼가치관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즉,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24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8.7%에 불과한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52.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부인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상대적으로 결혼을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인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한 부인은 연령에 따라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40~44세 연령층이 6.7%로 가장 높았고, 25~29세의 젊은 연령층이 3.8%로 가장 낮았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중년여성은 가사부담, 자녀양육부담, 시댁과의 복잡한 관계, 자아성취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가 표출된 것이라 판단된다(김승권 외, 2000a).

〈표 3-2〉 기혼여성의 연령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연령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15~24세	18.7	33.2	42.5	4.7	0.9	100.0(214)
25~29세	13.8	30.6	51.2	3.8	0.6	100.0(1,224)
30~34세	13.9	31.1	49.9	4.8	0.2	100.0(1,614)
35~39세	17.6	29.4	46.1	5.8	1.0	100.0(1,855)
40~44세	21.3	30.4	40.6	6.7	0.9	100.0(1,728)
45~49세	30.8	30.9	32.1	5.1	1.1	100.0(1,263)
50~54세	41.0	27.6	25.0	5.6	0.8	100.0(957)
55~59세	47.9	26.4	19.4	5.5	0.9	100.0(929)
60~64세	52.1	24.6	17.4	5.3	0.6	100.0(817)
2003년						
15~24세	26.8	37.8	25.2	10.2	-	100.0(127)
25~29세	20.4	32.5	42.0	4.6	0.5	100.0(845)
30~34세	17.8	30.8	44.8	6.1	0.5	100.0(1,738)
35~39세	17.8	28.7	44.9	8.0	0.6	100.0(2,071)
40~44세	22.1	28.1	39.9	9.3	0.7	100.0(2,137)
45~49세	28.2	27.9	34.1	8.9	0.9	100.0(1,625)
50~59세	43.0	25.4	22.9	8.1	0.6	100.0(2,208)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30

대까지는 점차 감소하다가 40대부터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으며,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은 낮아졌다. 또한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30대 까지는 점차 증가하여 44.9%까지 증가하였으나 40대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50세 이상은 22.9%까지 낮아졌다. 결혼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인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한 부인은 연령에 따라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24세 이하를 제외할 경우 30대 이전보다는 40대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중년부인의 경우 가사,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의 부담으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교육수준별 결혼가치관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이하의 부인들은 43.6%, 대학 이상의 부인들은 18.0%만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보다는 고연령층이 전통적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인이 젊은 연령층인 경우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은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젊고, 대체로 고학력의 부인보다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에서 높았는데, 이는 저학력층 부인이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론적인 태도인 것으로 짐작된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높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부인들은 40.6%, 대학 이상 학력의 부인들은 21.2%이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비율도 높아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학력이 낮은 층에서도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저학력층의 경우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많아 실제 이들이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3〉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교육수준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초교 이하	43.6	26.4	22.7	6.3	1.1	100.0(2,427)
중학교	29.6	30.2	31.6	7.6	1.0	100.0(1,782)
고등학교	19.0	29.5	45.6	5.2	0.7	100.0(4,328)
대학 이상	18.0	32.0	46.6	2.9	0.4	100.0(2,061)
2003년						
초교 이하	40.6	25.1	22.2	11.2	0.8	100.0(1,682)
중학교	29.8	25.6	33.2	10.2	1.3	100.0(1,737)
고등학교	21.4	28.0	42.0	8.1	0.5	100.0(4,801)
대학 이상	21.2	33.7	41.2	3.6	0.3	100.0(2,522)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라. 혼인상태별 결혼가치관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상태별로는 사별한 부인은 매우 적극적(47.0%)이고 긍정적(26.5%)인 결혼관을 보였으며, 이혼 및 별거부인은 소극적(47.4%)이고 부정적(18.1%)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비율은 사별인 경우 가장 높았고,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낮았으며, '하는 편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사별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외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비율은 이혼·별거의 경우 가장 높아 결혼상태별 결혼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별의 경우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아 유배우자나 이혼·별거부인들 보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혼·별거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본인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3-4〉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혼인상태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유배우	25.1	29.9	39.3	4.9	0.8	100.0(9,520)
사별	47.0	26.5	19.5	5.9	1.1	100.0(743)
이혼·별거	11.7	21.9	47.4	18.1	0.9	100.0(342)
2003년						
유배우	26.3	29.1	37.2	6.9	0.5	100.0(9,897)
사별	31.1	28.4	25.6	13.7	1.3	100.0(454)
이혼·별거	15.0	23.5	42.1	16.6	2.8	100.0(791)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마. 취업여부별 결혼가치관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결혼가치관을 보면, 취업부인이 전업주부보다 결혼에 대하여 적극적 및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도 취업부인이 약간 높았다. 또한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보다 비취업 부인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태도는 비취업 부인보다 취업부인이 약간 높았다.

〈표 3-5〉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결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비취업	25.1	29.9	39.0	5.1	0.9	100.0(5,774)
취업	27.6	28.8	37.2	5.7	0.7	100.0(4,828)
2003년						
비취업	24.8	30.0	38.0	6.8	0.5	100.0(5,187)
취업	26.7	27.2	36.5	8.8	0.8	100.0(5,609)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과 직장의 병행'에서 발생되는 취업부인의 다양한 어려움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직장에서의 남성과 경쟁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가사, 자녀양육, 복잡한 가족관계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기혼여성의 노력이 결코 용이하지 않아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최근 결혼가치관의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59세 기혼부부의 결혼가치관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거주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의 변수가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기혼부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	B	S.E.
상수(constant)	-2.160***	.148
거주지역		
대도시	-.230***	.057
중소도시	-.143*	.059
농촌	.000	
응답자 성 (남편 1; 부인 0)	.903***	.080
응답자 연령	.034***	.002
응답자 교육수준 (전문대학 이상 1; 그 외 0)	.129*	.052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972***	.087
사별	.876***	.129
이혼·별거	.00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 비취업 0)	-.103*	.042
가구소득	.001***	.000

주: 이 분석에서 "반드시 해야 함"과 "하는 편이 좋음"은 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과 "하지 않는 편이 좋음"은 0으로 하였으며, "모르겠음"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0.001, ** p<0.01, * p<.05, # p<0.10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타 지역거주자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장 높게 보였으며(-.230, p<.001), 중소도시 거주자도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143, p<.05).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903, p<.001),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34, p<.001).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부부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129, p<.01), 유배우자와 사별자도 결혼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유배우 .972, p<.001; 사별 .876, p<.001).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다 많이 갖고 있었다(-.103, p<.05). 그렇지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001, p<.001).

제 3 절 이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1. 이혼가치관의 변화양상

가. 전반적 변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2000년에는 52.8%이었으나 2003년에는 50.4%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혼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2000년 30.2%, 2003년 30.3%,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03년에는 18.6%로 3.1%포인트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이혼을 수용하는 부인의 비율은 2000년 45.7%에서 2003년 48.9%로 증가하여 이혼에 대해 점차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외, 2000a; 김승권 외, 2004a).

〈표 3-7〉 기혼여성의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년	3.3	12.2	30.2	38.0	14.8	1.4	100.0(10,598)
2003년	3.3	15.3	30.3	36.2	14.2	0.7	100.0(11,145)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표 3-8〉 기혼여성의 연령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년							
15~24세	6.1	16.4	41.8	28.2	6.1	1.4	100.0(213)
25~29세	4.6	19.8	39.1	28.4	6.5	1.6	100.0(1,225)
30~34세	4.1	14.1	36.9	35.7	8.3	0.8	100.0(1,614)
35~39세	2.9	12.3	32.6	40.4	10.2	1.6	100.0(1,855)
40~44세	3.4	12.5	32.4	38.0	12.4	1.2	100.0(1,727)
45~49세	2.1	11.1	27.7	42.7	15.1	1.3	100.0(1,263)
50~54세	3.2	10.6	23.3	39.1	22.3	1.4	100.0(958)
55~59세	2.8	7.0	18.0	42.0	28.3	1.9	100.0(927)
60~64세	2.1	4.9	16.9	40.9	32.9	2.3	100.0(817)
2003년							
15~24세	4.7	21.3	33.9	27.6	11.0	1.6	100.0(127)
25~29세	3.1	19.3	38.9	30.0	7.8	0.9	100.0(846)
30~34세	3.3	17.2	37.5	31.7	9.4	0.9	100.0(1,738)
35~39세	3.6	16.9	35.4	34.5	9.2	0.5	100.0(2,070)
40~44세	2.9	15.4	30.7	39.8	10.3	0.9	100.0(2,138)
45~49세	3.3	14.2	27.2	38.1	16.7	0.6	100.0(1,625)
50~59세	2.9	11.2	19.7	38.6	27.4	0.2	100.0(2,208)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나. 연령별 이혼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도 높아 20대 이하에서는 63.5~64.3%이며, 30~40대는 40.9~55.1%, 그리고 50대 이상은 23.9~37.1%를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아 15~24세 연령층 부인은 34.3%로 낮으나 60~64세 부인은 73.8%나 되었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저연령층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과 '이유가 있을 경우 하는 편이 좋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 15~24세 연령층 부인은 38.6%로 낮았으나 50세 이상 부인은 66.0%나 되었다.

다. 교육수준별 이혼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별로는 이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급적 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비율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표 3-9〉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이혼의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년							
초교 이하	2.3	7.0	20.7	39.9	27.9	2.1	100.0(2,426)
중학교	3.1	10.2	29.1	40.1	15.6	1.9	100.0(1,779)
고등학교	3.4	13.6	34.2	37.5	10.2	1.2	100.0(4,327)
대학 이상	4.2	17.4	34.2	35.2	8.2	0.8	100.0(2,060)
2003년							
초교 이하	3.0	11.4	19.4	37.8	28.3	0.2	100.0(1,682)
중학교	3.0	14.1	24.7	39.2	18.3	0.7	100.0(1,736)
고등학교	3.4	16.5	33.7	35.3	10.3	0.7	100.0(4,801)
대학 이상	3.1	16.4	36.2	34.4	9.4	0.6	100.0(2,522)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허용적인 태도까지 포함할 경우 초등학교 이하는 33.8%이었으나 대학 이상은 55.7%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는 반대로 '가급적 또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라. 혼인상태별 이혼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특성 중에서 결혼상태에 따른 이혼태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혼 및 별거부인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유배우부인이나 사별부인 보다 허용적이어서 70.7%가 이혼에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이혼 및 별거부인의 14.4%가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20.8%는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경우인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각각 24.6%, 3.5%였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혼에 찬성하거나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이혼·별거부인이 가장 높아 61.4%이었으며, 사별부인의 경우 가장 낮아 35.9%이었다.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는 비율도 유배우부인이 가장 높았으나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비율까지 포함할 경우 사별부인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이혼·별거부인은 37.5%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이는 사별부인의 경우 고연령층(평균 50.6세)으로 결혼, 이혼 등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이혼·별거부인은 본인들이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로 이혼에 대해 유배우나 사별부인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10〉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됨	절대로 해서는 안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년							
유배우	3.0	12.3	30.9	38.2	14.2	1.4	100.0(9,518)
사별	2.2	7.0	18.8	42.0	27.4	2.6	100.0(740)
이혼·별거	14.4	20.8	35.5	24.6	3.5	1.2	100.0(341)
2003년							
유배우	2.8	14.8	30.9	36.6	14.3	0.6	100.0(9,896)
사별	2.2	14.5	19.2	35.2	28.4	0.4	100.0(454)
이혼·별거	10.2	22.5	28.7	32.4	5.1	1.1	100.0(792)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마. 취업여부별 이혼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54.1%)이 비취업부인(51.7%)보다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52.2%)이 비취업부인(48.3%)보다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취업부인의 경우 비취업부인 보다 무배우자의 비율이 높아 부인이 가구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3-11〉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이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이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	가급적 해서는 안 됨	절대로 해서는 안 됨	모르겠음	계(수)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2000년							
비취업	3.4	12.3	31.1	38.0	13.7	1.5	100.0(5,774)
취업	3.2	12.2	29.2	38.0	16.1	1.3	100.0(4,826)
2003년							
비취업	2.9	16.1	32.1	35.7	12.6	0.6	100.0(5,188)
취업	3.4	14.6	29.2	36.4	15.8	0.6	100.0(5,608)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2. 최근 이혼가치관의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5~59세 기혼부부의 이혼가치관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거주지역, 성, 연령, 혼인상태, 가구소득 등의 변수가 이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수준이 다소 낮지만 교육수준과 취업여부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p<.010).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가 타 지역거주자보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장 높게 보였으며(.331, p<.001), 중소도시 거주자도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290, p<.001). 남편이 부인보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657, p<.001),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041, p<.001).

〈표 3-12〉 기혼부부의 이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	B	S.E.
상수(constant)	2.322***	.147
거주지역		
대도시	.331***	.057
중소도시	.290***	.060
농촌	.000	
응답자 성 (남편 1; 부인 0)	-.657***	.076
응답자 연령	-.041***	.002
응답자교육수준 (전문대학 이상 1; 그 외 0)	.089#	.052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971***	.086
사별	-.982***	.129
이혼·별거	.00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 비취업 0)	-.080#	.042
가구소득	.000***	.000

주: 이 분석에서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음",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음"은 1, "가급적 해서는 안 됨"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됨"은 0으로 하였으며, "모르겠음"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0.001, ** p<0.01, * p<.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부부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이혼에 대해 긍정적이었다(.089, p<.010). 그렇지만 유배우자와 사별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유배우 -.971, p<.001; 사별 -.982, p<.001).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080, p<.010). 그렇지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이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000, p<.001).

제 4 절 재혼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1. 재혼가치관의 변화양상

가. 전반적 변화

재혼가치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20.7%는 재혼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적극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47.2%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외 27.4%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3-13〉 기혼여성의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0.7	16.1	46.5	23.7	6.6	6.3	100.0(10,590)
2003년	0.8	19.9	47.2	21.5	5.9	4.6	100.0(11,127)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이를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재혼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긍정적 태도(2000년 16.8%, 2003년 20.7%)와 소극적인 태도(2000년 46.5%, 2003년 47.2%)

는 2000년 보다 2003년이 모두 높았으며, 부정적인 태도는 2000년(30.3%)이 2003년(27.4%) 보다 높아 최근으로 오면서 재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00a; 김승권 외, 2004a).

나. 연령별 재혼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별로는 재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부인이 55~59세가 19.5%로 가장 높았으며, 60~64세는 19.2%로 그 다음으로 높아, 50대 중반 이후 연령층 부인의 재혼에 관한 긍정적 태도가 높았다.

〈표 3-14〉 기혼여성의 연령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15~24세	-	14.1	54.9	16.9	3.8	10.3	100.0(213)
25~29세	0.3	17.4	58.1	14.3	3.1	6.7	100.0(1,223)
30~34세	0.6	17.5	54.3	17.5	3.4	6.8	100.0(1,614)
35~39세	0.5	14.7	49.9	23.7	5.2	5.9	100.0(1,852)
40~44세	0.6	15.3	46.1	25.6	6.3	6.1	100.0(1,727)
45~49세	0.8	14.3	42.7	28.9	7.9	5.5	100.0(1,261)
50~54세	0.9	15.9	36.8	27.0	11.9	7.5	100.0(957)
55~59세	1.7	17.8	36.3	29.4	9.7	5.1	100.0(928)
60~64세	1.2	18.0	33.6	29.8	11.0	6.3	100.0(815)
2003년							
15~24세	2.4	16.7	53.2	14.3	6.3	7.1	100.0(126)
25~29세	0.5	21.4	55.5	13.2	3.3	6.2	100.0(844)
30~34세	0.6	20.3	53.5	16.8	3.3	5.5	100.0(1,736)
35~39세	0.4	18.1	51.7	21.8	3.8	4.2	100.0(2,064)
40~44세	1.1	19.0	46.8	22.6	5.7	4.9	100.0(2,136)
45~49세	1.0	19.4	41.8	25.2	8.1	4.4	100.0(1,624)
50~59세	0.8	20.3	39.5	26.1	9.7	3.5	100.0(2,203)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혼에 관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은 25~29세에 21.9%로 가장 높다가 점차 낮아져 35~39세에는 18.5%에 이르나 40세 이후부터는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재혼에 대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며,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높아졌다.

다. 교육수준별 재혼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별로는 재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고학력일수록 높았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저학력층일수록 높았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견이 고학력일수록 높았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저학력층일수록 높았다.

〈표 3-15〉 기혼여성의 교육수준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초교 이하	1.0	16.8	33.2	31.2	11.8	6.0	100.0(2,422)
중학교	0.7	16.0	41.7	26.3	8.2	7.1	100.0(1,777)
고등학교	0.7	16.0	50.5	21.6	4.4	6.8	100.0(4,327)
대학 이상	0.6	15.8	58.0	17.1	3.7	4.9	100.0(2,062)
2003년							
초교 이하	1.1	19.4	34.1	30.2	11.3	3.8	100.0(1,677)
중학교	0.5	18.7	40.0	27.5	8.8	4.5	100.0(1,736)
고등학교	0.8	19.6	49.3	20.7	4.8	4.8	100.0(4,791)
대학 이상	0.6	20.2	57.3	14.4	2.7	4.8	100.0(2,519)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라. 혼인상태별 재혼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상태별로는 사별한 부인(40.7%)이 유배우 또

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보다 재혼에 대한 반대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사별부인들의 재혼반대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현재 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들보다 고령층으로 구성주5)되어 있어, 일부종사(一夫從死)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과 재혼을 하기 위한 배우자 선택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별한 부인(41.7%)이 유배우부인(26.5%)이나 이혼·별거중인 부인(30.6%)보다 재혼에 대한 반대비율이 높았다. 이는 사별부인들이 현재 유배우 또는 이혼·별거중인 부인들 보다 고연령층으로 구성주6)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표 3-16〉 기혼여성의 혼인상태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유배우	0.7	16.3	47.3	23.0	6.2	6.4	100.0(9,512)
사별	1.5	14.7	37.0	29.5	11.2	6.1	100.0(740)
이혼·별거	1.2	13.8	43.5	30.9	6.8	3.8	100.0(340)
2003년							
유배우	0.8	20.1	47.9	21.0	5.5	4.7	100.0(9,878)
사별	0.7	18.5	36.6	29.1	12.6	2.6	100.0(454)
이혼·별거	1.1	18.5	44.8	23.8	6.8	5.1	100.0(791)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마. 취업여부별 재혼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부인(33.5%)이 비취업부인(27.7%)보다 재혼에 대한 반대비율이 높았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

주5) 결혼상태별 부인들의 평균 현 연령을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이 40.7세, 사별부인 54.9세, 그리고 이혼·별거부인은 44.9세로 사별부인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주6) 결혼상태별 부인들의 평균 현 연령을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이 40.8세, 사별부인 50.6세, 그리고 이혼·별거부인은 44.5세로 사별부인이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부인(29.9%)이 비취업부인(25.3%)보다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취업부인의 연령이 취업부인보다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17〉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재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특성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	하는 것이 좋음	해도 되고 안하다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	모르겠음	계(수)
2000년							
비취업	0.8	16.5	48.5	21.9	5.8	6.5	100.0(5,770)
취업	0.7	15.7	44.1	25.9	7.6	6.1	100.0(4,822)
2003년							
비취업	0.8	20.8	48.5	20.3	5.0	4.7	100.0(5,178)
취업	0.8	18.5	46.3	23.1	6.8	4.6	100.0(5,600)

주 및 자료: <표 3-1>과 동일

2. 최근 재혼가치관의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59세 기혼부부의 재혼가치관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성, 혼인상태 중 유배우자, 취업여부 등의 변수는 재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수준이 높았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중 사별자, 가구소득 등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살펴보면, 남편이 부인보다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694, p<.001), 남성이 가사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유배우자도 재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268, p<.05).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177, p<.001). 이는 비취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표 3-18〉 기혼부부의 재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	B	S.E.
상수(constant)	-1.487***	.173
거주지역		
대도시	-.073	.067
중소도시	-.039	.071
농촌	.000	
응답자 성 (남편 1; 부인 0)	.694***	.079
응답자 연령	.000	.003
응답자교육수준 (전문대학 이상 1; 그 외 0)	.003	.063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268*	.102
사별	.147	.156
이혼·별거	.00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 비취업 0)	-.177***	.051
가구소득	.000	.000

주: 이 분석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음"과 "하는 것이 좋음"은 1, "해도 되고 안하다 됨",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함"은 0으로 하였으며, "모르겠음"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0.001, ** p<0.01, * p<.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제 5 절 논의 및 시사점

1. 논의

우리나라 기혼부부의 혼인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최근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가치관, 이혼가치관, 재혼가치관을 응답자 특성에 따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 거주자는 결혼에 대하여는 부정적이지만 이혼에 대하여는 긍정적이었다. 또한 중소도시 거주자도 대도시 거주자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재혼에 대하여는 거주지역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기혼남성은 결혼과 재혼에 대하여 긍정적이었으나 이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반대로 기혼여성은 결혼과 재혼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이혼에 대하여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은 배우자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여성은 가부장제적인 가족문화와 '가정과 직장의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 속에서 자아욕구를 포기해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9〉 기혼부부의 혼인가치관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B 값)

응답자 특성	결혼가치관	이혼가치관	재혼가치관
상수(constant)	-2.160***	2.322***	-1.487***
거주지역			
대도시	-.230***	.331***	-.073
중소도시	-.143*	.290***	-.039
농촌	.000	.000	.000
응답자 성 (남편 1; 부인 0)	.903***	-.657***	.694***
응답자 연령	.034***	-.041***	.000
응답자 교육수준 (전문대학 이상 1; 그 외 0)	.129*	.089#	.003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972***	-.971***	.268*
사별	.876***	-.982***	.147
이혼·별거	.000	.000	.00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 비취업 0)	-.103*	-.080#	-.177***
가구소득	.001***	.000***	.000

주: *** p<0.001, ** p<0.01, * p<.05, # p<0.10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과 재혼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젊은 연령층은 이혼에 대하여는 긍정적이었으나 결혼생활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 그렇지만 교육수준이 재혼가치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자와 사별자는 이혼·별거자보다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혼에 대하여 유배우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사별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결혼, 이혼, 재혼 등의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비취업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취업자는 소득이 있음으로 인하여 남녀를 불문하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는 남성가구주보다는 여성가구주에게서 더 심각하다고 한다. 전체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7.1%를 차지하며, 그 중 81.6%가 여성 한부모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도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다(강기정 외, 2002). 이러한 양상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부장적 전통에 기반을 둔 가치관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김승권 외, 2004b).

여성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가구의 주소득원인 부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모의 취업에 따르는 가족보호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즉,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은 부(夫)의 상실에 따르는 소득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구주로 하여금 소득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습득이 없이 가정생활을 하던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저임금, 서비스 영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녀가 어린경우에는 취업이 이루어지면서 자녀양육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재혼가족의 경우 형성단계에서부터 초혼가족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배우자의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결혼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초혼생활의 여파가 재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초혼과 재혼은 개인의 생애과정 중 상이한 시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적 성숙, 기대 수명, 사회·경제적 지위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혼 상황은 초혼과는 명백히 구분된다고 한다(권복순, 2002). 그리고 재혼가족의 경우에도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무자녀 재혼은 초혼과 가족구조측면에서 거의 유사하고, 유자녀 재혼에 비해 가족문제가 적게 발생하지만, 이와는 달리 유자녀 재혼은 새로운 결혼의 적응과정을 복잡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즉, 가족생활주기상의 요구와 과업이 가족원 개인의 욕구나 과업과 양립할 수 없는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전 배우자와 전 노부모가 재혼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가족의 경계가 취약해지며, 재혼부모와 자녀 간에 충성과 죄의식이라는 혼란된 감정을 발생시킨다(Ihinger-allman & Pasley, 1987; 윤주애, 2002 재인용).

2. 시사점

이와 같은 혼인가치관에 대한 최근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결혼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이혼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가족불안정은 증대됨과 동시에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가족형태를 불문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의 증가와 함께 발생되는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지원은 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낮다. 무엇보다도 여성 한부모가족이 갖지 않는 특수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에서 분명히 논의되어야 할 점이다.

셋째, 많은 이혼가정이 미성년자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자녀가 경험하는 교육 및 심리·정서적 발달상의 어려움은 지난 수년간 빈번하게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빈곤의 세대간 전승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이혼의 증가에 따라 재혼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는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혼가족의 구성의 상호 적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녀를 가진 많은 이혼가정이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재혼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부부생활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준비하

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재혼 부부들은 자신의 재혼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원하면서도 조심스러워 한다. 따라서 재혼가족의 바람직한 적응과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서 재혼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재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이 결혼 및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와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족과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생활의 돌봄 노동과 가사에서의 양성평등,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구축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혼인가치관의 약화는 전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장래의 불투명성이 증가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와 부모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양육은 부 또는 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형태를 감안한 부양기능 강화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한국인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과 기혼여성의 출산행위 요인분석

제 1 절　문제제기

지난 30~40년 동안에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진 유럽 및 북미의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는 사회 및 경제적 현대화와 더불어 인구학적 행위에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경제체제는 3차 산업 위주로 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학적으로는 출산율이 대체수준내지 극저수준으로 저하되었으며, 결혼행위는 만혼과 평생 미혼율의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고, 세대간의 동거율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극저출산율과 만혼의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개인화 되어가는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Bumpass, 1990; Lesthaeghe, 1983; Lesthaeghe & Wilson, 1986). 즉, 현대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개인의 경제활동, 사회적 성취, 행동의 자유 등의 제한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학적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36년 출생 여성 중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는 10%에 불과 하였으나 1970년 출생 여성은 거의 모두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그중 36%는 초급대학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1).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부인당 6.00에서 2003년에는 극저수준인 부인당 1.19명으로 저하하였으며, 3세대 가구는 1960년에 26%이던 것이 2000년에 10%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5).

2002년도 이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는 유럽, 미주, 일본 등의 여러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출산율 감소의 결

과이다. 196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계속되어온 출산력의 감소는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초래하였으며 인구의 고령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계속되는 극저출산율은 더욱 심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시킬 수 있고, 또한 얼마 후에는 인구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출산율은 대체 수준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관련 기관들도 이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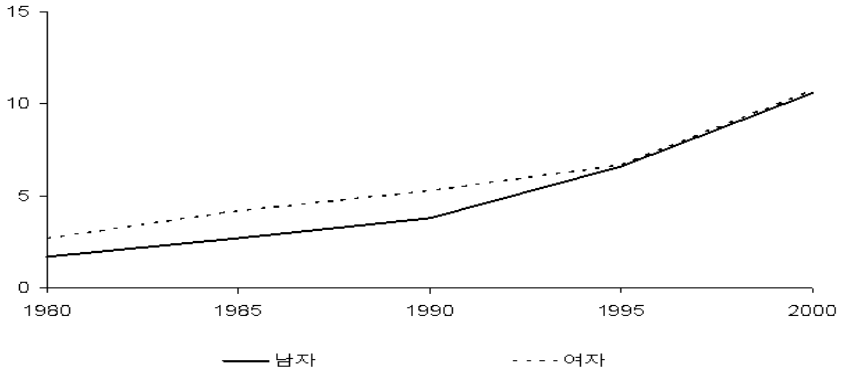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와 「미혼남녀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혼남녀의 결혼, 출산, 결혼 후 부인 취업에 대한 태도와 기혼여성의 결혼, 출산에 대한 태도, 출산계획 의도 분석 등으로 출산행위에 대한 이해와,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과 출산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절 결혼·출산 수준 및 가족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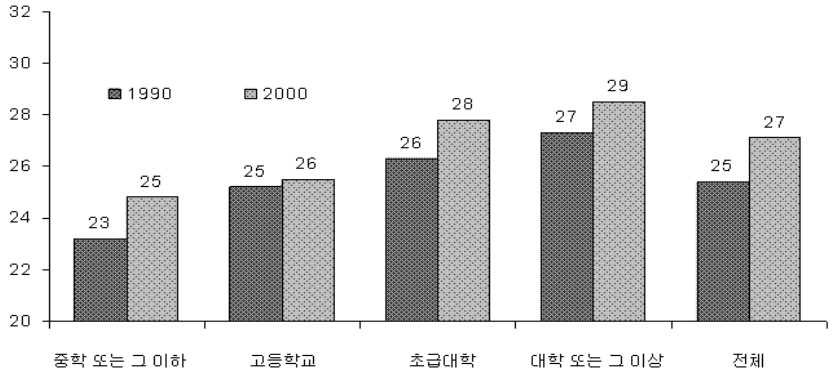
1. 결혼수준의 변화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의하면 혼인은 모든 남녀가 성인으로써 당연히 거쳐야 되는 인생의 과정으로 인식 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1980년까지 실제 혼인행위에 반영되어 왔다. 1980년 센서스에 의하면 45~49세 여자 중 미혼율은 0.3%에 불과 하였고 30~34세 여자 중에도 미혼율은 2.7%로써 혼인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후로 모든 연령에서 미혼율이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센서스에서는 30~34세 연령층의 미혼율이 10.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자의 경우 35~39세의 미혼율이 1980년 1.7%에서 2000년 10.6%로 증가 하였다(그림 4-1 참조). 이러한 추이는 결혼연령 상승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한편 이들이 결혼 적령기 이후 연령층임을 고려할 때의 평생 미혼율의 증가 추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4-1〕 30~34세 여자와 35~39세 남자의 미혼율 추이



〔그림 4-2〕 미혼율에 의한 평균 혼인연령(SMAM)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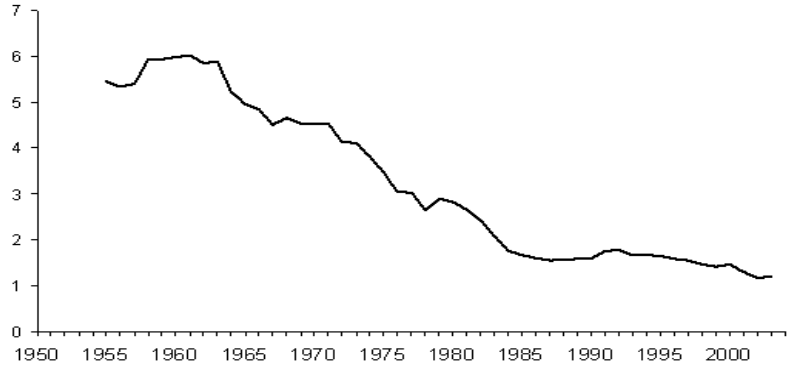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결혼연령 상승은 교육수준, 특히 여성 교육수준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화순, 2003). [그림 4-2]에서 보면, 평균 결혼연령은 교육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또 한편, 모든 교육수준에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평균 결혼 연령이 2년 정도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경제활동참여,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의 이유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출산수준의 변화

한국의 출산력은 1960년경 부인당 6명이라는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1983년에는 대체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 1990년에는 1.6, 2000년에는 1.47, 2003년에는 1.165 까지 저하되었으며, 2003년의 합계출산율은 1.19로 집계되었다(그림 4-3 참조). 한국의 2002년, 2003년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결혼의 지연, 취학 자녀의 교육비 부담, 비취업 기혼여성의 취업 희망과 취업부인의 취학 전 자녀의 보육에 대한 어려움 등이며,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도 한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김민자·김승권, 2003; 전광희, 2003).

〔그림 4-3〕 합계출산율 추이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혼인율의 저하가 출산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김민자·김승권, 2003; Choe & Park, 2005). 만일 이 기간에 혼인율의 변화가 없었고,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만 있었다면, 2000년의 합계출산율은 1.75로써, 집계된 출산율 보다 19% 높을 것이라고 이들 연구는 보고하고 있다.

3. 가족형태의 변화

한국의 가족제도는 가부장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지켜진 유교사상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최재석, 1985; 김두헌, 1985). 특히 한국의 가족제도는 호주상속에 관하여,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남아 적자계승을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재석, 1985). 이러한 전통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 특히 아들의 출산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써 남자인 경우 가문의 계승과 번성을 위해, 여자인 경우, 시가의 가문의 계승과 번성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고황경 등이 실시한 1960년 '한국 농촌가족 조사'에(당시 한국인구는 73%가 농촌인구이었음)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가 "가정이 화목한 사람(24%)", 둘째가 "자식이 많은 사람(2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적인 자녀수는 아들 셋, 딸 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황경 외, 1963). 그러나 1960년 후반부터는 사회, 경제의 근대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계획활동을 통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온 소자녀운동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가족계획 사업은 적은 수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새로운" 행복한 가정의 가치관을 정착시켰다고 할 수 있다(Cho & Kim, 1992).

또한 영아사망력의 감소로 가계의 계승이 아들 하나 또는 둘로도 부족 하지 않다는 점과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녀가 부담이 된다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하여,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발전의 혜택을 보는데도 소규모 가정이 이로운 것으로 해석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Kwon, 1993, 2001; 전광희, 2004).

전통적인 가족체제는 여성의 역할을 남성의 역할과 분명히 구별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역할의 변화가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함은 물론 (변화순 외, 2001; 이연주, 2003), 경제활동이 여성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 피고용자 중에 5년 이상 장기 피고용자

의 비율이 1985년에 14%이던 것이 1998년에는 30%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에 남성 장기 피고용자 비율은 37%에서 48%로 소폭 증가하였다(통계청, 1998, 1999).

제 3 절 미혼남녀의 결혼·가족·취업 가치관

본 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에 18~39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혼남녀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 조사"를 자료로 하여 미혼남녀의 결혼, 자녀 및 결혼 후 부인 취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다.

1.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하여 여자의 경우 11%에 불과하고, 남자인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29%로 나타났다. 즉, 결혼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은 남자 78%, 여자 57%로 "결혼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부합하는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 참조). 특히, 유의 할 점은 이러한 비전통적인 태도는 여자들 중에서 남자 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4-1〉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내용	남자	여자
하지 않는 편이 좋음	3.1	3.6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	16.3	37.9
하는 편이 좋음	49.4	45.8
반드시 해야 함	28.7	11.1
생각해 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2.5	1.6

자료: 김승권·곽혜경, "미혼남녀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실태와 과제", Pp. 168~208,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표 4-2>에서는 남녀별 로짓모델에 의한 분석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5~39세 연령층이 남녀 모두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대체로 결혼적령기를 지난 사람들인 점을(특히, 여자) 고려할 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표 4-2〉 미혼남녀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특성	남	여
연령		
18~24세	0.0000	0.0000
25~29세	0.2093	-0.0129
30~34세	0.0581	-0.7040
35~39세	-0.9269*	-1.291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0.0000	0.0000
전문대학	-0.2127	-0.0380
대학이상	-0.3936	0.0891
직업		
전문/관리/사무직	0.4637*	0.1530
기타/무직	0.0000	0.0000
학생	0.7299*	-0.1706
거주지역		
대도시	0.0000	0.0000
중소도시	0.0443	-0.3236*
농어촌	0.5985*	-0.3521#
상수	1.5798*	0.6751*

주: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하는 편이 좋음"과 "반드시 해야 함"을 1로 놓고, "하지 않는 편이 좋음"과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을 0으로 놓았음. "생각해 보지 않았음"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0.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한편 직업과 거주지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인 경우 상당히 유의하여 관리/전문직에 있는 남자와 대학생이 다른 남자들보다 결

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이들의 사회적 신분이 결혼 상대자로써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직업과 큰 관련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거주지역이 결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남자인 경우 대도시 거주자에 비하여 농·어촌 거주자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여자인 경우 중·소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들은 대도시 거주자들 보다 훨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혼 후 기대되는 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농·어촌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2.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조사된 미혼남녀의 자녀의 필요성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볼 수 있다(표 4-3).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자 80.3%, 여자는 76.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녀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내용	남자	여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	17.4	21.7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	41.1	44.8
꼭 있어야 함	37.4	31.4
생각해 보지 않았음/ 모르겠음	2.2	2.1
계	100.0	100.0

자료: <표 4-1>과 동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자녀의 필요성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역할에서 가계계승을 부부관계보다 더 중시하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가 아직까지 젊은 남

녀의 가족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관하여서 로짓모델에 의한 분석을 하였다.

〈표 4-4〉 미혼남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특성	남	여
연령		
18~24세	0.0000	0.0000
25~29세	0.1048	-0.2630
30~34세	-0.0484	-0.9335*
35~39세	-0.2188	-1.3143*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0.0000	0.0000
전문대학	-0.5827*	-0.3140
대학이상	-0.4673	-0.2422
직업		
전문/관리/사무직	0.0000	0.0000
기타/무직	-0.1432	-0.3275
학생	0.1990	-0.5990*
거주지역		
대도시	0.0000	0.0000
중소도시	0.1832	0.1717
농어촌	0.6001*	0.9802*
상수	1.8241*	1.9972*

주: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꼭 있어야 함"과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을 1로 놓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음"을 0으로 놓았음. "생각해 보지 않았음"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0.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30세 이상의 미혼여성들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보다 젊은 여자들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그들의 나이가 이제부터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하여 조사대상에서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역이 자녀의 필요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녀간 차이는 작게 나타났다. 남자들 중에는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자들 중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녀 모두 농어촌 거주자들이 대도시 거주자들보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3. 미혼남녀의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여성역할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 행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Kwon, 1993, 2001; 전광희 2003; 이삼식, 2005). 여성의 역할변화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결혼 후 부인의 취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미혼남녀의 결혼후 부인 취업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4-5>에서 보면, 미혼 여자의 86%가 결혼후 취업을 희망하는 한편, 미혼남자 중에는 58%만이 결혼 후 부인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를 볼 때, 미혼자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갈등을 경험 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한편, 남자들 중 24%가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태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5〉 미혼남녀의 기혼여성 취업희망 여부

(단위: %)

내용	남자	여자
취업함	57.8	86.0
취업 안함	17.9	4.6
모르겠음	24.3	9.4
계	100.0	100.0

자료: 김승권 외,『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미혼남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지가 결혼 후 부인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로짓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6>에서 보

면 결혼 후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요인은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비하여 남녀간의 차이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이 미치는 영향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상당히 비슷하게 분석 되었다. 35세 이상의 여자들은 34세 이하의 여자들보다 부인취업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여자들이 35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4-6〉 미혼남녀의 기혼여성 취업희망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특성	남 (부인의 취업)	여 (본인 취업)
연령		
18～24세	0.0000	0.0000
25～29세	0.0331	-0.0196
30～34세	0.0194	0.2210
35～39세	-0.1523	0.6931#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0.0000	0.0000
전문대학	0.7023*	0.3711#
대학 이상	1.0148*	1.0577*
직업		
전문·관리직	0.4742	0.5966
사무·기능·서비스·판매직	0.3364	0.6121
기타·무직	0.0000	0.0000
학생	0.3335	0.9780*
거주지역		
대도시	0.0999	0.0077
기타	0.0000	0.0000
상수	-0.5025*	0.9296*

주: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여자인 경우 "취업함" 남자인 경우 "부인 취업 희망"을 1로 놓고, 다른 응답을 0으로 놓았음.
* $p<0.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남녀 모두 대학이상 학력자들이 부인취업에 대하여 대학 미만의 학력자보다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인 경우, 현재 대학생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부인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혼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여성의 결혼 후 취업에 대한 태도가 많이 변화하였고,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위의 두 가지 태도에 비하여 그 변화율이 적은 편이었으며, 모든 태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혼남녀 간의 태도의 차이는 그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결혼 연령이 개인의 의사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자녀의 필요성과 결혼 후 부인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높은 학력에서 진보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결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여자의 경우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남자인 경우, 고학력이 오히려 더 전통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제 4 절 기혼여성의 결혼·출산 태도

1. 기혼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한국이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영향을 받아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던 시기에는 결혼한 부인의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결혼의 지연현상과 출산력 저하 현상은 출산행위와 또 이와 깊은 관계에 있는 결혼행위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대한 태도 또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기혼여성 중에서도 부인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김승권 외, 2004a). 우선 15~59세 기혼여성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2003년 조사에서 26%에 불과 하였고, 2000년 조사 때 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다(표 4-7).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4%이었다. 이는 18~39세 미혼여자들 중에 긍정적인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57%)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이미 결혼한 여성의 3분의 1 정도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하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4-7〉 15~59세 기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내용	2000년	2003년
반드시 해야 함	26.2	25.7
하는 편이 좋음	29.4	28.7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38.2	37.1
하지 않는 편이 좋음	5.4	7.9
모르겠음	0.8	0.7

자료: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지난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표 4-8 참조). "반드시 가져야한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0년 90%에서 2003년 55%로 크게 감소하였고, "없어도 무관" 하다는 부인은 1997년 9%에서 2003년 13%로 증가하였다.

〈표 4-8〉 15~59세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1991~2003년)

내용	1991	1997	2000	2003
반드시 가져야 함	90.3	73.7	58.1	54.5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8.5	26.0	41.5	44.9
갖는 것이 좋음	-	16.6	31.5	32.3
없어도 무관	-	9.4	10.0	12.6
모르겠음	1.2	0.3	0.5	0.6

자료: <표 4-7>과 동일

그러나 자녀의 필요성은 결혼의 필요성보다 긍정적 태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한국의 가족은 자녀를 통한 가문 계승의 역할이 부부관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그리고 앞으로의 취업희망이 그들의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기 위해 로짓모델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앞으로의 취업 희망은 현재 취업중이며 취업을 계속하겠다는 부인과 현재 취업중이 아니지만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부인을 "1"로 놓고, 다른 부인들을 "0"으로 놓아서 분석하였다.주7)

〈표 4-9〉 20～39세 유배우부인의 결혼과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특성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연령		
20～24세	0.0000	0.0000
25～29세	0.4697*	-0.1398
30～34세	0.6593*	-0.2244
35～39세	0.7176*	-0.1335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0.0000	0.0000
전문대학	-0.3002*	-0.2776#
대학 이상	-0.2698*	-0.0007
거주지역		
서울	0.1338	0.4330*
다른 대도시	0.0475	0.2238
기타 도시	-0.0138	-0.2776
농어촌	0.0000	0.0000
취업 (취업 계속) 희망	0.1650*	0.1339
상수	-0.6363*	-1.9833

주: 이 분석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있어야 한다"와 "하는 것이/있는 것이 낫다"를 1로 놓고, 다른 응답을 0으로 놓았으며, "모른다" 와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0.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주7) 이 분석에서는 그 대상을 20～39세 유배우부인으로 제한하였음.

<표 4-9>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은 약간의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부인의 연령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학력자가,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상 학력자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희망 부인들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결혼자체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부인들 간에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혼의 필요성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기혼여성의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은 상당히 추상적인 관념이다. 이는 이미 결혼한 부인들 중 3분의 1 이상이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응답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의 출산행위를 이해하는 데는 이보다 더 구체적인 변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부인의 출산 행위는 매우 계획적인 것으로 출산계획과 실제 출산 행위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uya & Choe, 2004). 여기서는 부인들의 출산계획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출산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기혼여성의 추가자녀 계획에 대한 태도

15~44세 유배우부인중 추가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부인은 매우적은 18%에 불과하며, 특히 생존자녀가 없는 부인의 경우, 83%, 생존자녀가 1명인 부인의 경우, 42%만이 추가자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추가자녀 계획률을 현존 자녀수가 이상자녀수에 미달한 비율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많아 상당수의 부인들이 아직 이상자녀수를 출산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추가자녀 계획

현존자녀수	부인수	현존자녀수 < 이상자녀수 (%)	추가자녀 희망 (%)
0명	249 (7%)	99.8	84.7
1명	719 (20%)	85.7	43.5
2명	2,194 (61%)	30.9	4.6
3명	402 (11%)	15.3	1.7
4명 이상	53 (1%)	4.7	1.9
전체	3,617 (100%)	45.0	17.5

주: 현재 임신 중이며 임신된 아이를 낳기 원하는 부인은 추가자녀 희망부인으로 함.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생존아들, 딸 수, 앞으로의 취업희망, 그리고 자녀사망 경험이 그들의 추가자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로짓모델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대상을 20～39세 유배우부인으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11>에서는 로짓 회귀계수를, <표 4-12>에서는 로짓모델에 의한 특성별 추가자녀 계획률을 볼 수 있다.

우선 두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부인의 현재 생존아 수가 이상자녀수에 미달 하였는가 아닌가는 추가자녀 계획 요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모델의 차이는 추가자녀 계획률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추가자녀 계획률은 현재 생존아 수가 이상자녀수에 미달 한 부인들 중에서 조금 높았다는 것이다. 두 모델이 제시하는 추가자녀 계획에 관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30세 이상의 부인, 특히 35세 이상의 부인의 추가자녀 계획률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0세 이상의 부인들이 그들의 가임성에 대하여 확신이 없거나, 나이 많은 부인의 태아에게 있을 수 있는 의학적 위험성에대한 우려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 결과는 결혼을 늦게 하는 여자들이 그들의 출산가능 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인식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11〉 20～39세 유배우부인의 자녀를 더 낳겠다는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특성	전체	현존자녀수<이상자녀수
부인의 연령		
20～24세	0.0000	0.0000
25～29세	0.1426*	0.3876
30～34세	-0.6973*	-0.6854*
35～39세	-1.7432*	-1.9115*
부인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0.0000	0.0000
전문대학	0.5494*	0.6250*
대학 이상	0.2996*	0.3975*
거주지역		
서울	-0.4214*	-0.4737#
다른 대도시	-0.3837*	-0.2593
기타 도시	-0.2336	-0.1700
농어촌	0.0000	0.0000
현존 자녀수		
없음	4.3396*	2.9014*
아들 1, 딸 0	2.2105*	1.0365*
아들 0, 딸 1	2.6111*	1.5551*
아들 2, 딸 0	0.6615	0.1064
아들 1, 딸 1	0.1140	-0.5853
아들 0, 딸 2	1.3086*	0.7902
3명 이상	0.0000	0.0000
부인의 앞으로 취업 (계속) 희망	-0.2065#	-0.2553#
자녀 사망 경험	1.1321*	0.5510
상수	-2.3663*	-0.7754

주: 이 분석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겠다"는 부인과 현재 임신중이며 임신중인 아이를 낳겠다는 응답을 1로 놓고, 다른 응답을 0으로 놓았음.
* $p<0.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교육수준에 따른 추가자녀 계획률은 전문대학 학력소지 부인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또는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과 다른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인들이 약간

낮은 추가자녀 계획률을 가지고 있었다.

〈표 4-12〉 20～39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추가자녀에 대한 태도: 로짓모델에 의한 추정치

특성	전체	현존자녀수<이상자녀수
부인의 연령		
25세 이하	23	37
25～29세	24	45
30～34세	15	25
35～39세	8	11
지역		
서울	22	28
대도시	22	30
중소도시	24	31
농촌	26	33
부인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또는 그 이하	22	28
전문대학	27	36
대학 또는 그 이상	24	33
현존 자녀수		
없음	65	67
아들 1, 딸 0	23	30
아들 0, 딸 1	29	40
아들 2, 딸 0	7	16
아들 1, 딸 1	4	9
아들 0, 딸 2	11	26
3명 이상	4	15
부인의 앞으로 취업희망		
하겠다	23	29
하지 않겠다	25	31

주: "낳겠다"에는 현재 임신중이며, 임신중인 아이를 낳겠다는 부인이 포함됨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추가자녀 계획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현존 자녀수와 또 그 중에 아들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존 자녀가 없는 부인의 경우, 높은 추가자녀 계

획률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현존 자녀가 한명인 경우, 추가자녀 계획률은 별로 높지 않아 최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아들이 없는 부인이 아들이 있는 부인보다 높은 추가자녀 계획률을 보이고 있어 한국 부인들의 남아선호의 경향이 출산행태에 계속하여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승권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1990년 이후로 급격히 저하하여 1991년에는 15~49세 유배우부인 중 41%가 이러한 남아 선호 태도를 보인데 반하여, 2003년에는 15~44세 유배우부인 중 14%만이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심리적 만족", "가정행복", "가문유지"등의 이유로 남아선호 의식은 계속되고 있다.

제 5 절 논의 및 시사점

1. 논의

한국의 출산력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계속 저하하여 2000년 이후의 합계출산력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2정도에서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합계출산력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계속되는 결혼연령의 상승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 미혼남녀의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결혼 후 부인의 취업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들의 태도가 전통적 가족제도가 요구하는 태도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자들 중에 반이 조금 넘는 정도이며, 남자들 중에는 4분의 3 정도이다. 여기에서 남녀의 큰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최근 일본과 미국의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Tsuya, Mason, & Bumpass, 2004)에서는 일본의 미혼남녀는 결혼의 유익한 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한국의 미혼남녀의 태도와 비슷한 면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미혼남녀들은 결혼의 유익한 점에 대하여 서로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결혼에 따르는 생활의 변화가 남녀별로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Rindfuss(2004)는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이나 일본처럼 유교사상이 지배하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여자들에게 기대되는 결혼 후의 생활변화가 그들의 현대적 가치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요인 분석 결과도 이러한 설명과 일치하는 점을 보여 준다. 즉 장래의 가장으로써의 "결혼조건"이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들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과 농·어촌 거주자 중 남자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여자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한편, 자녀관은 훨씬 더 전통적이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남녀 모두 4분의 3이 넘는다. 그 요인들도 남녀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고학력자가 조금 낮은 정도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농어촌 거주자들이 조금 높은 정도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후 부인의 취업태도는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만 그 요인에서는 큰 차이를 없었다. 즉, 고학력자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외에 다른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의 남녀 차이는 1994년 실시된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Bumpass & Choe, 2004), 전통적인 사회가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남녀의 태도의 차이가 남녀가 같이 하는 결혼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교육수준이 여자들에게는 비전통적인 태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만, 남자들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오히려 전통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결혼 적령기를 맞이하는 젊은이들이 전보다 더 고학력 소지자가 될 것을 고려 할 때,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결혼상대자를 찾는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을 볼 때, 혼인 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거부가 심한 지금의 한국에서는 결혼 자체가 필요하기 보다는 자녀를 갖기 위하여 결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혼여성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여성의 태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여성이 미혼여자보다 나이가 많으며 기혼여성 중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전통적인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기혼여성의 비전통적 태도는 그들의 결혼생활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들의 결혼생활이 기대했던 것보다 행복하지 않을 때,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결혼 이후 비전통적(부정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혼여성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미혼여자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긍정적 태도의 시대적 변화이다.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태도가 1991년 이후 급증 하였으며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도 2003년에는 13%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이상자녀수가 1980년 이후 2.2정도에서 별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는 이상적인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태도이며, 이러한 유연한 태도는 가정과 사회적 조건이 부적합하다면 출산을 지연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혼여성의 출산계획 태도를 보면, 현존 자녀수와 남아수, 그리고 부인의 연령과 큰 관련이 있으며 부인의 교육수준, 거주지, 앞으로의 취업 희망, 그리고 자녀사망 경험 모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인의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학력소지자가 추가자녀 계획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또 거주지역으로는 농·어촌 거주자가 가장 높은 추가자녀 계획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녀양육비,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수준, 이에 따른 교육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2. 시사점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출

산율을 높이는 데는 우선 혼인율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계속되는 혼인율의 저하는 미혼 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미혼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부양하여야 한다.

많은 부인들이 이상적인 자녀수를 가지기전에 출산을 중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비교적 크게 느낄 수 있는 계층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출산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부담으로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인이 많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제시되는 정책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취업의 중단을 최소화 하고, 출산 후 재취업의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미혼남자들이 직업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결혼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의 기회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택 마련의 기회가 직업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출산과 함께 오는 가사, 자녀양육의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 부담하여, 결혼과 출산이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행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만휴가,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며, 보육 정책을 보완하여 모든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시간과 경제력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모든 취업자들이, 남녀의 구별 없이 "직장의 노예"가 되어 취업과 자녀양육 중 한 가지만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취업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휴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취학자녀들이 방과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서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친 가족정책"은 그 대상이 전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새 세대 젊은이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과 정보매체에서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기혼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경제적 자율성, 그리고 이혼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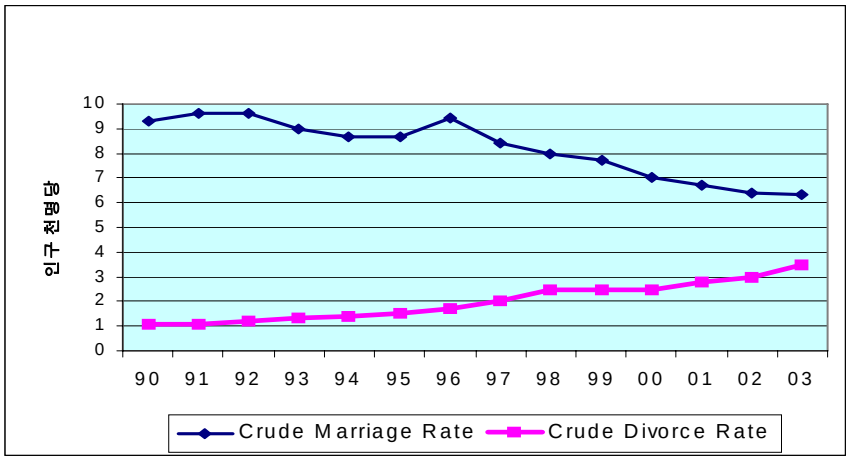
제1절 문제제기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조이혼율(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이 1980년 0.6이었다가 조금씩 증가하여 1991년 1.1을 기록하였다. 그 후 매년 0.1씩 증가하여 1995년에 1.5에 이르렀으나 1995년 이후 3년 동안 매년 0.2, 0.3, 0.5씩 증가하였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정체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해마다 0.3, 0.2, 0.5씩 증가하여 2003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5에 이르렀다(그림 5-1 참고). 이 수치는 미국의 4.1에 근접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의 범주에 포함된다. 2004년 이십여 년 만에 최초로 조이혼율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감소내지 정체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게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최근 가족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혼을 원하는 일부 여성들이 양성평등법이 실현되는 2008년 이후로 이혼을 연기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어 향후 몇 년간 추세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혼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의 하나는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안녕이다. 미국과 같이 결혼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 소유주의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등 비교적 양성평등법이 실현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혼후 여성과 자녀의 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보고하고 있다(Amato, 2000; Biblarz & Raftery, 1999). 이 연구들은 18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에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모자가정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부 또는 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있고 별거하는 부모 측에도 양육비보조가 법으로 강제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결혼파경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안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증가가 비교적 최근의 추세이므로 아직 자녀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지만 외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오히려 이혼중 양육권이나 친권 지정과정에서 자녀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도 있다. 경쟁적인 입시과정 등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이혼으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5-1〕 조혼인율과 조이혼율(1990~2003년)



이혼은 이와 같이 이혼 가족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혼의 사회적 파급효과는 이혼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이혼과 결혼에 관한 사회적 가치, 즉,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기혼자들의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이혼자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줌으로써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Bumpass 1990; Giddens 2005). 이혼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도 이혼 당사자들의 가족형성 과정

이 중단되는 것 이외에 이혼가능성의 기대가 가져오는 결혼이나 출산행동의 변화도 포함된다. 이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련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이혼추세를 예측하고 또 가족의 안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혼에 대한 태도가 출산계획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혼가치관이 다른 가족행동과도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이혼의 원인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일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여, 이혼하는 것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부부모두 혹은 어느 한편의 안녕에, 즉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안녕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될 것이다(Becker, Landes, & Michael 1977; Sayer & Bianchi, 2000). 그러나 이 원인론은 급격히 증가하는 이혼추세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같은 수준의 불만족상태이라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추세가 이혼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선택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혼이나 혼전 성관계 등 금기시 되던 사회적 행동이 급격히 변화하는 데는 주로 사회규범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Ishida, 2003; Lee, 2004; Retherford, Ogawa, & Matsumura, 2001). 이혼을 금기시하는 시선이 약화되어, 가족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 이혼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가치관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의 변화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그와 함께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향상되면서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형성된다. 또한 국민 전체의 교육수준 증가도 여러 가지 인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확산에 기여한다. 특히 부계 혹은 부권 중심의 우리나라 가족제도 하에서는 고통을 겪는 여성들도 단지 결혼관계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관계를 유지해 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

족관계 상황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약화되면 이혼율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왔다(KOSIS, 2005). 서구의 연구를 보면 흥미롭게도 남편과 부인의 수입이 결혼안정성에 반대의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남편의 수입은 높을수록 이혼확률이 감소하지만 부인수입의 경우, 특히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부에서, 이혼확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가족이론가들은 이러한 부인의 수입효과를 남편의 수입효과에 대비하여 여성의 "독립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독립효과는 점점 감소한다(Oppenheimer, 1997; Sayer & Bianchi, 2000). 아마도 취업기회가 증대함에 따라 비취업 기혼여성도 이혼과 함께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도시부문에서 기혼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직도 쉽지는 않으나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단순직 취업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1997년 12월 이후 IMF 경제 위기기간 동안 많은 남성들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게 되어 중년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로 분리된 성역할이 차츰 붕괴된다는 것은 남편의 수입효과는 감소하는 한편 여성의 독립효과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1〕 을 보면 실제로 IMF 관리기간 전후 이혼율이 상승하였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이혼율 증가와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IMF관리기간 등의 경제적 충격이 이혼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약화될 것이다. 부정적인 견해의 약화는 또 다시 이혼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이혼에 대한 규범의 변화와 결혼의 불안정성을 잇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결혼결정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배우자의 선택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이혼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결혼이나 배우자선택을 보다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Ishida, 2003). 결과적으로 최적이 아닌 배우자와 결혼할 확률이 늘어나고 따라

서 이혼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아서 아직 전체 인구중 이혼유경험자의 비율이 서구사회보다 현저히 낮아서 이 가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이혼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한편 이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절 이혼 가치관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설

이혼 가치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이 가설들은 주로 이혼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빌려온 것 들이다. 본 연구는 이혼 가치관과 행동의 결정요인이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첫째, 부부관계 만족도는 이혼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혼은 결혼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을 택하겠다는 선택이므로 부부관계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태도 혹은 가치관은 실제 생활과 다른 경로로 형성될 수도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도 교육이나 가정환경 등의 영향으로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개인의 성장배경과 관계없이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태도들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다.

가족을 개인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혼에 대해 비허용적일 것이고 동시에 결혼과 자녀가, 특히 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가족의 유

지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면 대체로 반대의 태도들을 보일 것이다. 즉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한 단면일 것이라는 가설이다.

셋째, 사회규범의 일반적인 결정요인들도 이혼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이 적을수록 연령이 많은 사람에 비해 진보적인 태도를 보여 이혼에 대해 허용적일 것이며,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에 비해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도시거주자가 농촌거주자 보다 더 이혼에 대해 허용적일 것이다.

넷째,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허용적일 것이다.

여성의 자율성은 경제적 독립성, 사회적 자율성, 의사결정의 권한 등을 포괄하는데 어떤 측면이든지 자율성이 강할수록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취업은 이 모든 자율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의 틀에서 생활하는 여성은 이혼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남편은 노동시장에서 부인은 가족 내에서의 일로 역할을 나누는 전통적 성역할 분담은 결혼관계 내에서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결혼이 파탄되면 부부 각자에게 손실이 크다. 성역할 분담은 부부각자가 자신이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고 그 열매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부부모두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결혼이 파탄되면 남편은 가족 내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나 생산품을 잃게 되고 부인은 수입을 잃게 된다.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수년 내지 수십 년간 부부간 역할 분담을 해 왔다면 여성의 경우 이혼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계속 일해 온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수입도 적을 것이다.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남성의 수입이 높으므로 이혼 후 남편수입의 손실은 경제적 지위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

성이 높은 바, 비취업여성들에게는 이혼은 더욱 불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이 없는 여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일 것이다. 과거의 취업경험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은 수입을 제공한다는 의미이외에 사회적 자율성을 발전시키는 역할도 한다.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직장생활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생존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의 자율성을 성장시키는 기능도 있다.

여성의 근로수입 액수도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근로수입은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의 지표이다. 재산수입이나 기타 수입도 경제적 자립성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비근로수입의 수입원은 부부간에 명확한 분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다. 현재 유배우여성의 경우 가정내 부부간 의사결정권 배분도 여성의 자율성을 나타낸다. 여성의 결정권이 클수록 보다 강한 자율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다.

다섯째, 결혼중 형성된 부부공유의 자산이 많을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일 것이다.

물질적 자산은 생활수준을 의미하고 가족원의 신체적 안녕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이혼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부부공유의 자산은 자가소유나 순재산과 같은 물질적 자산도 포함하지만 또한 출생자녀수도 포함한다. 원만한 결혼관계 속에서 많은 자녀수는 부모에게 그만큼 많은 유대와 행복감을 의미한다. 반면에 많은 자녀수는 결혼이 파탄될 경우 그로인해 고통을 받을 가족원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가족원의 분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비용이외에 비물질적인 의미에서도 이혼의 비용이 자녀수가 많을수록 커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일 것이다.

여섯째, 유배우여성의 경우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일 것이다.

남편의 교육, 수입,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의 이혼에 따른 기회비용이 늘어나므로, 이혼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것이다.

일곱째, 여성의 결혼력과 이혼에 대한 태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여성은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것은 결혼파탄을 겪으면서 태도가 보다 허용적으로 변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용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간 갈등이 결혼파탄의 행동으로 연결된 것일 수도 있다. 태도와 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어느 방향이든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다. 반면 사별의 경우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유배우자와 크게 다를지 않을 것이다.

제 4 절 자료와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하여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가설검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표 5-1 참조). 부부관계만족도는 네 개의 측면을 고려하였다. 부부간의 대화,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 문화생활, 그리고 부부관계 전반에 관한 만족도 등이다. 5점 척도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매우 불만족스럽다 2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4 만족스럽다 5 매우 만족스럽다. 이혼, 별거 혹은 사별여성의 경우에는 부부관계 대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및 친인척관계, 가족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부부관계만족도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만족도와 달리 이혼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 순차 로짓 다변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내용
종속변수	
이혼에 대한 태도	1: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2: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모르겠다 3: 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4: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독립변수	
부부(가족)관계 만족도	
부부간 대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배우자의 소비성향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부부간 문화생활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부부관계 전반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이웃 친인척관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가족 문화 여가활동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다른 가족주의적 태도 변수	
결혼의 필요성	1: 반드시 해야 한다 2: 하는 편이 좋다 3: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모르겠다 4: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자녀의 필요성	1: 꼭 있어야 한다 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3: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다
아들의 필요성	1: 꼭 있어야 한다 2: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3: 없어도 상관없다, 모르겠다
사회규범의 일반적 결정요인	
연령	실제 수: 세 (15~59세 조사대상자와 그 배우자, 남 21~67세 여 18~65세)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0: 중학교 이외 (초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 1: 중학교
고등학교	0: 고등학교 이외 (중학교 이하, 전문대학 이상) 1: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0: 전문대학 이상 이외 (고등학교 이하) 1: 전문대학 이상
농촌거주	0: 도시 거주 1: 농촌 거주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율성	
결혼전 취업경험 (있다)	0: 없다 1: 있다
(현재 일하지 않음)	
현재취업: 상용, 임시,일고	0: 상용, 임시, 일고 이외 1: 상용, 임시, 일고
현재 취업: 자영업,고용주	0: 자영업 고용주 이외 1: 자영업 고용주
현재취업: 가족종사자	0: 가족 종사자 이외 1: 가족 종사자
근로수입 (만원)	실제 수: 만원 (0~997만원, 수입 미상일 경우 유효표본의 평균값 부여)
근로수입 미상	0: 근로수입 미상 아님 1: 근로수입 미상

〈표 5-1〉 계속

구분	내용
가정내 의사결정권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이사, 투자/재산증식, 자녀양육/교육 등 4개 항목)	1: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 2: 대체로 남편이 결정 3: 부부 공동 결정 4: 대체로 부인이 결정 5: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 총 4~20점
결혼중 형성된 자산	
자가소유	0: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1: 자가
순재산	순재산 = 총자산-총부채
(하나도 없거나 빚이 있음)	0: 그 외 1: 1억원 미만
1억원 미만	0: 그 외 1: 1~3억원
1~3억원	0: 그 외 1: 3억원 이상
3억원 이상	0: 미상 아님 1: 순재산 미상
미상	
현존 자녀수(18세 미만 자녀수)	실제 수: 명
남편 특성	
남편수입	실제 수: 만원(0~997만원, 수입 미상일 경우 유효표본의 평균값 부여)
남편수입 미상	0: 수입 미상 아님 1: 수입 미상

가족주의를 대표하는 가족에 대한 다른 태도로는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아들의 필요성 등 세 변수를 살펴보았다. 혼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질문에 응답은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④ 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리고 ⑤ 모르겠다 등이다. "모르겠다"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같은 의미로 간주하여서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자녀의 필요성과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① 꼭 있어야 한다,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③ 없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④ 모르겠다 등이지만 "모르겠다"는 응답은 있어야 한다는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없어도 상관없다"로 간주하여 3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농촌거주, 결혼 전 취업경험, 현 고용상태, 근로수입, 자가 소유, 현존자녀수, 남편근로수입 등의 변수는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표 5-1 참조). 가정 내 의사결정권은 중요 가정 내 일에 부부 중 누가 최종의사결정권을 갖는가 하는 변수이다.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

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 4개의 의사결정 항목에서 ①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 ② 대체로 남편 결정, ③ 부부공동 결정, ④ 대체로 부인 결정, 그리고 ⑤ 전적으로 부인 결정 등의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총 4점에서 20점까지의 값을 갖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순재산은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감한 금액으로 분석을 위해 6개 집단으로 나누었다(순재산 0, 부(負)의 순재산, 즉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순재산 1억원 미만, 순재산 1억~3억 미만, 3억 이상, 순재산 미상).

종속변수인 이혼에 대한 태도에는 다음의 6개 선택이 질문지에 주어졌다. 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②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 ④ 이혼은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⑤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하다, 그리고 ⑥ 모르겠다 등이다.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항목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빈도가 매우 낮아서 다음 항목인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와 통합하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허용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로 간주하였다. 그 결과 4점 척도로 재구성되었다(표 5-1 참조).

다변인 분석을 위해 순차로짓(ordered logit)이라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였다(Agresti & Finlay 1997). 순차로짓의 결과에 나타난 계수 해석은 보통 로짓(일명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와 정확히 같다. 다만 보통로짓의 경우 종속변수가 두 가지 사건으로만 분리되는데, 순차로짓에서는 둘 이상의 순차적인 경우들로 나누어진다. 그 순차적 경우들을 가지고 모든 가능한 이분적 조합들을 만들고 그 조합의 수만큼 보통로짓을 실행한다는 원리이다.

이혼에 대한 태도에 4개의 순차적 응답이 있으므로 3개의 이분적 조합이 가능하다. 즉, '1 대 2+3+4', '1+2 대 3+4', '1+2+3 대 4'의 조합이다. 각 조합에서 전자에 "0" 후자에 "1"의 값을 부여한다. 똑같은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여 이 3개의 보통 로짓을 동시에 실행하되, 독립변수들의 계수가 세 가지 로짓에서 같다고 가정한다. 즉, 각 독립변수가 태도의 이분적 구분에 주는 효과는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세 가지 로짓에서 종속변수인 태도의 이분적 분포는 각각 다르므로, 모델의 상수(즉, y 절편)는 각각 다르도록 허용되어서 세 개의 상수(혹은 절편)가 제시된다.

본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정의 계수는 보다 비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부의 계수는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로짓계수(coefficient)는 숫자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로짓계수의 반로그(anti-log 즉 exponential)를 취하여 odds ratio를 구하였다. odds ratio는 독립변수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에 사건의 odds가 몇 배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숫자이다. odds ratio가 1이면 독립변수의 값이 한 단위 증가해도 이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이 넘으면 비허용적인 태도의 odds가 그만큼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1이하이면 비허용적인 태도의 odds가 더 낮다는 것을 뜻한다. 표에는 계수대신 odds ratio를 제시하였으므로, stanadard error대신 z값을 제시하도록 한다. z 값은 계수를 standard error로 나눈 값으로 1.96 이상이면 계수가 $p<.05$ 수준에서 유위미하다.

1. 분석결과

가. 표본의 특성

<표 5-2>는 15~59세 전체 기혼여성 표본뿐 아니라 결혼상태별 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예상된 바와 같이 평균연령은 사별여성이 50.8세 가장 높고 초혼지속중인 여성이 40.7세로 가장 낮다. 또 사별여성은 교육수준이 가장 낮고, 농촌 거주율이 높은 편이다. 결혼 전 취업경향은 초혼지속중인 여성이 가장 높고, 현재 취업률은 이혼 별거의 여성이 가장 높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사별여성이 가장 비허용적이고, 이혼 별거여성이 가장 허용적이다. 이러한 결혼상태별 이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연령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남아있는지 아래의 다변인 분석에서 살펴볼 것이다.

〈표 5-2〉 18～59세 기혼여성 표본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전체	초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재혼
가족(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간 대화-	-	3.3	-	-	3.3
배우자의 소비성향	-	3.4	-	-	3.5
부부간 문화생활	-	2.8	-	-	2.8
무무관계 전반	-	3.3	-	-	3.4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3.4	-	3.4	3.2	-
이웃 친인척관계	3.4	-	3.4	3.1	-
가족 문화 여가활동	2.9	-	2.6	2.5	-
다른 가족 채도 변수					
결혼의 필요성	2.7	2.7	2.8	2.2	2.6
자녀의 필요성	2.5	2.5	2.6	2.2	2.3
아들의 필요성	1.8	1.8	2.0	1.6	1.8
사회규범의 일반적 결정요인					
연령	41.4	40.7	50.8	44.3	45.0
교육수준(초등학교 이하)	0.18	0.15	0.58	0.20	0.26
중학교	0.16	0.16	0.18	0.24	0.30
고등학교	0.44	0.45	0.20	0.48	0.38
전문대학 이상	0.22	0.24	0.04	0.08	0.06
농촌거주	0.29	0.29	0.40	0.17	0.36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율성					
결혼전 취업경험(있다)	0.71	0.73	0.45	0.61	0.51
(현재 일하지 않음)	0.46	0.49	0.27	0.23	0.49
현재취업: 상용, 임시, 일고	0.28	0.26	0.45	0.54	0.24
현재취업: 자영업, 고용주	0.11	0.09	0.28	0.23	0.12
현재취업: 가족종사자	0.15	0.16	0.00	0.00	0.15
근로수입(만원)	44.4	41.4	70.1	86.7	29.7
근로수입 미상	0.01	0.01	0.00	0.01	0.00
가정내 의사결정권	-	13.2	-	-	12.9
결혼중 형성된 자산					
자가 소유	0.69	0.71	0.66	0.30	0.61
순재산(없거나 빚이 있음)	0.13	0.11	0.16	0.31	0.26
1억원 미만	0.49	0.48	0.58	0.57	0.55
1~3억원	0.25	0.27	0.19	0.07	0.12
3억원 이상	0.08	0.09	0.03	0.02	0.03
미상	0.05	0.05	0.04	0.03	0.03
현존자녀수(18세 미만 자녀수)	(1.3)	2.1(1.3)	2.7(.6)	1.9(.7)	(.8)

〈표 5-2〉 계속

구분	전체	초혼 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재혼
남편특성					
남편수입	-	207.5	-	-	149.4
남편수입 미상	-	0.02	-	-	0.02
이혼에 대한 태도(평균)	2.5	2.5	2.8	1.9	2.2
1. 이유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0.19	0.18	0.16	0.39	0.27
2.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0.31	0.31	0.20	0.33	0.30
3.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0.35	0.36	0.34	0.25	0.32
4.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0.15	0.15	0.30	0.03	0.11
표본수	8,584	7,630	376	382	172
(표본분포)	(1.00)	(.891)	(.044)	(.045)	(.020)

주: 1) 독립변수중 교육수준, 농촌거주, 결혼전취업, 현재취업상태, 자가소유, 가족순재산 등이 명목변수임.
2) 명목변수는 구성율, 나머지는 평균치임.

나. 이혼에 대한 태도의 다변인 분석

1) 초혼지속중인 유배우여성

초혼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18~59세 여성표본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순차로짓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5-3>에 제시되는데, 두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혼결정에 혹은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인 부부관계만족도와 일반적으로 가치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포함한다. 즉, 가족주의이념을 반영하는 가족태도 변수들과 사회규범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령, 교육, 거주지역 변수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에 이혼을 용이하게 하거나 혹은 억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수들을 첨가하였다. 이 모델들은 서구 및 한국에서 실시된 여러 선행연구에서 실제 이혼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변수들을 사용한 것이다. 이 모델들을 통해 실제 이혼확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이혼에 대한 태도에도 같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실제 이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들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결과를 분석한 후 그 함의를 논의한다.

부부관계만족도는 가설에서 예측한대로 전반적으로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비허용적이었다. 즉,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생각한다. 달리 표현하면, 전반적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은 여성은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여성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진다. 이 결과는 부부관계만족도가 궁극적인 이혼의 결정요인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부부관계만족도의 개개문항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제한 후에도 부부간의 대화,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반면에 배우자의 이해도,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고려하였으나 이들은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제하면 이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다시 말해 부부간의 대화,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인 부부관계만족도를 넘어서 각각이 이혼에 대한 태도에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특이한 것은 부부간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처음 모델에서 다른 항목들과 반대의 효과를 보이다가 두 번째 모델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부부관계의 일반적 만족도보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른 가족태도를 살펴보면, 가설에서 예측한대로 가족주의이념을 반영하는 태도들은 이혼에 대한 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결혼, 자녀,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이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규범의 일반적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예측한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비허용적이었다. 결혼관계가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가정할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해 이혼을 더 바람직한 선택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효과는 교육이 인습이나 전통보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고양시키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실제 이혼빈도와는 부의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 비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

향은 강하지만 실제 이혼에 이르는 확률은 더 높다. 예측한대로 농촌거주 여성들이 도시거주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보다 비허용적이다. 농촌거주자가 도시거주가들 보다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 사실과 일치한다.

연구가설에서는 부인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분석결과는 이 가설을 대체로 지지하였으나 일부 상충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이 이혼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이었다. 또한 부인의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강할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었다. 이 결과들은 여성의 사회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율성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인 여성의 근로수입은 가정의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고 나면 이혼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또한 취업상태별로 보면, 예측과 달리, 현재 취업한 여성이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이혼에 대하여 더 비허용적이었다. 가족종사자의 경우 실제로 이혼빈도도 다른 어떤 취업상태의 여성보다 현저히 낮으므로(Lee, 2004) 예상된 결과이다. 그러나 상용고, 임시고, 일용고, 자영업 등 경제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들이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이혼에 대해 더욱 비허용적이었음은 예상 밖이다. 선행연구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실제로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서 더욱 그렇다(Lee, 2004).

본 연구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견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혼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반면, 일하는 남편-전업주부의 전통적인 성 역할분담을 따르는 부부의 경우 이혼의 기회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앞에서 논의하였는데, 그러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들이 이혼에 대해 더욱 허용적이었다는 점은 전업주부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향후 이 분야의 심층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결혼 중 형성된 자산과 관련한 서구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 중 형성된 자산은 이혼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Becker, Landes, & Michael, 1977). 이는 결혼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지는 이유이기

도 하다. <표 5-3>을 보면 예측대로 자가 소유여성이 자사 비소유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더 비허용적이었다. 부부가 결혼 후 형성한 중요한 자산항목인 자녀의 경우도,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혼에 대해 보다 비허용적이었다. 그러나 재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재산의 경우 이혼에 대한 태도와 뚜렷한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예측과 반대로 순재산이 많을수록 (1~3억을 가진 여성이 순재산이 0원이거나 빚이 있는 여성들보다) 이혼에 대해 허용적이었지만, 순재산이 3억 이상인 경우 다시 비허용적인 태도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예측과 달리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이혼에 대해 허용적이었다.

결과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모델을 몇 가지로 다르게 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제할 경우에도 위에 나타난 변수들의 효과는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산과 남편의 수입은 이혼의 기회비용으로서의 효과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고양시키는 개인주의의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표 5-3〉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초혼 유배우 18~59세 여성(Ordered Logit)

구분	odds ratio		z	odds ratio		z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간 대화	1.11	**	3.0	1.12	**	2.8
배우자의 소비성향	1.10	**	3.8	1.09	**	3.9
부부간 문화생활	0.94	*	-2.2	0.96		-1.6
부부관계 전반	1.17	**	3.8	1.19	**	4.1
다른 가족 태도 변수						
결혼의 필요성	1.35	**	11.5	1.34	**	11.4
자녀의 필요성	1.42	**	10.4	1.42	**	10.5
아들의 필요성	1.16	**	4.9	1.15	**	4.4
사회규범의 일반적 결정요인						
연령	1.03	**	7.2	1.03	**	7.2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0.81	*	-2.5	0.89		-1.3
고등학교	0.64	**	-5.5	0.76	**	-3.2
전문대학이상	0.61	**	-5.5	0.77	**	-2.8
농촌거주	1.29	**	5.1	1.18	**	3.1

〈표 5-3〉 계속

구분	odds ratio		z	odds ratio		z
부인의 사회경제적 자율성						
결혼전 취업경험 (있다)	-	-	-	0.87	*	-2.5
(현재 일하지 않음)	-	-	-			
현재취업: 상용, 임시, 일고	-	-	-	1.14	*	2.3
현재 취업: 자영업, 고용주	-	-	-	1.12		1.5
현재취업: 가족종사자	-	-	-	1.17	*	2.3
근로수입 150만원 이상	-	-	-	0.87		-1.6
근로수입미상	-	-	-	1.31		0.9
가정내 의사결정권	-	-	-	0.97	**	-3.0
결혼중 형성된 자산						
자가 소유	-	-	-	1.18	**	3.2
순재산 (없거나 빚이 있음)	-	-	-			
1억원 미만	-	-	-	0.96		-0.5
1-3억원	-	-	-	0.83	*	-2.3
3억원 이상	-	-	-	0.96		-0.4
미상	-	-	-	0.98		-0.1
현존 자녀수	-	-	-	1.09	**	3.2
남편 특성						
남편수입	-	-	-	0.999	**	-2.7
남편수입 미상	-	-	-	0.93		-0.1
절편1	2.29	-	-	1.88		-
절편2	3.94	-	-	3.54		-
절편3	5.92	-	-	5.54		-
Log-liklihood ratio chi square	-	-	1168**	-		1232**
(자유도)	-	-	12	-		27
n	-	-	7630	-		7630

주: 1) odds ratio는 1보다 높은 점수일수록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나타냄 .
2) 독립변수중 교육수준, 농촌거주, 결혼전취업, 현재취업상태, 자가소유, 가족순재산 등이 명목변수임.
* p<.05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전체 기혼여성 표본

사별이나 이혼·별거 등 결혼의 파경을 경험한 여성들과 유배우여성의 태도가 표본의 특성에 포함된 기타의 독립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 기혼여성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표 5-4

참조). 모든 결혼상태의 여성을 포함하므로 부부관계와 관련되는 변수들은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초혼 유배우여성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들어가지 않은 모델과 들어간 모델을 함께 제시한다.

〈표 5-4〉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8～59세 기혼여성 (Ordered Logit)

구분	odds ratio		z	odds ratio		z
현 결혼상태 (초혼지속)						
사별	1.08		0.6	1.11		0.8
이혼, 별거	0.38	**	-9.5	0.40	**	-8.5
재혼	0.59	**	-3.7	0.59	**	-3.6
가족관계 만족도						
대화 및 친밀도	1.20	**	5.7	1.20	**	5.6
이웃, 친인척관계	1.09	**	2.6	1.09	*	2.5
문화, 여가활동	0.96		-1.5	0.98		-0.9
다른 가족 태도 변수						
결혼의 필요성	1.37	**	13.1	1.37	**	13.0
자녀의 필요성	1.36	**	9.9	1.36	**	9.9
아들의 필요성	1.18	**	5.5	1.17	**	5.4
사회규범의 일반적 결정요인						
연령	1.03	**	10.1	1.03	**	8.4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0.81	**	-2.6	0.84	*	-2.2
고등학교	0.66	**	-5.6	0.70	**	-4.6
전문대학 이상	0.63	**	-5.6	0.69	**	-4.2
농촌거주	1.26	**	5.0	1.21	**	3.7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율성						
결혼전 취업경험 (있다)	-	-	-	0.91	*	-2.0
(현재 일하지 않음)	-	-	-			
현재취업: 상용, 임시, 일고	-	-	-	1.15	**	2.8
현재 취업: 자영업, 고용주	-	-	-	1.07		1.3
현재취업: 가족종사자	-	-	-	1.19	**	2.9
근로수입 150만원 이상	-	-	-	0.85	*	-2.2
근로수입미상	-	-	-	1.14		0.5

〈표 5-4〉 계속

구분	odds ratio		z	odds ratio		z
가족 자산						
자가 소유	-	-	-	1.16	**	3.0
순재산 (없거나 빚이 있음)						
1억원 미만	-	-	-	1.00		0.1
1~3억원	-	-	-	0.86	*	-2.0
3억원 이상	-	-	-	0.92		-0.8
미상	-	-	-	1.03		0.2
18세 미만 가족원수	-	-	-	1.02		0.7
절편1	1.93	-	-	2.01		-
절편2	3.54	-	-	3.61		-
절편3	5.50	-	-	5.58		-
Log-liklihood ratio chi square	-	-	1369**	-		1404**
(자유도)	-	-	(14)	-		(26)
n	-	-	8584	-		8584

주: 1) odds ratio는 1 보다 높은 점수일수록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태도를 나타냄.
2) 독립변수중 교육수준, 농촌거주, 결혼전취업, 현재취업상태, 자가소유, 가족순재산 등이 명목변수임.
* p<.05 **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결혼상태에 의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타 독립변수들을 통제하고 나면 사별여성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유배우여성과 같았다. 그러나 현재 이혼이나 별거중이거나 재혼한 여성은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배우여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현저하게 더 허용적이었다. 횡단적 연구에서 어떤 변수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인과적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데 현 결혼상태와 이혼에 대한 태도의 두 변수는 상호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관계 만족도 등 기타 독립변수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체표본의 대다수가 초혼유배우 여성이므로(8,584명 중 7,650명) 기타 독립변수의 영향은 <표 5-3>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남편의 수입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 여성의 고소득(월평균 150만원 이상)이 고액의 순재산(1~3억원)과 함께 개인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들은 저소득의 적은 재산을

가진 여성에 비하여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 사별·이혼·별거·재혼 여성

각 집단내의 동질성 때문인지 혹은 적은 표본수 때문인지 이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뚜렷한 독립변수가 없다(표 5-5 참조). 이혼·별거여성의 경우, 현재 취업한 여성이 취업하지 않은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훨씬 더 허용적이었는데, 이 결과는 초혼유배우 여성의 경우와 상반된다. 즉, 초혼 유배우여성의 경우 취업이 이혼에 대한 태도를 더 허용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일단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경우 취업이 이혼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나머지 변수들은 초혼 유배우여성의 경우와 대체로 일관적이다. 사별여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가족주의태도가 주요 변수이었고, 이혼·별거여성의 경우도 비슷하여 아들의 필요성이 주요 변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혼여성의 경우 가족종사자들이 다른 어떤 취업상태의 여성들보다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이었다.

〈표 5-5〉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초혼중단 18～59세 여성(Ordered Logit)

현재 결혼상태	사별			이혼, 별거			재혼		
	odds ratio		z	odds ratio		z	odds ratio		z
가족관계 만족도									
부부관계 전반	-			-			1.10		0.5
가족문화 여가활동	-			1.09		1.3	-		-
다른 가족 태도 변수									
결혼의 필요성	1.46	**	3.8	-			-		
자녀의 필요성	1.57	**	3.0	-			-		
아들의 필요성	-			1.43	**	2.7	-		
사회규범의 일반적 결정요인									
연령	1.03	*	2.0	0.99		-0.9	1.04	*	2.0
교육수준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0.64		-1.8	1.26		1.0	0.60		-1.6
전문대학이상	0.98		-0.0	0.68		-1.1	0.26	*	-2.2

〈표 5-5〉 계속

현재 결혼상태	사별		이혼, 별거		재혼	
	odds ratio	z	odds ratio	z	odds ratio	z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율성						
(현재 일하지 않음)						
현재 취업	0.92	-0.4	0.58 *	-2.2	-	
현재 취업: 피고용,자영,고용주	-		-		1.71	1.8
현재취업: 가족종사자	-		-		2.99 *	2.5
절편1	1.88		-0.21		1.10	
절편2	3.05		1.22		2.52	
절편3	4.62		3.96		4.52	
Log-liklihood ratio chi square		53**		19**		25**
(자유도)		6		6		6
n		376		386		172

주: 표본수가 작으므로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 모델을 표본에 따라 다르게 하였음.
* p < .05 ** p< .01

제 5 절 이혼태도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의 다변인 분석

이혼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이 절에서는 이혼에 대한 태도가 가족행동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18~39세의 초혼지속중인 유배우여성을 표본으로 하여 출산계획에 대한 다변인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6 참조). 이 분석은 본 보고서 <표 4-11>을 재현 확대하였는데, 모든 유배우여성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나 <표 5-6>의 분석은 전술한 분석결과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초혼이 지속되고 있는 유배우여성만을 포함하였다. 출산계획 변수는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입니까?”의 질문에서 “낳겠다”는 응답에는 1을, “낳지 않겠다”와 “생각중이다”라는 응답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18~39세 초혼 유배우여성의 약 4분의 1이 ”낳겠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5-6>에서 첫 번째 모델은 부인의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만 포함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표 5-11>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대 이

상의 교육수준에서, 농촌거주자가, 비취업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낳겠다"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표 5-6〉 18～39세 초혼 유배우부인의 자녀를 더 낳겠다는 태도의 로짓모델

구분	odds ratio	z	odds ratio	z
부인의 태도와 부부관계만족도				
비허용적인 이혼태도	-		1.14*	2.04
자녀의 필요성	-		1.38**	3.67
아들의 필요성	-		1.77**	6.40
부부관계만족도				
부부간 대화	-		0.99	-0.18
배우자의 소비성향	-		1.22*	2.35
부부간 문화생활	-		0.81**	-3.10
부부관계 전반	-		1.07	0.63
부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령(18～24세)				
25～29세	1.23	0.72	1.26	0.76
30～34세	0.56*	-2.03	0.57	-1.88
35～39세	0.13**	-6.81	0.14**	-6.4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1.33	0.90	1.54	1.36
전문대학	2.48**	2.69	3.00**	3.18
대학교 이상	1.62	1.49	1.96*	2.01
농촌거주 (도시: 0, 농촌:1)	1.55**	3.28	1.47**	2.78
현재 비취업 (취업: 0, 비취업: 1)	1.37**	2.63	1.43**	2.93
현존 자녀수 (3명 이상)				
없음	137.36**	12.68	243.23**	13.54
아들 1, 딸 0	18.56**	8.06	24.23**	8.65
아들 0, 딸 1	28.22**	9.15	41.88**	9.99
아들 2, 딸 0	1.45	0.94	1.56	1.12
아들 0, 딸 2	4.17**	3.79	5.79**	4.58
아들 1, 딸 1	0.99	-0.02	1.01	0.03
자녀 사망 경험 (없음: 0, 있음 :1)	0.50	-0.97	0.49	-0.97
Log-likelihood chi square	1913**		2001**	
(자유도)	(15)		(22)	
n	3620		3620	

주: 1) <표 5-11>에서와 같이 앞으로 자녀를 더 낳겠다는 응답은 1, 다른 응답은 0의 값을 부여하였음.
2) 현재 임신중인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도 1에 포함됨.

현존자녀수와 자녀의 성별 구성이 출산계획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현존자녀수가 3명 이상일 경우에 비하여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낳겠다"는 odds가 무려 137배에 달하였다. 같은 자녀수라도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경우 "낳겠다"는 확률이 높았다. 참고로, 표본의 약 10%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겠다"라는 응답의 확률은 약 2%로 odds가 약 .02(2/98)이었다.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낳겠다"라는 응답의 확률은 약 88%, odds는 약 7.3(88/12)이었다.

두 번째 모델에는 이혼에 대한 태도, 자녀와 아들의 필요성, 부부관계만족도가 포함되었다. 이혼에 대한 태도가 비허용적일수록 앞으로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이혼을 실현 가능한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들의 출산력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낮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와 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부부관계만족도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다변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항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낳겠다"는 응답확률이 높았고, 부부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낳겠다"는 응답확률이 낮았다.

실제 출산행동이 출산계획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결과는 유배우여성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출산 등 가족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혼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자녀와 아들의 필요성이나 부부관계만족도 등 심리적인 여건이 가족행동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 6 절 논의 및 시사점

1. 논의

본 장에서는 기혼여성에 있어서 이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변인 순차로짓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기혼여성 표본이외에 초혼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재혼 등 현재의 결혼상태별 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초혼 유배우여성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면, 먼저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비허용적이었다. 또한,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와 아들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이었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거주일수록 이혼에 대하여 비허용적이었다.

이와 결과들은 이혼에 대한 태도가 연령, 교육수준, 농촌거주와 같은 사회규범의 일반적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개인보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족주의적 태도의 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와 같이 일반적 사회규범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으면 가족주의적인 태도와는 별개로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율성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다소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과 가족 내 의사결정권이 강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서 여성의 자율성이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 취업중인 유배우여성은 취업하지 않은 유배우여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더 비허용적이었다. 가족종사자의 경우 남편 혹은 다른 가족원과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혼에 대해 보다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상용고, 임시고, 일용고 등에 종사하는 유배우여성의 경우에도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에 비해 이혼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취업자체는 여성의 개인주의적 자율성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따라서 취업이 유배우여성이 이혼을 선택하도록 촉진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이미 이혼이나 별거를 한 경우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이혼에 대해 현저하게 허용적이었다. 즉, 취업이 이혼이나 별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유배우, 이혼, 별거, 사별, 재혼 여성을 모두 포함한 표본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상 고소득이면 이혼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었다. 그러나 이 소득의 효과가 반드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때문은 아닌 듯하다. 가족의 순재산이 많은(1~3억원) 여성, 남편의 수입이 높은 유배우여성의 경우에도 여성자신의 수입이 높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해 허용적이었다.

가족자산은 이혼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므로 가족자산이 많을수록 이혼에 대해 비허용적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고액의 가족재산이나 수입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유연한 가치관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종합적으로 일곱 개의 가설 중 여성의 자율성에 관한 네 번째의 가설과 가족자산에 관한 여섯 번째 가설이 부분적으로 부정되었고 나머지 가설들은 긍정되었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규범의 약화 즉 이혼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약화가 급격한 이혼율 증가의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가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지역적로 많은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통제한 후 사회규범을 비교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나타난 이혼태도의 유형을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이혼행동의 유형과 연결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혼에 대한 태도 유형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실제 이혼행동의 유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즉, 이혼행동이 이혼에 대한 사회규범 혹은 이혼에 대한 태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의 순재산과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이혼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실제 이혼의 확률은 가족 재산이나 남편의 수입과 부의 관계에 있다고 선행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Lee 2004, 2005). 이러한 결과는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이혼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설사 사회 전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이런 규범의 약화가 이혼 증가를 가져온다고 가정하더라도 (Lee 2004), 이혼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혼에 대해 반드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혼태도가 이혼행동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아니라면 전통적 사회규범을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를 저지하려는 정책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사회규범 혹은 이혼태도가 이혼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수입 재산 등 일부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 변수들의 경우 이혼태도와 행동의 유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결혼이나 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태도와 이혼에 대한 태도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급격한 이혼율 증가를 저지하는데 사회규범이 하나의 정책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혼에 관한 정책은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생활의 다른 측면의 정책들과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확증하기는 어려우나 이혼태도는 출산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59세 이하 전체 기혼여성 표본에서 현재의 자녀수가 적을수록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반면 39세 이하 유배우여성의 경우 현재의 자녀수와 성별구성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자신과 가족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여성이 이혼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여성에 비해 “앞으로 아이를 (더) 낳겠다”라고 대답할 확률이 낮았다. 이혼에 대한 태도가 가족생활의 다른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자가소유나 자녀수 등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가족고유의 자산의 증식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혼에 관한 정책이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생활의 다른 측면의 정책들과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만족도 등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이혼태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러 객관적인 조건과 별개로 결혼만족도가 결혼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부부관계의 불만족은 이혼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인 결혼 만족도와 독립적으로 결혼 안정성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의 주관적인 삶의 질이 가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가족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여성의 취업은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현재 이혼이나 별거중인 여성에게 있어서만 취업이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한다. 여성의 취업이 이혼행동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라면 그것은 취업여성의 이혼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가족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끝으로, 수입, 교육 등 사회경제적인 자원에 관한한 이혼에 대한 태도보다는 객관적인 여건이 실제 이혼확률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수입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아서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할 충분한 자원을 가진 여성들이 이혼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만 실제 이혼확률은 낮다. 또한,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이혼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학력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그들의 이혼에 대한 보다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가족생활만족도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제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소득보장이 가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 6 장　자녀가치관 및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제 1 절　문제제기

인구전환기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관심은 자녀가치관과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논의한다. 동 조사는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로 대표성을 갖도록 동일한 조사방법, 조사기법, 조사문항을 사용하였으므로 시계열적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여러 가치관이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하듯이, 자녀가치관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태어난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 가정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아동양육을 전적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선진사회에서의 흐름이다.주8)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적 측면보다 인구학적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소자녀관의 정착으로 자녀의 질적 양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으로 인하여 자녀출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의 장애요인인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

주8)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가 중심이었음.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됨.

환경의 조성,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승권, 2005. 11).

이와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자녀양육의 형태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주9)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부담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 시간적 측면에서 지대해 졌기 때문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최근 자녀양육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제 2 절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자녀의 가치는 사회변화에 따라 상이하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자녀는 가계계승, 노동력의 창출, 노후의 부양기대 등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많은 수(數)의 자녀가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부부중심 가족생활의 강조 등으로 인하여 소자녀관이 형성되고 자녀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절에서는 부인의 자녀가치관을 '자녀의 필요성'에 의하여 살펴본다. 먼저 시계열적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화양상은 15~44세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모색은 15~5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9) 문화방송 가족조사의 결과(2004)를 보면, 부모세대는 다음 세대에 비해 자녀양육의 의미를 '대 잇기'와 '노후봉양'에 강하게 두고 있어 유교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음. 이는 '도구주의 가족이념'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며 자녀의 대학 학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대다수 부모세대가 갖고 있었음.

1. 자녀가치관의 변화양상

가. 전반적 변화

자녀가치관의 측정을 위하여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시계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1991년 90.3%,[주10] 1997년 73.7%, 2000년 58.1%, 그리고 2003년에는 54.5%로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였다.

〈표 6-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1991~2003년)

(단위: %)

연도	반드시 가져야 함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음			모르겠음	계(수)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1]	90.3	8.5	-	-	1.2	100.0(7,448)
1997[2]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3]	58.1	41.5	31.5	10.0	0.5	100.0(6,363)
2003[4]	54.5	44.9	32.3	12.6	0.6	100.0(6,593)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또는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지만을 질문함.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반대로 자녀를 선택적 사항으로 판단하는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부인은 1991년 8.5%, 1997년 26.0%, 2000년 41.5%, 그리고 2003년 44.9%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

주10) 1991년 자료는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15~44세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조사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하겠음.

다'는 부인이 1997년 9.4%, 2000년 10.0%, 그리고 2003년 12.6%로 증가하고 있었다(공세권 외, 1992; 홍문식 외, 1994; 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a, 2004a). 결국 결혼하면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가치관은 퇴색되고 있으며, 점차 자녀필요성은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연령별 자녀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부인의 태도는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부인은 35~39세 연령층이 5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4세 연령층으로 58.6%이었으며, 15~24세 연령층은 50.0%로 가장 낮았다.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은 15~24세 연령층이 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이 12.8%이었으며, 30세 이상의 연령층은 8.8%~9.3%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부인이 30대 이상의 연령층 부인에 비하여 자녀의 필요성이 약함을 보여 주었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인의 태도는 2000년의 조사결과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부인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60.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연령층은 약 53.4~55.5%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자녀가 '있는 것이 나음'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25.0%로 가장 적었고, 다른 연령층은 약 31.7~32.9%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전체 연령층 부인은 15~24세 연령층 부인이 14.5%로 가장 많았고, 30~34세 연령층 부인이 11.8%로 가장 적었다.

따라서 15~24세의 젊은 연령층 부인의 자녀 가치관이 '중간적 위치'에서 '꼭 필요함'으로 다소 변화를 보였다고 하겠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영향을 다소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 출산에 얼마나 연결될 것인지의 여부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제도의 확충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6-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연령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15～24세	50.0	32.9	17.1	-	100.0(210)
25～29세	58.0	29.2	12.8	0.1	100.0(1,214)
30～34세	57.8	33.1	8.9	0.2	100.0(1,568)
35～39세	58.8	31.4	8.8	1.0	100.0(1,776)
40～44세	58.6	31.6	9.3	0.5	100.0(1,595)
2003년					
15～24세	60.5	25.0	14.5	-	100.0(124)
25～29세	55.0	31.7	12.2	1.1	100.0(836)
30～34세	55.5	31.9	11.8	0.8	100.0(1,706)
35～39세	53.4	32.7	13.3	0.6	100.0(1,959)
40～44세	54.1	32.9	12.5	0.5	100.0(1,969)

자료: 1)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2)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다. 교육수준별 자녀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고등학교 학력의 부인이 59.1%로 가장 높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56.3%로 가장 낮았으며,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중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1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으로 10.8%이었으며,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층 부인은 6.3%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부인의 연령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고학력층의 부인은 젊은 연령이 많기 때문에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자녀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6-3〉 15～44세 유배우부인의 교육수준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초교 이하	56.6	35.5	6.3	1.5	100.0(332)
중학교	58.2	29.9	11.3	0.6	100.0(806)
고등학교	59.1	31.1	9.6	0.3	100.0(3,419)
대학 이상	56.3	32.3	10.8	0.6	100.0(1,804)
2003년					
초교 이하	61.9	26.0	12.1	-	100.0(215)
중학교	55.0	31.6	12.2	1.2	100.0(658)
고등학교	56.0	30.6	12.5	0.8	100.0(3,576)
대학 이상	51.2	35.8	12.7	0.3	100.0(2,137)

자료: <표 5-2>와 동일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이 61.9%로 가장 많았고,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은 51.2%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약 12.1～12.7%의 범주에 있었다. 따라서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자녀가 '꼭 필요함'과 '있는 것이 나음'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의 경우와 다소 상이한 것이다.

라. 취업여부별 자녀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여부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미미한 차이만을 보였다. 즉,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58.3%, 비취업부인 57.9%이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취업부인 10.2%, 비취업부인 9.8%이었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가치관은 미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2000년의 조사결과보다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취업부인이 54.8%, 비취업부인 54.2%이었고, 반대로 자녀가 '없

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취업부인 13.6%, 비취업부인 11.6%이었다.

결국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 가치관의 차이는 자녀가 '있는 것이 나음'과 '없어도 상관없음'의 차이에서만 다소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의 취업여부와 자녀가치관에는 현저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러한 태도가 현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실화, 육아휴직 등 사회제도의 확충 등이 얼마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판단된다.

〈표 6-4〉 15～44세 유배우부인의 취업여부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비취업	57.9	31.9	9.8	0.4	100.0(3,656)
취업	58.3	30.9	10.2	0.5	100.0(2,705)
2003년					
비취업	54.2	33.5	11.6	0.7	100.0(3,439)
취업	54.8	31.0	13.6	0.6	100.0(3,154)

자료: <표 5-2>와 동일

마. 현존자녀수별 자녀가치관의 변화

200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존자녀수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6.3%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이 49.0%로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는 자녀가 적을수록 높아 자녀가 없는 부인은 16.3%나 되었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2.4%에 불과하였다. 이는 부인의 현존자녀수가 연령 및 교육수준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존자녀수에 따른 부인의 자녀가치관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경우는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1.9%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이 44.1%로 가장 적었다. 이와는 상반되는 개념인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인은 자녀가 적을수록 높아 자녀가 없는 부인은 24.8%나 되었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7.1%에 불과하였다. 이는 2000년의 조사결과보다 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인 자녀양육 부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5〉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별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꼭 필요함	있는 것이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수)
2000년					
0명	49.0	34.5	16.3	0.2	100.0(533)
1명	57.6	30.4	11.5	0.5	100.0(1,475)
2명	58.3	32.0	9.2	0.5	100.0(3,662)
3명	66.3	27.2	6.4	0.2	100.0(611)
4명 이상	54.9	41.5	2.4	1.2	100.0(82)
2003년					
0명	44.1	30.0	24.8	1.1	100.0(537)
1명	55.7	31.0	12.9	0.3	100.0(1,263)
2명	54.1	33.5	11.8	0.7	100.0(3,988)
3명	61.7	30.4	7.5	0.4	100.0(707)
4명 이상	61.9	29.8	7.1	1.2	100.0(84)

자료: <표 5-2>와 동일

2. 최근 자녀가치관의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59세 기혼부부의 자녀가치관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가구소득, 현존자녀수, 현존아들 수 등의 변수는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의수준이 높았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성과 교육수준 등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기혼부부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	B	S.E.
상수(constant)	1.279***	.261
거주지역		
대도시	-.408***	.106
중소도시	-.394***	.110
농촌	.000	
응답자 성 (남편 1; 부인 0)	.172	.147
응답자 연령	-.011*	.005
응답자 교육수준 (전문대학 이상 1; 그 외 0)	-.070	.082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653***	.133
사별	.689*	.258
이혼별거	.00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 비취업 0)	-.216*	.071
가구소득	.001***	.000
현존 자녀수	.298***	.049
현존 아들수	.116*	.054

주: 이 분석에서 "꼭 필요함"과 "있는 것이 나음"은 1, "없어도 상관없음"은 0으로 하였으며, "모르겠음"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0.001, ** p<0.01, * p<.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하였고(-.408, p<.001), 다음으로는 중소도시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자녀필요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394, p<.001).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필요성이 강하였고, 반대로 젊은 연령층은 자녀 필요성이 약하였다(-.011, p<.005). 유배우자가 다른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강하였고(.652, p<.001), 사별자도 다른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자녀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689, p<.05).

그렇지만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약하였고(-.216, p<.05). 이는 여성취업자가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001, p<.001),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298, p<.001), 그리고 아들이 많을수록

(.116, p<.05)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과 영향요인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한계에 의해 파악하였다.

1. 자녀양육관의 변화양상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자녀양육 책임'에 의하여 '2003년 전국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15~59세 기혼가구 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척도에 의하였다.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등이다. 부모들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 졸업 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2.1%, 취업할 때까지 11.5%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3%, 언제(까지)라도 6.3% 등이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가족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04a).

이를 가구와 가구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지역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동부지역 거주가구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1.1%로 높았으나 읍·면부지역 거주가구는 36.3%로 다소 낮았다. 반면에 혼인할 때까지를 책임한계라고 응답한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38.1%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30.7%보다 높았다.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읍·면부지역 거주가구가 7.2%로 동부지역 거주가구의 6.1% 보다 높았다.

〈표 6-7〉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 책임한계

(단위: %)

구분	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혼인할 때까지 ⑤ 언제(까지)라도 ⑥ 기타 ⑦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지역								
동부	8.5	41.1	11.7	30.7	6.1	0.6	1.1	100.0(9,083)
읍·면부	7.1	36.3	10.3	38.1	7.2	0.4	0.6	100.0(2,02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3.0	31.2	10.7	35.7	7.4	0.6	1.4	100.0(1,091)
100～199만원	9.9	38.4	11.6	31.5	6.2	0.6	1.8	100.0(2,651)
200～299만원	7.9	43.8	10.6	30.2	6.2	0.5	0.8	100.0(3,164)
300만원 이상	6.5	42.0	12.1	32.3	6.0	0.6	0.5	100.0(3,804)
가구주 성								
남성	8.0	40.8	11.3	31.9	6.3	0.6	1.1	100.0(10,047)
여성	11.1	34.6	12.7	34.1	6.0	0.6	0.8	100.0(1,060)
가구주 연령								
29세 이하	19.6	36.4	8.6	22.5	9.9	0.8	2.1	100.0(382)
30～39세	11.8	45.9	11.2	21.4	7.5	0.8	1.4	100.0(3,206)
40～49세	6.2	44.1	12.4	30.3	5.3	0.7	1.0	100.0(4,245)
50～59세	6.2	31.8	11.7	44.1	5.6	0.1	0.5	100.0(2,566)
60세 이상	6.2	24.5	7.9	52.9	7.6	0.1	0.7	100.0(707)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9	32.5	10.7	41.9	5.7	0.3	1.1	100.0(2,779)
고등학교	8.6	41.9	12.3	29.1	6.3	0.7	1.1	100.0(4,463)
대학 이상	8.2	43.9	11.1	28.5	6.7	0.6	1.0	100.0(3,853)
가구주 취업여부								
취업중	8.2	40.8	11.7	31.3	6.3	0.6	1.1	100.0(10,013)
비취업	8.6	35.2	8.9	39.5	6.4	0.5	1.0	100.0(1,095)
가구주 혼인상태								
유배우	7.8	40.9	11.3	32.2	6.2	0.6	1.0	100.0(9,863)
사별	9.1	29.1	13.5	41.1	6.6	0.2	0.4	100.0(453)
이혼·별거	13.5	38.5	12.1	25.6	7.3	0.9	2.2	100.0(786)

주: 1) 기타에는 아들은 군대 제대까지, 딸은 결혼할 때까지 또는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대학입학 때까지, 자녀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이 끝날 때까지 등이 있음.

가구소득별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31.2%,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43.8%,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42.0% 등이었다.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있다는 응답은 99만원 이하 소득가구 13.0%, 100만원대의 소득가구 9.9%, 200만원대의 소득가구 7.9%, 300만원 이상 소득가구 6.5% 등이었다. 또한 혼인할 때까지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99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35.7%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대의 소득가구는 30.2%로 가장 적었다. 평생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 '언제(까지)라도'의 비율은 99만원 이하 소득가구가 7.4%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의 소득가구는 6.0%로 적었다. 따라서 소득이 높다고 자녀양육책임을 반드시 넓게 인식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 31.9%이었다. 반면에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의 자녀양육 책임한계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가 각각 34.6%, 34.1%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경우도 남성가구주 6.3%, 여성가구주 6.0%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가구주 연령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높았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52.9%나 되었으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는 다른 연령층보다는 낮은 24.5%이었다. 관심을 끄는 연령층은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을 책임한계로 응답한 비율이 19.6%나 되어 가장 많았으며, 반대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9.9%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 가구주의 41.9%는 혼인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 하였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32.5%이었다. 반면에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43.9%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하였고, 28.5%만이 혼일할 때까지를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한계를 제시한 경우는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가 6.7%,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5.7%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가 가구주가 취업중인 경우 각각 40.8%, 31.3%이었고, 가구주가 비취업인 경우는 각각 35.2%, 39.5%이었다.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자녀양육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가구주의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가 유배우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에 대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인할 때까지'로 32.2%이었다. 그렇지만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에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해 '혼인할 때까지'는 41.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로 29.1%이었다.

그리고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인 경우에는 자녀양육 책임한계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38.5%로 가장 많았으나 유배우 가구주보다는 적었다. 또한 '혼인할 때까지'는 2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혼인상태 가구보다 적었으며, 반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13.5%로 다른 혼인상태의 가구주 가구보다 많았다.

2. 최근 자녀양육관의 영향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5~59세 기혼부부의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중 사별여부, 취업여부, 가구소득, 현존자녀수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성은 유의수준이 다소 낮았지만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지의 여부는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자녀양육책임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251, $p<.001$), 중소도시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09, p<.01). 남편이 부인보다 자녀양육책임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181, p<.1),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책임의 한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033, p<.001).

사별상태에 있는 응답자가 다른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녀양육책임의 한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529, p<.01), 이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자녀양육책임 한계가 낮은 수준이었다(-.107, p<.05). 이와는 상반되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책임한계를 보다 폭 넓게 생각하고 있었다(.001, p<.001). 또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책임한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073, p<.01).

〈표 6-8〉 15～59세 기혼가구의 자녀양육의 책임한계의 로짓모델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	B	S.E.
상수(constant)	-1.252***	.190
거주지역		
대도시	-.251***	.066
중소도시	-.209**	.068
농촌	.000	
응답자 성 (남편 1; 부인 0)	-.181#	.099
응답자 연령	.033***	.004
응답자 교육수준 (전문대학 이상 1; 그 외 0)	-.142**	.056
응답자 혼인상태		
유배우	.018	.114
사별	.529**	.195
이혼별거	.000	
응답자 취업여부 (취업 1; 비취업 0)	-.107*	.048
가구소득	.001***	.000
현존 자녀수	-.073*	.030

주: 이 분석에서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①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②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를 0, ③취업할 때까지 ④혼인할 때까지, ⑤언제(까지)라도 등은 1로 하였으며,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모르겠음”,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p<0.001, ** p<0.01, * p<.05, # p<0.10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1. 논의

한국사회에서는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동시에 사회구성원인 가족 개개인의 의식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치관으로 간주되는 자녀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은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문제로 여겨질 수 없을 것이며,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녀가치관의 약화는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치관 변화에 더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적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사회 특유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높은 책임감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자녀양육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책임이 강하게 남아있는 관계로 실제 자녀양육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승권(2005)의 논문에 의하면, 자녀양육비를 2005년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영아는 3년간 2,155만 2천원, 유아는 3년간 2540만 2천원, 초등학생은 6년간 5,429만 6천원, 중학생은 3년간 2,996만 6천원, 고등학생은 3년간 3,441만 1천원, 그리고 대학생은 4년간 5,344만 9천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출생후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비용은 약 1억 6,561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출생후 대학 졸업까지는 2억 1,905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부담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며,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 학력 및 학벌 중심의 노동시장구조, 그리고 교육정책의 오류 등에 기

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6-9〉 아동의 연령단계별 양육비용(2005년 기준)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학생 (6~11세)	중학생 (12~14세)	고등학생 (15~17세)	대학생 (18세 이상)
2,155만 2천원	2,540만 2천원	5,429만 6천원	2,996만 6천원	3,441만 1천원	5,344만 9천원

자료: 김승권, 「한국의 자녀양육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지원 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창립세미나 자료집, 2005. 11.

〈표 6-10〉 아동의 연령단계별 양육비용

	출생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출생후 대학 졸업까지
2005년 추정	1억 6,561만원	2억 1,905만원

자료: <표 6-9>와 동일

2. 시사점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자녀가치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현상을 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녀양육에의 책임은 결코 가족부담이어서는 안될 것이라 사료된다. 즉, 자녀양육은 전적으로 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재정적 한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한다.

첫째, 영아~대학생까지 소요되는 전체 자녀양육비용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하여야 겠다. 공제규모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녀양육비 전체금액이어야 할 것이며, 세부 내용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교육급여의 지급확대 및 교육을 위한 부대비용(교재, 학용품, 급식 등) 등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여야겠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질적 교육급여 지급이 교육비는 물론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서비, 필기도구비, 과제물비 등이 포함된 수준으로 교육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하며, 용돈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가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예를 들면, 보육원,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전체 아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특수보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서민층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보육관계자는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보육욕구가 높은 지역과 공급이 미흡한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은 특수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체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겠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호, 교육, 놀이, 오락 등을 제공하는 지역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 센터는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육시설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다. 희망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하거나 기존의 공부방시설 등을 활용하여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동대상의 보호, 오락, 체육활동 지원, 학습지도, 생활적응지도 및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부모-자녀관계와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모임을 조직하고 부모모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자녀양육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 7 장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과 결정요인

우리나라는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장기화되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전망된다. 즉, 지속적인 저출산은 절대적인 인구규모를 감소시키고, 젊은 연령층의 인구감소와 노인인구를 증가시켜 인구구조를 이상적인 형태로 변화시켜서 노동력의 감소, 사회복지지출의 증대 등 사회경제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동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으로는 결혼연령 상승에 의한 미혼율 증대와 기혼여성의 소자녀관 등이 작용하고, 간접적 요인으로는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남아선호관의 변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2).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자녀가치관이 변화되어 과거의 필수라는 개념에서 선택적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최근의 자녀가치관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자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부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소자녀관이 보편적으로 정착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녀관의 변화는 저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남아선호관은 태아의 성감별을 통하여 아들을 출산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력 저하의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아선호관은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의 출산 및 인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전

환의 주원인인 저출산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남아선호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럼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고 출산안정을 도모하며, 인구구조의 완만한 변화를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아선호관련 영향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자녀관 및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며, 남아선호가치관을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남아선호가치관을 전망함으로써,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남아선호 관련 영향 및 선행연구

1. 남아선호가 미치는 영향

가. 남아선호와 출산행위

이론적으로 남아선호는 출산행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Sheps, 1963; Cain, 1993; Mason, 1993; Nugent, 1998) 남아선호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보다 이상자녀수 또는 자녀성구성에 따른 피임실천, 인공임신중절, 추가자녀수 등 출산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남아선호는 피임 및 출산 관련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Freedman, 1975; Foreit & Suh, 1980). 즉 남아선호는 이상자녀수, 피임사용 및 총 출생아수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초혼연령이나 사회적 요인들은 남아선호관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출산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김일현 외, 1990).

남아선호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연구는 남아선호가 출산력 저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Coombs, 1979; Park, 1978, 1983; Yount, Langgsten, & Hill, 2000). 같은 맥락에서 많은 연구결과들이 자녀의 성구성의 차이는 피임 및 다음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Park, 1983; Lee, 1984; 이홍탁, 1987;

이규식·이임전, 1989; Park & Cho, 1993; 조남훈·서문희, 1994). 예를 들면 세 번째 출산이 딸일 경우 그 다음 출산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 선호는 결과적으로 인구의 양적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1960년도 자료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결과 아들이 없는 여성이 아들이 있는 여성보다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rk, 1978, 1983). 이는 합계출산율이 높고 피임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시기에도 남아선호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남아선호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Repetto, 1972; Arnold, 1985, 1987, 1992; Das, 1987; Rahman & Da Vanzo, 1993).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녀를 계속 출산하는 동안 자연히 아들을 갖게 되며, 다른 하나는 아들을 가지지 않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 전반적 출산율 하강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Arnold, 1985, 1987, 1992; Das, 1987). 또한 아들이 없는 부인이 아들이 있는 부인보다 다음에 출산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Repetto, 1972). 이러한 연구들은 출산율이 높거나 피임률이 낮은 사회는 강한 성 선호가 존재하더라도 성 선호가 반드시 출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설명해주는 연구들은 이와 같은 맥락과는 다른 측면에서 남아선호와 출산의 영향을 말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남아선호가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남아선호에 의해 성감별 인공임신중절이 보편적으로 행하여졌기 때문으로 보았다(Cho, Seo, & Tan, 199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선호의 강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 남아선호와 출생성비 불균형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자녀관과 남아선호관, 초음파기와 같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이용의 보편화 등은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이다(서문희, 1995; Lee, 1997; 김한곤, 1997; 이삼식 외, 2001). 남아선호가 강한 부부는 소수의 자녀를 희망하면서 첫째아가 남아이기를 희망하나 기존자녀의 성구성에 불만족할 경우

각종 의료적 방법을 이용하여 태아의 성을 확인한 후, 여아로 판명된 경우 인공임신중절 행위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남아선호도는 성 선택적 출산행위로 이어져 출생성비 불균형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생성비 불균형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데, 이는 지역에 따른 남아선호가 다른데서 기인하고 있다.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부인의 경우 태아 성검사 후 원치 않은 성일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남아선호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에서 출생성비가 높은 셋째아의 비율이 높아 출산 감소속도가 느리며 결과적으로 출생성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서문희, 1995). 김한곤 외(1999)도 경북지역에서의 높은 출생성비는 남아선호가치관과 현대의료기기의 발달 및 보급, 의료인들의 영리추구가 부합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남지역과 남아선호도의 관계를 보면 이 지역은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데다 군사정권시대에 뒤이어 대구·경북출신이 집권하여 부와 군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아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에서의 높은 출생성비는 1차적으로 유교문화의 특성인 남아를 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의식구조에 기인하며, 2차적으로는 남아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 의료기술을 이용하는 데 기인한다고 한다(김한곤, 1994; 김한곤, 1997).

2. 남아선호 관련 선행연구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아선호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국외연구는 출생성비와 관련하여 그 원인중의 하나로 남아선호가 연구되고 있다. 출생성비 연구는 출생시 높은 성비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있어 왔다. 남아선호가치관은 극소수의 모계사회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아랍 및 동남아시아에서 남아선호가 강하며, 종교적으로는 동양의 유교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Wilhamson, 1976). 세계 여러 국가의 남아선호 경향은 노후의존에서 발견되며(Can, 1986; Caldwell, 1982), 인도에서도 종교, 관습과 노후의 경제적 이론 때문에 남아선호가치관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as, 1987). 즉 자녀의 성에 따라 출산행의가 결정되는 데, 첫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의 진행여부는 첫째 자녀의 성과 무관하나 둘째 자녀에서 셋째 자녀로의 진행여부는 둘째 자녀의 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Lee, 1982). 따라서 성 선호는 출산행위와 자녀수를 결정지으며 소자녀 규범이 강할수록 성선호가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Yamaguchi, 1989). 이와 같이 남아선호 현상은 성 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의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Gu, 1994).

국내 연구동향을 보면 남아선호관련 연구는 주로 출생성비와 관련하여 연구되는 경향을 보였다. 출생성비와 관련하여 수행되어 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하룡과 박재용(1988)은 1984～1987년까지 대구시의 5개 종합병원 출생아를 대상으로 성비불균형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김일현(1990)은 출생시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자녀수, 현존아들 수, 현존딸수, 거주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아선호는 출생시 성비 불균형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규명되어 왔다. 즉, 출생시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여성차별과 강한 남아선호관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이다. 성선호가 강하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출생시 성비에 영향을 주므로 남아선호가치관은 출생시의 성비불균형, 남녀별 이상자녀수, 현존자녀수의 성별 분포에 따른 가족계획실천율에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박경애, 1993).

또한, 남아선호와 관련하여 유래, 역사적 배경이나 원인 등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다. 아들을 낳고자 하는 강한 집념의 유래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남자의 노동력이나 경제적인 역할이 강조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남아선호는 조선중기부터 강하게 보급된 것으로 본다(최재석, 1983). 그 이전 시기에는 왕위계승부터 재산에 이르기까지 남녀구분이 없었으며, 조선조 세종때 까지만 해도 왕위계승을 제외하고, 남녀 구별이 없었으며, 혈통을 잇기 위해 양자를 맞아들인 예는 거의 없었다. 조선후기에 오면서 유교보급과 직계가족, 문중 및 장자 상속제가 확립되자 남존여비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일반화 되었다고 본다. 이홍탁(1987)도 17～18세기에 걸쳐 급격한 인구증가로 여성

은 상속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아선호의 원인으로 Arnold & Kuo(1984)에서는 가계계승과 노후보장과 경제적 도움이 주요 이유이었으며, 김일현 외(1990)와 공세권 외(1992)에서도 심적 든든함, 가문계승과 제사 등이 지적되고 있어서 남아에 대한 가치와 기대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진기남 외(1998)는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 남아선호 이유로 대를 잇기 위해서, 딸·아들 다 양육하고 싶어서 등으로 나타나 아들선호가 가부장제적인 관념에서만 단순히 기인하지 않고 다양한 이유 등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제도가 전형적으로 가부장제인 국가에서는 아들이 노후에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남아선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변수들로 나타나고 있다(김일현 외, 1990; 공세권 외, 1992; 홍문식 외, 1994; Lee, 1997; 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a; 이삼식, 2001).

남아선호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아들 필요성을 보면 지역, 연령, 교육수준 및 현존자녀수, 현존남아수에 따라 상이하다[주11]. 또한 현존자녀의 성구성에 따라 이상자녀수와 실제자녀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대희, 1982; 조남훈·서문희, 1994). 이삼식(1998)의 연구결과도 현존자녀의 성구성이 남아선호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수와 남아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는데 공세권 외(1992)의 연구는 아들이 없는 경우 약한 남아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조남훈·서문희(1994)의 연구에서는 아들수와 남아선호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아들이 적을수록 남아선호가 높아지고 아들이 많을수록 남아선호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 직업, 사망자녀 유무 및 사회·심리적 요인도 남아선호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초혼연령과 남편연령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일현 외, 1990). 이외에도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가치체계가 발전 지향적이고 근대화된 태도를 가질수록 남아선호관이 약하며 이는 자녀수를 통제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Chung, Cha, & Lee, 1974). 남아선호관이 성 편견에 뿌리를 두고 있음

주11) 아들필요성은 농촌이 높고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김승권 외, 2000a; 조남훈 외, 1997; 홍문식 외, 1994; 공세권 외, 1992; 김일현 외, 1990).

을 밝힌 연구도 있으며(Lee & Choe, 1982), 아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시대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연구(김일현 외, 1990; 공세권 외, 1992)에서는 아들 선호이유로 '심리적 든든함' 이나 '가문계승과 제사'가 주요 이유로 설명되다가 1990년대 후반연구(조남훈 외, 1997; 김승권 외, 2000a)로 오면서 남아선호는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할수록 아들을 필요로 한다는 연구와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서문희, 1993).

또한, 다수의 연구들이 도시화가 남아선호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Lee(1997)는 도시여성이 농촌여성에 비해 교육 참여 기회가 많고, 자아실현에 대한 의식이 강하며,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을 덜 받아, 남아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밝히고 있다. Meng(1983)의 연구결과에서도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남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와 논의

1.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태도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반면, '있는 것이 좋다'는 중립적인 태도와 아들이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남아선호관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 성평등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선호관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양상이다. 남아선호관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가치관으로 향후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구구조를 이상적인 형태로 변화시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표 7-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1991~2003년)

(단위: %, 명)

연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1991[1)]	40.5	30.7	28.0	0.8	100.0(7,448)
1994	26.3	34.3	38.9	0.5	100.0(5,175)
1997	24.8	35.0	39.4	0.8	100.0(5,409)
2000	16.2	43.2	39.5	1.1	100.0(6,350)
2003	14.1	41.8	43.3	0.8	100.0(6,559)

주: 1) 1991년은 15~49세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4a. p.321에서 재인용.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남아선호도의 변화를 출생순위별 출생성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아 100명당 남아수로 나타내는 출생성비는 1991년 112.4에서 증감하다 1995년 113.2로 다소 증가하였고, 출생성비는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 110.2, 2003년에 108.7로 정상적인 출생성비인 106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를 살펴보면 전혀 다르게 나타나서, 대체로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출생성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증가하던 출생성비는 1994년을 기점으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출산순위별로 뚜렷한 차이는 유지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출산에서는 완만하던 출생성비는 세번째 출산부터 급격히 높아져서 네 번째 이상에서는 남아 출생수가 여아 출생수의 1.5배 수준까지 많은 격차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두 명의 딸을 둔 부인의 경우 남아선호로 인한 태아감별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의 행위에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말로 하면 소자녀관의 확립과 정해진 자녀수 안에서 아들을 가져야 한다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성 감별과 관련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위적인 성 조절 등과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신적·경제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출산을 지속할 수 없는 현상도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표 7-2〉 연도 및 출생순위별 출생성비(1991~2003년)

(단위: 여아 백명당 명)

연도	전체	1	2	3	4 이상
1991	112.4	105.7	112.5	179.5	194.5
1992	113.6	106.2	112.4	191.1	213.0
1993	115.3	106.4	114.7	202.1	235.2
1994	115.2	106.0	114.1	202.2	224.2
1995	113.2	105.8	111.7	177.2	203.9
1996	111.6	105.3	109.8	164.0	184.6
1997	108.2	105.1	106.3	133.5	153.7
1998	110.1	105.9	108.0	144.7	153.6
1999	109.6	105.6	107.6	141.8	154.3
2000	110.2	106.3	107.4	141.7	167.5
2001	109.0	105.4	106.5	140.3	152.4
2002	110.0	106.5	107.3	140.0	152.5
2003	108.7	105.0	107.0	135.2	149.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동계연보』, 각 연도.

2. 남아선호가치관의 원인 변화

아들필요성과 출생순위별 출생성비로 볼 때 남아선호가치관은 점차 강도가 약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아들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높은 편이고 또한 아들을 낳기 위한 선택적 출산행위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남아선호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남아선호가치관의 원인을 살펴보면 <표 7-3>과 같다. 1991년에는 아들이 필요한 이유가 주로 가계계승과 아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는 정서적 유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의존에 따른 기대는 약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점차 변화되어서 가문유지나 제사 같은 가부장제적인 이유에서 부부의 심리적 만족이나 가정 행복 등 심적인 안정 같은 정서적인 질을 위해 아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내적인 동기가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들이 필요한 이유의 상당부분이 가문유지나 제사 등 가부장제적인 개념이 차지하고 있다.

〈표 7-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아들의 필요이유(1991～2003년)[1)]

(단위: %, 명)

자녀수	가문 유지	제사	노후 생활	경제적 도움	심리적 만족	가정 행복	기타	(분석대상수)
1991	42.2	-	6.8	-	34.21)	16.8	-	(7,448)
1997	35.1	10.3	8.0	2.9	69.6	41.6	1.4	(5,409)
2000	23.1	5.7	5.4	2.4	69.8	43.3	0.7	(6,350)
2003	23.0	7.5	5.3	1.6	72.9	56.6	0.4	(6,559)

주: 1) 1997～2003년: 중복응답결과임.
2) 심리적 만족에는 기타 1% 내외가 포함됨.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3)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4)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3. 남아선호와 출산·인구자질과의 관련성

최근 들어 남아선호가치관이 감소하고 있으나 출산순위별로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녀관 등에 영향을 미쳐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고, 여성의 생식보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인구자질과도 관련이 깊다.

가. 인구학적 측면

남아선호가치관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남아선호가 출산력 수준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긍정적 측면으로 남아선호가치관이 출산력 감소를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출산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둘째, 남아선호는 원하는 아들수를 달성한 부인은 딸수와는 관계없이 더 이상의 자녀를 원하지 않게 됨으로써 출산력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 고출산 수준과 저출산 수준으로 구분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Amold, 1985). 즉, 고출산 수준에서는 부부들이 원하

는 자녀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생리적 과정에서 적정수의 아들을 두게 됨으로써 남아선호와 출산력의 관계는 미약하다. 그러나 저출산 수준에서는 소수의 원하는 자녀수의 한도 내에서 적정 아들수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아들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자녀수를 넘어서 자녀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남아선호가 출산력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는 점이다(조남훈·서문희, 1994 재인용).

그러면 실제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 성구성에 따라 추가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태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부의 추가자녀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소자녀관과 함께 이미 2명 이하의 자녀를 가졌거나 원하는 아들을 가진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4〉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수 및 남아수별 추가자녀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자녀수	아들수	낳겠다	낳지 않겠다	생각중이다	계(수)
1명	0명	40.6	52.2	7.1	100.0(534)
	1명	28.9	62.1	9.0	100.0(731)
2명	0명	7.6	89.0	3.4	100.0(684)
	1명	1.6	96.9	1.5	100.0(2,206)
	2명	3.1	95.6	1.3	100.0(1,112)
3명	0명	6.6	89.0	4.4	100.0(91)
	1명	0.5	98.5	1.0	100.0(391)
	2명	-	100.0	-	100.0(162)
	3명	-	98.4	1.6	100.0(64)
4명 이상	0명	-	100.0	-	100.0(6)
	1명	2.1	97.9	-	100.0(47)
	2명	-	100.0	-	100.0(15)
	3명 이상	-	100.0	-	100.0(14)
전체		14.8	81.9	3.2	100.0(6,599)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자녀의 절대수와 상관없이 딸만 가진 부부의 경우 아들을 1명 이상 가진 부부보다 추가자녀에 대한 태도가 보다 적극적이었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딸만 가진 부부의 경우는 추가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 주목

된다. 한편 자녀를 1명만 가진 경우 그 자녀의 성에 상관없이 추가자녀에 대해 강력한 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아들수와 추가자녀에 대한 욕구는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아들수가 많을수록 추가자녀에 대한 욕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남아선호 가치관과 출산력은 관련이 있으며 향후 출산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나. 생식보건적 측면

남아선호관 및 소자녀관은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 피임행위를 통하여 여성의 생식보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과 피임행위가 자녀 및 아들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공임신중절

성 선택이 가능한 경우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나 희망하는 자녀의 성에 만족하는 경우 단산에 돌입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성 선택적 출산행위는 출산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태헌, 1993). 이러한 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선택은 여성의 생식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인구자질을 저해한다. 따라서 남아선호와 인공임심중절 행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녀 성구성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 부부의 과반수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의 경험이 없었으며 나머지 부부는 인공임신중절을 1~2회 정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회 이상을 경험한 부부도 일부 있었다.

우리나라 부부의 인공임신중절횟수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아들을 1~2명 가질 때 까지는 인공임신중절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남아선호로 성 선택적 출산행위인 인공임신중절이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5〉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수 및 남아수별 인공임신중절 횟수

(단위: %, 명, 회수)

자녀수	아들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평균
1명	0명	76.3	16.0	6.8	0.9	100.0(532)	0.33
	1명	71.7	19.1	5.3	3.8	100.0(732)	0.43
2명	0명	60.5	24.3	11.0	4.2	100.0(684)	0.61
	1명	52.4	28.2	15.1	4.4	100.0(2,204)	0.73
	2명	49.2	30.7	13.8	6.3	100.0(1,111)	0.79
3명	0명	52.2	31.5	5.4	10.9	100.0(92)	0.83
	1명	46.0	30.9	14.8	8.2	100.0(391)	0.91
	2명	54.7	23.0	15.5	6.8	100.0(161)	0.84
	3명	51.6	31.3	10.9	6.3	100.0(64)	0.76
4명 이상	0명	83.3	16.7	-	-	100.0(6)	0.20
	1명	42.6	40.4	4.3	12.8	100.0(47)	0.88
	2명	53.3	20.0	26.7	-	100.0(15)	0.68
	3명 이상	66.7	20.0	6.7	6.7	100.0(15)	0.69
전체		59.6	24.6	11.4	4.5	100.0(6,597)	0.63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2) 피임행위[주12)]

일반적으로 피임행위는 결혼 후 첫 출산이나 두 번째 출산부터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출산 및 그 이후의 출산결과가 남아선호관의 충족과 함께 피임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아선호도는 피임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 자녀 성구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임실천율은 아들이 없는 부인이 아들이 있는 부인에 비해서 낮았다. 그러나 자녀가 4명인 경우, 딸만 가진 부인과 아들이 적은 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이 높아서 자녀수가 많아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실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정 수의 아들을 가진 후에는 단산을 목적으로 피임을 하고

주12) 남아선호는 피임실천율을 줄이고 이상자녀수와 총출생아수를 증가시킨다하고 보는 견해가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초혼연령과 사회학적 변수들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미하나 남아선호를 감소시켜 피임실천율의 증가와 이상자녀수 및 총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조남훈·서문희, 1994. 재인용).

있으나, 아들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그 다음 출산을 위하여 피임이 소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7-6 참조).

따라서 피임행태는 자녀의 성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아선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선호로 인한 소극적 피임행위는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어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표 7-6〉 15～44세 기혼여성의 자녀수 및 남아수별 피임행태

(단위: %, 명)

자녀수	아들수	현실천	과거실천	무경험	계(수)
1명	0명	59.8	20.5	19.7	100.0(533)
	1명	72.3	16.5	11.2	100.0(732)
2명	0명	90.8	5.7	3.5	100.0(683)
	1명	95.5	3.6	0.9	100.0(2,203)
	2명	94.6	3.6	1.8	100.0(1,112)
3명	0명	87.9	9.9	2.2	100.0(91)
	1명	93.6	6.1	0.3	100.0(391)
	2명	95.7	3.7	0.6	100.0(162)
	3명	93.8	4.6	1.5	100.0(65)
4명 이상	0명	83.3	-	16.7	100.0(6)
	1명	95.9	2.0	2.0	100.0(49)
	2명	93.3	6.7	-	100.0(15)
	3명 이상	73.3	20.0	6.7	100.0(15)
전체		84.5	8.5	7.0	100.0(6,5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를 재분석함.

제 3 절 남아선호가치관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앞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남아선호가치관은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있는 것이 좋거나' '없어도 무관하다'는 선택적

인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소자녀관과 함께 최근 성 평등적 인식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남아선호도에 대한 원인 또한 변하고 있는데, 가문유지나 제사 같은 가부장제적인 이유에서 심리적 만족, 가족 행복 같은 내적인 동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남아선호가치관과 그 원인의 변화는 사회의 양성평등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부부의 특성 및 자녀의 필요성 등의 부부 가치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남아선호관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현재의 남아선호가치관의 양상을 이해하고, 향후 남아선호가치관을 전망하는 데 그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

본 연구목적은 남아선호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부의 경우 남아선호가치관을 선택하는 데 어떤 특성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가.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자료는 15~59세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본 분석을 위하여서는 15~44세 유배우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주는 가임연령층의 남아선호가치관 파악에 있고 또한 이혼, 별거, 사별 부인의 경우는 남아선호가치관의 선택에 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자녀특성, 가치관외에 배우자와의 해혼, 사망 등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파악이 어렵다.

본 분석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7 참조). 15~44세 연령층의 유배우부인의 대다수는 동부지역인 도시에 거주하였고, 부인의 연령은 30대 연령층이 55.6%, 40대 초반이 29.9%로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

한 부인의 86.8%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 교육수준이 높았고, 취업중인 부인은 47.8%로 비취업인 부인의 분포가 약간 높았다. 취업한 부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이 38.6%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도 적지 않았고, 전문직,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18.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유배우부인의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인 비율이 42.5%, 10년 이상은 57.4%이었으며, 그중 10%는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에 해당되었다. 또한, 부인의 72.6%는 현존자녀수가 2명 이상이었고, 가구 총소득은 유배우부인의 58.0%가 300만원 미만이었고 300만원 이상인 비율도 42.1%로 높았다.

〈표 7-7〉 분석대상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

(단위: 명, %)

특성	빈도	백분율
지역		
동부	5,600	84.5
읍·면부	1,024	15.5
연령		
15~24세	126	1.9
25~29세	838	12.7
30~34세	1,711	25.8
35~39세	1,971	29.8
40~44세	1,977	29.9
부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20	3.3
중학교	659	10.0
고등학교	3,590	54.3
대학 이상	2,148	32.5
부인의 현 취업여부		
취업	3,168	47.8
비취업	3,455	52.2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표 7-7〉 계속

특성	빈도	백분율
부인의 직업유형		
고위공무원·관리직	7	0.2
전문직	300	9.5
준전문직	277	8.8
사무직	460	14.6
서비스·판매직	1,218	38.6
농·어·축산업	190	6.0
기능직	149	4.7
기계장치·조작원	181	5.7
단순노무	375	11.9
결혼기간		
10년 미만	2,813	42.5
20년 미만	3,163	47.8
20년 이상	638	9.6
현존자녀수		
0명	541	8.2
1명	1,265	19.2
2명	4,001	60.6
3명 이상	793	12.0
가구총소득		
100만원 미만	218	3.4
200만원 미만	1,361	21.0
300만원 미만	2,176	33.6
300만원 이상	2,731	42.1
전체	6,624	100.0

나.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부인 및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특성, 결혼·출산 특성, 자녀가치관별로 남아선호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으로 유의도를 검증하였고, 우리나라 부인의 남아선호가치관 경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본 분석 자료는 남아선호가치관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한 여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 변수 분석으로서

종속변수가 이분화된 범주변수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고, 독립변수에 범주변수와 연속변수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비선형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분석변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남아선호가치관으로 2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의 선정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남아선호가치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변수 및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 중 본 분석에서 재검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본 분석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변수 중에서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부관계 등의 변수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본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독립변수는 총 25개로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거주지역 1, 거주지역 2, 부인연령, 부인교육수준, 현 취업여부, 혼전취업여부, 부인직업, 남편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등 10개 변수를 사용하였고, 가족관련 요인주13)으로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선택하였고, 경제요인주14)으로 재산(동산+부동산), 가구총소득의 2개 변수, 결혼·출산요인주15)으로 초혼연령, 결혼기간, 현존자녀수, 현존아들수, 현존딸수, 자녀사망경험여부 등 6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부부관계 요인으로 가사분담 형태, 의사결정 형태 등 2개 변수, 자녀가치관 요인으로 자녀필요성, 가계계승과 제사를 위해 아들필요, 심리적 만족과 가정의 행복·조화를 위해 아들필요, 이상자녀수 등 4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은 <표 7-8>에 제시된다.

주13) 가족관련 요인으로 가족형태와 시부모와의 동거형태 등 2개 변수를 선정하였으나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864로 다중공선성이 높아서 이론적으로 검증된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선택하였음.

주14) 경제적 요인으로 재산과 가구총소득간의 상관계수는 .379로 다중공선성이 낮아서 두 개의 변수를 선정하였음.

주15) 출산요인으로 현존자녀수와 현존아들수간의 상관계수는 .477로 다중공선성이 낮고 이론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검증되어 선정하였음.

〈표 7-8〉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측정
종속변수	
남아선호가치관	0: 없어도 상관없다/모르겠다 1: 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독립변수	
부부특성변수	
거주지역1	0: 읍·면부 1: 동부
거주지역2	0: 비영남권 1: 영남권
부인연령	실제 수: 세
부인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현 취업여부	0: 비취업 1: 취업
혼전 취업여부	0: 비취업 1: 취업
부인직업	0: 비전문직 1: 전문직
남편연령	실제 수: 세
남편의 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남편의 직업	0: 비전문직 1: 전문직
가족관련 변수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0: 비동거 1: 동거
경제관련 변수	
재산(동산+부동산)	실제 수: 십만원
가구총소득	실제 수: 십만원
결혼·출산관련변수	
초혼연령	실제 수: 세
결혼기간	실제 수: 년
현존자녀수	실제 수: 명
현존아들수	실제 수: 명
현존딸수	실제 수: 명
자녀사망경험여부	0: 없음 1: 있음
부부관계	
가사분담 형태	0: 부부공동분담 1: 부부역할분담
의사결정 형태	0: 부부공동결정 1: 한쪽 배우자 결정
자녀가치관	
자녀필요성	0: 없어도 상관없다 1: 꼭 있어야 한다/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가문계승과 제사를 위해 아들필요	0: 아니다 1: 그렇다
심리적 만족과 가정의 행복·조화를 위해 아들필요	0: 아니다 1: 그렇다
이상자녀수	실제 수: 명

3. 주요 분석결과

가. 차별 남아선호도

1)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남아선호도

우리나라 남아선호가치관은 전통적인 남아선호도에서 점차 비선호도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일부는 아직도 남아선호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환기에 있는 남아선호관이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15~44세 연령층의 부부 중에서 남아선호도는 55.9%, 남아비선호도는 44.1%로 나타나서 남아선호도와 남아비선호도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으나, 그럼에도 남아선호도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남아선호도가 높은 부부 층은 주로 읍·면부지역인 농촌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인이 현재 취업중인 경우, 혼전에 취업한 경험이 없을 때, 부인의 직업이 농·어·축산업, 기능직, 기계장치·조작원, 단순노무직 등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남편의 특성에서도 나타난다. 남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이 현재 취업중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농·어·축산업, 서비스·판매직 등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으나 고위공무원·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도 높은 편이었다.

반대로, 남아 비선호 태도를 보인 부부 층은 동부지역인 도시에 거주하며, 부인이 연령이 낮을수록,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이 현재 비취업 중에 있는 전업주부인 경우, 혼전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인의 직업이 고위공무원·관리직,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등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남아비선호도가 높았다. 남편의 특성도 비슷하여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이 현재 비취업인 경우, 남편의 직업이 고위공무원·관리직, 전문직, 비전문직, 사무직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높았다.

〈표 7-9〉 부부특성별 남아선호도

(단위: 명, %)

구분	남아선호[1]	남아 비선호[2]	계(수)	χ^2(d.f.)
거주지역				
동부	54.9	45.1	100.0(5,578)	13.909***(1)
읍·면부	61.2	38.8	100.0(1,023)	
부인연령				
15~24세	49.2	50.8	100.0(124)	
25~29세	52.1	47.9	100.0(838)	
30~34세	55.4	44.6	100.0(1,704)	14.897**(4)
35~39세	55.2	44.8	100.0(1,961)	
40~44세	58.9	41.1	100.0(1,972)	
부인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0.6	29.4	100.0(218)	
중학교	60.2	39.8	100.0(659)	28.546***(3)
고등학교	55.4	44.6	10000(3,578)	
대학교 이상	53.8	46.2	100.0(2,139)	
부인의 현 취업여부				
취업	56.2	43.8	100.0(3,156)	0.284(1)
비취업	55.6	44.4	100.0(3,445)	
부인의 혼전취업여부				
취업	55.7	44.3	100.0(5,471)	0.490(1)
비취업	56.9	43.1	10000(1,124)	
부인의 직업[2]				
고위공무원·관리직	57.1	42.9	100.0(7)	
전문직	55.3	44.7	100.0(300)	
준전문직	50.9	49.1	100.0(277)	
사무직	55.9	44.1	100.0(456)	
서비스·판매직	54.5	45.5	100.0(1,212)	17.903*(8)
농·어·축산업	67.4	32.6	100.0(190)	
기능직	63.5	36.5	100.0(148)	
기계장치·조작원	57.5	42.5	100.0(181)	
단순노무	57.6	42.4	100.0(373)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표 7-9〉 계속

구분	남아선호	남아 비선호	계(수)	χ^2(d.f.)
남편연령				
15~24세	50.0	50.0	100.0(16)	
25~29세	50.9	49.1	100.0(348)	
30~34세	54.7	45.3	100.0(1,300)	8.673(4)
35~39세	53.8	46.2	100.0(1,670)	
40~44세	57.5	42.5	100.0(2,009)	
남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2.0	28.0	100.0(193)	
중학교	59.1	40.9	100.0(470)	24.270***(3)
고등학교	54.6	45.4	100.0(2,822)	
대학교 이상	55.6	44.4	100.0(3,019)	
남편의 현 취업여부				
취업	56.1	43.9	100.0(6,278)	0.527(2)
비취업	53.6	46.4	100.0(233)	
남편의 직업[2)]				
고위공무원·관리직	56.6	43.4	100.0(189)	
전문직	55.7	44.3	100.0(537)	
준전문직	54.6	45.4	100.0(757)	
사무직	52.8	47.2	100.0(1,057)	
서비스·판매직	58.2	41.8	100.0(1,195)	18.894*(8)
농·어·축산업	66.3	33.7	100.0(261)	
기능직	56.1	43.9	100.0(978)	
기계장치·조작원	55.9	44.1	100.0(925)	
단순노무	54.5	45.5	100.0(325)	
전체	55.9	44.1	100.0(6,601)	

주: 1) 남아선호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2) 남아비선호는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3) *p 〈.05 , **p 〈.01 , ***p 〈.001

이와 같이 남아선호도가 높은 부부는 대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특성을 가진 반면, 남아비선호도가 높은 부부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젊은 연령층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였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의 부부가 대체로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연령층의 부부에 비해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근대적인 가족

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 가족 및 경제특성별 남아선호도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아선호도는 가족형태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결과에서는 가족 및 경제특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선호 태도를 보인 부부 층은 부부, 자녀, 조부모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형태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부중심의 1세대 가족에서 높았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서 남아선호도가 낮았다. 그리고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남아 비선호 태도를 보인 부부 층은 2세대가족과 1세대가족이 높은 편이었고, 시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도 높았다.

이와 같이 남아선호도가 3세대가족 및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에서 높은 것은 과거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관습 속에서 남아선호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던 세대의 가치와 관습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7-10〉 가족 특성별 남아선호도

(단위: 명, %)

구분	남아선호	남아 비선호	계(수)	χ^2(d.f.)
가족유형				
1세대가족	55.8	44.2	100.0(5,729)	
2세대가족	53.4	46.6	100.0(174)	0.983(2)
3세대가족	57.3	42.7	100.0(684)	
시부모와의 동거				
동거	58.6	41.4	100.0(648)	2.239(1)
비동거	55.6	44.4	100.0(5,953)	
전체	55.9	44.1	100.0(6,601)	

주: 1) 남아선호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2) 남아 비선호는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남아선호 태도를 보인 부부 층은 동산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남아 비선호 태도를 보인 부부 층은 동산과 부동산이 적은 경우와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남아비선호도가 높았다.

재산이나 가구소득 등 경제적 수준과 남아선호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련성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부부 층은 비교적 고연령층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수준이 낮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남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7-11〉 경제적 특성별 남아선호도

(단위: 명, %)

구분	남아선호	남아 비선호	계(수)	χ^2(d.f.)
동산+부동산				
없음	49.2	50.8	100.0(185)	
100백만원 미만	55.3	44.7	100.0(3,495)	
200백만원 미만	56.1	43.9	100.0(1,610)	5.820(4)
300백만원 미만	58.1	41.9	100.0(473)	
300백만원 이상	57.9	42.1	100.0(662)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9.5	50.5	100.0(216)	
200만원 미만	55.5	44.5	100.0(1,354)	3.833(3)
300만원 미만	56.4	43.6	100.0(2,172)	
300만원 이상	56.1	43.9	100.0(2,724)	
전체	55.9	44.1	100.0(6,601)	

주: 1) 남아선호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2) 남아 비선호는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3) 결혼 및 출산 특성별 남아선호도

부부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남아선호도를 결정하는데 결혼 및 출산 관련 요인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아선호 태도는 초혼연령이 낮고, 결혼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 높은 남아선호도를 보였으며, 남아 비선호 태도를 보인 부부는 초혼연령이 높고,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와 같이 초혼연령이 낮고, 결혼기간이 오래된 고연령층 부부의 경우 강한 남아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이들 부부는 대다수가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여왔고, 여성도 다수가 저학력층으로 취업 등 사회적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통적인 남아선호관을 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반해서, 초혼연령이 높고, 결혼기간이 짧은 저연령층의 부부는 핵가족, 고학력수준, 취업기회의 증대 등으로 양성평등적 사고방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서, 고연령층에 비해 개인적·자립적 사고방식 또한 강한데서 오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 7-12〉 결혼특성별 남아선호도

(단위: 명, %)

구분	남아선호	남아 비선호	계(수)	χ^2(d.f.)
초혼연령				
15~24세	58.0	42.0	100.0(3,473)	16.057**(3)
25~29세	54.0	46.0	100.0(2,698)	
30~34세	49.1	50.9	100.0(279)	
35~39세	46.9	53.1	100.0(32)	
결혼기간				
10년 미만	52.5	47.5	100.0(2,805)	27.753***(2)
20년 미만	57.7	42.3	100.0(3,152)	
20년 이상	62.2	37.8	100.0(635)	
전체	55.9	44.1	100.0(6,601)	

주: 1) 남아선호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2) 남아 비선호는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3) **p 〈.01, ***p 〈.001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출산과 남아선호와의 관련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선호 태도는 현존자녀수와 현존 아들수가 많은 경우, 현존 딸수는 오히려 적은 경우 높은 편이었다. 또한 자녀가 사망한 경험이 있는 경우, 추가자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나 추가

아들을 희망하는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남아비선호도는 현존자녀수, 현존 아들수가 적은 경우, 또한 현존 딸수가 많은 경우 높았다. 그리고 자녀를 사망한 경험이 없는 경우, 추가자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아들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높은 남아비선호도를 보였다.

〈표 7-13〉 출산특성별 남아선호도

(단위: 명, %)

구분	남아선호	남아 비선호	계(수)	χ^2(d.f.)
현존자녀수				
없음	40.0	60.0	100.0(538)	120.940***(3)
1명	49.3	50.7	100.0(1,264)	
2명	58.1	41.9	100.0(3,994)	
3명 이상	66.4	33.6	100.0(792)	
현존아들수				
없음	39.2	60.8	100.0(1,851)	290.351***(3)
1명	62.6	37.4	100.0(3,371)	
2명	62.0	38.0	100.0(1,286)	
3명 이상	61.5	38.5	100.0(78)	
현존딸수				
없음	54.4	45.6	100.0(2,443)	39.264***(3)
1명	59.8	40.2	100.0(2.906)	
2명	49.4	50.6	100.0(1,092)	
3명 이상	53.7	46.3	100.0(147)	
자녀사망경험 여부				
경험있음	65.7	34.3	100.0(99)	3.870*(1)
경험없음	55.8	44.2	100.0(6,486)	
추가자녀 희망여부				
희망함	52.9	47.1	100.0(977)	4.162*(2)
희망하지 않음	56.4	43.6	100.0(5,397)	
추가아들희망여부[1)]				
희망함	79.5	20.5	100.0(215)	8.506**(1)
희망하지 않음	65.7	34.3	100.0(143)	
전체	55.9	44.1	100.0(6,601)	

주: 1) 남아선호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2) 남아 비선호는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한 비율임; 3) 추가아들희망 대상자는 추가자녀를 희망한 경우 중 구별하겠다고 응답한 36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p 〈.05, **p 〈.01, ***p 〈.001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이와 같이 현존자녀수, 현존 아들수 및 현존 딸수와 남아선호도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남아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원인적으로 자녀 및 아들·딸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반대로 현재 출산한 자녀 및 아들·딸의 크기가 남아선호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존 아들수가 많은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자녀사망경험과 남아선호의 관계는 자녀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며 심리적보상감으로 아들에 대한 집착이 큰 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나. 남아선호가치관을 결정하는 요인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의 모형을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별 모형설정은 각 요인들을 통제할 때마다 그 요인들이 전체 모형의 영향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이전에 포함된 변수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모형Ⅰ은 독립변수로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포함한 것이고, 모형Ⅱ는 독립변수로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가족요인을 추가한 것이며, 모형Ⅲ은 독립변수로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요인 및 경제요인을 함께 포함한 것이다. 모형Ⅳ는 여기에다 결혼·출산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것이며, 모형Ⅴ는 모형Ⅳ에 부부관계를 추가하였으며, 모형Ⅵ는 독립변수로 부부의 인구사회학적요인, 가족요인, 경제요인, 결혼·출산요인, 부부관계, 자녀가치관 등을 포함한 것이며, 그 결과는 <표 7-1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Ⅰ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만을 포함한 것으로,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관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의 거주지역, 부인의 연령 등이었다(Wald 검정: p=.017, p=.036). 즉, 남아선호관이 높은 부부 층은 부인의 연령이 높을 때로 나타난 반면, 남아비선호도가 높은 부부 층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연령층의 부부는 젊은 연령층에 비하여 아들에 대한 의

존도가 높고, 근대적인 가족관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는 교육 및 취업기회가 높아 사회경제활동 등으로 양평등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적 사고방식, 경제적 자립 등 부부중심의 생활양식 등으로 인하여 아들을 포함하여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형Ⅱ는 모형Ⅰ에 가족요인을 통제한 것으로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관 결정은 가족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성에 있어서 모형Ⅰ과 변화가 거의 없었다. 모형Ⅱ에서 부부의 남아선호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의 거주지역, 부인연령 등이었다(Wald 검정: p=.029, p=.031). 즉, 남아선호관이 높은 부부 층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인의 연령이 높을 때이었으며, 남아비선호도가 높은 부부 층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젊은 연령층일 경우 가능성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부부의 남아선호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등 가족요인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Ⅰ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남아선호관은 개인적 가치관 즉 개인적 선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모형Ⅲ은 모형Ⅱ에 경제요인을 추가한 것으로 모형Ⅰ, 모형Ⅱ와 비교해 볼 때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족요인은 통계적 유의성과 방향에서 변화를 보였다. 즉 모형Ⅲ에서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인연령은 통계적 유의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부인의 혼전취업여부는 +에서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남편연령과 남편의 직업은 -에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변수의 유의도가 떨어지는 것은 부인 연령의 영향력이 재산과 가구소득 등의 변수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모형Ⅲ에서 부부의 남아선호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부부의 거주지역, 부인연령이었고, 가족요인으로는 시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Wald 검정: p=.023, p=.085, p=.092). 즉, 남아선호관이 높은 부부 층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부인의 연령이 높으며, 시부모

와 동거하는 경우이었으며, 남아비선호도가 높은 부부 층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연령이 젊으며,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모형Ⅳ는 모형Ⅲ에 결혼·출산 요인을 통제한 것이다. 이때 남편연령과 재산은 통계적 유의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부의 거주지역의 영향력은 전혀 유의하지 않았으며, 부인연령, 혼전취업여부, 남편연령 등은 변수의 방향이 변하였다.

이 모형에서 부부의 남아선호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부인연령, 남편연령 등이었고, 경제요인에서는 재산, 결혼·출산 요인으로는 초혼연령, 결혼기간, 현존자녀수, 현존아들수, 자녀사망경험여부 등으로 나타났다(Wald 검정: p=.076, p=.087, p=057, p=.069, p=.053, p=.000, p=.000, p=.011). 즉 남아선호관이 높은 부부 층은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현존자녀수와 현존아들수가 많은 경우, 자녀를 사망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여기서 현존자녀수, 현존아들수와 남아선호의 관계는 원인·결과적인 면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자녀사망경험과 남아선호의 관계는 자녀사망의 경험이 심리적 보상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들선호로 발전하는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관을 결정하는 요인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요인과 현존자녀수, 현존아들 수, 자녀사망경험 등 자녀출산 특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형Ⅴ는 모형Ⅳ에 부부관계 변수를 통제한 것으로 이들 부부관계 변인은 부부의 남아선호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모형Ⅳ와 동일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부의 남아선호관을 결정하는 요인은 부부특성, 경제요인과 결혼·출산 관련 요인 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인연령, 남편연령, 재산, 초혼연령, 결혼기간, 현존자녀수, 현존아들 수, 자녀사망경험여부 등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검증되었다(Wald 검정: p=.079, p=.079, p=.060, p=.071, p=.054, p=.000, p=.000, p=.010). 따라서 남아선호관은 부부, 경제 및 결혼·자녀 특성에는 영향을 받으나 부부역할이나 부부권력 등 부부관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선호관은 부부관계보다 부부의 인구 및 경제

적 배경, 결혼기간, 자녀규모, 성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모형Ⅵ은 모형Ⅴ에 자녀가치관 변수를 통제한 것이다. 모형Ⅵ과 비교해 볼 때 부인연령, 남편연령, 재산, 초혼연령, 결혼기간, 현존자녀수, 현존아들수, 자녀사망경험여부 등은 유의도가 떨어지고 있으나, 거주지역1, 부인교육수준, 부인직업, 남편의 직업,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구총소득, 부부의 의사결정 형태 등은 오히려 유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것은 자녀가치관 요인을 통제했을 때 비로소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직업, 남편의 직업, 가구총소득, 부부의 의사결정 형태 등은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부의 자녀가치관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부부의 사회학적 특성, 경제수준에 따라 남아선호관이 결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부부의 의사결정과 남아선호관의 관계를 보면 부부의 의사결정형태는 모형Ⅴ에서 억제변수로 영향을 미치다 자녀가치관을 통제한 모형Ⅵ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자녀가치관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부관계의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부간에 불평등적 관계일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부부관계는 젊은 부부보다 고연령층의 부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들 고연령층 부부의 경우는 남아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모형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부부의 거주지역, 부인교육수준, 부인직업, 남편직업 등이었고, 경제요인 중 가구총소득, 부부관계변수 중 의사결정형태, 자녀가치관에서 이상자녀수 등이었다(Wald 검정: p=.068, p=.005, p=.050, p=.026, p=.013, p=.031, p=.015). 즉 남아선호관이 높은 부부 층은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인이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가구총소득이 높은 경우, 부부의 의사결정이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형태로 이루어 질 때, 이상자녀수가 많을 때로 나타났다. 남아비선호도가 높은 부부 층은 부인교육수준이 높고, 부인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높았다. 여기서 도시지역에 거주하거나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남아선호관이 높았는데 이는 지역과 직종간의 차이보다 다른 인구학적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며, 이상자녀수가 많은 경우 남아선호관이 높은 것은 자

녀가치관에 남아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표 7-14〉 남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B	S.E.	Wald	B	S.E.	Wald	B	S.E.	Wald
부부특성관련 변수									
거주지역1	-.237*	.099	5.689	-.219*	.100	4.753	-.233*	.102	5.179
거주지역2	-.115	.084	1.859	-.113	.084	1.794	-.095	.086	1.230
부인연령	.031*	.015	4.415	.032*	.015	4.626	.026#	.015	2.975
부인교육수준	-.184	.134	1.889	-.182	.134	1.854	-.224	.138	2.631
혼전취업여부	.068	.105	.421	.063	.105	.366	-.022	.108	.040
부인직업	-.063	.106	.346	-.058	.106	.295	-.128	.111	1.333
남편연령	-.002	.014	.016	-.003	.014	.037	.002	.014	.031
남편의 교육수준	-.081	.146	.306	-.084	.146	.328	-.083	.149	.313
남편의 직업	-.027	.102	.067	-.026	.103	.065	.050	.107	.221
가족관련 변수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170	.116	2.156	.200#	.119	2.841
경제관련 변수									
재산							.0002	.000	2.525
가구총소득							.0003	.000	1.763
상수항	-.409	.362	1.275	-.434	.362	1.432	-.251	.372	.456
-2 Log L		3971.893			3969.721			3827.727	
Model Chi-Square		41.790			43.963			42.363	
(유의수준)		.000			.000			.000	
자유도		9			10			12	
사례수		2554			2554			2470	
부부특성관련 변수									
거주지역1	-.100	.107	.888	-.111	.107	1.081	1.733#	.950	3.331
거주지역2	-.109	.088	1.529	-.099	.089	1.243	-.235	.531	.196
부인연령	-.142#	.080	3.153	-.140#	.080	3.081	-.859	.535	2.580
부인교육수준	-.202	.145	1.932	-.206	.146	2.007	-2.088**	.737	8.022
혼전취업여부	.066	.116	.328	.061	.116	.277	.740	.682	1.178
부인직업	-.122	.115	1.127	-.121	.115	1.102	-1.599*	.816	3.842
남편연령	-.027#	.016	2.933	-.028#	.016	3.077	-.070	.089	.614
남편의 교육수준	-.082	.156	.273	-.082	.156	.278	-.607	.727	.698
남편의 직업	.114	.110	1.067	.112	.110	1.043	1.337*	.599	4.987
가족관련 변수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172	.122	1.989	.183	.122	2.244	.529	.703	.566
경제관련 변수									
재산	.0003#	.000	3.617	.0002#	.000	3.531	-.001	.002	.416
가구총소득	.0004	.000	1.622	.0003	.000	1.651	.004**	.002	6.164

〈표 7-14〉 계속

변수	모형Ⅳ			모형Ⅴ			모형Ⅵ		
	B	S.E.	Wald	B	S.E.	Wald	B	S.E.	Wald
결혼·출산관련변수									
초혼연령	.146#	.080	3.313	.145#	.080	3.265	.705	.540	1.702
결혼기간	.154#	.080	3.732	.154#	.080	3.714	.826	.533	2.407
현존자녀수	.292***	.064	20.725	.290***	.065	20.205	-.163	.394	.172
현존아들수	.443***	.065	46.551	.440***	.065	45.753	.011	.359	.001
자녀사망경험여부	.848*	.332	6.511	.850*	.332	6.549	-12.450	1411.430	.000
부부관계									
가사분담형태				-.081	.126	.417	1.202	1.092	1.211
의사결정 형태				.130	.082	2.523	1.030*	.477	4.659
자녀가치관									
자녀필요성							15.025	653.754	.001
가문계승과 제사를 위해 아들필요							34.932	1498.751	.001
심리적 만족과 가정의 행복·조화를 위해 아들필요							38.336	979.063	.002
이상자녀수							.683*	.281	5.913
상수항	.385	.502	.589	.424	.507	.699	-15.812	653.760	.001
-2 Log L	3630.508			3624.865			3582.494		
Model Chi-Square	165.482			167.227			173.067		
(유의수준)	.000			.000			.000		
자유도	17			19			23		
사례수	2420			2418			2400		

주: # p<.1, * p<.05, ** p<.01, *** p<.001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은 아들이 필수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선택적인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아선호가치관의 원인 또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가문유지나 제사 같은 가부장제적인 이유에서 부부의 심리적 만족, 가족행복 같은 개인적인 동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남아선호가치관은 자녀관 등에 영향을 미쳐 저출산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여성의 생식보건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남아선호가치관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향후 남아선호관을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성평등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남아선호관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가부장적 가치관이 우리사회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향후 출산저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남아선호관이 강한 부부의 경우 일정한 아들수를 갖기까지 출산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감별이나 인공임신중절 등도 행하여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인구자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성 선택적 인공인신중절의 예방강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아선호관과 그 원인의 변화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양성평등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특성, 자녀규모를 비롯하여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인구 및 가족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을 결정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아선호가치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부부의 거주지역, 부인교육수준, 부인직업, 남편직업, 가구총소득, 부부의 의사결정형태, 이상자녀수 등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매 단계마다 새롭게 변수를 추가하여, 그 변수들이 남아선호가치관 결정에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6단계의 모형을 시도한 결과, 부부의 남아선호가치관은 부부의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소득, 부부의 의사결정형태, 이상자녀관 등에 따라서도 남아선호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아선호가치관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으나, 부부관계, 자녀관 등과도 관련이 높았다. 이는 남아선호관이 우리 사회의 남아출산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압력 보다 부부의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성 평등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나, 특히 가족단위 특히 부부관계

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이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가 농촌지역보다 남아선호도가 높다는 의미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 중에서 고연령층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모형Ⅲ에서 통계적으로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남아선호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가부장제적 관습 속에서 남아선호 가치관을 수용하며 살아온 고연령층인 부모를 대상으로 양상 평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교육 정책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고연령층이면서 무직이거나 비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여성 집단은 고학력의 젊은 여성 집단에 비하여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근대적인 가족관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의 학력수준과 직업은 경제력과 가정에서의 위치와 역할, 부부간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저학력 및 무직,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양성평등 가치관 증대를 위하여 가정내에서 여성의 결정권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가족생활 양식에서 탈피하여 여성에게 경제적 권한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의 역할이 단순히 자녀출산과 양육을 넘어선 사회개발의 일원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성의 양육 및 가사 등을 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높은 경우 남아선호도가 높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교육수준이 높으며, 젊은 연령층의 남성일 경우는 고연령층보다 양성 평등의식이 높으나 대체로 우리나라 가족구조 속에서 남성이 고 학력수준과 전문직일 경우 부부의 의사결정은 남성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는 가구주 또는 부부가 전문직이나 특수직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중장년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남성, 특히 중장년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교육프

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 평등화를 위하여 가사부터 가정 대소사의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가치관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의 의사결정 형태가 부부공동이 아니고 한쪽 배우자에 의하여 결정될 때 남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연령, 학력, 교육수준 등 부부의 개인적인 배경과 관련이 높으나, 세대에 따라 사회적 가치관의 영향과도 밀접하다. 최근 자녀의 개념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양성평등 가치관이 증대됨에 따라 남아선호관이 약화되고 있으나, 사회구조적으로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각종 제도가 잔존하여서 양성평등 가치관 증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 근대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도 등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에를 들어 명백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 고용 등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제도와 법률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여성의 고용을 비롯한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녀양육 정책 등이 뒷받침 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상자녀수가 많을 때 남아선호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를 얻을 때까지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과 일시적 피임행위를 통하여 여성의 생식보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의 모성건강 및 생식건강의 보호차원에서 성 선택적 인공인신중절의 감소를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취시키는 대국민 홍보활동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태아 성감별에 따른 불법 의료에 대한 처벌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자 중심의 일방적인 부부관계를 지양하고 평등한 관계를 통하여 적합한 피임방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올바른 부부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 및 계몽이 요구된다.

〔제3부 한국가족의 변화양상과 요인〕

제 8장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유형별 가족관계 및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제 9장 자녀규모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제10장 기혼여성의 가족주기와 취업결정요인

제11장 자녀양육 실태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제 8 장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유형별 가족관계 및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른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구조의 축소,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해체의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회적 요인으로 산업화, 도시화 외에 여성이 사회적 지위변화 등이 있고, 인구적요인으로는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있다.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는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가족부양가치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의 이행은 가족세대를 단순화하며, 인구변동으로 인한 1인가족, 노인가족 외에, 가족해체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새싹가족 등 다양한 가족 등을 출현시키고 있다. 이들 다양한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기능과 가족관계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다양한 가족의 발생은 가족의 역기능이 주는 사회적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목적은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의 만족도와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럼으로써 급변하는 가족변화 속에서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건강가정을 이루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삶의 만족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며,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및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제 1 절 이론적 논의

1.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 관련 이론

가.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 개념

가족관계의 개념은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이효재(1985)는 가족관계를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 및 가치체계로 보았다. 유영주(1986)는 가족관계는 가족구조이며, 가족에서 구조란 가족 구성들 간의 권리와 의무로서 행하여야 할 행동과 행하여서는 안 될 행동을 포괄하고 실제 행하여지고 기대되는 관계를 의미한다면서 다른 말로 가족관계란 가족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 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간의 심리적·정서적 구조인 개인적·심리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상호작용의 역동과정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심각성 정도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관계내에서 갈등이 적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적응수준과 안녕감 수준은 높아진다. 따라서 가족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에서 겪게 될 갈등과 스트레스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Hudson, Acklin, & Bartosh, 1980).

가족 삶의 만족도 개념은 만족의 개념에서 도출될 수 있다. Burr(1978)는 만족을 일정한 목표나 요구의 성취과정에 대한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Campbell et al.(1976)은 만족을 열망과 성취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만족감이란 어떤 표준에 의해 삶의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이 희망하는 상황인 열망과 개인이 실제로 향유하는 상황인 성취사이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박용호(1977)는 만족이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만족

에 관한 정의를 Burr & Constantine(1979)은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만족이 개인이 갖는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사이의 일치의 정도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 않은 현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Medley(1975)는 생활만족은 기대와 그 만족도 여부에 의해 정해진다고 정의하였고, 김명자(1988)는 생활만족도란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정의하고 이것은 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개인적 현상으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Kalish(1975)는 생활만족도란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목표성취를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만족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므로(Kopelman, Greenhaus & Connolly, 1983) 전체적인 생활만족, 생활의 질, 복지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문숙재·김재경, 1992). 생활의 질 개념은 포괄적이나 가정학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물질적·객관적 생활조건과 심리적, 주관적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나.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 관련 이론

가족관계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교환이론과 일반체계이론, 갈등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교환이론을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에 적용할 때 가족원간의 교환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관계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광역사회의 관계로 확대되며, 가족원간의 교환은 관계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점차 가족간의 교환적 특성이 감소하고 있다. 부부관계에서는 부부권력, 의시소통, 결혼의 안정성, 성역할, 성행동 가정폭력 등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권력에 있어서는 부부의 자원이 심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평가되어 작용한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추구하는 산업사

회에서의 취업문제, 세대간 유사성이나 동일시에 보상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 사회계층별 부모행동이나 가치관에서의 비용 개념 등이 교환이론과 연관된다.

일반체계이론을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에 적용할 때 가족체계는 가족원, 가족원과의 관계, 가족의 속성,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체계적 접근으로서의 가족은 가족 개개인의 행동보다는 상호의존적 관계와 유형을 바탕으로 응집성과 적응성을 보이는 전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가족원의 특정 행동유형은 인간관계속에서 분석되고 전체적인 체계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노든 가족체계는 부부, 부모자녀, 형제들의 여러 개의 하위체계로서 구성되어 있다. 가족원은 여러 하위체계에 소속될 수 있고 이러한 하위체계를 통해 가족은 기능을 수행한다. 경계는 하위체계들의 가장자리로서 효과적인 가족기능이 발생하려면 경계가 분명해야 되며, 어느 정도 투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장애를 가진 가정의 경우 폐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원들의 기능이 미분화되고 역기능에 빠지기 쉽다. 가족권력 또한 체계의 속성으로 가족관계의 체계적 속성 때문에 권력은 상호교류적 방식으로 나타나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 사회는 성이나 연령 등의 요인을 통해 가족내 권력발달에 영향을 주며 체계내의 권력은 가족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갈등이론주16)주17)을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에 적용할 때, 가족내의 이해관계나 권력 또는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내에서의 갈등이 반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해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체계가 더욱 구조화된다. 따라서 갈등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등의 강도와 지속성이 결정된다. 가족갈등이 처리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자원과 권위의 특성이 파악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16) Sprey는 권위나 자원의 분배과정에서 기족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적절한 대응 방식이 필요함. 즉 어떤 갈등관리 방법이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가족유지와 해체가 결정됨.

주17) Collins는 성, 연령 등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자원의 분배과정상 갈등을 발생하고, 이것이 가족내의 성적 불평등, 세대간 갈등을 발생하여 집단간 갈등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제시하였음.

2.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가. 가족관계

가족관계 연구는 가족구조나 기능, 가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결혼만족도나 의사소통, 부부관계 및 가족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경신, 1993). 가족적응의 측면에서는 주로 결혼생활의 적응으로 취업주부의 결혼적응에 관심이 높았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역할이론에 기반을 두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역할갈등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부부의 결혼적응에 초점을 맞추다 점차 주부의 적응, 청소년의 가족생활 적응, 노후적응에 이르기까지 연구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가족역할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직종의 여성지위와 역할갈등 등으로 폭을 넓혀갔다. 후반기에 오면서 가족유형·구조가 가족의 응집성이나 아동의 인성 및 자아정체감, 부부갈등과 자녀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문제나 사회적 행동, 여성의 지위변화 및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족유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연구범위도 계층별, 가족구조별, 사건별, 가족원 특성별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가족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가족관계 영역의 다른 주제보다 늦게 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구성원간의 권력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가족내 의사결정 유형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부의 참여도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 초반기에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분석이라면 후반기에는 의사결정유형과 가족내 권력구조, 권력구조와 가정폭력 등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권력구조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고 또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그것이 자녀발달, 인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부부간의 권력관계가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가족관계 연구는 부모-자녀관계가 다수를 차지하며, 부모-성인자녀 관계 연구는 감소한데 반해 부부관계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결혼만족도가 가족관계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배우자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역할분담과 의사결정, 의사소통, 성관계와

여가시간의 할당과 공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이들 요인들은 부부관계를 측정한 연구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장현섭 외(1994)와 김승권 외(2003)는 결혼생활만족도 또는 배우자 만족도를 8개 영역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즉 배우자의 애정·이해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양), 부부의 성생활,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문화생활,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Orthner(1975)는 부부가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될 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더욱 잘 이루어짐을 발견하였고, Holman & Epperson(1984)도 여가시간을 함께 즐기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생활에서 더욱 큰 만족을 얻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관계와 여가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가족의 여가활동은 화목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 가족관계의 만족도 향상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현수, 1996; 고갑준, 1998).

자녀관계만족도는 가족관계에서 성장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한다. 이는 가족관계의 기본으로 이를 통해 자녀인격 형성과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를 보면, 김승권 외의 연구(2003)에서는 자녀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대화, 문화생활,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 등이다.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를 보면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이 증가하고 소수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서구의 경우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노인들의 고립과 보호문제를 놓고 부모와 자녀간의 접촉빈도,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지리적 근접성이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규범이나 태도, 가치 등에 대한 세대간의 간격에 대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 속에서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가족구조적인 측면, 관계의 감정적 만족도, 애정과 보살핌, 보살핌의 부담과 긴장 등의 다양한 측면이 연구되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지역, 연령, 성, 취업 여부 등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부인은 자녀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최외선·손현숙, 1991; 옥선화·이기춘 외, 1991; 이정우·김경숙, 1993), 취업주부는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에 만족이 높았으나, 시댁관계에 대한 만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이정우 외(1997)는 신세대 주부는 부부, 자녀, 가족전체간의 관계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도시 부부가 농촌부부보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박현미, 1987).

나. 가족의 삶의 만족도

가정생활만족이란 가정생활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임정빈, 1988; 두경자, 1993).[주18] 가정생활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Hays & Stinnett(1971)는 중년기 부부의 생활만족 연구에서 생활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결혼관계, 건강, 직업, 자녀와의 관계, 여가와 사회참여, 자아개념 등 7개 변수들을 지적하였다. 임정빈(1988)은 주부의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간의 관계 연구에서 가정생활만족도는 생활표준일치, 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사노동영역 등과 관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종숙(1989)은 확대기가정의 가정생활만족을 조사하면서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경제적 상태, 생활표준일치, 의사소통, 가사노동참여, 건강상태, 자기평가, 여가활동, 직장생활 등 11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조미환(1990)은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에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사노동, 여가, 경제, 주거영역과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 등을 대상으로 가정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최외선·손현숙(1991)의 연구결과, 주부의 자아긍정감은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숙(1992)은 가정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주18) 임정빈(1988)은 가정생활만족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된 느낌이나 기대와 실제 보상간의 일치정도에서 오는 충족감으로 보고 있음. 두경자(1993)도 가정생활만족을 가정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의 주관적인 감정 및 태도라고 정의함.

에서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이 높은 변수로 재정상태, 부부관계, 자녀관계, 주부자신의 위치와 역할, 여가 및 지역사회참여, 가사수행, 생활표준의 일치 등을 지적하였다.

임정빈·고보선(1992)은 가족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식생활, 교육, 주생활, 가족관계, 가사노동 환경, 여가, 경제, 친구와 이웃, 지역사회 등을 활용하였다. 이정우·김경숙(1993)은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결혼전반, 재정문제, 시댁관계, 생활표준의 일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제 2 절 가족구조의 변화와 논의

1. 소가족화와 가족규모 축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의 진전은 가구수의 증가현상과 함께 가구당 평균가구원수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윤종주, 1994).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1960년 437만 1천 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0년 796만 9천 가구, 1990년 1135만 5천 가구, 2000년에 1431만 2천 가구로 40년간 약 3배가 증가하였다. 가족규모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1960년 각각 2.3%와 7.1%에서 2000년 각각 15.5%와 19.1%로 40년간 1인 가구는 7배, 2인 가구는 3배 증가하였다. 3~4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 26.5%에서 2000년 52.0%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5인 이상 가구는 1960년 64.1%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13.4%에 이르러서 대다수의 가구가 4인 이하 가구임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 분포의 변화는 평균 가구원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60년 5.6명에서 1970년 5.2명, 1980년 4.5명, 1990년 3.7명, 그리고 2000년 3.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가구수의 증가와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여러 요인 중에서 출산율 저하,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

가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8-1〉 가구수 및 가구원 변화(1960～2000년)

(단위: %)

가구원수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전체 가구수(천가구)	4,371	5,576	7,969	11,355	12,961	14,312
가구원수 분포						
1명	2.3	3.7	4.8	9.0	12.7	15.5
2	7.1	9.4	10.5	13.8	17.3	19.1
3～4명	26.5	27.8	34.8	48.6	52.1	52.0
5명 이상	64.1	59.1	49.9	28.6	17.9	13.4
평균 가구원수(명)	5.6	5.2	4.5	3.7	3.3	3.1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2. 가족세대의 단순화와 핵가족의 증대

가족규모의 축소는 가족의 세대구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가족세대가 단순화되고 핵가족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3세대 이상의 가족이 감소하는 반면 부부나 부부·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가족 중에서 1세대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0년 7.5%에서 2000년 17.1%에 이르고 있다. 또한 2세대 가족은 1960년 64.6%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0년 74.2%이었다가 1990년 이후 다소 정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세대 가족의 증가와는 반대로 3세대 이상의 가족은 1960년 28.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10.1%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 가족 중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가 감소하고 1세대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핵가족의 증가와 확대가족의 감소를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핵가족은 1970년의 71.5%에서 2000년에 82.0%로 증가된 반면, 직계가족은 1970년 18.8%에서 2000년 8.0%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1세대 가족이 증가하는 것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형제들로만 이루어진 가족의 증가로 미혼층과 노인층에서 발견된다.

〈표 8-2〉 가족의 세대구성 및 가족유형 변화(1960～2000년)

(단위: %)

세대구성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전체 가족수(천가구)	4,371	5,576	7,470	10,167	11,133	11,928
가족의 세대별 비율						
1세대	7.5	6.8	9.0	12.0	14.7	17.1
2세대	64.6	70.0	74.2	74.1	73.7	72.9
3세대 이상	28.5	23.2	18.4	13.9	11.6	1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족유형						
핵가족	-	71.5	74.0	76.0	79.8	82.0
직계가족	-	18.8	11.2	10.3	9.1	8.0
기타가족	-	9.7	14.8	13.8	11.2	10.1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혈연가구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우리나라 가족의 형태는 부부가족, 부부+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 부부+양(편)친, 부부+양(편)친+자녀로 구분된다. '부부가족'은 가족형성기와 가족축소 완료기에 나타나는 가족형태로서 1970년대 5.4%에서 2000년 14.8%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부부+미혼자녀'는 전형적인 2세대 핵가족 형태로 1970년에 55.5%, 1990년 58.0%, 2000년 57.8%로 전체 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다 2000년에 와서 약간 정체를 보인다.

다음은 '한부(모)+미혼자녀'로 핵가족 형태인데, 이 가족유형은 한부모만 있는 가족으로 이러한 한부모 가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은 재혼율의 증가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부+양(편)친+자녀'의 형태는 3세대 가족형태로 1970년대에 17.4%였으나 2000년에 6.8%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기타가족은 가족원의 구성과 세대가 다양하여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8-3〉 가족형태의 변화(1970～2000년)

(단위: %)

가족유형	1970	1980	1990	1995	2000
부부	5.4	6.5	9.3	12.6	14.8
부부+미혼자녀	55.5	57.4	58.0	58.6	57.8
한부(모)+미혼자녀	10.6	10.1	8.7	8.6	9.4
부부+양(편)친	1.4	0.6	0.9	1.1	1.2
부부+양(편)친+자녀	17.4	10.6	9.4	8.0	6.8
기타가족	9.7	14.8	13.8	11.1	1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형태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가 단순화되고 핵가족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핵가족의 형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핵가족 형태가 전체 가족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이 82.0%로 동부 83.1%, 그리고 읍·면부 77.6%이었다. 핵가족 중 '부부'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이 14.8%, 동부가 11.7%로 읍·면부(26.6%)가 높았다. 이는 농촌의 경우 노인단독가구가 많은 것과 관련된다.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가족이나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족은 읍·면부보다는 동부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표 8-4〉 핵가족의 구성(2000년)

(단위: %)

가족형태	전국	동부	읍·면부
부부가족	14.8	11.7	26.6
부부+미혼자녀	57.8	61.5	43.6
한부모+미혼자녀	9.4	9.9	7.4
전체	82.0	83.1	77.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3.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우리나라 가족유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중의 하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면, 1970년 3.7%

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 15.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인 가구 수를 보면 1970년 20만 6천 가구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38만 3천 가구, 1990년에 102만 1천 가구, 그리고 2000년에는 222만 4천 가구로 30년 동안 무려 11배나 증가하였다(표 8-5 참조).

〈표 8-5〉 1인 가구의 변화(1970～2000년)

(단위: 천가구,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1인 가구 (%)[1]	206 (3.7)	281 (4.2)	383 (4.8)	661 (6.9)	1,021 (9.0)	1,642 (12.7)	2,224 (15.5)
전체	5,576	6,648	7,969	9,571	11,355	12,958	14,312

주: 1)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가구의 증가로 사회적인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 노인가구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자녀의 부모부양의식이 약화되고, 또한 농촌의 젊은 연령층의 도시로의 이동 등의 여러 요인으로 노인만의 가구 또는 가족의 증가를 가져왔다. 노인의 부양이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노인가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가족형태의 세대의 단순화와 핵가족화에 영향을 받아 노인가구의 형태도 독신가구 및 1세대 가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신가구는 1985년 17.1%에서 2000년 31.5%로 약 2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세대 가족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00년에 다소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3세대 이상의 가족형태는 계속 감소하여 1985년 25.4%에서 2000년 10.0%에 불과하였다.

노인독신가구 및 노인 1세대 가족 같이 자녀비동거 형태 노인가족의 증가는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인 1인 가구 및 노인1세대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8-6〉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세대구성 변화(1985～2000년)

(단위: %)

세대구성	1985	1990	1995	2000
독신가구	17.1	20.2	10.3	31.5
1세대	22.0	25.0	39.2	34.0
2세대	35.5	31.8	32.8	24.4
3세대 이상	25.4	23.0	17.7	10.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1인 가구 및 노인가구 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족형태는 한부모 가족이다. 한부모 가족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에 의해 양친 중의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조흥식 외, 1997; 공세권 외, 1996).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의 변화를 보면 '한부(모)+미혼자녀'가족형태는 1970년 10.6%에서 2000년 9.4%로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서 실제로 편모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편모가족은 배우자의 상실로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편부가족 또한 가사일이나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의 양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한부모 가족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특히 편부가족은 가사일이나 자녀양육 등에 대한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부자가정이냐 모자가정이냐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8-7〉 한부모 가족의 변화(1970～2000년)

(단위: %)

가족유형	1970	1980	1990	1995	2000
한(부)모+미혼자녀 가구 비율	10.6	10.1	8.7	8.6	9.4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	14.7	15.7	16.6	18.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그리고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발생하는 소년소녀가정은

매년 증가하여 1995년 8,107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부터는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에 3,504세대로 1995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청소년 등이 생계 및 교육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화와 건강육성을 위해서는 미성년자들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보다 성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지할 것이다.

〈표 8-8〉 소년소녀가정의 현황(1990～2004년)

(단위: 세대, 명)

연도	세대주	세대원
1985	4901	6224
1990	6696	7082
1995	8107	7011
2000	6229	3350
2001	5248	2812
2002	4531	2416
2003	3994	2190
2004	3504	1940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 및 가족규모는 많은 변인에 의하여 그 영향을 받는다. 즉, 결혼연령의 상승, 취학이나 취업에 의한 가족의 분가 내지 분거, 이혼율의 증가 등에 의한 미혼가구, 독신가구, 또는 해체가족이 그 요인이기도 하나, 출산율의 감소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인 구조상의 변화는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등이 주요 특징이었다. 향후 가족구조 또한 결혼연령, 취학 및 취업 등에 의한 가족의 분가(분거), 이혼율 및 미혼율, 출산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소가족화와 핵가족의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함께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정의 출현 등이 계속되며 가족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제 3 절 가족관계 및 가족원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앞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족은 가족구조의 축소, 가족기능 약화, 가족해체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가족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세대가 단순화되며, 인구변동으로 인하여 1인 가족 및 노인가족이 증가하고, 가족의 해체 등으로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가족이 야기하는 사회적 역기능 현상은 가족의 삶의 만족도 저하 뿐 아니라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가족생활의 만족도는 개별 가족의 특성과 생활조건,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형태 및 가족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및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수준을 측정하고 향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전망하는데 그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

본 연구목적은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의 만족도와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급변하는 가족변화 속에서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건강가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분석대상은 15~59세의 기혼가구

의 가구주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가구주 및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특성, 결혼·출산 특성, 가치관별로 가족관계 만족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으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만족도 및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분석변수

본 연구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선정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변수 및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 중 본 분석에서 재검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중심으로 본 분석 자료에서 이용 가능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가족관계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검증된 가족간의 여가활동, 시댁관계, 건강 등의 변수와 가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에서 시댁과의 관계, 교육 등은 본 분석에서 사용한 구조화된 조사자료에서 누락되어 독립변수로 선정하지 못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독립변수는 총 31개로 부부특성변수로는 거주지역, 부인연령, 부인교육수준, 현 취업여부, 남편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등 7개 변수를 사용하였고, 가족특성관련 변수로 가구주의 장남여부, 배우자의 장녀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등 3개변수를 선택하였고, 경제관련 변수로 재산(동산+부동산), 가구총소득, 주택소유형태, 주관적 경제자립도 등 4개 변수, 결혼·출산관련 변수로 초혼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아들유무 등 4개 변수, 가족부양관련 변수로 신체적 부양여부, 정서적 부양여부, 경제적 부양여부 등 3개 변수, 부부관계 변수는 배우자의 이해도, 공유하는 시간, 성생활,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문화생활 등 7개 변수, 부모자녀관계 변수는 대화정도, 문화생활,

부모의 의견 및 기대 충족 등 3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은 <표 8-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9〉 가족관계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측정
종속변수	
가족관계 만족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만족/만족
독립변수	
부부특성변수	
거주지역	0: 읍·면부 1: 동부
부인연령	실제 수: 세
부인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현 취업여부	0: 비취업 1: 취업
남편연령	실제 수: 세
남편의 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남편의 직업	0: 비전문직 1: 전문직
가족특성관련 변수	
가구주의 장남여부	0: 차남 이하 1: 장남
배우자의 장녀여부	0: 차녀 이하 1: 장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0: 비동거 1: 동거
경제관련 변수	
재산(동산+부동산)	실제 수: 십만원
가구총소득	실제 수: 십만원
주택소유형태	0: 비자가 1: 자가
주관적 경제자립도	0: 비자립 1: 자립
결혼·출산관련변수	
초혼연령	실제 수: 세
결혼기간	실제 수: 년
자녀수	실제 수: 명
아들유무	0: 없음 1: 있음
가족부양관련 변수	
신체적 부양 여부	0: 받지 못함 1: 부양받음
정서적 부양 여부	0: 받지 못함 1: 부양받음
경제적 부양 여부	0: 받지 못함 1: 부양받음

〈표 8-9〉 계속

구분	측정
부부관계 변수	
배우자의 이해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공유하는 시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성생활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배우자의 소비성향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부부간의 대화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부부간의 문화생활	
부모-자녀관계 변수	
대화정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문화생활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부모의 의견 및 기대 충족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가족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독립변수는 총 32개로 부부특성변수로는 거주지역, 부인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현 취업여부, 남편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등 7개 변수를 사용하였고, 가족특성관련 변수로 가구주의 장남여부, 배우자의 장녀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등 3개 변수를 선택하였고, 경제관련 변수로 재산(동산+부동산), 가구총소득, 주택소유형태, 주관적 경제자립도 등 4개 변수, 결혼·출산관련 변수로 초혼연령, 결혼기간, 자녀수, 아들유무 등 4개 변수, 가족부양관련 변수로 신체적 부양여부, 정서적 부양여부, 경제적 부양여부 등 3개 변수, 가족관계 변수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2개 변수, 가정생활관련 변수는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분담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또는 친척관계,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 9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은 <표 8-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8-10〉 가족 삶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측정
종속변수	
가정생활만족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만족/만족
독립변수	
부부특성변수	
거주지역	0: 읍·면부 1: 동부
부인연령	실제 수: 세
부인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현 취업여부	0: 비취업 1: 취업
남편연령	실제 수: 세
남편의 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남편의 직업	0: 비전문직 1: 전문직
가족특성관련 변수	
가구주의 장남여부	0: 차남 이하 1: 장남
배우자의 장녀여부	0: 차녀 이하 1: 장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0: 비동거 1: 동거
경제관련 변수	
재산(동산+부동산)	실제 수: 십만원
가구총소득	실제 수: 십만원
주택소유형태	0: 비자가 1: 자가
주관적 경제자립도	0: 비자립 1: 자립
결혼·출산관련변수	
초혼연령	실제 수: 세
결혼기간	실제 수: 년
자녀수	실제 수: 명
아들유무	0: 없음 1: 있음
가족부양관련 변수	
신체적 부양 여부	0: 받지 못함 1: 부양받음
정서적 부양 여부	0: 받지 못함 1: 부양받음
경제적 부양 여부	0: 받지 못함 1: 부양받음
가족관계관련 변수	
부부관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부모-자녀관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표 8-10〉 계속

구분	측정
가정생활관련 변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가사노동분담 정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이웃 또는 친인척 관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의식주 수준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건강수준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0: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1: 매우 만족/만족

4. 주요 분석결과

가. 제 특성별 가족관계의 만족도

1) 전반적 가족관계의 만족도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영역별로 구성하였으며, 부부관계는 8개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즉, 배우자의 이해도, 공유하는 시간, 성생활,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문화생활, 전반적인 부부관계 등이다. 또한, 자녀관계는 4개의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는데 즉 대화정도, 문화생활,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전반적 자녀관계 만족도 등이다. 응답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등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5점중 3.20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3.36점, 자녀관계만족도는 3.40점으로 부부보다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약간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기타 가족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부가족(3.20점), 1인 가족(3.18점), 노인가족(3.17점), 한부모가족 (3.06점)순으로 높았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가족이 높은 편이었고, 해체

가족의 경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기타 가족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부가족(3.37점), 노인가족(3.32점), 1인 가족(3.30점) 순이었으며, 자녀관계만족도는 부부가족이 3.5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은 노인가족이 3.48점으로 높았고, 한부모가족 3.42점, 기타 가족이 3.41점이었다. 따라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을 포함하여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족은 낮은 경향을 보여서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부관계의 지표별 만족도 수준을 보면,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의 이해도(3.39점), 성생활(3.32점), 부부간의 대화(3.28점), 공유하는 시간(3.15점),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3.04점), 부부간의 문화생활(2.84점)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부부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문화생활 등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가사부담을 여성이 주로 부담하는 실정을 반영하며, 부부가 함께 하는 문화생활의 부족도 부부중심보다 자녀중심, 가족중심의 생활양식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가족유형별로는 부부가족은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는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3.05점), 부부간의 문화생활(2.86점)은 만족도가 낮았다. 노인가족도 부부가족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배우자의 소비성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2.98점), 부부간의 문화생활(2.71점)의 만족도는 낮았으나 부부가족보다 낮았다. 1인 가족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는 3.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간의 문화생활(2.83점), 공유하는 시간(2.58점)은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다른 가족유형보다 낮아서 부부간의 비동거형태에서 오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기타가족은 여러 가족형태를 포함하므로 전체와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의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는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생활(3.31점), 공유하는 시간(3.18점)이었으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3.10점), 부부간의 문화생활(2.78점)은 만족도가 낮아서 다른 가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한

부모가족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비해당이어서 제외하였다.

〈표 8-11〉 가족유형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가족[1]	노인가족	1인가족[2]	기타	전체	F값
부부관계							
배우자의 이해도	3.39	-	3.38	3.61	3.38	3.39	5.847***
공유하는 시간	3.16	-	3.14	2.58	3.18	3.15	13.223***
성생활	3.33	-	3.31	3.05	3.31	3.32	10.825***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3.05	-	2.98	3.06	3.10	3.04	4.174**
배우자의 소비성향	3.43	-	3.39	3.25	3.35	3.42	3.051**
부부간의 대화	3.28	-	3.31	3.32	3.31	3.28	3.612**
부부간의 문화생활	2.86	-	2.71	2.83	2.78	2.84	7.720***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도	3.37	-	3.32	3.30	3.39	3.36	6.001***
자녀관계							
대화정도	3.53	3.46	3.54	3.15	3.44	3.50	22.406***
문화생활	3.01	2.76	2.92	2.57	2.90	2.96	30.379***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3.30	3.19	3.26	3.09	3.25	3.28	7.595***
전반적 자녀관계 만족도	3.52	3.42	3.48	3.20	3.41	3.49	21.091***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3.20	3.06	3.17	3.18	3.22	3.20	1.175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1) 부부가족은 부부, 부부+미혼자녀의 가족형태를 포함하였고, 노인가족은 가족원 중에 노인이 1명이라도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며, 기타 가족에는 기타 1세대 가족, 2세대 가족, 3세대 이상 가족과 부부+미혼자녀,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형태를 포함함.

2) 한부모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측정은 동거 및 비동거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함.

3) 1인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 측정은 부부관계는 유배우를 대상으로, 자녀관계는 동거 및 비동거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함.

4)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5) **p 〈.01, ***p 〈.001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자녀관계의 지표별 만족도 수준은 대화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또한,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3.28점), 문화생활(2.96점) 순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에 순종하는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생활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족, 기타가족 모두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자녀와의 대화정도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문화생활은 만족도가 낮았다.

2) 부부의 특성별 가족관계의 만족도

부부의 특성별로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8-12>와 같다.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3.21점,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은 3.17점으로 동부지역이 높았다. 부인연령별로는 30~34세와 35~39세 연령층이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3.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0세 연령층이 3.20점으로 높았고, 25~29세는 3.01점, 15~24세는 1.61점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인이 중장년층인 경우 높았고, 20대 연령층은 낮았는데 이는 중장년층은 가족주기별로 안정기인 반면, 20대 연령층은 가족형성기이므로 불안정한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는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학력소지자가 3.20점, 중학교 3.09점, 초등학교 이하 3.06점 등의 순으로 높아서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과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인의 직업별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준전문직은 3.34점, 사무직은 3.32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외의 직업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위공무원·관리직은 2.87점으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실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는 떨어진다.

남편연령별로는 30~34세와 35~39세 연령층이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3.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40세 연령층이 3.25점으로 높았고, 25~29세는

3.11점, 15~24세는 1.61점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인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남편의 연령이 중장년층인 경우 높았고, 20대 연령층은 낮았다. 남편의 교육수준별로도 부인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직, 준전문직, 고위공무원·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높았으며, 농·어·축산업, 기계장치·조작원, 단순노무직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았다. 부부의 취업형태별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편이 취업한 경우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부가 취업한 경우는 3.18점, 부부가 비취업인 경우는 3.11점, 부인이 취업한 경우는 2.94점 순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가족관계에는 아직도 남성부양자 모델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 및 부부의 특성별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모든 가족유형에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읍·면부지역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서 거주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1인 가족과 기타 가족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노인가족과 부부가족의 경우 높았으며, 한부모가족은 가장 낮았다. 한편, 읍·면부지역은 부부가족이 높았으며 1인 가족이 낮았다. 따라서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든 지역에서 부부가족이 높았고, 해체가족인 한부모가족과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1인 가족의 경우 낮았다.

부인의 연령별로는 부부가족과 1인 가족 부인이 30대 연령층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및 기타가족 모두 응답부인의 연령이 40~44세 연령층이 경우 가장 높았다. 만족도가 낮은 연령층은 한부모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형태에서 20대 이하로 나타나서 가족주기별로 안정기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인교육수준별로는 모든 가족유형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부인의 교육수준과 경제정도와는 관련이 높으며 이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응답부인의 직업별로는 부부가족, 노인가족 및 기타가족의 경우 부인의 직업이 전문직, 준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한부모가족은 기계장치

조작원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1인 가족은 농·어·축산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높았다. 이는 가족유형별로 응답부인의 교육수준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의 연령별로는 부부가족 및 기타가족은 남편이 35~39세 연령층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가족은 35~39세와 40~44세인 경우, 노인가족은 30~34세, 1인 가족 40~44세인 경우 높았다. 만족도가 낮은 연령층은 부부가족과 노인가족은 20대 이하로 나타나서 응답부인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남편교육수준은 모든 가족형태에서 응답남편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부부가족과 노인가족은 응답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른 가족형태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의 직업별로는 부부가족과 노인가족의 경우 응답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준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한부모가족은 준전문직, 1인 가족 서비스·판매직, 기타가족은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높았다. 이는 가족유형별로 응답남편의 교육수준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된다.

부부의 취업형태별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가족과 기타가족의 경우는 전체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가족관계에 전형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은 남성이 취업한 경우 1인 가족 부부가 취업한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표 8-12〉 부부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거주지역						
동부	3.20	3.05	3.21	3.33	3.27	3.21
읍·면부	3.19	3.14	3.10	2.86	3.10	3.17
부인연령						
15~24세	1.61	-	-	-	-	1.61
25~29세	3.01	-	3.08	2.00	3.00	3.01
30~34세	3.29	3.05	3.24	-	3.31	3.28
35~39세	3.28	2.97	3.19	3.54	3.36	3.28
40~44세	3.19	3.30	3.26	2.00	3.37	3.20
부인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06	2.73	3.04	2.56	3.11	3.06
중학교	3.09	2.73	3.10	3.19	3.15	3.09
고등학교	3.20	3.14	3.21	3.55	3.30	3.20
대학교 이상	3.43	3.24	3.38	3.00	3.40	3.43
부인의 직업						
고위공무원관리직	2.86	-	3.00	-	-	2.87
전문직	3.48	4.00	3.68	3.00	3.34	3.50
준전문직	3.36	2.67	3.28	3.22	3.39	3.34
사무직	3.32	2.91	3.32	-	3.33	3.32
서비스·판매직	3.14	2.71	3.15	2.85	3.22	3.14
농·어·축산업	3.15	3.00	3.13	4.00	3.20	3.15
기능직	3.13	3.00	3.06	-	3.28	3.12
기계장치조작원	3.12	3.49	3.00	2.00	3.17	3.11
단순노무	3.02	3.07	2.97	3.70	3.00	3.02
남편연령						
15~24세						
25~29세	3.12	-	3.00	-	-	3.11
30~34세	3.27	-	3.35	-	3.25	3.28
35~39세	3.29	4.00	3.17	-	3.42	3.28
40~44세	3.25	4.00	3.26	4.00	3.33	3.25
남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04	3.00	3.03	3.00	3.18	3.05
중학교	3.07	-	3.06	3.00	3.08	3.07
고등학교	3.18	2.78	3.16	2.82	3.26	3.18
대학교 이상	3.34	4.00	3.33	3.79	3.35	3.34

〈표 8-12〉 계속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남편의 직업						
고위공무원·관리직	3.33	-	3.47	-	3.29	3.34
전문직	3.39	-	3.37	3.00	3.53	3.39
준전문직	3.34	4.00	3.19	-	3.47	3.33
사무직	3.32	3.00	3.32	2.73	3.23	3.31
서비스·판매직	3.21	-	3.14	4.09	3.18	3.20
농·어·축산업	3.14	3.00	3.13	2.93	3.18	3.14
기능직	3.19	3.26	3.19	3.00	3.55	3.20
기계장치·조작원	3.12	-	3.21	-	3.14	3.13
단순노무	3.07	-	3.03	-	3.11	3.07
부부의 취업여부						
부부취업	3.18	3.20	3.17	4.00	3.27	3.18
남편취업	3.26	3.77	3.25	3.00	3.29	3.26
부인취업	2.92	2.69	3.04	-	2.91	2.94
부부비취업	3.13	-	2.99	-	3.16	3.11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3) 가족 및 경제적 특성별 가족관계의 만족도

가족특성별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보면 <표 8-13>과 같다. 가구주의 장남(장녀)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는 장남(장녀)이 3.21점, 차남(차녀) 이하가 3.19점으로 장남(장녀)인 경우 약간 높았다. 가구주의 배우자는 차녀(차남) 이하인 경우가 3.21점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장녀(장남)는 3.18점으로 약간 낮았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동거하는 경우 3.21점, 비동거는 3.20점으로 동거하는 경우가 약간 높았다.

가족특성 및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장남(장녀)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가족형태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이었으며, 1인 가족과 기타 가족은 가구주가 차남(차녀) 이하인 경우 높았다. 가구주 배우자는 장녀(장남)인 경우 한부모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가족형태에서

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는 노인가족과 기타 가족 등 확대가족형태에서 높았으며, 부부가족, 한부모가족의 동거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는 비해당으로 제외하였다.

〈표 8-13〉 가족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가구주의 장남(장녀) 여부						
장남(장녀)	3.21	3.26	3.19	2.90	3.23	3.21
차남(차녀) 이하	3.20	3.01	3.16	3.33	3.23	3.19
배우자의 장남(장녀) 여부						
장녀(장남)	3.19	3.30	3.10	3.16	3.14	3.18
차녀(차남) 이하	3.21	2.98	3.21	3.19	3.26	3.21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	-	3.21	-	3.28	3.21
비동거	3.20	3.07	3.02	3.18	3.21	3.20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여기서 가구주가 장남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가족문화에서 장남은 가정대소사를 결정하고,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응집력이 높은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배우자인 경우는 오히려 차녀 이하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출산 순위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목할 것은 확대가족인 노인가족과 기타가족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서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가족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특성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경제적 특성별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14 참조).

재산(동산+부동산)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주택소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 높았다. 대체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서 경제력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8-14〉 경제적 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동산+부동산						
없음	3.12	3.00(3)	2.84(9)	-	3.00	3.10
100백만원 미만	3.14	3.18	3.15	2.98	3.17	3.14
200백만원 미만	3.22	2.66(10)	3.08	3.50(8)	3.21	3.20
300백만원 미만	3.27	3.49(2)	3.20	4.00(1)	3.34	3.26
300백만원 이상	3.36	3.00(4)	3.38	2.72(4)	3.44	3.3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6	2.66	2.97	3.06	2.92	3.04
200만원 미만	3.09	2.59	3.08	2.93	3.01	3.08
300만원 미만	3.16	2.93	3.13	3.03	3.22	3.15
300만원 이상	3.31	3.39	3.31	3.63	3.39	3.31
주택소유형태						
자가	3.22	3.13	3.17	3.21	3.25	3.21
전세	3.20	3.03	3.26	3.22	3.06	3.20
전·월세	3.08	2.68	3.18	3.11	3.46	3.09
월세	3.07	3.00	3.08	3.00	3.00	3.06
기타	3.22	3.00	3.01	3.00	3.00	3.19
경제적 자립도						
자립함	3.34	3.56	3.30	3.11	3.36	3.34
보통	3.18	3.05	3.16	3.45	3.26	3.18
자립하지 못함	3.02	2.79	3.01	3.04	3.00	3.02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경제적 특성 및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가족형태는 부부가족과 확대가족형태인 기타가족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가족형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는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와 전세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족형태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이었고, 기타 가족은 전·월세와 자가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서 전체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가족형태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기타가족 등이었고, 1인 가족 일정하지 않았다. 가족형태별로도 경제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4) 결혼 및 자녀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주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주기를 구성하는 요인인 결혼특성별로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혼연령이 20대 이하 연령층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30대 이상 연령층은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즉 초혼연령이 낮다는 것은 가족주기상으로 확대완료기 및 축소기일 가능성이 높아서 가족주기상 비교적 안정기인 경우에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등에서 나타나며, 1인 가족과 기타 가족은 일정하지 않았다.

결혼기간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는 초혼연령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결혼기간이 길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주기상 가족형성기 및 확대기에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족형태별로는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가족형태는 부부가족과 기타 가족이었고, 이외의 가족형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결혼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주기상으로 결혼 후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부터 확대기까지, 확대완료기를 지나서 축소기까지는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표 8-15〉 결혼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초혼연령						
15~24세	3.19	3.12	3.17	2.99	3.26	3.19
25~29세	3.24	3.01	3.24	3.54	3.11	3.24
30~34세	3.04	-	2.99	4.00	3.57	3.06
35~39세	3.10	-	3.00	2.00	-	3.02
결혼기간						
10년 미만	3.28	2.94	3.15	2.61	3.32	3.26
20년 미만	3.23	3.24	3.26	3.35	3.27	3.23
20년 이상	3.17	2.99	3.13	3.20	3.13	3.16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자녀가치관과 남아선호관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에서 자녀수 및 아들수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자녀수와 가족관계 만족도는 자녀수가 1명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자녀가 1명도 없는 경우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자녀가치관이 선택의 개념으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녀의 유무 여부가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자녀규모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볼 때 우리나라 출산규범이 1~2명 수준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부부가족에서 나타나며, 노인가족, 1인 가족 및 기타 가족은 자녀수가 2명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서 핵가족형태에 비해서 확대가족의 경우 자녀규모가 클 때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부부가족은 자녀수가 3명일 때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나, 1인 가족과 기타 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낮았다. 따라서 자녀유무 및 규모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들유무와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면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아들이 없는 경우가 아들이 있는 경우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이는 남아선호가 가

족관계에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서 남아선호가치관이 약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부부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 등에서 나타나며, 한부모 가족과 1인 가족은 아들이 있는 경우에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표 8-16〉 출산특성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자녀수						
없음	3.20	-	-	2.00	3.15	3.14
1명	3.29	2.75	3.11	2.84	3.18	3.26
2명	3.22	3.11	3.25	3.33	3.30	3.22
3명 이상	3.19	3.79	3.12	3.00	3.21	3.18
아들유무						
없음	3.28	2.99	3.24	2.71	3.33	3.28
있음	3.21	3.15	3.20	3.17	3.22	3.21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5) 가족부양 형태별 가족관계의 만족도

교환이론에 의하면 가족부양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부양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8-17>과 같다.

부양여부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양을 주고 받는 경우가 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서 부양여부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족형태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신체적 부양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신체적 부양을 주고 받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부부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의 경우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한부모가족은 오히려 부양을 주고 받지 않는 경우에 가족관계 만족

도가 높았는데 다시 말하면 한부모가족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서 가족해체로 인하여 가족지원망이 축소되어 부양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낮은 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신체적 부양에 비해 정서적 부양과 경제적 부양은 부양을 주고 받지 않는 경우에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정서적 부양과 경제적 부양이 신체적 부양만큼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는 가족간의 정서적 부양과 경제적 부양이 가족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부부가족과 한부모가족에서 나타나며, 노인가족은 정서적 부양은 전체와 동일하였으나, 경제적 부양을 주고받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으며, 1인 가족은 정서적 부양, 기타 가족은 경제적 부양을 주고받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서 가족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부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8-17〉 가족부양 형태별 가족관계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부양여부						
부양을 주고받음	3.21	3.06	3.17	3.20	3.24	3.21
부양을 주고받지 않음	3.01	3.00	3.05	3.00	3.00	3.07
신체적 부양						
부양을 주고받음	3.31	3.00	3.30	-	3.39	3.31
부양을 주고받지 않음	3.21	3.06	3.17	3.20	3.23	3.20
정서적 부양						
부양을 주고받음	3.17	2.81	3.14	3.27	3.17	3.16
부양을 주고받지 않음	3.24	3.21	3.21	3.16	3.30	3.24
경제적 부양						
부양을 주고받음	3.15	-	3.30	-	3.63	3.17
부양을 주고받지 않음	3.21	3.06	3.17	3.20	3.22	3.21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나. 제 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1) 전반적 가족 삶의 만족도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10개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즉,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또는 친인척 관계,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전반적 가족생활만족도 등이다. 응답은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등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가족 삶의 만족도는 5점 중 3.30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전반적인 가족 삶의 만족도는 부부가족이 3.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노인가족(3.28점), 기타 가족(3.21점) 순으로 높았다. 한부모가족(3.00점)과 1인 가족(2.74점)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전반적인 가족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따라서 가족 삶의 만족도는 부부중심의 핵가족과 노인가족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족과 1인 가족은 낮아서 해체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의 삶을 구성하는 지표별로 만족도 수준을 보면,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이웃 또는 친인척 관계(3.36점), 건강수준(3.35점),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3.34점), 가족원 갈등문제 해결(3.31점)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의식주 수준(3.15점), 가사노동분담정도(3.11점),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2.91점),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2.86점)은 가족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여기서 가사노동분담정도 및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가사부담을 여성이 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정에서의 여성은 배우자 및 자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루는 성취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의 부족도 가족중심의 휴식 및 여가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서 주 5일제 근무제 확산과 함께 사회적으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유형별로는 부부가족은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3.45점), 건강수준(3.42점),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3.39점), 이웃 또는 친인척 관계(3.38점), 가족원의 갈등 문제 해결(3.36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사노동분담정도(3.12점)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2.98점)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부부가족은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부모가족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에 대한 만족도(3.36점)가 높은 편이었으며, 다른 지표들은 부부가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의식주 수준(2.76점),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2.59점),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2.53점)는 만족도가 낮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노인가족은 이웃 또는 친인척 관계(3.41점),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3.38점)가 높았으며,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2.87점),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2.77점)에 만족도는 낮았다. 노인가족은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지표별 만족도는 부부가족보다 낮았으나 한부모가족보다는 높았다.

〈표 8-18〉 가족유형별 가족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F값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3.39	3.16	3.28	2.99	3.25	3.34	42.306***
가사노동 분담 정도	3.12	3.06	3.11	2.99	3.15	3.11	4.197**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3.45	336	3.38	3.06	3.38	3.42	33.692***
이웃 또는 친인척 관계	3.38	3.17	3.41	3.16	3.36	3.36	32.301***
의식주 수준	3.20	2.76	3.18	2.74	3.11	3.15	81.224***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3.36	3.19	3.25	2.96	3.21	3.31	43.207***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2.93	2.59	2.77	2.49	2.79	2.86	48.258***
건강수준	3.42	3.09	3.20	2.89	3.23	3.35	56.541***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2.98	2.53	2.87	2.40	2.79	2.91	84.074***
전반적 가정생활만족도	3.36	3.00	3.28	2.74	3.21	3.30	99.752***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1)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2) **p 〈.01, ***p 〈.001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1인 가족은 전반적으로 다른 가족에 비해 지표의 만족수준이 낮았다. 그중에

서 이웃 또는 친척관계(3.16점),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3.06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2.99점), 가사노동분담정도(2.99점),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2.96점), 건강수준(2.98점), 의식주 수준(2.74점),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2.49점),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2.74점)에 만족도는 낮았다. 따라서 1인 가족은 한부모가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외에 건강, 가족관계 등에서도 애로점이 많음을 말해준다. 기타가족은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3.38점), 이웃 또는 친인척관계(3.36점)가 높았으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2.79점),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2.79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기타 가족의 지표별 만족도는 노인가족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부부의 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부부의 특성별로 가족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8-19>와 같다. 가족 삶의 만족도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3.31점,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은 3.24점으로 동부지역이 높았다. 부인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15~24세는 3.49점, 40~44세는 3.31점이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여성인 경우 고연령층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 및 사회활동의 기회가 많으며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서 가정에서 가사분담, 지위와 역할 및 중용한 것들의 성취도가 높고,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참여도 또한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즉 대학교 이상이 3.58점, 초등학교 이하가 3.08점으로 이는 연령별에서 나타나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 부인의 직업별로는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고위공무원·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단순노무직은 3.04점으로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남편연령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30~34세를 제외하고연령이 적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즉 30~34세는 3.51점, 25~29세 3.50점, 40~44세는 3.36점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별로도 부인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대학교 이상이 3.50점, 초등

학교 이하가 3.09점이었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농·어·축산업,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가족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가족 삶의 만족도는 부인과 남편의 특성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부부의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반대로 고연령층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부부의 취업형태별로는 남편이 취업(3.44점)하였거나 부부가 취업(3.33점)한 경우는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부부가 비취업(3.07점)이거나 부인이 취업(2.98점)한 경우는 가족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문화는 아직도 남성부양자 모델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 및 부부의 특성별로 가족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1인 가족을 제외한 모든 가족유형에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읍·면부지역보다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1인 가족은 지역간에 동일한 경향을 보여서 대체로 가족 삶의 만족도가 거주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는 부부가족과 노인가족이 높았으며, 읍·면부지역도 부부가족과 노인가족에서 높았다. 따라서 가족 삶의 만족도는 모든 지역에서 부부가족이 높았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 가족의 경우 낮았다.

부부가족은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다른 가족은 일정하지 않았다. 부인의 교육수준별로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 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1인 가족은 일정하지 않았다. 부인의 직업별로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족, 기타 가족은 전문직,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부인의 저연령층,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높다, 노인가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이외에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직업은 부부가족과 기타 가족은 단순노무직이었고,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계장치 조작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8-19〉 부부의 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거주지역						
동부	3.37	2.99	3.31	2.74	3.25	3.31
읍·면부	3.31	3.08	3.20	2.74	3.10	3.24
부인연령						
15~24세	3.53	-	3.40	2.33	3.46	3.49
25~29세	3.51	3.22	3.14	2.93	3.55	3.48
30~34세	3.46	2.78	3.36	2.66	3.40	3.43
35~39세	3.40	2.98	3.24	2.56	3.29	3.35
40~44세	3.34	2.94	3.40	2.85	3.46	3.31
부인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5	2.87	3.13	2.66	3.07	3.08
중학교	3.20	2.91	3.23	2.89	3.19	3.17
고등학교	3.34	3.10	3.27	2.73	3.33	3.31
대학교 이상	3.61	3.13	3.51	2.85	3.55	3.58
부인의 직업[2]						
고위공무원관리직	3.37	-	3.00	-	-	3.34
전문직	3.71	3.50	3.75	2.53	3.83	3.70
준전문직	3.53	3.32	3.55	2.99	3.54	3.51
사무직	3.51	3.02	3.42	3.36	3.56	3.48
서비스·판매직	3.23	2.92	3.24	2.82	3.02	3.18
농·어·축산업	3.24	3.13	3.14	2.87	3.40	3.21
기능직	3.18	3.01	3.58	2.34	3.40	3.20
기계장치조작원	3.28	2.90	3.09	2.33	3.16	3.21
단순노무	3.12	2.93	3.10	2.46	2.91	3.04

남편의 연령별로는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및 기타 가족은 연령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부부가족과 노인가족은 일정하지 않았다. 남편의 교육수준별로는 부부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 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한부모가족, 1인 가족은 일정하지 않았다. 남편의 직업별로는 부부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은 전문직,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가족유형별로 남편의 교육수준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된다. 기타 가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이외에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한부모가족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 삶의 만족도가 낮은 직업은 한부모가족이 농·어·축산업인 것을 제외하고, 다른 가족은 공통적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부부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족 삶의 만족도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은 남편이 취업한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 가족은 부부가 취업한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가족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취업형태는 1인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형태에서 부인이 취업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 가정에 전형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19〉 계속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남편연령						
15~24세	3.36	-	-	-	4.00	3.42
25~29세	3.52	-	3.30	-	3.43	3.50
30~34세	3.54	4.00	3.37	2.78	3.39	3.51
35~39세	3.41	4.00	3.22	2.61	3.39	3.38
40~44세	3.39	3.39	3.31	2.24	3.24	3.36
남편의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0	3.13	3.14	2.64	3.12	3.09
중학교	3.20		3.17	2.49	3.18	3.17
고등학교	3.32	2.78	3.28	2.82	3.27	3.29
대학교 이상	3.53	3.57	3.40	2.90	3.44	3.50
남편의 직업[2]						
고위공무원·관리직	-	-	-	-	-	-
전문직	3.70	-	3.70	3.32	3.75	3.70
준전문직	3.50	3.45	3.34	3.04	3.26	3.46
사무직	3.53	3.49	3.49	2.98	3.54	3.52
서비스·판매직	3.34	4.00	3.30	3.08	3.24	3.31
농·어·축산업	3.22	2.00	3.17	2.99	3.23	3.20
기능직	3.32	3.39	3.33	2.68	3.37	3.31
기계장치·조작원	3.29	-	3.27	2.83	3.38	3.29
단순노무	3.16	-	3.11	2.44	3.09	3.10
부부의 취업여부						
부부취업	3.33	3.31	3.30	4.00	3.41	3.33
남편취업	3.45	3.41	3.35	3.00	3.47	3.44
부인취업	2.98	2.69	3.02	-	2.89	2.98
부부비취업	3.08	-	3.00	3.00	3.14	3.07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3) 가족 및 경제적 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가족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를 보면 <표 8-20>과 같다. 가구주의 장남(장녀) 여부에 따른 가족 삶의 만족도는 장남(장녀)이 3.31점, 차남(차녀) 이하가 3.32점으로 차남(차녀)인 경우 약간 높았다. 가구주의 배우자는 차녀(차남) 이하인 경우가 3.32점으로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장녀(장남)는 3.30점으로 약간 낮았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가족 삶의 만족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동거하는 경우 3.28점, 비동거는 3.30점으로 시부모님과 비동거하는 경우가 가족 삶의 만족도가 약간 높았다.

〈표 8-20〉 가족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 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가구주의 장남(장녀) 여부						
장남(장녀)	3.36	2.94	3.27	2.81	3.20	3.31
차남(차녀) 이하	3.36	3.09	3.28	2.77	3.28	3.32
배우자의 장녀(장남) 여부						
장녀(장남)	3.34	2.97	3.28	2.86	3.25	3.30
차녀(차남) 이하	3.37	3.00	3.29	2.80	3.29	3.32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	3.28	2.00	3.32	-	3.16	3.28
비동거	3.36	3.00	3.12	2.74	3.25	3.30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가족특성 및 가족유형별로 가족 삶의 만족도를 보면 가구주가 차남(차녀) 이하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가족형태는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이었으며, 부부가족은 차이가 없었으며, 1인 가족은 가구주가 장남(장녀)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가구주 배우자가 차녀(차남) 이하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이었

고, 1인 가족은 배우자가 장녀(장남)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노인가족을 제외하고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족, 기타 가족 등은 시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에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즉 핵가족 형태에서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말해준다.

가구주가 차남(차녀) 이하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가족문화에서 차남은 장남에 비해 가정 대소사를 비롯하여 부모님 부양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배우자의 경우도 차녀 이하인 경우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출산 순위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나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확대가족인 노인가족을 제외하고 다수의 가족형태에서 시부모와 비동거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노부모 부양이 가정생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특성은 가족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경제적 특성별로 가족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21 참조).

재산(동산+부동산)과 가족 삶의 만족도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주택소유형태가 전세, 자가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 높았다.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가족의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경제력과 가족 삶의 만족도는 관련성이 높음을 말해 준다.

경제적 특성 및 가족유형별로 가족 삶의 만족도를 보면, 재산이 많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가족형태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으로 나타났고, 1인 가족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소득과 가족 삶의 만족도는 모든 가족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가족 삶의 만족도는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와 전세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족형태는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가족이었고, 부부가족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도와 가족 삶의 만족도는 모든 가족 형태에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만족도 수준은 다른 가족형

태에 비해서 1인 가족(2.98점)과 한부모가족(3.34점)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표 8-21〉 경제적 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동산+부동산						
없음	3.12	2.73	2.74	2.65	2.97	2.99
100백만원 미만	3.28	2.94	3.21	2.64	3.05	3.20
200백만원 미만	3.39	3.27	3.21	3.06	3.34	3.35
300백만원 미만	3.50	3.41	3.40	3.00	3.41	3.47
300백만원 이상	3.63	3.41	3.49	3.26	3.51	3.59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3.04	2.74	2.98	2.61	2.69	2.87
200만원 미만	3.18	3.02	3.16	2.69	3.01	3.12
300만원 미만	3.33	3.05	3.28	3.08	3.21	3.30
300만원 이상	3.53	3.47	3.42	3.27	3.57	3.52
주택소유형태						
자가	3.39	3.14	3.29	2.83	3.29	3.34
전세	3.41	3.07	3.24	2.88	3.16	3.35
전·월세	3.11	2.78	3.21	2.61	2.75	3.00
월세	2.92	2.89	3.11	2.45	2.83	2.78
기타	3.40	2.70	3.17	2.69	3.08	3.28
경제적 자립도						
자립함	3.56	3.34	3.47	2.98	3.52	3.53
보통	3.36	3.22	3.29	2.93	3.32	3.33
자립하지 못함	3.05	2.77	3.00	2.54	2.87	2.96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4) 결혼 및 자녀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가족 삶의 만족도는 결혼시기, 기간 및 자녀특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 요인에 따라 가족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혼연령과 가족 삶의 만족도를 보면 초혼연령이 25~29세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는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34세가 3.30점으로 높았으며,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층은 35~39세이었다. 따라서 초혼연령에 따른 가족 삶의 만족도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모든 가족형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기간에 따른 가족 삶의 만족도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가족주기상 가족형성기 및 확대기에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족형태별로는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가족형태는 부부가족, 기타 가족이었고, 1인 가족은 결혼기간이 길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외의 가족형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특성에 따른 가족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부부의 경우, 가족주기상으로는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부터 확대기의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22〉 결혼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초혼연령						
15~24세	3.32	3.00	3.26	2.72	3.22	3.25
25~29세	3.44	2.95	3.35	2.80	3.24	3.39
30~34세	3.39	3.01	3.35	2.75	2.97	3.30
35~39세	3.05	4.04	3.59	2.63	3.00	3.11
40~44세	3.00	-	3.00	3.60	4.00	3.25
결혼기간						
10년 미만	3.46	2.91	3.27	2.64	3.39	3.42
20년 미만	3.38	2.90	3.34	2.66	3.14	3.32
20년 이상	3.29	3.02	3.27	2.75	3.12	3.22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자녀가치관과 남아선호관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수 및 아들수가 가족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수와 가족 삶의 만족도는 자녀가 1명도 없는 경우 3.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 3명 이상(3.28점)인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자녀가치관이 선택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녀 유무가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삶의 질이 낮은 것은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가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기타 가족에서 나타나며, 노인가족, 1인 가족은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기타 가족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서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8-23〉 출산특성별 가족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자녀수						
없음	3.63	3.32	3.52	2.85	3.72	3.59
1명	3.38	3.07	3.15	2.75	3.18	3.32
2명	3.38	2.87	3.36	2.71	3.37	3.35
3명 이상	3.32	3.04	3.18	2.83	3.16	3.28
아들유무						
없음	3.47	2.92	3.28	2.71	3.32	3.40
있음	3.36	2.95	3.30	2.81	3.32	3.33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아들유무와 가족 삶의 만족도를 보면 아들이 없는 경우(3.40점)가 아들이 있는 경우(3.33점)보다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아들유무가 가족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서 남아선호가치관이 약화되는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형태별로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들

이 없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족형태는 부부가족이었으며, 기타 가족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은 아들이 있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남아선호가치관이 가족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가족부양 형태별 가족 삶의 만족도

가족부양여부에 따라 가족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면 <표 8-24>와 같다. 부양여부에 따른 가족 삶의 만족도는 부양을 주고 받는 경우가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부양여부가 가족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기타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형태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신체적 부양과 가족 삶의 만족도는 신체적 부양을 주고받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부부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의 경우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한부모가족과 기타 가족은 부양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에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즉,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서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자원의 축소로 부양의 가능성이 낮아진데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경제적 부양을 주고받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한부모가족과 기타 가족에서 나타나며, 부부가족은 동일하였고, 노인가족과 1인 가족은 오히려 경제적 부양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경제적 부양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체적 부양과 경제적 부양에 비해 정서적 부양의 경우는 주고받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정서적 부양이 신체적 부양, 경제적 부양만큼 가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형태별로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적 부양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에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가족형태는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기타 가족이었으며, 노인가족과 1인 가족은 정서적 부양을 주고받는 경우에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아서 정서적 부양이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서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표 8-24〉 가족부양 형태별 가족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전체
부양여부						
부양을 주고받음	3.38	3.02	3.28	2.78	3.21	3.32
부양을 주고받지 않음	3.01	2.88	3.19	2.59	3.36	2.92
신체적 부양						
부양을 주고받음	3.50	2.93	3.41	3.00	3.10	3.37
부양을 주고받지 않음	3.37	3.02	3.28	2.77	3.22	3.31
정서적 부양						
부양을 주고받음	3.34	3.00	3.28	2.82	3.14	3.27
부양을 주고받지 않음	3.39	3.04	3.27	2.67	3.28	3.35
경제적 부양						
부양을 주고받음	3.37	3.22	3.25	2.63	3.49	3.34
부양을 주고받지 않음	3.37	3.01	3.28	2.78	3.21	3.31
(분석대상수)	(8400)	(607)	(1057)	(414)	(587)	(11,219)

주: 만족도는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으로 측정되며, 평균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다.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가족, 1인 가족, 기타 가족 등 5개의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한부모 가족과 1인 가족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개별 가족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통계적인 의미가 떨어지므로 기타 가족에 함께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족, 노인가족, 기타 가족 등 3개 가족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고 전체 가족과 비교하였다.

1)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25>와 같다. 전체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결정 요인은 경제요인에서는 가구총소득이었고, 결혼요인으로는 초혼연령, 부부관계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이해도,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 성생활,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문화생활 등이었고, 자녀관계 요인에서는 자녀와의 대화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자녀가 부모의 의견 및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등이었다(Wald 검정: p=.057, p=.081, p=.000, p=.002, p=.000, p=.000, p=.000, p=.000, p=.000, p=.000, p=.000). 즉 전체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가구 총소득이 높고, 초혼연령이 낮은 경우 다른 말로 하면 결혼 기간이 오래된 경우, 배우자의 이해도,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 성생활에 만족할 때, 또한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및 문화생활에 만족할 때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정도, 문화생활에 만족할 때, 자녀가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만족할 때에도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여기서 가구 총소득은 가족관계에 비례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초혼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가족주기별로 볼 때 중장년층의 경우 가족확대기 또는 확대완료기로 가족관계가 안정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간의 대화, 이해도, 공유하는 시간, 문화 및 소비생활 등은 부부와 자녀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체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 결혼 시기, 부부관계 요인, 자녀관계 요인 등이 주요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부부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 가족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유의한 요인으로는 가구총소득, 초혼연령, 배우자의 이해도,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 성생활,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문화생활, 자녀와의 대화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자녀가 부모의 의견 및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등이었다(Wald 검정: p=.072, p=.077, p=.000, p=.001, p=.000, p=.000, p=.000, p=.000, p=.000, p=.000, p=.000).

이와 같은 결과는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부가족의 경우 가구 총소득 같은 경제적 요인, 초혼연령에 따라 가족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생

활양식 등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부부와 자녀관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전체 가족 및 부부가족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부부의 사회학적 요인인 부인교육수준이었고, 가족부양 요인으로는 신체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요인 중 배우자의 이해도, 성생활,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문화생활 등이었고, 자녀관계 요인으로는 자녀와의 대화정도, 문화생활, 자녀가 부모의 의견 및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등이었다(Wald 검정: p=.046, p=.025, p=.000, p=.015, p=.007, p=.001, p=.000, p=.005, p=.003, p=.000). 즉 노인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과 신체적으로 부양을 주고받는 경우, 부부와 자녀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부인의 교육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관련성은 교육수준이 직업 및 경제수준과 관련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부인의 교육수준은 가족관계에 비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가족간에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신체적 부양을 통하여 가족간에 신뢰도와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노인부부 및 노인이 1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인가족의 경우는 전체 가족, 부부가족과 공통적으로 부부와 자녀관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부인의 교육수준 같은 사회적 배경요인, 가족간의 부양 교류인 신체적 부양 여부 등이 노인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타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결정 요인은 전체 가족 및 다른 가족 유형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거주지역, 부인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등이었고, 가족특성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장녀여부, 부부관계 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의 이해도,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등이며, 자녀관계 요인으로는 자

녀와의 대화정도, 문화생활, 자녀가 부모의 의견 및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등이었다(Wald 검정: p=.069, p=.022, p=.002, p=.051, p=.000, p=.034, p=.033, p=.006, p=.003, p=.006, p=.083). 따라서 기타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인의 연령이 낮은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배우자의 출생순위가 차녀 이하인 경우, 부부와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부의 거주지역이 동부지역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대체로 도시지역이 농촌에 비해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고, 교통 시설이 발달하여 가족간에 교류가 빈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인의 연령이 낮을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이들 연령층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활동도 활발하여 고연령층에 비해서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가족관계에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남편의 교육수준은 직업 및 경제수준과 관련이 높아서 가족관계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배우자가 장녀인 경우 보다 차녀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남성의 경우는 장남이 가족을 책임지고, 대소사를 결정하는 등 가족관계의 응집력이 높은 데 반해 여성은 출생순위에 따른 역할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의 출생순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기타 가족은 한부모 가족, 1인 가족 등의 해체가족을 포함하여 형제·자매·친척 등과 함께 거주하는 기타 1세대, 기타 2세대, 기타 3세대 이상의 가족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역, 부인 연령, 남편 교육수준 등의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족특성 요인으로 배우자의 장녀 여부와 부부와 자녀관계를 구성하는 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표 8-25〉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부부가족			노인가족		
	B	S.E.	Wald	B	S.E.	Wald
부부특성관련 변수						
거주지역	.124	.135	.835	.303	.393	.595
부인연령	.010	.021	.245	.070	.069	1.014
부인교육수준	.243	.164	2.207	1.055*	.529	3.971
혼전취업여부	.155	.097	2.571	.180	.377	.228
남편연령	-.024	.018	1.799	-.008	.069	.015
남편의 교육수준	.095	.177	.285	-.346	.542	.408
남편의 직업	.098	.116	.703	-.536	.486	1.219
가족특성관련 변수						
가구주의 장남여부	.003	.103	.001	-.115	.332	.119
배우자의 장녀여부	-.035	.107	.105	-.397	.382	1.082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1.531	1.019	2.256	.312	.631	.244
경제관련 변수						
재산	.0003	.000	.427	.001	.001	2.417
가구총소득	.001#	.000	3.234	.0003	.001	.000
주택소유형태	.069	.101	.468	.398	.504	.623
주관적 경제자립도	.017	.098	.029	-.052	.356	.021
결혼·출산관련 변수						
초혼연령	-.021#	.012	3.119	-.051	.042	1.506
결혼기간	.008	.015	.297	-.053	.059	.821
자녀수	.051	.075	.464	.293	.249	1.385
아들유무	-.131	.124	1.131	-.286	.468	.373
가족부양관련 변수						
신체적부양여부	-.647	.581	1.242	2.335*	1.044	5.005
정서적부양여부	-.134	.104	1.656	-.155	.357	.189
경제적부양여부	-.213	.280	.581	-.652	3.643	.032
부부관계 변수						
배우자의 이해도	1.180***	.100	139.181	1.506***	.379	15.773
공유하는 시간	.340**	.102	11.196	.059	.360	.026
성생활	.825***	.100	68.506	.932*	.384	5.896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164	.100	2.699	.029	.365	.006
배우자의 소비성향	.505***	.098	26.684	.967**	.359	7.268
부부간의 대화	1.058***	.100	110.838	1.282**	.378	11.475
부부간의 문화생활	.813***	.105	59.878	1.774***	.373	22.568
부모자녀관계 변수						
대화정도	1.009***	.105	91.774	1.071**	.383	7.808
문화생활	.747***	.102	53.826	1.167**	.387	9.094
부모의 의견 및 기대 충족	1.598***	.098	264.185	1.715***	.333	26.553
상수항	-4.585***	.675	46.129	-8.448**	2.821	8.970
-2 Log L		3075.395			277.840	
Model Chi-Square		2411.401			300.177	
(유의수준)		.000			.000	
자유도		31			31	
사례수		3678			469	

〈표 8-25〉 계속

변수	기타 가족			전체		
	B	S.E.	Wald	B	S.E.	Wald
부부특성관련 변수						
거주지역	.257#	.930	.076	.173	.123	1.994
부인연령	-.332*	.183	3.304	.003	.019	.025
부인교육수준	-3.807	1.664	5.234	.224	.151	2.209
혼전취업여부	-.193	.763	.064	.140	.091	2.358
남편연령	.012	.140	.008	-.022	.017	1.640
남편의 교육수준	5.117**	1.678	9.297	.180	.163	1.224
남편의 직업	-1.307	1.086	1.448	.039	.110	.124
가족특성관련 변수						
가구주의 장남여부	-.183	.806	.052	.027	.095	.082
배우자의 장녀여부	-1.788#	.918	3.793	-.128	.099	1.661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101	.838	.014	-.235	.146	2.597
경제관련 변수						
재산	-.001	.001	1.162	.0003	.000	.720
가구총소득	.003	.003	1.595	.001#	.000	3.628
주택소유형태	.453	1.104	.169	.112	.096	1.348
주관적 경제자립도	.146	.769	.036	.019	.091	.046
결혼·출산관련 변수						
초혼연령	.016	.124	.017	-.019#	.011	3.047
결혼기간	.151	.151	.999	.011	.014	.613
자녀수	-.567	.503	1.273	.065	.069	.889
아들유무	-.397	.797	.248	-.164	.115	2.029
가족부양관련 변수						
신체적부양여부	-2.918	7.609	.147	-.131	.500	.069
정서적부양여부	.303	.728	.174	-.132	.096	1.887
경제적부양여부	-1.681	3.415	.242	-.248	.274	.818
부부관계 변수						
배우자의 이해도	3.655***	.914	15.993	1.234***	.094	172.729
공유하는 시간	.094	.782	.014	.291**	.095	9.430
성생활	.712	.767	.861	.834***	.094	79.307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1.840*	.866	4.517	.099	.094	1.124
배우자의 소비성향	1.777*	.833	4.554	.536***	.091	34.661
부부간의 대화	2.132**	.775	7.557	1.077***	.094	131.057
부부간의 문화생활	-.314	.774	.165	.831***	.098	72.287
부모자녀관계 변수						
대화정도	2.634**	.897	8.625	1.017***	.098	106.708
문화생활	2.374**	.864	7.552	.793***	.095	69.498
부모의 의견 및 기대 충족	1.212#	.698	3.009	1.571***	.091	296.569
상수항	1.486	5.110	.085	-4.616***	.630	53.615
-2 Log L		80.921			3524.303	
Model Chi-Square		137.688			2762.134	
(유의수준)		.000			.000	
자유도		31			31	
사례수		153			4300	

주: # p<.1, * p<.05, ** p<.01, *** p<.001

2) 가족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가족유형별로 가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26>과 같다.

전체 가족의 삶 만족도의 결정 요인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부인연령, 부인의 현 취업여부, 남편 연령 등이었고, 경제요인으로는 가구총소득, 주택소유형태, 주관적 경제자립도 등이었다. 가족부양 요인으로는 정서적 부양 여부이었고, 가족관계 요인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이었고, 가정생활 관련 요인으로는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었다(Wald 검정: p=.093, p=.001, p=.062, p=.000, p=.085, p=.000, p=.022, p=.000, p=.000, p=.000, p=.000, p=.000, p=.000, p=.001, p=.008, p=.003). 즉 전체 가족 삶의 만족도는 부인의 연령층이 높고, 부인이 전업주부이고, 남편연령층은 낮은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총소득이 높은 경우, 자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경우, 가족간에 정서적으로 부양을 주고 받는 경우,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만족하는 경우에 전체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의 만족도가 높을 때,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의 만족도가 높을 때 전체 가족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기서 부인 연령이 높은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가족주기로 볼 때 가족확대완료기와 축소기에 접어들수록 가족관계가 성숙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자립 능력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부인이 취업한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 가족구조상 여성 혼자서 자녀양육, 가사 및 직장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서의 역할 소홀로 인하여 가족원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에 반해 남편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역할 차이에서도 기인될 수 있으며 또한 젊은 연령층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가족의 부양부담이 적고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적은 데서 오는 결과로 생각된다. 가구 총소득 및 주관적 경제자립도 등의 경제력은 가족 삶의 만족도와 비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공간은 가족원의 휴식과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가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가족간의 정서적 부양을 포함하여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은 가족 삶의 만족도에 비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체 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부의 인구사회적 배경, 경제적 요인, 가족 부양, 가족관계, 가정생활 관련 요인 등이 주요 변수들로 나타났다.

부부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 가족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는 현 취업여부, 남편연령, 가구총소득, 주택소유형태, 주관적 경제자립도, 정서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었다(Wald 검정: p=.004, p=.050, p=.000, p=.049, p=.004, p=.038, p=.000, p=.000, p=.000, p=.000, p=.000, p=.000, p=.003, p=.038, p=.011).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가족형태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부부가족의 경우 부부의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 부양, 가족관계 등이 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관련 요인들이 가족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전체 가족 및 부부가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특성 요인으로는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이었고, 가족부양 요인은 신체적 부양 여부, 가족관계

요인으로는 부부관계, 가정생활 관련 요인은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 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었다(Wald 검정: p=.020, p=.080, p=.000, p=.021, p=.041, p=.000, p=.061, p=.091, p=.099). 즉, 노인가족은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가족간에 신체적 부양을 주고받는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가족의 경우는 전체 가족, 부부가족과 공통적으로 가족생활 관련 요인 중에서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 가족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가사노동분담정도가 포함되고 있다. 또한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 같은 가족특성 요인, 가족간의 부양 교류인 신체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등이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도의 결정 요인은 전체 가족 및 다른 가족 유형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등이었고, 가족특성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장남여부, 배우자의 장녀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이며, 경제요인으로는 재산, 가구총소득, 주관적 경제자립도 등이었다. 결혼·출산 요인으로는 자녀수, 아들유무이었고, 가족부양 요인으로는 정서적 부양여부, 가족생활 관련 요인은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 포함되었다((Wald 검정: p=.000, p=.004, p=.010, p=.050, p=.023, p=.023, p=.097, p=.016, p=.087, p=.014, p=.053, p=.045, p=.090, p=.008, p=.017, p=.093, p=.099). 기타 가족은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은 높은 경우, 가구주가 차남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차녀 이하인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재산이 적은 경우, 가구총소득이 높은 경우, 주관적 경제자립도가 높은 경우, 자녀수가 적은 경우, 아들이 없는 경우 가족간에 정서적 부양을 주고받는 경우, 부부관계,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가정에서의 지위

와 역할,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재산이 적은 경우 가족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의 차이보다 연령, 가족 특성, 결혼 기간 등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가구주가 장남인 경우보다 차남 이하인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은 장남보다 차남이 부모와 형제에 대한 부양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출생순위에 따른 역할 부담은 없으나 그럼에도 장녀가 차녀보다 책임감이 부여되는 데서 오는 결과로 설명된다. 그리고 시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시부모로부터 자녀양육 및 가사 등 여러 가지 부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정서적 교류로 인하여 가족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녀가치관 및 남아선호관이 약해지면서 자녀수가 많은 경우 양육부담 등으로 오히려 가족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반영하며, 아들유무 또한 부모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부인교육수준, 남편교육수준, 가족특성에서는 가구주의 장남여부, 배우자의 장녀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경제 요인으로 재산, 가구총소득, 주관적 경제자립도 등이었다. 결혼·출산 요인으로는 자녀수, 아들유무, 가족부양 요인으로 정서적 부양 여부, 가족관계, 그리고 가정생활 관련 요인으로는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으로 나타났다.

〈표 8-26〉 가족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부부가족			노인가족		
	B	S.E.	Wald	B	S.E.	Wald
부부특성관련 변수						
거주지역	-.087	.112	.604	.249	.312	.635
부인연령	.028	.018	2.455	.028	.056	.241
부인교육수준	-.162	.132	1.499	.368	.374	.967
현 취업여부	-.233**	.082	8.087	-.197	.290	.461
남편연령	-.030#	.015	3.851	.015	.050	.087
남편의 교육수준	.173	.140	1.518	-.441	.401	1.211
남편의 직업	.088	.103	.741	.074	.367	.041
가족특성관련 변수						
가구주의 장남여부	-.037	.087	.181	-.018	.257	.005
배우자의 장녀여부	-.100	.090	1.234	-.247	.295	.700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198	.711	.077	1.336*	.575	5.411
경제관련 변수						
재산	.0003	.000	.098	-.001	.001	1.811
가구총소득	.001***	.000	22.620	.002	.001	2.704
주택소유형태	.168*	.085	3.888	-.306	.350	.766
주관적 경제자립도	.242**	.083	8.410	.308	.272	1.278
결혼·출산관련 변수						
초혼연령	-.005	.010	.292	-.013	.036	.132
결혼기간	-.005	.013	.163	-.019	.044	.186
자녀수	.001	.064	.000	-.219	.184	1.419
아들유무	-.132	.108	1.500	.616	.392	2.477
가족부양관련 변수						
신체적부양여부	-.091	.514	.031	1.267#	.724	3.060
정서적부양여부	.181*	.087	4.327	.233	.263	.782
경제적부양여부	.335	.223	2.257	-1.822	1.881	.938
가족관계 변수						
부부관계	1.064***	.085	156.539	1.015***	.269	14.197
부모자녀관계	.501***	.082	37.759	.095	.268	.126
가정생활관련 변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930***	.083	125.139	.642*	.278	5.335
가사노동분담 정도	-.030	.090	.108	-.618*	0303	4.166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482***	.090	28.970	1.663***	.278	35.858
이웃 도는 친인척 관계	.044	.085	.268	.246	.285	.747
의식주 수준	.769***	.090	72.977	.566#	.302	3.503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318***	.087	13.543	.247	.281	.774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294**	.099	8.733	.589#	.348	2.857
건강수준	.171*	.082	4.308	.417	.268	2.421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248*	.098	6.463	.575#	.349	2.714
상수항	-2.422***	.556	18.945	-5.227*	2.040	6.566
-2 Log L		4159.980			423.722	
Model Chi-Square		1917.454			242.584	
(유의수준)		.000			.000	
자유도		32			32	
사례수		3678			469	

〈표 8-26〉 계속

변수	기타 가족			전체		
	B	S.E.	Wald	B	S.E.	Wald
부부특성관련 변수						
거주지역	-1.167	.723	2.601	-.092	.101	.827
부인연령	-.014	.126	.013	.027#	.016	2.818
부인교육수준	-4.996***	1.435	12.121	-.135	.121	1.242
현 취업여부	-.778	.616	1.598	-.251**	.077	10.736
남편연령	-.088	.118	.550	-.026#	.014	3.487
남편의 교육수준	4.289**	1.470	8.514	.134	.128	1.092
남편의 직업	-.127	.870	.021	.077	.098	.635
가족특성관련 변수						
가구주의 장남여부	-1.829*	.710	6.642	-.052	.080	.429
배우자의 장녀여부	-1.451#	.741	3.835	-.119	.083	2.061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1.702*	.750	5.156	.160	.122	1.720
경제관련 변수						
재산	-.002*	.001	5.156	.0003	.000	.181
가구총소득	.003#	.002	2.749	.001***	.000	25.031
주택소유형태	.931	.841	1.225	.139#	.081	2.957
주관적 경제자립도	1.579*	.657	5.771	.275***	.077	12.774
결혼·출산관련 변수						
초혼연령	.029	.067	.180	-.004	.009	.203
결혼기간	.007	.086	.007	-.005	.012	.158
자녀수	-.696#	.406	2.934	-.037	.057	.417
아들유무	-2.016*	.816	6.102	-.095	.100	.905
가족부양관련 변수						
신체적부양여부	-1.321	4.151	.101	.318	.407	.610
정서적부양여부	1.444#	.745	3.755	.182*	.080	5.215
경제적부양여부	.699	2.730	.066	.242	.217	1.247
가족관계 변수						
부부관계	1.256*	.627	4.010	1.037***	.079	173.862
부모자녀관계	1.037#	.611	2.881	.501***	.076	43.896
가정생활관련 변수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1.958**	.734	7.114	.890***	.077	133.035
가사노동분담 정도	.475	.611	.604	-.069	.083	.686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822	.811	1.029	.570***	.082	47.821
이웃 도는 친인척 관계	.624	.697	.801	.083	.079	1.091
의식주 수준	.582	.719	.656	.715***	.084	73.105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753	.643	1.372	.324***	.080	16.398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1.657*	.693	5.710	.304**	.092	10.864
건강수준	1.125#	.670	2.823	.202**	.076	7.004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1.234#	.749	2.719	.272**	.091	8.899
상수항	1.493	3.854	.150	-2.506***	.516	23.581
-2 Log L		107.415			4801.887	
Model Chi-Square		127.227			2177.254	
(유의수준)		.000			.000	
자유도		32			32	
사례수		153			4300	

주: # p<.1, * p<.05, ** p<.01, *** p<.001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1. 논의

우리나라 가족은 산업화, 도시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그리고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가족부양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 즉 가족구조의 축소, 가족기능 약화, 가족해체 증가 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족변화로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족세대가 단순화되며, 인구변동으로 1인 가족 및 노인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해체로 인하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가족이 야기하는 사회적 역기능 현상은 가족의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향후 엄청난 사회 부담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가족생활의 만족도는 개별 가족의 특성과 생활조건, 생활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형태 및 가족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수준을 진단하고 건강가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및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및 가족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유형별로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가구총소득, 초혼연령, 배우자의 이해도, 배우자와 공유하는 시간, 성생활, 배우자의 소비성향, 부부간의 대화, 부부간의 문화생활, 자녀와의 대화정도, 자녀와의 문화생활, 자녀가 부모의 의견 및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등으로 검증되었다. 즉 전체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구성하는 요인 외에 경제요인, 결혼시기 등에 따라서도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부부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체 가족과 동일하게 검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족 형태의 상당수가 부부가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노인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다른 가족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부관계 요인으로는 배우자의 이해도, 성생활, 소비성향, 대화, 문화생활, 자녀관계 요인으로 대화정도, 문화생활, 부모의 의견 및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등이 검증되었다. 또한 부인의 교육수준 같은 사회적 요인, 가족간의 신체적 부양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서 전체 가족과 부부가족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기타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부부관계 요인으로 배우자의 이해도,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소비성향, 대화, 자녀관계 요인으로 대화정도, 문화생활, 부모의 의견 및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정도 등이 파악되었으며, 이외에도 거주지역, 부인연령, 남편의 교육수준 등의 사회적 요인, 배우자의 장녀여부 등이 기타 가족의 가족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가족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족의 삶 만족도 결정에 유의한 요인은 부인연령, 부인의 현 취업여부, 남편 연령, 가구총소득, 주택소유형태, 주관적 경제자립도, 정서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원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으로 검증되었다. 즉 전체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요인 외에 부부의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요인, 가족관계 등에 따라서도 가족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족형태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부부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관련 요인들 외에 부부의 인구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족 부양, 가족관계 등이 가족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가족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족생활 관련 요인으로는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의식주 수준,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배우자의 가사노동분담정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 같은 가족특성 요인, 가족간의 부

양 교류인 신체적 부양 여부, 부부관계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가족생활 관련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건강수준,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 파악되었으며, 이외에도 부부의 교육수준 등의 사회적 요인, 가구주의 장남여부, 배우자의 장녀여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같은 가족특성 요인, 재산, 가구총소득, 주관적 경제자립도 등의 경제요인, 자녀수, 아들유무 등의 출산 요인, 가족부양 요인으로는 정서적 부양여부 등이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상기한 가족관계 만족도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구총소득이 낮은 경우, 초혼연령이 높은 경우 즉,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을 구성하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구성원간의 대화 등의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공유하는 시간, 부부간의 성생활,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원활한 관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가족의 경제수준, 가족의 결혼·출산과 관련이 높은 가족주기상의 시기 등도 가족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 가족 및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가족의 안정성차원에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형성을 통한 부부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가부장제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남성위주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전통적 행위를 지양하고,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과 지위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저연령층, 저소득층의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해체의 예방 차원에서 배우자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부교육이나 상담 등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이 지역사회내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과거의 수직적, 소유적, 종속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인격적, 독립적인 관계 정착을 위한 가족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부모-자녀 모델을 제시하고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저연령층의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을 전후로 부모-자녀관계의 정립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이 개발 및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신체적 부양을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가족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노인가족의 경우는 부부관계, 노인수발 등이 가족관계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노인부부를 중심으로 자녀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가족의 경우는 3세대간의 가족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가족원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가족의 가족관계 제고를 위한 모색은 노부모와 자녀, 손자녀간의 적절한 관계 형성도 중요하나 노부모의 보호수발 및 부양 부담 등이 원활할 때 가능하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부모와 자녀, 손자녀 관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노부모-자녀간에 상호적 부양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지원 망을 형성하여 가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기관을 중심으로 노인부부,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가족의 참여를 제고한다.

셋째, 기타 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인연령이 많은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족은 한부모가족, 1인가족, 기타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부부가족에 비해서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기타 가족원의 관계가 가족해체 과정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갈등과 가정 여건, 역할 등으로 불안정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기타 가족, 여성이 고연령층인 기타 가족의 경우는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기타 가족의 가족관계 제고를 위하여 한부모가족 및 1인 가족은 가족해체 과정에서 전문상담의 개입이 필요하며 사후적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하면서 약화된 가족의 정서적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 지역과 고연령층의 여성 가구주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단계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가족단위의 전문적 상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 삶의 만족도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족과 부부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의식주 수준을 비롯하여 건강수준, 가족간의 대화 및 친밀도, 가족원간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과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아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부인의 취업상태, 남편 연령, 경제수준, 정서적 부양 상태, 가족관계 등도 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및 부부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족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적 지원,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단위의 문화와 여가 활동 등 가정생활 향상을 위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의식변화, 생활기대 수준의 향상 및 고용기회의 증가 등으로 맞벌이가족이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족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역할 불평등에서도 일부 기인되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족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양성평등적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적인 가족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가사와 양육, 가족 돌봄 노동에 대해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위하여 보육인프라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가족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내의 가

족단위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을 통해 의사소통 향상과 문제해결방안 향상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부가족의 경우 해체가족에 비해 생계부양자가 있다는 여건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생활의 만족도와 비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 정도, 또한 가족간의 대화 및 친밀도,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과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높을 때 노인가족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시부모와 동거, 신체적 부양 상태, 부부관계 등도 노인가족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높았다. 이는 노인부부가족의 경우 부부관계, 문화 및 여가생활, 노인수발 보호 등이 노인부부가족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노인과 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3세대 노인가족의 경우 노부모와 자녀, 손자녀와의 복합적인 가족관계와 노부모 부양부담 등으로 인해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부부가족과 3세대 노인가족의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부부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 증진, 노인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노인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의 제고를 위해서 지역사회내의 기관을 중심으로 노인부부교육, 노부모-자녀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고 노인부부, 3세대 노인가족을 위한 세대간 통합적인 여가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사회보험을 내실화하고 저소득층 노인가족을 위하여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수발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가사도우미 등의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내의 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며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의 건강수준을 비롯하여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 가정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을 때 비례적으로 높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 가구주와 배우자의 장남여부, 시부모와의 동거, 경제수준, 자녀수 및 아들유무, 정서적 부양 상태, 가족관계 등도 기타 가족의 삶의 만족도와 높은 관련을 보였다. 기타 가족은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의 해체가족과 기타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포함하여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직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경제요인, 정서적 부양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 가족원의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타 가족의 삶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적으로 해체가족을 문제시하는 시각이 이들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해체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체가족을 다양한 가족형태로서 받아들이고 가정 및 사회에서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함께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개인적 가족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기타 가족은 가구주의 교육, 경제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서 가족의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족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가정은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능력이 떨어지므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취업중인 모자가정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부터 다양한 시간제 보육지원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자가정도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 알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이와 함께 자녀 학습, 가사, 가족원 수발을 위한 서비스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 9 장　자녀규모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제 1 절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전반부터, 여성 1인당 2.1명이라는 대체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후, 최근에 이르러 출산력 저하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초(超) 저출산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통계청, 2005; 김승권, 2004a, 2005a, 2005b; Jun K-H, 2005). 우리나라는 현재 아시아의 대만(臺灣)과 동유럽의 폴란드, 구소련의 구성공화국이던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나라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인구학 연구의 사정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자녀규모, 특히 완결 가족규모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물론 여기에는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에 사용되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들은 물론, 최근에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여 주요 정책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양성평등과 관련된 태도변수, 여성과 배우자의 취업 등 노동시장 관련변수와 가족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형성 등을 고려하여, 최근의 초저출산을 야기하는 일차적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출산력 조사의 다양한 변수, 특히 총출생아수, 출산간격, 이상자녀수 등에 대한 시계열적 정보는 2000년대 초반의 지속가능한 인구·가족정책의 수립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녀규모의 축소 또는 왜소화를 가져오는 사회경제적·정책개입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은 궁극적으로 최근에 논의되는 자녀양육비용의 고액

화(특히 자녀의 고학력화와 교육비 증대)와 여성의 노동력화(특히, 빈곤문제와 고소득 창출의 기회증대의 비동시적 공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력의 지속적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지만, 출산율의 측정문제, 특히 코호트출산율과 기간출산율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해당 코호트의 자녀규모가 일정불변(一定不變)이라고 하더라도 출산력의 템포 변동에 해당하는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은 바로 기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출산력의 측정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인구정책 특히 저출산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근 저출산과 관련된 자녀규모의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코호트별 자녀규모, 특히 완결 가족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시계열적 자녀규모의 변화를 결정하는데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등 노동참가나 양성평등에 관련되는 대체변수들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 자녀규모의 결정에 관련하는 출산간격이나 이상자녀수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둘째, 우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총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코호트 출산율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환언하면, 여기서의 관심영역은 기간 출산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역출로서의 코호트 출산율을 추정/추계하여 자녀규모의 변천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녀규모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에 궁극적으로 한국의 출산율 변천과 관련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출산력의 측정, 특히 양(quantity)과 템포(tempo)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일차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절은 최근의 저출산을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여성학 등의 이론적 관점을 간단히 요약한다. 이들 관점은 크게 ① 수요이론, ② 위험과 기회의 이론, ③ 탈물질주의 가치이론, ④ 양성평등 이론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제3절에서는 한국의 자녀규모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이론적 관점과 관련하여, 총출생아수, 출산기간, 이상자녀수 등의 자녀규모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의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제4절은 자녀규모의 변화양상이 정책적으로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최근의 출산율 저하를 코호트 출산율의 관점에서 검토하자 한다.

제 2 절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관점

출산력을 규정하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헌들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출산력 연구들 위한 모형들을 ① 구성요인의 분석, ② 중간변수, ③ 차별출산력 접근, ④ 경제학적 접근, ⑤ 인류학적 모형, ⑥ 종합적 모형(synthetic framework)으로 나누기도 한다(권태환·김두섭, 2002). 본 장의 관심이 우리나라의 자녀규모가 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가를 인구학적·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① 경제학의 수요이론, ② 사회학의 기회/위험 이론, ③ 문화인류학의 가치이론, ④ 여성학의 양성평등 이론 등 4개로 나누어 검토한다(Mcdonald, 2000, 2002, 2004).

1. 경제학적 관점-수요이론

인구학의 전통적인 구성요인분석이나 중간변수 접근방법과는 달리 경제학의 수요이론 또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녀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추가자녀의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것인가를 계산한

다(Becker, 1960; Barro & Becker, 1989; Becker, Barro, & Tamura, 1988). 이론의 핵심은 효용의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로서, 추가자녀의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커지면, 그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녀규모의 축소는 ① 자녀의 상대적 가격이 증가하거나, ② 부부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③ 타 재화 대비 자녀에 대한 부부의 효용함수가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의 수요이론은 대부분, 자녀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자녀 가격(또는 비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가령, 19세기 유럽에서 의무교육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자녀비용은 상승하였으며(Caldwell, 1982),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김승권 외, 2005a, 2005b). 자녀의 수와는 별도로 자녀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것은 자녀비용의 증대를 가져왔다. 어떤 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market)이 부모의 선택범위를 키우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녀의 직접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출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 대한 투자에서 어떤 금전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녀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금전적 비용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은 자녀에 대한 각종 금전적·비금전적 투자를 조장하고 있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직접비용은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주택비용을 포함하여, 대도시에서는 주택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저렴한 주택은 자녀양육을 위하여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녀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것의 최종적 결과는 자녀규모의 축소로 나타난다.

출산과 육아의 간접비용 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출산/육아와 취업의 양립가능성에 의존한다. 취업여성이 자녀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거나, 직장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출산·육아의 간접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이 상승하는 경우에, 자녀의 간접비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김승권, 2005a, 2005b).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에서처럼, 유급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경우 자녀의 간접비용은 다시 상승하기 마련이다. 첫째자녀의 출산을 연기하는 경우, 여성들은 여급 노동시장의

취업을 통하여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작업현장에서의 숙련도와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녀의 간접비용은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수준의 교육수준 곧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들에게 자녀의 간접비용은 감소할 수 있지만, 또한 높은 수준의 교육배경 곧 인적자본을 형성한 여성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마련이다.

부부를 포함하는 가족소득과 관련하여, 자녀규모가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여 왔지만 실질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따라서 소득수준의 저하가 자녀규모를 줄이는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반면, 소득불평등의 증대가 자녀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비용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이상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가 저소득 부부의 소득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이 저소득 부부의 저출산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이 저소득 부부에게 일차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반면에 고소득 부부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녀규모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현대사회의 저출산의 맥락을 검토할 때, 자녀비용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자녀편익은 금전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할 수 있다(김현지·주경미, 2004). 자녀편익, 또는 자녀효용은 다차원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그리 쉽게 양적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최근의 저출산과 그것의 반등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을 일별할 때, 자녀가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내재적 가치(immanent value)'라고 명명할 수 있다(김승권, 2005a). 이 경우, 자녀효용을 개념화하는 방법은 순편익 분기점(net benefit threshold), 곧 심리적 편익에서 심리적 비용을 뺀 수치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추가자녀를 가지는 경우에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이익을 계산한다. 가령 자녀비용이 상승하고 효용함수가 여타재화에 유리한 쪽으로 변하게 되면, 순편익 분기점을 마이너스가 되고, 추가자녀를 낳지 않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개연성이 커진다. 또 첫째자녀의 출산을 연기할 때, 자녀 외의 여타 재화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되어 자녀 이외의 다른 재화의 방향으로 효용함수가 변화하였다는 추리를 가

능하게 할 수 있다.

2. 사회학의 관점-위험과 기회의 이론

Kingsley Davis(1963)의 다단계 반응이론(multiple response theory)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가족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족들은 새로운 직업상황에서 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것은 사회이동 가설(social mobility hypothesis)과 유사한데, 이에 따르면 영국의 출산력 저하는 중산층의 상승과 '혼인적령기(optimal marriage age)'라는 중산층의 윤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사회학의 위험과 기회의 이론은 출산력의 수요이론에 새로운 독립변수의 추가적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수요이론의 가정은 사람들이 추가자녀의 비용과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위험이론은 자녀의 편익이나 비용은 미래의 편익이나 비용을 말하지 현재, 그 편익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자녀를 갖는 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은 장래의 생애과정(life course)을 바꿀 수도 있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많은 경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의존한다. 경제, 사회, 주변의 인간관계 등 미래에 대한 생각이 불확실하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그들은 자신들이 도달가능하다고 믿는 기회만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Beck(1999)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IMF 금융쇼크 이후 직장은 이제 평생직장이 아니다. 경제는 선순환과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취업목적의 지역간 이동은 필수적 생활사가 되고 있다(Eun K-S, 2003; 은기수, 2003).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자율은 단기간에도 상당정도 변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오르거나 내리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사회학의 위험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녀출산(상당기간 동안의 가구소득 감소, 노동시장 복귀의 불확실성, 고액의 소비지출, 피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보다는 경제적 보장에 대

한 투자(교육, 노동시장 참가지속, 장시간 노동, 저축과 주식투자 등)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위험회피는 사회적 영역 또는 주변의 대인관계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개연성은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가져다 줄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부모가 이혼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있고, 자녀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한부모가족(lone-parent family)이 탄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들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크다. 자녀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3. 문화인류학의 관점-탈물질주의 가치이론

출산력의 결정요인으로 경제학의 수요이론과 관련하여, 문화인류학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가치관의 변동은 자녀효용은 줄이고 타 재화에 대한 효용을 증대시킨다. 이것이 일어나는 경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전개된 가치관 변동의 논의는 또한 사회학적 접근방법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탈물질주의 가치이론은 제2의 인구변천(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되어왔던 이론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은 사회적·인구학적 행태의 변화는 개인적 자아실현, 개인적 선호의 만족,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전통적 권위(특히, 종교)로부터의 자유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Inglehart(1977)에 따르면, 현대의 풍요로운 사회에서 물질적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에 의하여 촉진되는데, 이 주장은 Beck이 말하는 위험사회론(risk society theory)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 탈물질주의 가치는 이혼율, 동거율, 혼외출산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남유럽의 전통적 가족주의 문화나 아시아의 유교주의 국가보다 북유럽이나 앵글로색슨 사회의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훨씬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 중에서 전통적 문화에 집착하는 사회보다 자유주의적 문화에 집착하는 사회에서 출산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민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타난다(Mcdonald, 2000, 2001).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유럽 출신은 이혼율, 동거율, 혼외출산율이 다른 이민 집단보다 낮지만 자녀규모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학의 양성평등이론은 전통적 가족주의에 의존하는 사회가 대단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고양하는 자유주의 가치관의 고양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가치를 회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저출산 체제의 영속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이 탈물질주의 가치의 만연에 기인한다는 이론과 배치되는 또 하나의 연구결과는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한국의 최근 출산력 조사결과에서도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기대자녀수 또는 이상자녀수가 대체수준인 2.1명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승권, 2005a, 2005b). 물론, 연령이 상승되면서, 기대자녀수 또는 이상자녀수가 감소하지만 여전히 실제 출산자녀수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보다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의지나 희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탈물질주의 가치가 저출산 체제의 영속화를 촉진한다는 이론은 생태학적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들이 교육수준이 높고, 세속적이고, 도시화되고, 보다 태도나 가치관이 자유주의적이면, 반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들보다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유주의적 사회가 보수주의적 사회보다 출산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저출산은 사회제도의 구조와 연관된 사회현상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제도의 역할을 보면, 그것은 경제학의 수요이론이나 사회학의 위험과 기회의 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더욱 더 분명해진다. 저출산을 설명하는데 있는데 사회구조의 역할은 여성학의 양성평등이론의 시각에서 더욱 더 분명해 질 것이다.

4. 여성학의 관점-양성평등이론

최근까지 선진국의 사회제도는 남성을 생계취업자 모형의 핵심으로 하여, 남

자는 아침에는 일터로 가고, 여자는 집에서 자녀를 돌본다고 하는 가족모형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 모형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생물학적 차이가 있으며, 남자는 가정의 생계책임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여자는 출산과 육아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1960년대 이후, 여성들은 교육과 직장에서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사회제도는 이제 고도의 양성평등에 의하여 특징지어지게 되었다.

최근 여성학의 입장에서 전개된 양성평등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선진국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은 사회제도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성평등 수준의 일관성 부재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극저출산의 경향을 보이는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노동시장 등의 사람들을 개인으로 다른 제도에서는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고, 반면에 사람들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루는 경우(예컨대, 산업관계, 가족서비스, 조세제도, 사회보장, 가족제도 등)에는 양성평등의 수준이 낮다. 간단히 말하자면,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에서 여성이 남자와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게 되지만, 이 기회가 자녀출산으로 심각한 제약을 당하는 경우, 여성들은 자녀수를 제한하여, 대단히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영속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hesnais, 1996; Esping-Anderson, 1996). 개인지향적 제도에서 양성평등이 모든 선진국에서 상당한 진적은 이루고 있지만, 남성 생계취업자 모형은 여전히 가족지향적 사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가족제도에 대하여 사회 전체가 전통적이면, 사회제도 간에 불일치의 수준이 높으며 출산율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 전 세계의 최저출산율이 남부유럽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전통적 남성 중심적 사회로서 가족주의적 모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경험하는 대단히 낮은 출산율은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 관점에서, 남성 생계취업자 가족모형(male breadwinner model)의 뿌리를 이루는 제도들을 개혁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 3 절 자녀규모와 출산행태의 변화

본 절에서는 한국의 자녀규모를 결정하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이론적 관점을 근거로, 총출생아수, 출산기간, 이상자녀수 등의 자녀규모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피면서 하여, 한국의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설피는 시계열적 출산행태의 변화는 다음에 검토하게 코호트 관점의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녀규모의 변화

우리나라의 자녀규모, 특히 저출산 체제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Ortega and Kohler, 2002). 그러나 일차적으로 자녀규모는 '출생아'의 규모를 통하여 간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출생아'는 응답자 여성이 낳은 모든 자녀수를 말한다. 곧 출생자녀가 성장과정에서 사망하였던, 입양시켰던, 혼외출산이든, 혼인 중의 출산이든, 재혼부인의 경우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든 그 자녀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여기서 말하는 '출생아'에 포함된다. 물론 쌍태아 또는 삼태아의 경우에도 2명 또는 3명의 출생아로 계산된다.

그러나 현재 혼인부부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입양된 아이도 제외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현재 본인의 자녀이든 상관없이, 누구와 관계에서 생겼던 관계없이, 그리고 아이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생애동안에 출산한 모든 자녀는 출생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차적 사용되고 있는 2003년 출산력 조사에 나타난 15~44세 유배우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으로, 1994년과 1997년 출산력 조사와 같은 수준이며, 2000년의 결과보다 0.1명이 증가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평균 1.9명을 출산하였으나 동부지역에 거주하

는 응답자는 1.8명이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3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응답자의 출생아수는 2000년보다 0.1명이 증가하였고,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0.1명이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평균 출생아수가 과거에는 약 0.3~0.4명의 격차가 있었으나, 2003년의 출산력 조사에서는 0.1명만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소규모 자녀 선호행태가 읍·면 등의 농촌지역으로 빠른 속도의 확산이 됨을 알 수 있고, 이것은 1997년의 IMF 충격 이후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1〉 15~44세 유배우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단위: %)

특성	1994	1997	2000	2003
전체	1.8	1.8	1.7	1.8
지역				
동부	1.7	1.7	1.7	1.8
읍·면부	2.1	2.0	2.0	1.9
연령				
15~24세	0.7	0.7	0.8	0.8
25~29세	1.2	1.2	1.1	1.1
30~34세	1.8	1.8	1.7	1.7
35~39세	2.1	2.1	2.0	2.0
40~44세	2.5	2.5	2.1	2.1
교육수준				
6년 미만	2.6	2.5	2.2	2.3
6~9년	2.1	2.1	2.1	2.1
10~12년	1.6	1.7	1.7	1.8
12년 이상	1.4	1.5	1.5	1.6

자료: 1)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2)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3)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5)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응답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교육수준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

답자의 학력수준과 평균출생아수의 관계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총출생아수는 1994년 이후 2000년까지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2003년에는 2.3명으로 소폭으로 상승하였고, 중학교 학력을 가진 부인은 1994년 이후 2003년까지 동일한 수준인 2.1명을 유지하였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출생아수는 1994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0년에는 각각 1.8명, 1.6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 중에는 고령층의 응답자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곧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출생아수의 차이는 1994년 1.2명, 1997년 1.0명, 2000년과 2003년에는 0.7명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2000년과 2003년의 3년 동안에 걸친 3년간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상은 교육수준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생활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소자녀 가치가 한국사회의 전 계층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2>에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부인 중 2명의 출생아를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은 60.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1명을 가진 응답자가 19.1%로 3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 11.2%, 그리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8.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5~44세 유배우부인의 87.6%가 2명 이하의 자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5~44세 유배우부인의 87.6%가 2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응답자가 동부지역 거주 응답자 88.9% 읍·면부지역 거주 응답자 80.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명 이하의 자녀를 둔 응답자는 동부지역 27.6%, 읍·면부지역의 23.9%로 지역 간 3.7%로서 과거보다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동부지역 11.1%, 읍·면부지역 19.9%로서 지역 간 차이가 8.8%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의 수준에 따른 응답자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규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거보다 자녀규모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고 평균값을 중심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2〉 15~44세 유배우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자녀수의 분포

(단위: %)

특성	자녀수					합계	평균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체	0.1	19.1	60.4	11.2	1.2	100.0	1.8
지역							
동부	8.4	19.3	61.2	10.2	0.9	100.0	1.8
읍·면부	6.4	17.3	56.2	16.5	3.4	100.0	1.9
연령							
15~24세	51.2	36.8	12.0	0.0	0.0	100.0	0.6
25~29세	29.1	37.8	31.5	1.4	0.2	100.0	1.1
30~34세	7.7	24.1	59.9	7.9	0.4	100.0	1.7
35~39세	3.0	13.0	69.0	13.4	1.6	100.0	2.0
40~44세	1.8	11.6	67.7	16.6	2.3	100.0	2.1
교육수준							
6년 미만	5.0	6.4	54.1	23.9	10.6	100.0	2.3
6~9년	2.5	13.4	64.1	17.8	2.2	100.0	2.1
10~12년	7.3	16.4	64.6	10.6	1.1	100.0	1.8
12년 이상	11.3	26.5	52.9	8.8	0.5	100.0	1.6
취업여부							
취업	9.5	17.1	59.5	12.4	1.5	100.0	1.8
비취업	6.7	20.8	61.3	10.0	1.2	100.0	1.7

자료: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응답자의 출생아수는 그들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연령층의 응답자는 1명의 출생아를 가진 경우가 36.8%로 출생아를 전혀 가지지 않은 경우도 51.2%나 되어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무려 88.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연령층의 응답자는 평균 출생아수가 0.6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째자녀의 출산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21세기 우리나라의 장래 출산력이 대단히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상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세심하고도 포괄적인 인구·가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25~29세 연령층에 있는 응답자는 24세 이하 연령층에 있는 응답자보다는 평균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수는 1.1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37.8%, 2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31.5%로 이 연령층의 응답자가 69.3%가 1~2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자녀의 응답자도 29.1%가 되었는데, 이것은 15~24세 연령층 응답자에 대한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유배우 출산력의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9세 이하 연령층의 응답자와는 대조적으로 30세 이상 응답자의 자녀 분포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곧 29세 이하 연령층의 응답자들은 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30세 이상 연령층 응답자들은 2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30세 이상 연령층 응답자들의 경우는 0~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어,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코호트 출산율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영향은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30~34세 연령층 여성이 0.4%, 35~39세 연령층 여성 1.6%, 40~44세 연령층 여성 2.3%로 극히 낮았다. 이와 같은 영향에 의하여 30~34세 연령층 응답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1.7명인 반면에 35~39세와 40~44세 연령층의 응답자는 각각 2.0명과 2.1명으로 응답자의 연령과 자녀규모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이 코호트 효과를 반영하는 것인지, 연령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코호트 효과를 반영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30세 이상 연령층의 응답자 중에서 무자녀가 있다는 것이다. 곧, 30~34세 응답자의 7.7%, 35~39세 응답자의 3.0%, 그리고 40~44세 응답자의 1.8%가 무자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0년의 출산력 조사 결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만혼화에 의하여 첫째자녀의 출산연기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일 수 있으며,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재혼여성이 전처의 자녀를 염두에 두고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출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늦어지거나 자연불임이 된 경우, 그리고 자연유산이 반복되는 경우 등을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실험연구나 임상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자녀규모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모든 교육수준에서 2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나름대로 많은 자녀수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3명 이상의 출생아를 가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1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무자녀나 1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는 23.7%인데 반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는 37.8%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00년의 출산력 조사에서는 43.6%로 나타나는데, 2003년의 출산력 조사에서도 그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고학력층의 부인이 원하는 자녀수도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낮은 학력수준의 부인이 일반적으로 높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반대로 높은 학력수준의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규모의 분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중에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자녀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어쩌면, 양성평등이론의 여성학적 관점은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듯하다. 가령,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취업자 13.9% 비취업자 11.2%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취업자 17.1% 비취업자 27.5%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출생아수는 취업중인 응답자 1.8명, 취업하지 않은 응답자 1.7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 중에서, 결혼 후 취업을 중단하고 자녀양육 후 재취업하는 등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 여성들보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코호트별로 여성들의 취업행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으로 앞으로 코호트별 출산행태의 변화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자녀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곧 취업여성이 9.3%, 비취업 여성의 6.7%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들의 출산을 상대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3〉 초혼 유배우여성(15~49세)의 혼인연령 및 첫째 자녀와 막내 자녀의 출산연령[1)]

(단위: %)

특성	결혼연령	첫째자녀의 출산연령	막내자녀의 출산연령	결혼~막내자녀의 이행기간
1997년	23.2	24.5	27.6	4.4
2000년	23.7	24.9	27.6	3.9
2003년	23.9	25.2	28.2	4.4
지역				
동부	24.0	25.3	28.3	4.3
읍·면부	23.0	24.3	27.6	4.6
연령				
15~24세	19.8	20.7	21.5	1.7
25~29세	23.2	24.4	25.5	2.3
30~34세	24.5	25.9	28.1	1.6
35~39세	24.5	25.8	28.9	4.3
40~44세	23.7	25.0	28.4	1.7
45~49세	23.0	24.3	27.8	4.8
교육수준				
6년 미만	21.2	22.6	26.7	5.5
6~9년	22.4	23.7	27.1	4.7
10~12년	23.8	25.1	28.9	4.2
12년 이상	24.3	26.7	29.5	4.2
결혼코호트				
1979년 이전	20.8	22.0	26.0	5.2
1980~89년	23.4	24.8	28.2	4.8
1990~99년	24.9	26.3	28.9	4.2
2000~03년	26.2	27.3	28.1	4.2

주: 1)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과 출산경험이 있어도 추가자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2. 출산간격의 변화

다음으로 자녀규모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자녀규모의 측정치인 합계출산율(TFR)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출산간격을 변화를 검토하여 본다(Rallu & Toulemon, 1994; Bonngarts & Feeney, 1998; Ortega & Kohler, 2002). 출산간격은 첫째자녀의 출산시기부터 막내자녀의 출산시기까지의 전체기간을 출산기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부인의 결혼연령, 부부의 첫째자녀 출산시기, 그리고 막내자녀의 출산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물론, 출산을 개시하는 연령과 출산을 종료하는 연령은 앞에서 언급했던 경제학의 수요이론, 기회와 위험의 이론, 탈물질주의 가치이론, 그리고 양성평등이론이 암시하는 다양한 자녀가치와 태도가 부부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결혼, 첫째자녀의 출산연령, 막내자녀의 출산연령에 의하여 결혼연령에서 막내자녀의 출산연령에 이르기까지의 전체기간을 일단 출산간격으로 계산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15~49세 초혼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본 2003년 출산력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결혼연령은 23.9세이며, 첫째자녀의 출산연령은 25.2세 막내자녀(곧 추가자녀를 원하는 여성을 제외하는 경우)를 출산하거나 단산한 연령은 28.2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 첫째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1.3년, 첫째자녀 출산시기부터 막내자녀 출산시기까지의 기간은 3.0년에 이르러, 결혼시점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재 여성들은 결혼 이후 약 4년 만에 출산을 완료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가족의 최종 규모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9-4〉 15~44세 유배우여성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의 변화(1976~2003년)

(단위: %)

연령	1976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15~24세	2.4	2.1	1.8	1.8	1.8	2.0	2.1	2.1	2.2
25~29세	2.5	2.2	1.9	1.9	1.9	2.1	2.1	2.1	2.2
30~34세	2.8	2.5	2.0	2,0	2.1	2.2	2.2	2.2	2.3
35~39세	3.0	2.6	2.1	2.0	2.2	2.3	2.3	2.3	2.3
40~44세	3.2	2.9	2.2	2.1	2.3	2.3	2.3	2.3	2.3
전체	2.8	2.5	2.0	2.0	2.1	2.2	2.3	2.2	2.2

주: 1991년은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1) 박병태 외, 『197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계획 평가조사』, 한국가족계획연구원, 1978.
2) 문현상 외, 『1982년 전국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3)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4) 문현상 외, 『198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5)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6)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7)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8)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9)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4a.

이와 같은 2003년의 출산력 조사결과를 2000년의 출산력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결혼연령은 0.2세 올라가고 있으며, 첫째자녀의 출산연령은 0.3세가 올라갔고, 막내자녀의 출산연령은 0.6세가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무자녀에서 첫째자녀로의 이행기간은 2000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1.2년이었지만, 2003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1.3년으로 0.1년이 길어졌으며, 첫째자녀에서 막내자녀로의 이행기간은 2000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2.7년이었지만, 2003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3.0년으로 0.3년이 늘어났다. 따라서 결혼에서 막내자녀로의 이행기간은 2000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3.9년이었지만, 2003년 출산력조사에서는 4.3년으로 0.4년이 늦어지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한국의 출산력 변천을 전망할 때,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의 상승으로 합계출산율이 저하할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2000년 출산력 조사의 분석결과를 1997년의 출산력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혼인연령은 23.2세에서 23.7세로 0.5세가 상승하였으며, 막내자녀의 출산연

령은 27.6세에서 27.6세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자면, 결혼부터 첫째자녀로의 이행기간은 1997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1.3년이었지만, 2000년 출산력조사에서는 1.2년으로 0.1년이 단축되었고, 첫째자녀에서 막내자녀로의 이행기간은 1997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3.1년이었으나 2000년 출산력조사에서는 2.7년으로 0.4년이 단축된 것이다. 따라서 결혼부터 막내자녀로의 이행기간은 1997년의 출산력조사에서는 4.4년이었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3.9년으로 0.5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7년대 이후 한국의 IMF 충격이 코호트의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기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기간의 변화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혼인연령 상승, 첫째자녀의 출산지연, 그리고 막내자녀의 출산지연 등이 코호트들 사이에 차이를 보이면서, 그것이 기간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연령에서 막내자녀의 출산연령에 이르기까지의 재생산기간을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 출산행태를 알 수 있으며, 향후 21세기의 출산행태도 예측하고 그것을 통하여 인구·가족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결혼 후 무자녀에서 첫째자녀로의 이행기간은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0.9년에서 1.4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첫째자녀 출산이 결혼 후 10개월 미만(약 0.8세 미만)인 경우는 혼전임신에 의한 출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에서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약 1.7년에서 5.5년으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결혼연령, 첫째자녀 및 막내자녀의 출산연령, 그리고 결혼~막내자녀 출산연령까지의 전체기간 등을 응답자의 결혼코호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의 출산율 변화는 물론 장래 출산율의 변화에 대한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결혼시점에서부터 출산종료까지의 재생산 기간은 1979년까지의 결혼에서는 5.2년이 되었으나 1980~89년에 결혼한 응답자는 약 4.8년으로 줄어들었고, 1990~99년에 결혼한 부인은 4.0년으로 더욱 줄어들었으

며, 최근에 결혼한 여성들은 약 1.9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규모의 감소와 더불어 출산기간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상자녀수

우리나라의 장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는 "이상자녀수"가 있다. 실제로 '이상자녀수'는 자녀가치관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변수로서, 응답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규모(수)'를 의미한다. 물론 이는 응답자가 실제 두고 있는 현존 자녀수와 관계없이 몇 명의 자녀를 두면 이상적인가를 묻는 주관적인 지표로서, 이러한 가치관이 실제로 한 부부의 자녀수를 결정하는 출산행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주는 지표임에는 틀림없다(김승권, 2005a, 2005b). 특히 다음 절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코호트간 출산율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임에 분명하다.

2003년 출산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15~44세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00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자녀수의 연도별 시계열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는 지속되고 있다. 곧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에는 2.0명으로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명이었다가 2000년 2.2명으로 감소하여 200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과거에는 0.2~0.8명이었지만, 2003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0.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상자녀수는 2.2명의 대체수준에서 표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 이상자녀수는 15~24세와 25~29세 연령층 여성의 경우 2.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의 연령층 응답자들의 경우는 2.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절에서 보게 될 것처럼, 1950년대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40년에 걸쳐 코호트별 완결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르러 코호트별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인 2.1명을 밑돌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상자녀수가 약간 상승하여, 대체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웃도는 경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계출산율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그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Jun, K-H, 2005; 김승권, 2005a, 2005b). 곧,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제의 합계출산율이 이상자녀수보다 높게 나타나며, 낮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상자녀수가 실제의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구미선진국과 일본이나 타이완·홍콩 등의 동북아시아 저출산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72명이었던 1986년에 이상자녀수는 2.5명으로 나타났고, 199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0명으로 저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자녀수는 2.6명으로 상승하였다.

2003년 출산력 조사에서 나타난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 및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9-5>에 제시된다. 0～1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997년 10.0%, 2000년 9.3%, 그리고 2003년 11.5%로 최근 약간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응답한 경우도 1997년 26.5%, 2000년 25.8%, 그리고 2003년 28.4%로 최근 증가하여 평균 이상자녀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2명을 이상자녀수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997년 62.6%에서 2000년에는 64.3%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3년에는 58.8%로 다시 감소하였고, 감소된 몫은 0~1명과 3명이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표 9-5〉 15～44세 유배우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자녀수의 분포

(단위: %)

특성	이상자녀수					합계	평균
	1명 이하	2명	3명	4명	기타 이상		
1997년	10.0	62.6	20.3	6.2	0.9	100.0	2.3
2000년	9.3	64.3	20.1	5.7	0.7	100.0	2.2
2003년	11.5	58.8	21.7	6.7	1.2	100.0	2.2
지역							
동부	11.7	59.4	21.2	6.4	1.2	100.0	2.2
읍·면부	10.5	55.7	24.5	8.4	1.6	100.0	2.3
연령							
15～24세	9.7	64.5	19.4	2.4	4.0	100.0	2.2
25～29세	12.1	65.0	18.0	4.3	0.6	100.0	2.2
30～34세	9.4	60.5	23.5	5.2	1.3	100.0	2.3
35～39세	11.9	58.6	20.4	8.2	0.9	100.0	2.3
40～44세	12.9	54.6	23.2	8.0	1.3	100.0	2.3
교육수준							
6년 미만	12.0	53.0	21.7	11.5	1.8	100.0	2.4
6～9년	14.0	55.4	22.0	7.6	1.1	100.0	2.3
10～12년	11.8	59.5	21.1	6.4	1.1	100.0	2.2
12년 이상	10.0	59.3	22.8	6.6	1.3	100.0	2.3
취업여부							
취업	12.3	56.7	22.8	7.3	0.9	100.0	2.3
비취업	10.8	60.7	20.8	6.3	1.4	100.0	2.2
현존 자녀수							
0명	21.5	61.9	11.5	1.7	3.5	100.0	1.9
1명	14.3	61.9	19.5	3.2	0.9	100.0	2.1
2명	9.6	59.8	22.5	7.2	0.9	100.0	2.3
3명	9.8	46.6	28.9	13.5	1.3	100.0	2.5
4명 이상	11.5	45.2	28.6	16.7	1.2	100.0	2.6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표 9-6>에 2003년 출산력 조사의 이상자녀수 분포와 평균 이상자녀수를 부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먼저,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0～1명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비율은 동부 지역 거주자가 11.7%로서, 읍·면부 거주자의 10.5%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3명 이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32.9%로서 동부지역 거주자인 27.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 이상자녀수는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2.3명으로 동부지역 거주자의 2.1명보다 0.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체로 이상자녀수가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자녀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곧 출산력의 대체수준을 의미하는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대답한 비율은 15~24세 연령층 응답자가 74.2%, 25~29세 연령층 응답자 77.1%, 그 외 연령층은 약 70% 전후였으며, 반면에 4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대답한 비율은 40~44세 연령층 응답자가 31.2%였으나 15~24세 연령층 응답자 21.8%, 25~29세 연령층 응답자 22.3%로 차이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차이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응답자의 연령별 평균 이상자녀수는 15~24세와 25~29세 연령층 응답자의 경우 2.2명이었고, 그 밖의 연령층은 모두 2.3명으로 대체수준을 약간 넘는 이상자녀수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교육수준별 이상자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응답자가 71.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응답자가 65.0%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대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부인이 33.2%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27.5%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이상자녀수의 분포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평균 이상자녀수의 차이도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부인이 2.4명, 고등학교 학력수준의 부인이 2.3명이었고, 그 밖의 학력수준의 응답자는 이상자녀수가 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하를 이상자녀수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비취업자의 경우 71.5%, 취업자가 69.0%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산순위별 재생산 과정에서와는 달리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상자녀수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취업자가 30.1%, 비취업자가 27.1%로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취업여부별 응답자의 평

균 이상자녀수는 취업자가 2.3명, 비취업자가 2.2명으로 0.1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상가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6〉 15~44세 유배우부인의 거주지별 연령별 자녀수의 분포

(단위: %)

지역 및 응답자의 연령	이상자녀수 분포						평균 이상자녀수
	1명 이하	2명	3명	4명	기타	계	
동부							
15~24세	8.7	64.4	19.2	2.9	4.8	100.0	2.2
25~29세	12.9	64.3	17.8	4.4	0.6	100.0	2.1
30~34세	9.3	61.4	22.9	4.9	1.5	100.0	2.2
35~39세	11.8	59.3	22.0	8.1	0.8	100.0	2.3
40~44세	13.5	55.5	22.6	7.1	1.4	100.0	2.3
읍·면부							
15~24세	15.0	65.0	20.0	-	-	100.0	2.0
25~29세	8.3	68.2	19.1	3.2	1.3	100.0	2.2
30~34세	10.1	55.4	26.8	7.1	0.7	100.0	2.3
35~39세	13.1	54.7	22.5	8.3	1.4	100.0	2.3
40~44세	9.6	49.5	27.2	13.0	0.7	100.0	2.3

자료: 1)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3)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현존자녀수에 따른 응답자의 자녀가치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존자녀수에 따른 이상자녀수의 분포와 평균 이상자녀수는 큰 차이를 보였다. 0~1명을 이상자녀수라고 대답한 비율은 현재 무자녀인 응답자의 21.5%로 가장 많았으나, 2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는 9.6%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현재 무자녀인 응답자가 13.2%로 가장 적었으나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가 45.3%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존자녀수가 0명인 응답자의 평균 이상자녀수가 1.9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이상자녀수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분포와 평균 이상자녀수

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2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과거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0~1명과 3명 이상을 이상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약간 늘어나고 있으며, 2명의 자녀가 이상적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응답자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분포를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 <표 9-6>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2명 이하의 자녀규모를 이상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동부지역에서는 25~29세 연령층 응답자가 7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15~24세 연령층 응답자가 73.1%이었으며, 읍·면부지역에서는 15~24세의 연령층 응답자가 80.0%로 가장 적었고, 다음은 25~29세 연령층 응답자가 76.5%로 나타났다. 한편 3명 이상을 이상자녀수라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 응답자는 40~44세 연령층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읍·면부지역 거주 응답자의 경우도 같은 연령층이 40.2%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00년의 조사에서는 2명 이하의 자녀규모를 이상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동부지역에서는 25~29세 연령층 응답자가 86.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5~24세 연령층 응답자가 77.2%로 나타났고, 읍·면부지역에서는 15~24세 연령층 응답자가 8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5~29세 연령층 응답자가 73.4%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과 2003년의 출산력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응답자에게 소자녀 가치관이 강하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녀규모는 더욱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코호트 출산율 변천의 개관

본 연구는 앞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조사를 바탕으로 자녀규모의 결정요인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 자녀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지식으로는 최근 한국의 저출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정책수단을 도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호트별 연령별 출산율의 변천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절은 우선 코호트별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추정/추계방법을 논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1950년부터 1989년까지 태어난 코호트들의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변천을 개관하고자 한다.

1. 코호트 출산율의 추정/추계방법

본 절에서는 출산순위별 출산모형의 인구 추정/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코호트별 자녀규모의 감소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령별출산율 모형으로서 확률모형을 적용하는데, 출산순위 n, 연령 x에서의 누적출산율(cumulative fertility rate)을 $F_n(x)$, 출산연령 x를 확률변수로 하는 확률분포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G(x)$로 하여,

$$F_n(x;\ C_n,\ P) = C_n \cdot G(x;\ P) \qquad (1)$$

이 성립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다만 C_n은 생애기간 중 출산순위 n의 자녀를 출산할 확률, P는 확률분포의 파라메타 세트를 총칭하는 기호이다 누적출산율 $F_n(x)$는 여자가 x세에 이르기까지 출산순위 n의 자녀를 출산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이것은 물론 통계학자 Ronald Fisher의 최우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의한 파라미터 추정 등의 통계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출산율 함수 $f_n(x)$는 $g(x)$를 x의 확률밀도함수(確率密度函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로 하여,

$$f_n(x) = \frac{dF_n(x)}{dx} = C_n \cdot g(x) \qquad (2)$$

로 표시한다. 다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완결연령(completed age) a세의 출산율 $f_n(x)$는 $F_n(a+1) - F_n(a)$을 계산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출산순위를 구분하지 않은 연령별출산율, 곧 모든 자녀에 대한 연령별 출산율 $F_t(x)$는 출산순위별로 계산한 연령별출산율들의 합계로 계산할 수 있다. 곧,

$$F_t(x) = \sum_{n=1}^{L} F_n(x) \tag{3}$$

이 성립한다. 다만 L은 최종 출산순위이다. 본 연구에서는 $L=4$으로서, 넷째 자녀 이상의 출생은 모두 넷째 자녀에 포함하여 계산된다. 다음부터 수식이나 문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으면 첨자 t, n은 생략한다.

코호트 출산율은 인구번역(demographic translation)의 관점에서 기간출산율에서 도출하였는데, 코호트 출산율의 추정/추계결과는 <표 9-1>에서 <표 9-5>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9-1>은 모든 자녀에 대한 코호트 합계출산율이고, <표 9-2>, <표 9-3>, <표 9-4>, 그리고 <표 9-5>는 출산순위별 코호트 합계출산율로, 각각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이상의 코호트 합계출산율이다.
코호트별 연령별 출산율을 추정/추계하기 위하여, 로그감마분포모형(log-gamma distribution model)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파라메타의 설정방식에 따라서 3종류의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Kaneko, 2005).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4-파라메타 모형(4-parameter model)으로,

$$f(x) = \frac{C|\lambda|}{b\Gamma(1/\lambda^2)}\left(\frac{1}{\lambda^2}\right)^{\lambda^{-2}} \exp\left[\frac{1}{\lambda}\left(\frac{x-u}{b}\right) - \frac{1}{\lambda^2}\exp\lambda\left(\frac{x-\mu}{b}\right)\right] \tag{4}$$

$$F(x) = C \cdot I\left(\lambda^{-2}, \lambda^{-2}\exp\left(\lambda\frac{x-\mu}{b}\right)\right) \tag{5}$$

$$0 \le C \le 1,\ -\infty < \mu < \infty,\ b > 0,\ -\infty < \lambda < \infty,\ \lambda \ne 0$$

로 주어진다. C는 특정연도에 출생한 코호트가 일생동안 출산순위 i 곧 i번째 자녀의 출산을 경험할 확률을 표시하는 파라미터다. μ, λ, b는 C와 마찬가지로 실측치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정되어야 할 파라미터에 속한다. 또 $\Gamma(*)$, $I(*)$는 각각 감마함수(gamma function), 불완전 감마함수(incomplete gamma function)를 표시한다.주19)

로그감마분포모형에서 추정/추계되어야 할 파라미터 중에서, λ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값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연령별 초혼율(age-specific first-marriage rate)과 첫째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에 제대로 적합 시킬 수 있는 Coale-McNeil의 초혼모형은 $\lambda = 1.287$의 값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주20) 일본의 경우에는 $\lambda = -0.7465$의 값을 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λ의 값을 고정시켜서,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쉬운 간편한 3-파라메타 모형(3-parameter model)을 가정할 수도 있다. 또 u, b는 각각 위치 파라메타(location parameter), 척도 파라메타(scale parameter)이다. 따라서 λ를 고정한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라메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주21).

주19) 감마함수 Γ, 불완전감마함수 I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음.

$$\Gamma(x) = \int_0^{\infty} u^{x-1} e^{-u} du. \qquad x > 0.$$

$$I(k, t) = \frac{1}{\Gamma(k)} \int_0^{t} u^{t-1} e^{-u} du, \; k > 0, \; c > 0.$$

주20) Coale은 스웨덴 여성을 대상으로 초혼율함수의 표준을 제안하고, 이것을 수리적 공식으로 표현하였음. 그에 의하면, 출신국가가 다른 여성들의 연령별 초혼율은 3개의 파라메타를 보정하게 되면 사실상 동일한 유형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음. 또, Rodriguez & Trussell(1980)은 이것을 변형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라메타로 하는 형식으로 나타냈음.

$$f(x) = C \cdot 1.2813 \cdot \exp\left[-1.145\left(\frac{x-\mu}{\sigma} + 0.805\right) - \exp\left(-1.896\left(\frac{x-\mu}{\sigma}\right) + 0.805\right)\right]$$

여기서 μ, ρ는 각각 5초혼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이와 관련된 문헌으로서는 Coale(1971), Coale & McNeil(1972), Rodriguez & Trusell (1980), Kaneko Ryuichi(1991, 2003)을 참고.

주21) 평균을 μ, 표준편차를 σ로 표시하면,

$$\mu = u + (b/\lambda)[\Phi(\lambda^{-2}) + \ln \lambda^{2}]$$

$$\sigma^{2} = (b/\lambda)^{2} \Phi'(\lambda^{-2})$$

의 관계에 있음. 다만 Φ, Φ'는 각각 2-파라메타 감마함수, 3-파라메타 감마함수임. 따라서 λ가

다음에는 대수-감마분포 모형(log-gamma distribution model)을 경험적으로 보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보정형 모형”(adjusted-form model)을 제안한다.

또 감마분포도 같은 종류의 모형으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예측모형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모형과 비교대상에 놓게 된다. 이것의 누적출산율 함수(4개의 파라메타)는

$$F(t) = CI(k, (at)^{\beta}) \qquad (6)$$

$$0 \leq C \leq 1,\ k > 0,\ \alpha > 0,\ \beta > 0.$$

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마분포는 $\beta = 1$로 고정한 것이며, 이것을 사용한 모형을 3 파라메타 모형(3-parameter model)이라고 부른다, 다만 여기서 t = x -15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출산모형에서 실제 출산력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한다. 우선, 1950~1989년생의 40개 코호트에 대하여 전체 4개의 파라메타를 동시추정하고, 각 출산순위에 대하여, 재생산을 종료하였다고 생각되는 출생코호트, 곧 1950~1960년생의 11개의 코호트에 대해서는 이 추정치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라메타를 위의 동시추정에서 구한 값으로 고정하여 다른 파라메타를 재추정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첫째자녀에서 넷째자녀 이상의 출산순위 각각에 대하여, 1950년부터 1971년까지의 22년간의 출생코호트에 대하여 추정치를 구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35세까지 곧 생애 재생산 과정의 전반부를 완성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완전히는 아니라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겠지만, 그 이후의 젊은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정확한 파라메타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해서 구한 각각의 파라메타 값의 시계열적 추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특정 출생 코호트에 대한 가정치의 값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불변의 일정한 값을 취하는 경우, μ, σ를 파라메타로 하는 location-scale family로 취급.

재로서는 아무리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출산예측모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적용하는 도리밖에 없으며, 이를 위하여 추세와 통계청이 설정하고 있는 코호트 출산율의 목표치와 수렴점을 찾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곡선(logistic curve)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라메타 값의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재생산을 종료하지 않은 코호트에 대해서는 일반화 로그감마분포 모형에서 형태를 보여주는 파라미터(λ값을 고정하고)를 일정한 값에 고정하고, 다른 것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추정된 C의 추세와 목표치를 연계하는 추정치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이들의 설정치에 대응하여, u, b를 추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구한 추세와 그 목표치에 따라서, 다른 파라메타 값을 나머지 추계기간에 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코호트 출산율 변천의 개관

앞에서 설정된 코호트 출산율의 추정/추계방법을 통한 1950~1989년생 코호트의 연령별 출산율을 5년 간격으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 <표 9-7>이고,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등 출산순위별로 제시한 것이 <표 9-8>, <표 9-9>, <표 9-10>, <표 9-11>이다. 또 이것을 연령별 누적출산율의 형태로 도표화한 것이 모든 자녀의 경우는 〔그림 9-1〕,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등 출산순위별로 제시한 것 경우는 〔그림 9-2〕~〔그림 9-5〕이다.

〈표 9-7〉 코호트별 모든 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치: 1950～1989년생

연령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5	0.00143	0.00304	0.00155	0.00110	0.00049	0.00043	0.00044	0.00009	0.00003
16	0.00506	0.00751	0.00421	0.00365	0.00132	0.00134	0.00097	0.00033	0.00014
17	0.01329	0.01556	0.00990	0.00843	0.00335	0.00308	0.00210	0.00082	0.00041
18	0.02926	0.02820	0.02091	0.01681	0.00689	0.00631	0.00377	0.00167	0.00094
19	0.05501	0.04626	0.04067	0.02913	0.01326	0.01178	0.00631	0.00303	0.00184
20	0.09170	0.07301	0.07117	0.04710	0.02518	0.01874	0.01020	0.00515	0.00329
21	0.13753	0.11260	0.11165	0.07125	0.04281	0.02920	0.01558	0.00826	0.00549
22	0.18791	0.16616	0.15741	0.10274	0.06708	0.04352	0.02284	0.01263	0.00869
23	0.23282	0.21629	0.19514	0.14097	0.09775	0.06244	0.03235	0.01853	0.01315
24	0.26664	0.26127	0.21811	0.17319	0.12999	0.08633	0.04443	0.02629	0.01915
25	0.27939	0.27931	0.22055	0.19553	0.15452	0.11059	0.05938	0.03610	0.02697
26	0.26935	0.26360	0.20401	0.20564	0.17123	0.12938	0.07673	0.04817	0.03683
27	0.23855	0.22065	0.17754	0.19810	0.17452	0.14374	0.09255	0.06203	0.04872
28	0.19677	0.16680	0.14764	0.17822	0.16456	0.14760	0.10538	0.07595	0.06197
29	0.15418	0.11870	0.11905	0.14990	0.14535	0.14000	0.11609	0.08821	0.07521
30	0.11564	0.08095	0.09389	0.11912	0.12076	0.12457	0.12079	0.09801	0.08707
31	0.08359	0.05473	0.07268	0.08983	0.09556	0.10440	0.11789	0.10416	0.09641
32	0.05858	0.03861	0.05566	0.06449	0.07236	0.08306	0.10926	0.10544	0.10209
33	0.04119	0.02864	0.04224	0.04618	0.05351	0.06341	0.09624	0.10177	0.10326
34	0.02900	0.02207	0.03168	0.03440	0.04014	0.04699	0.08104	0.09403	0.09987
35	0.02029	0.01707	0.02344	0.02596	0.03049	0.03446	0.06562	0.08345	0.09259
36	0.01452	0.01341	0.01730	0.01947	0.02292	0.02541	0.05137	0.07140	0.08254
37	0.00991	0.01026	0.01280	0.01488	0.01726	0.01883	0.03928	0.05907	0.07099
38	0.00671	0.00766	0.00938	0.01155	0.01309	0.01396	0.02981	0.04739	0.05906
39	0.00445	0.00544	0.00676	0.00901	0.00998	0.01053	0.02263	0.03703	0.04768
40	0.00278	0.00374	0.00486	0.00692	0.00756	0.00797	0.01717	0.02845	0.03754
41	0.00161	0.00247	0.00345	0.00524	0.00563	0.00605	0.01300	0.02175	0.02905
42	0.00083	0.00147	0.00240	0.00395	0.00412	0.00462	0.00990	0.01664	0.02229
43	0.00039	0.00084	0.00162	0.00282	0.00299	0.00350	0.00758	0.01269	0.01704
44	0.00017	0.00049	0.00105	0.00189	0.00207	0.00260	0.00576	0.00961	0.01299
45	0.00005	0.00025	0.00064	0.00121	0.00137	0.00187	0.00435	0.00723	0.00985
46	0.00002	0.00011	0.00036	0.00072	0.00086	0.00133	0.00328	0.00540	0.00742
47	0.00001	0.00002	0.00017	0.00038	0.00054	0.00092	0.00250	0.00401	0.00555
48	0.00001	0.00001	0.00008	0.00018	0.00033	0.00062	0.00194	0.00298	0.00413
49	0.00000	0.00001	0.00005	0.00006	0.00019	0.00040	0.00153	0.00225	0.00308
TFR(All)	2.54863	2.26720	2.08000	1.98000	1.70000	1.49000	1.39000	1.30000	1.29333

〈표 9-8〉 코호트별 첫째 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치: 1950～1989년생

연령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5	0.00129	0.00274	0.00126	0.00100	0.00048	0.00042	0.00043	0.00009	0.00003
16	0.00413	0.00652	0.00347	0.00292	0.00129	0.00117	0.00095	0.00032	0.00014
17	0.01052	0.01249	0.00797	0.00687	0.00299	0.00271	0.00189	0.00076	0.00039
18	0.02247	0.02125	0.01609	0.01322	0.00602	0.00537	0.00338	0.00151	0.00087
19	0.04161	0.03466	0.02985	0.02240	0.01101	0.00967	0.00543	0.00269	0.00166
20	0.06703	0.05423	0.04999	0.03646	0.02055	0.01482	0.00840	0.00443	0.00288
21	0.09512	0.08015	0.07531	0.05542	0.03466	0.02273	0.01244	0.00688	0.00467
22	0.11857	0.10855	0.10220	0.07912	0.05353	0.03325	0.01787	0.01027	0.00720
23	0.12893	0.12666	0.12038	0.10444	0.07559	0.04645	0.02475	0.01481	0.01066
24	0.12495	0.13204	0.12636	0.12110	0.09483	0.06169	0.03312	0.02065	0.01525
25	0.10685	0.11920	0.11743	0.12659	0.10500	0.07552	0.04259	0.02779	0.02108
26	0.08331	0.09462	0.09689	0.11717	0.10596	0.08364	0.05246	0.03607	0.02815
27	0.06061	0.06840	0.07372	0.09615	0.09464	0.08617	0.06015	0.04475	0.03616
28	0.04222	0.04592	0.05287	0.07232	0.07698	0.08078	0.06465	0.05239	0.04432
29	0.02878	0.02983	0.03694	0.05062	0.05861	0.06894	0.06634	0.05782	0.05149
30	0.01928	0.01924	0.02573	0.03391	0.04261	0.05501	0.06398	0.06052	0.05668
31	0.01300	0.01241	0.01792	0.02230	0.03059	0.04146	0.05752	0.05988	0.05914
32	0.00896	0.00858	0.01284	0.01443	0.02215	0.02992	0.04922	0.05583	0.05844
33	0.00626	0.00649	0.00959	0.00952	0.01618	0.02117	0.04043	0.04931	0.05469
34	0.00440	0.00519	0.00732	0.00673	0.01218	0.01485	0.03205	0.04162	0.04865
35	0.00318	0.00419	0.00559	0.00504	0.00960	0.01032	0.02474	0.03383	0.04140
36	0.00232	0.00352	0.00436	0.00389	0.00776	0.00728	0.01886	0.02667	0.03393
37	0.00166	0.00298	0.00343	0.00310	0.00630	0.00541	0.01434	0.02061	0.02698
38	0.00117	0.00243	0.00264	0.00258	0.00510	0.00419	0.01087	0.01575	0.02100
39	0.00083	0.00187	0.00196	0.00214	0.00419	0.00335	0.00822	0.01198	0.01612
40	0.00055	0.00146	0.00147	0.00168	0.00341	0.00270	0.00632	0.00910	0.01229
41	0.00035	0.00110	0.00107	0.00130	0.00271	0.00224	0.00502	0.00696	0.00936
42	0.00022	0.00075	0.00073	0.00101	0.00208	0.00190	0.00409	0.00542	0.00717
43	0.00013	0.00049	0.00047	0.00074	0.00161	0.00161	0.00340	0.00434	0.00559
44	0.00006	0.00032	0.00031	0.00050	0.00121	0.00132	0.00285	0.00356	0.00445
45	0.00001	0.00019	0.00018	0.00033	0.00087	0.00104	0.00239	0.00296	0.00362
46	0.00000	0.00009	0.00009	0.00021	0.00060	0.00084	0.00204	0.00248	0.00300
47	0.00000	0.00001	0.00002	0.00012	0.00041	0.00066	0.00177	0.00210	0.00251
48	0.00000	0.00000	0.00001	0.00005	0.00027	0.00049	0.00153	0.00180	0.00213
49	0.00000	0.00000	0.00001	0.00000	0.00016	0.00035	0.00131	0.00156	0.00182
TFR1	0.99878	1.00858	1.00647	1.01540	0.91213	0.79945	0.74580	0.69751	0.69393

〈표 9-9〉 코호트별 둘째 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치: 1950～1989년생

연령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5	0.00014	0.00030	0.00009	0.00010	0.00000	0.00001	0.00000	0.00000	0.00000
16	0.00074	0.00081	0.00035	0.00069	0.00003	0.00017	0.00002	0.00001	0.00000
17	0.00216	0.00246	0.00126	0.00149	0.00036	0.00035	0.00021	0.00006	0.00002
18	0.00560	0.00570	0.00367	0.00343	0.00084	0.00090	0.00037	0.00016	0.00008
19	0.01189	0.00991	0.00886	0.00643	0.00217	0.00202	0.00084	0.00033	0.00018
20	0.02213	0.01611	0.01804	0.01011	0.00447	0.00373	0.00170	0.00067	0.00039
21	0.03769	0.02763	0.03160	0.01494	0.00784	0.00612	0.00295	0.00128	0.00076
22	0.05951	0.04768	0.04832	0.02212	0.01297	0.00961	0.00463	0.00217	0.00138
23	0.08338	0.06949	0.06532	0.03414	0.02110	0.01482	0.00698	0.00339	0.00228
24	0.10641	0.09605	0.07966	0.04848	0.03336	0.02274	0.01027	0.00504	0.00353
25	0.12239	0.11515	0.08857	0.06368	0.04664	0.03213	0.01514	0.00730	0.00524
26	0.12508	0.11785	0.09067	0.08122	0.06090	0.04144	0.02175	0.01048	0.00760
27	0.11399	0.10360	0.08631	0.09259	0.07374	0.05176	0.02874	0.01480	0.01085
28	0.09359	0.07983	0.07711	0.09460	0.07964	0.05957	0.03578	0.02001	0.01509
29	0.06981	0.05442	0.06523	0.08648	0.07729	0.06268	0.04352	0.02561	0.02011
30	0.04831	0.03497	0.05263	0.07156	0.06775	0.06055	0.04951	0.03152	0.02564
31	0.03207	0.02371	0.04087	0.05380	0.05435	0.05393	0.05239	0.03735	0.03140
32	0.02036	0.01649	0.03075	0.03711	0.04020	0.04474	0.05185	0.04208	0.03687
33	0.01233	0.01148	0.02249	0.02487	0.02834	0.03471	0.04798	0.04482	0.04124
34	0.00737	0.00849	0.01603	0.01716	0.02011	0.02560	0.04185	0.04510	0.04377
35	0.00435	0.00629	0.01119	0.01182	0.01432	0.01870	0.03455	0.04296	0.04403
36	0.00258	0.00463	0.00767	0.00800	0.00995	0.01383	0.02708	0.03886	0.04205
37	0.00155	0.00334	0.00516	0.00572	0.00700	0.01013	0.02049	0.03350	0.03821
38	0.00097	0.00243	0.00342	0.00422	0.00499	0.00728	0.01544	0.02760	0.03313
39	0.00059	0.00165	0.00223	0.00316	0.00354	0.00530	0.01173	0.02188	0.02753
40	0.00034	0.00102	0.00143	0.00236	0.00249	0.00388	0.00882	0.01693	0.02205
41	0.00019	0.00062	0.00090	0.00176	0.00173	0.00281	0.00645	0.01297	0.01722
42	0.00009	0.00030	0.00055	0.00132	0.00121	0.00201	0.00469	0.00986	0.01325
43	0.00004	0.00015	0.00033	0.00092	0.00079	0.00139	0.00339	0.00737	0.01007
44	0.00002	0.00007	0.00019	0.00058	0.00047	0.00095	0.00237	0.00536	0.00753
45	0.00000	0.00001	0.00010	0.00034	0.00027	0.00062	0.00160	0.00380	0.00551
46	0.00000	0.00000	0.00005	0.00018	0.00013	0.00036	0.00101	0.00261	0.00393
47	0.00000	0.00000	0.00002	0.00007	0.00005	0.00019	0.00060	0.00171	0.00271
48	0.00000	0.00000	0.00001	0.00003	0.00002	0.00010	0.00034	0.00107	0.00180
49	0.00000	0.00000	0.00000	0.00001	0.00001	0.00004	0.00018	0.00063	0.00114
TFR2	0.98566	0.86265	0.86112	0.80549	0.67907	0.59518	0.55524	0.51929	0.51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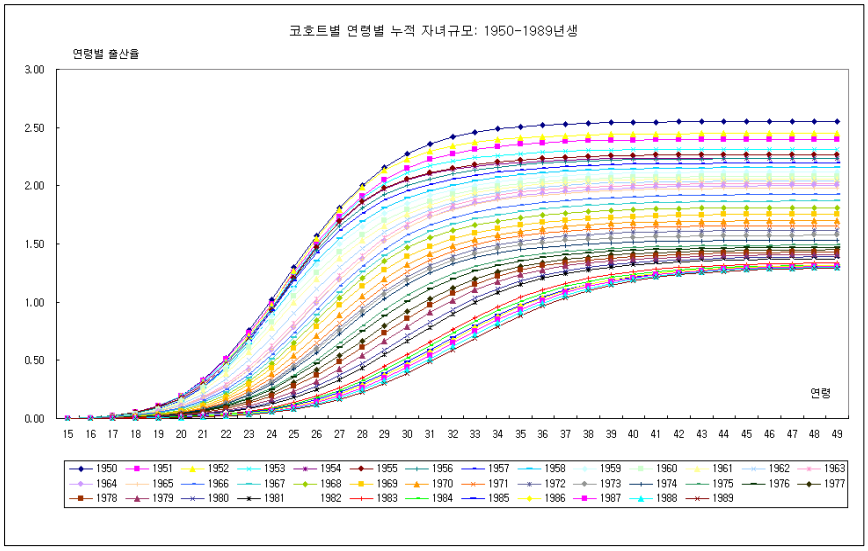
〈표 9-10〉 코호트별 셋째 자녀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치: 1950～1989년생

연령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5	0.00000	0.00000	0.0002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6	0.00018	0.00018	0.00035	0.00002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7	0.00061	0.00061	0.00060	0.00005	0.00000	0.00001	0.00000	0.00000	0.00000
18	0.00118	0.00118	0.00102	0.00013	0.00002	0.00004	0.00001	0.00000	0.00000
19	0.00148	0.00148	0.00172	0.00025	0.00006	0.00009	0.00004	0.00001	0.00001
20	0.00221	0.00221	0.00269	0.00044	0.00015	0.00019	0.00009	0.00004	0.00002
21	0.00380	0.00380	0.00400	0.00077	0.00028	0.00034	0.00017	0.00008	0.00004
22	0.00779	0.00779	0.00577	0.00133	0.00053	0.00062	0.00031	0.00016	0.00009
23	0.01639	0.01639	0.00787	0.00216	0.00098	0.00110	0.00055	0.00030	0.00018
24	0.02732	0.02732	0.01006	0.00330	0.00169	0.00180	0.00096	0.00054	0.00034
25	0.03689	0.03689	0.01209	0.00485	0.00270	0.00278	0.00154	0.00093	0.00059
26	0.04119	0.04119	0.01367	0.00673	0.00411	0.00406	0.00234	0.00150	0.00099
27	0.03781	0.03781	0.01459	0.00870	0.00579	0.00547	0.00341	0.00230	0.00158
28	0.03031	0.03031	0.01474	0.01052	0.00747	0.00680	0.00461	0.00332	0.00237
29	0.02416	0.02416	0.01402	0.01189	0.00887	0.00782	0.00580	0.00446	0.00336
30	0.01768	0.01768	0.01280	0.01261	0.00971	0.00835	0.00678	0.00557	0.00444
31	0.01132	0.01132	0.01144	0.01260	0.00986	0.00830	0.00740	0.00646	0.00547
32	0.00773	0.00773	0.00996	0.01180	0.00924	0.00768	0.00756	0.00700	0.00631
33	0.00610	0.00610	0.00839	0.01065	0.00824	0.00683	0.00722	0.00708	0.00681
34	0.00491	0.00491	0.00681	0.00938	0.00713	0.00590	0.00654	0.00674	0.00689
35	0.00390	0.00390	0.00538	0.00801	0.00592	0.00489	0.00577	0.00611	0.00660
36	0.00332	0.00332	0.00423	0.00657	0.00467	0.00387	0.00494	0.00535	0.00603
37	0.00252	0.00252	0.00333	0.00518	0.00354	0.00295	0.00405	0.00451	0.00530
38	0.00178	0.00178	0.00259	0.00401	0.00266	0.00224	0.00318	0.00366	0.00449
39	0.00122	0.00122	0.00200	0.00311	0.00200	0.00170	0.00243	0.00286	0.00366
40	0.00079	0.00079	0.00151	0.00238	0.00147	0.00126	0.00186	0.00219	0.00289
41	0.00047	0.00047	0.00113	0.00179	0.00106	0.00092	0.00140	0.00165	0.00223
42	0.00025	0.00025	0.00085	0.00131	0.00075	0.00065	0.00103	0.00123	0.00169
43	0.00011	0.00011	0.00061	0.00093	0.00053	0.00046	0.00073	0.00089	0.00126
44	0.00006	0.00006	0.00041	0.00066	0.00035	0.00031	0.00050	0.00063	0.00092
45	0.00002	0.00002	0.00027	0.00044	0.00021	0.00019	0.00033	0.00043	0.00065
46	0.00001	0.00001	0.00016	0.00026	0.00012	0.00011	0.00021	0.00029	0.00045
47	0.00000	0.00000	0.00009	0.00015	0.00007	0.00006	0.00012	0.00018	0.00030
48	0.00000	0.00000	0.00005	0.00008	0.00003	0.00003	0.00006	0.00010	0.00019
49	0.00000	0.00000	0.00002	0.00004	0.00001	0.00001	0.00003	0.00005	0.00011
TFR3	0.29351	0.29351	0.17544	0.14311	0.10023	0.08785	0.08196	0.07665	0.07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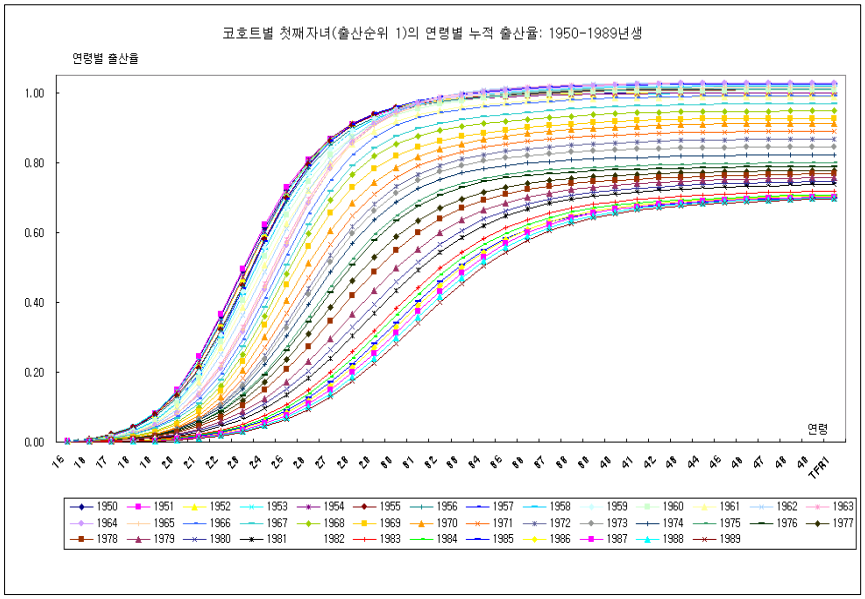
〈표 9-11〉 코호트별 넷째 자녀 이상의 연령별 출산율 추정치: 1950~1989년생

연령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5	0.00000	0.00000	0.00002	0.00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6	0.00000	0.00000	0.00004	0.00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7	0.00000	0.00000	0.00007	0.00002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8	0.00001	0.00008	0.00013	0.00003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19	0.00003	0.00021	0.00024	0.00006	0.00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0	0.00033	0.00047	0.00045	0.00008	0.00001	0.00001	0.00001	0.00000	0.00000
21	0.00092	0.00101	0.00074	0.00012	0.00003	0.00002	0.00002	0.00001	0.00001
22	0.00203	0.00213	0.00112	0.00016	0.00005	0.00004	0.00003	0.00002	0.00001
23	0.00412	0.00376	0.00156	0.00023	0.00008	0.00007	0.00005	0.00003	0.00002
24	0.00797	0.00587	0.00203	0.00031	0.00012	0.00010	0.00008	0.00005	0.00004
25	0.01327	0.00807	0.00245	0.00041	0.00018	0.00016	0.00012	0.00008	0.00006
26	0.01977	0.00994	0.00278	0.00052	0.00026	0.00024	0.00018	0.00012	0.00008
27	0.02613	0.01084	0.00293	0.00065	0.00035	0.00034	0.00025	0.00017	0.00013
28	0.03065	0.01075	0.00292	0.00079	0.00047	0.00045	0.00033	0.00024	0.00018
29	0.03143	0.01029	0.00286	0.00092	0.00058	0.00056	0.00042	0.00032	0.00024
30	0.03038	0.00907	0.00273	0.00103	0.00068	0.00066	0.00051	0.00040	0.00032
31	0.02720	0.00728	0.00246	0.00112	0.00075	0.00072	0.00058	0.00047	0.00039
32	0.02154	0.00582	0.00210	0.00115	0.00077	0.00072	0.00062	0.00053	0.00047
33	0.01651	0.00456	0.00177	0.00114	0.00076	0.00070	0.00062	0.00057	0.00052
34	0.01232	0.00348	0.00152	0.00112	0.00073	0.00064	0.00060	0.00057	0.00055
35	0.00885	0.00269	0.00127	0.00108	0.00065	0.00054	0.00056	0.00055	0.00056
36	0.00630	0.00194	0.00104	0.00100	0.00054	0.00043	0.00049	0.00051	0.00054
37	0.00418	0.00142	0.00088	0.00087	0.00043	0.00034	0.00040	0.00045	0.00050
38	0.00279	0.00101	0.00072	0.00073	0.00034	0.00025	0.00032	0.00037	0.00044
39	0.00181	0.00070	0.00057	0.00061	0.00025	0.00018	0.00025	0.00030	0.00037
40	0.00109	0.00046	0.00045	0.00050	0.00018	0.00013	0.00018	0.00023	0.00030
41	0.00059	0.00028	0.00035	0.00040	0.00013	0.00008	0.00013	0.00017	0.00023
42	0.00028	0.00016	0.00027	0.00030	0.00009	0.00005	0.00009	0.00013	0.00018
43	0.00011	0.00009	0.00020	0.00022	0.00006	0.00003	0.00006	0.00009	0.00013
44	0.00004	0.00005	0.00014	0.00016	0.00004	0.00002	0.00004	0.00006	0.00009
45	0.00002	0.00003	0.00009	0.00010	0.00002	0.00001	0.00002	0.00004	0.00006
46	0.00000	0.00001	0.00005	0.00006	0.00001	0.00001	0.00001	0.00002	0.00004
47	0.00000	0.00001	0.00003	0.00004	0.00001	0.00000	0.00001	0.00001	0.00003
48	0.00000	0.00000	0.00002	0.00002	0.00000	0.00000	0.00000	0.00001	0.00001
49	0.00000	0.00000	0.00001	0.0000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1
TFR4	0.27068	0.10246	0.03697	0.01600	0.00857	0.00751	0.00701	0.00656	0.00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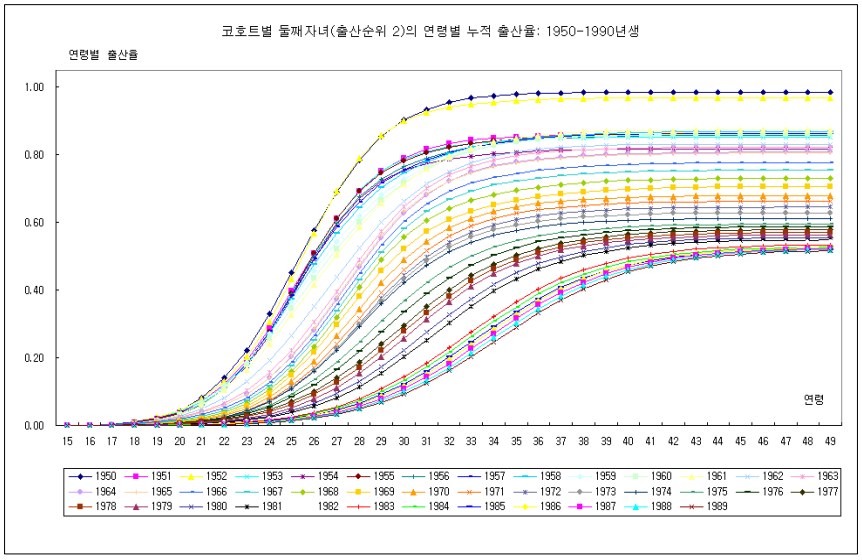
〔그림 9-1〕 코호트별 모든 자녀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 1950～1989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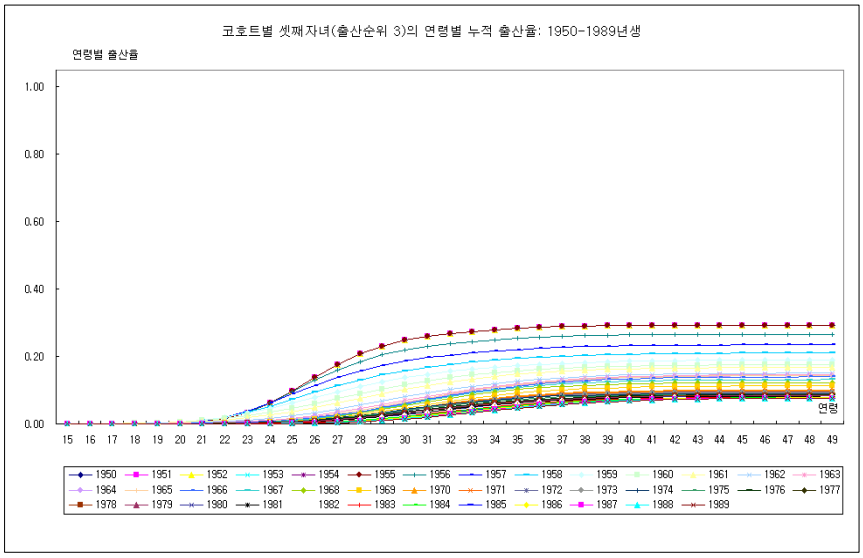
〔그림 9-2〕 코호트별 첫째 자녀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 1950～1989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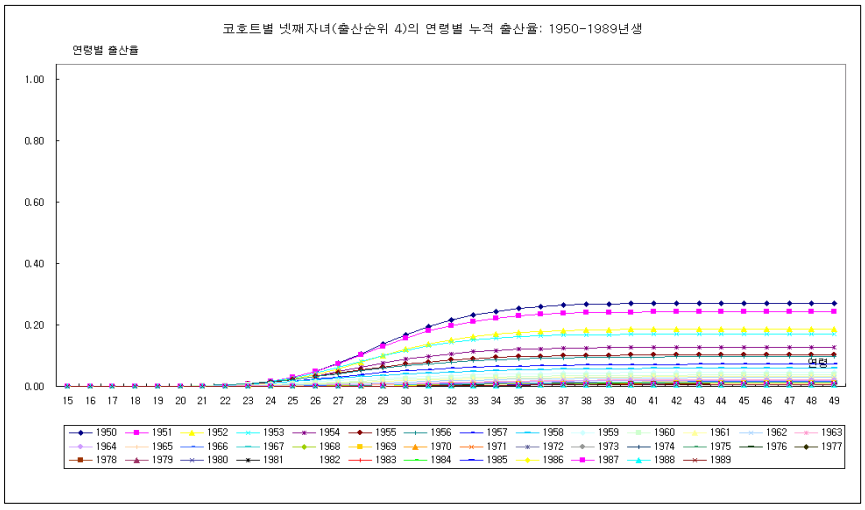
〔그림 9-3〕 코호트별 둘째 자녀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 1950~1989년생



〔그림 9-4〕 코호트별 셋째 자녀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 1950~1989년



〔그림 9-5〕 코호트별 넷째 자녀 이상의 연령별 누적 출산율:1950~1989년생



이상에서 로그감마분포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추계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양상을 검토하여 본다. 먼저 자녀규모, 곧 합계출산율을 보면 1950년생 코호트는 2.58명에 이르고, 1989년생 코호트는 1.28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자녀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56년생 코호트부터 자녀규모가 대체수준인 2.2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1960년 중반에 태어난 코호트부터는 자녀규모가 2.0명 이하로 줄어들어, 1970년부터는 자녀규모가 1.5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가 제3절의 <표 9-1>에서 시계열적으로 검토한 유배우여성의 40~44세의 총출생아수는 1994년 2.5명, 1997년 2.5명, 2000년 2.1명, 2003년 2.1명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던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응답자의 평균 출생아수도 그리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이것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력조사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미혼화와 비혼화 현상이 평균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승권 외, 2000a, 2004a). 한마디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태어난 코호트들도 1950년대와 1960년대와 태어난 코호트들과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호트별 완결 출산율의 추정치를 보면 1975년생 1.70명, 1975년 1.49명, 1980년 139명, 1985년 1.30명, 1989년 1.29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최근 코호트의 완결출산율 감소가 둔화되어 1991년생 코호트의 목표 출산율인 1.28명에 근접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출산의 맥락에서 자녀규모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산순위별 출산율을 코호트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 자녀를 출산할 확률은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코호트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1.0이었지만, 그것이 1970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70년 0.91, 1975년 0.80에 이르렀고, 1980년대에도 약간 둔화되면서, 1980년 0.75, 1985년 0.7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평생동안 무자녀로 지나게 되는 여성의 비율이 코호트별로 볼 때, 1970년 9%, 1975년생 20%, 1980년 25%, 1985년생이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분명히 이들은 도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 여성이 될 개연성이 크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가족정책의 수단이 필요해 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한편, 둘째 자녀를 낳을 확률을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1950대 코호트는 1.0명이었으나, 1960년대 코호트에 이르러 1960년생의 경우 0.86, 1965년생의 경우 0.81로 격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1970년대 코호트에서도 계속되어 1970년생의0.67, 1975년생의 경우 0.59에 이르고, 1980년대 코호트에서는 그 속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1980년생의 경우 0.56 1985년생과 1989년의 경우가 0.51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출생연도별로 코호트를 볼 때, 둘째 자녀가 없는 여성들의 비율이 1960년생의 경우 14%, 1965년생의 경우가 19%이었다가, 1970년생의 경우가 33%, 1975년생의 경우가 41%에 이르렀다가, 1980년생의 경우 44%, 1985년생과 1989년생의 경우가 49%에 이르면서, 둘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이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은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를 낳을 확률을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를 낳을 확률을 출생코호트별로 보면 1950년생의 경우에는 0.30이었으나, 이것이 급격히 떨어져서 1958년생 코호트부터는 0.20 이하로, 1970년생 코호트부터는 0.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언하면, 출생코호트별로 볼 때, 셋째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들의 비율이 1950년생의 경우 70%였으나 이것이 1958년생의 경우 80%이상으로, 그리고 1970년생의 경우 10%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녀의 출산은 남아선호와 관련하여 자녀규모의 감소에 대하여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최근 코호트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자녀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자녀 이상을 낳을 확률은 1950년생 코호트의 경우에는 0.27이었으나, 그것이 1956년생 코호트부터는 0.1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59년생 코호트부터는 0.05 이하로 떨어져, 그 이후에 출생하는 코호트의 경우에는 넷째 자녀 이상을 가질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도 출생코호트별로 볼 때, 넷째 자녀 이상을 갖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1950년생의 경우 73%였으나, 그것이 1956년생의 경우부터는 90% 이상으로 늘어났고, 1959년생부터는 95%로 다시 늘어났고, 그 이후에 출생하는 코호트의 경우에는 넷째 자녀 이상의 자녀를 가지지 않을 여성의 비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있다.

제 5 절 논의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최근 저출산의 맥락에서 자녀규모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의 모든 이론적 시각을 검토하였다. 경제학의 수요이론은 핵심가정으로서 효용의 극대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추가자녀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줄어들면, 그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둘째로 사회학의 시각인 기회와 위험의 이론은 사회경제적 대변화로 가족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종 기회와 위험은 생애과정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셋째의 시각은 문화인류학의 시각으로 탈물질주의(post-

materialism)의 가치이론인데, 이것은 제2의 인구변천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관점으로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양성평등이론은 남녀평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가족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장은 자녀규모의 변화, 특히 총출생아, 출산기간, 그리고 이상자녀수에 대한 다양한 결정요인을 검토하였다. 총출생아의 경우에는 2003년 출산력 조사에 나타난 15~44세 유배우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으로, 1994년과 1997년 출산력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2000년의 조사결과보다 0.1명이 증가하였다. 이를 거주지별로 보면, 농촌지역은 평균 1.9명을 출산하였으나 도시지역은 1.8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3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동부지역에 살고 있는 응답자의 출생아수는 2000년보다 0.1명이 증가하였고, 읍·면부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0.1명이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평균 출생아수가 과거에는 약 0.3~0.4명의 격차가 있었으나, 2003년의 출산력 조사에서는 0.1명만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03년의 출산력 조사에 나타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별 자녀수의 분포는 15~24세의 연령층 응답자의 경우에 초혼연령의 상승과 유배우 출산율의 저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수의 분포를 볼 때,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상대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암시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관심영역은 출산간격의 변화이다. 2003년 출산력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15~44세의 유배우부인의 결혼연령은 23.9세이며, 첫째자녀의 출산연령은 25.2세 막내자녀(곧 추가자녀를 원하는 여성을 제외하는 경우)를 출산하거나 단산한 연령은 28.2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 첫째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1.3년, 첫째자녀 출산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은 3.0년이 사용되어, 결혼시점부터 막내자녀 출산까지의 전체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현재 기혼여성들은 결혼 이후 약 4년 만에 출산을 완료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가족의 최종 규모는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녀규모의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이상자녀수에 관한 분석을 살펴

보자. 2003년 출산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15~44세 유배우여성의 이상자녀수는 2000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자녀수의 연도별 시계열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은 약간 저하하여 2003년까지는 지속되고 있다. 곧 이상자녀수는 1976년의 2.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88년에는 2.0명으로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명이었다가 2000년 2.2명으로 감소하여 200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연령별 이상자녀수의 차이가 과거에는 0.2~0.8명이었지만, 2003년 출산력 조사에서는 0.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상자녀수는 2.2명의 대체수준에서 표준화되고 있다. 곧, 이상자녀수는 15~24세와 25~29세 연령층 여성의 경우 2.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의 연령층 응답자들의 경우는 2.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코호트별 자녀규모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코호트별 출산율을 추정/추계하는 순서로 옮아간다. 출산순위별 출산모형을 채택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출산순위별 출산모형에 확률분포 모형을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aneko, 2005; Iwasa, 2005). 자녀규모의 추정/추계는 복합사건이기 때문에 확률분포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를 않다. 확률분포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파라미터 추정 등에서 확고한 이론적 기반이 있는 고전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 둘째로, 출산순위별 출산력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된 초혼모형과 같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인구현상을 기술하는 모형으로서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다. 셋째로, 출산순위별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가구규모별 가구수 추계를 비롯하여, 출산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모든 사건(예: 여성의 유급노동시장 참가, 아동수당 소요비용 추정, 산전후 휴가기간 책정 등)에 대한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코호트별 출산율의 추정/추계에서 코호트별 자녀규모가 1950년생 코호트의 2.58명에서 1989년생 코호트가 1.28명으로 절반 정도의 자녀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956년생 코호트부터 자녀규모가 대체수준인 2.2명에

접근하고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코호트부터 자녀규모가 2.0명 이하로 줄어들어,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난 코호트부터는 자녀규모가 1.5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출산순위별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호트별 자녀규모의 저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 자녀를 낳을 확률은 사실상 1960년생 이전 코호트들의 경우에는 1.0이었으나나 1989년생의 경우에는 0.69로 격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혼인연령의 상승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비혼화의 추이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둘째 자녀를 낳을 확률은 1950년생 코호트의 경우에는 1.0이었으나 1989년생 코호트의 경우에는 0.52로 첫째 자녀를 낳을 확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둘째 자녀를 낳을 확률이 0.80이하로 떨어진 코호트는 1965년생 이후부터 나타났고, 0.70이하로 떨어지는 코호트는 1970년생부터 나타나고, 0.60이하로 떨어지는 코호트는 1970년생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분명히 한국사회의 경제발전, 근대화, 도시화 등의 급격한 모습을 도외시하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셋째 자녀를 낳을 확률은 1950년생 코호트의 경우에는 0.30이었으나, 이것이 급격히 떨어져서 1958년생 코호트부터는 0.20 이하로, 1970년생 코호트부터는 0.1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자녀의 출산은 남아선호와 관련하여 자녀규모의 감소에 대하여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녀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아님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자녀 이상을 낳을 확률은 1950년생 코호트의 경우에는 0.27이었으나, 그것이 1956년생 코호트부터는 0.1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1959년생 코호트부터는 0.05 이하로 떨어져, 그 이후에 출생하는 코호트의 경우에는 넷째자녀 이상을 가질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은 우리나라의 자녀규모 감소현상, 곧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저하는 기간별 합계출산율과 적어도 분석적 관점은 물론 인구·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성 1명이 일생에 걸쳐서 출산하는 자녀수를 의미하는 코호트 출산율은 여전히 저하추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출산을 완결한 코호트의 경우에는 그 저하추세가 완만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추세로 볼 때 1960년대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는 완결출산율은 2.0명을 밑도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의 수준으로 학력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출산시기의 변화를 고려할 때,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출생한 코호트의 경우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자녀수요의 감소, 사회전반의 위험요소 증대,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양성평등적 제도의 부재 등에 의하여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투자증가를 고려할 때,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저하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질에 대한 교환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저출산 행렬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교육제도에 의한 교육비 절감, 주택비용 경감 등은 코호트 출산율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일어나게 된 코호트 출산율의 변화는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 증대에 따른 출산시기와 템포의 지연이 출산율 저하의 영속화에 기여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한마디로, 출산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학력수준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간 합계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학력수준의 상승이 종료되면서 기간 합계출산율은 코호트의 완결출산율 수준으로 다시 접근하게 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태어난 출생코호트들은 학력수준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시기였으며, 고등교육의 팽창과 여성들의 대학진학률 상승에 의하여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코호트를 최저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1년, 1.30명, 2002명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에 이르는 대단히 낮은 기간관점의 합계출산율을 단순히 학력구성의 변화에 의하여 설명하기는 대단히 힘들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매우 낮은 출산율을 첫째자녀의 출산연령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1997년의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악화는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의 안정화 또는 적정수준으로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정책수단

으로서는 출산지원정책만이 아니라, 적령혼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여건의 유지,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등 경제정책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혼인연령의 상승과 이에 따른 출산연령의 변화, 특히 만혼화와 독신경향의 증대, 곧 비혼화의 증대 가능성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출산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초점을 그들의 수요에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출산여성은 과거보다 고학력이며, 유급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의 비중도 크고 첫째자녀의 출산연령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그들의 출산비용에서도 임금과 인적자본의 축적 손실의 기회비용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에서도 여성들의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정책,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 등의 중요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여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이러한 저출산 대응정책들은 경제학의 수요이론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출산증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육비 절감,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과 같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자녀에 대한 효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한다면, 기간관점의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대한 정책방향은 인구규모 자체를 정책목표로 하는 인구정책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한다. 직접적인 출산지원정책들은 비용에 비하여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이민정책도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민 수가 필요하다는 점, 이민은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 유입된 인구역시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보다는 그 정책방향을 인구정책과 가족정책(family policy)에 두고 이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도 그 효과가 불분명한 직접적 지원의 경우에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첫째자녀와 둘

째자녀 등 출산순위가 낮은 경우에도 출산에 따라 여성과 가족의 불편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여 해소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 중에서는 보육지원정책이 외국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육아비용이 주로 시간비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고학력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염두에 둘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육아휴가/보육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본질적으로 가족정책 또는 복지정책이므로 출산율의 상승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단할 정책은 아니며, 그렇다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과도하게 추진하여 할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역할은 출산지원정책에 의하여 개인의 출산결정에 개입하는 것보다 개인이 쉽게 출산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는 생각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출산율이 안정화될 개연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대단히 낮은 출산율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21세기 전반의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면 출산율이 향후 약간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자녀에 대한 선호체제, 교육비와 주택비용 등 높은 양육비용을 고려할 때, 저출산의 영속화, 곧 극소산화 경향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출산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적령혼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 주택비용 등 중장기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따른 비용을 하락하는 정책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은 선진국들에서는 1930년부터 비롯되었으며, 당시에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국력증강이라는 경제외적 측면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현대사회는 인구규모 자체가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인구증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인구정책으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이민정책을 인구감소나 극소산화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강조하는 정부 일각에서의 입장정리가 있었고, 출산지원정책에 정책효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제는 출산지원정책은 단순히 인구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정책의 차원에서 출산에 따른 불편

과 비용을 들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자녀효용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고학력 여성과 취업여성이 증가한 현재의 상황에서 비추어 본다면, 출산지원정책 중에는 보육지원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으로 출산/육아와 관련 휴직과 휴가의 연장이 여성학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제10장 기혼여성의 가족주기와 취업결정요인

제1절 문제제기

가정에서의 지위나 역할은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여부가 가정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 남성과 여성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이다(Becker, 1976; Humphries, 1998; 황수경, 2003 재인용).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남성은 시장노동으로 집중되고 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연령대에서 여성은 결혼과 함께 출산 및 양육 등 집중적인 가사부담이 발생하고 이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성별 역할구분이 분명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나라에서 노동시장 이탈현상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남성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요 측의 여건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데 비해, 기혼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여건만큼이나 노동공급 측의 요인, 그 중에서도 학력, 연령 등 개인적인 속성 이외에 가계소득이나 자녀양육 등 가구관련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결혼, 자녀출산 등 가족주기의 단계에 따라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특징을 갖고 있다(양승주, 1994).

이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인이 속한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족주기 단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부인 및 가족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결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이론적 논의

1. 여성경제활동참가 관련 이론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가계는 구성원의 시장재화와 비시장재화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실현한다. 효용극대화 과정에는 예산의 제약이 따르는데, 사람들이 시장노동시간과 비시장 노동시간이라는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생산된 생산물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보는 것이 기본모델이다(서문희 외, 2004). 즉, 시간과 예산제약 하에 효용(대체로 소비와 여가)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의 변화가 개인의 여가와 시장재간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취업으로 인한 임금(제의임금, offer wage)이 비시장 시간의 가치(요구임금, reservation wage)보다 작다면, 경제주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임금상승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들의 크기에 의해 개인의 노동공급행동이 설명된다(Devine & Kiefer, 1991; 김영옥, 1999. 재인용). 즉,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결정간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임금이 요구임금보다 클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선택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 즉, 노동시장 참여는 비시장시간의 가치와 부적(-)으로 관련된다.

비시장시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배우자 소득, 정부로부터의 소득지원이나 양육관련 현금급여나 수당 등이 모두 영향을 주게 된다. 높아진 소득은 시장시간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소득효과 발생), 시장시간의 공급을 증가시키기도 한다(대체효과 발생). 기혼자의 경제활동참가는 요구임금과 시장임금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은 주로 임금과 비근로소득의 함수인데 비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자녀양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서문희 외, 2004).

Becker(1965)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노동, 순수한 여가, 그리고 다양한 비시장활동(non-market activity)에 대한 시간배분으로 구성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타 노동력에 비해 시장활동을 대신할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보다 탄력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계가 일반적으로 인식된 바와 같이 단순한 소비주체가 아닌 가사노동시간을 투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주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일부는 소득증가에 의해 보다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반면, 자녀양육과 같은 가사노동영역은 상당히 낮은 대체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특성과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유무와 비용 등이 여성들의 시장과 가사노동간의 시간배분, 즉,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영옥, 1999. 재인용).

2. 여성경제활동참가 관련 선행연구

홍경희(1994)는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도시가구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을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혼여성 보다 기혼여성의 경우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으나 이혼·사별 등의 무배우자는 미혼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혼여성에 있어서는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은 낮았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은 높았으며, 자녀수는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경제활동참가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높지는 않았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현송(1996)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가족주기별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취업여부는 현재의 자녀수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계획된 수의 자녀출산을 완료한 경우 미취학 아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인의 교육수준 및 남편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취업을 삼가는 경향을 보였다.

1979~1993년간의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NLSY)의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의 행위가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각각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 장지연(1997)의 연구결과는 첫 자녀 임신 후의 노동시장 이탈은 임신시점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출산시기에 절정에 달하며 이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은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의 향상은 응답자의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장 경력이 긴 경우에 짧은 경우보다 노동시장을 떠나는 비율이 낮았고, 현 직업의 재직기간 역시 노동시장 이탈률과 반비례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출산 전의 수입이 많을수록 출산 후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편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은 낮아졌다. 응답자의 교육수준, 교육에 대한 열망, 임금노동 선호도는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경력의 단절을 경험했던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전환율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김영옥(1999)에 의하면, 취업여성 중 절대다수의 여성이 결혼 1년 남짓한 기간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종사상의 지위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직전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취업여성의 71.3%이었으나 이들 중 결혼과 함께 퇴직하여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44%로 떨어지고, 이후 첫 자녀 출산이후에 33.7%로 더욱 저하되었다. 자녀양육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학력 여성일수록 노동시장 퇴출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 중학교 졸업이하의 경우에는 가사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률이 19.2%인데 비해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47.0%, 그리고 대학교 졸업이상은 52.1%이었다(김영옥 외, 2002). 또한 장혜경 외(2002)에 의하

면, 여성의 결혼, 출산, 육아는 비정규직으로의 지위변화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제3차 여성취업실태조사」자료(1997년)를 이용하여 생애에 걸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유형과 노동시장 이동을 결정하는 요인 및 그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 김영옥(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취업경력에 변화를 초래하는 생애사건으로 영향력이 크고, 유업률이 20대 초반 이후 하락하고 30대 초 이후 재반등 하는 추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결혼·출산의 생애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은 남성과 달리 가족 및 가구의 특성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유배우 상태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달라지며, 또한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현저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한편 타 가구원 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부적(-)인 효과가 뚜렷하다.

개인적 특성 변수의 효과를 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함으로써 연령과 경제활동참가율간의 관계가 ∩자 형태로 나타나며, 고등학교 이상 졸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중학교 졸업이하의 여성보다 저조하여 교육수준과 반비례관계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이 높지 않았다.

Jacobsen(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수와 여성취업과의 관계에서 아동의 수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반면에 남성의 참여율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약간씩 상승한다.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도 여성취업자는 현저히 감소된 시간당 임금을 수령하나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주22)

주22) 여성취업자에게는 아동 1인당 6%의 시간당 임금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됨(Jacobsen, 2002; 서문희 외, 2004. 재인용).

〈표 10-1〉 남녀 근로자의 자녀수별 노동시장 참여율 및 주당 노동시간 : 미국

(단위: %, 시간, $)

구분	여성			남성		
	노동시장 참여율	주당 노동시간	시간 임금	노동시장 참여율	주당 노동시간	시간 임금
자녀 없음	81	40	12.01	89	44	14.42
1명	79	38	11.54	94	45	16.48
2명	74	36	10.99	96	46	16.83
3명	66	34	9.62	95	45	16.73
4명 이상	55	33	7.92	92	46	14.42
전체	77	38	11.53	92	44	15.38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1999; Jacobsen, The Economics of Work and Family, W. E. Upjohn Institute, 2002; 서문희 외, 2004 재인용.

황수경(2003)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혼여성의 가족주기를 5단계[주23)]로 구분하여 가족주기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 자료의 분석결과, 제1주기는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율은 45.1%이나 육아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2주기에는 25.7%로 급격히 감소한다. 영유아 자녀가 없어지는 3주기의 취업자 비율은 48.3%로 크게 증가하고, 4주기에도 45%를 유지한다. 자녀와 동거하는 제5주기에는 9.7%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주기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의 구직희망률은 0.2%에 불과하여 육아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23) 제1주기는 여성의 결혼으로 시작되어 첫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로 하고, 제2주기는 첫 아이의 출산부터 막내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의 시기로, 제3주기는 막내자녀가 3세 되는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까지의 기간으로 구분함. 제4주기는 막내자녀의 중학교 입학부터 기혼여성의 양육부담이 완료되는 단계로, 그리고 제5주기는 자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단위가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단계로 구분함.

제 3 절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변화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의 가족주기 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세대 핵가족의 기본 가족주기 모형에 따라 가족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등 6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1. 가족주기 단계별 시작 및 종료시점의 변화

가족주기의 첫 단계인 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1.56세에 결혼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 결혼한 부인은 26.26세에 결혼하여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가족형성기의 시작시점이 늦어짐을 알 수 있다.

확대기의 시작시점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도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높아져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2.95세에 첫째아를 출산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27.35세에 첫째아를 출산하였다. 확대기의 종료시점이면서 확대완료기의 시작시점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26.02세,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30.21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확대완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시 부인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로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들의 경우 51.35세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5.75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소기의 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은 54.42세,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은 58.61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이 상승하고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가 보다 뚜렷하여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69.61세로,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76.82세로 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결혼한 부인들 간에 각각 72.76세에서 80.92세로 추정되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10-2〉 가족주기 각 단계의 시작 및 종결당시 부인[1)]의 평균연령

(단위: 세)

결혼년도	초혼 연령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자녀결혼 시작	자녀결혼완료	남편 사망	본인 사망
1979년 이전	21.56	22.95	26.02	51.35	54.42	69.61	72.76
1980~89년	23.46	24.79	28.06	53.19	56.46	70.75	75.56
1990~99년	24.95	26.29	29.15	54.69	57.55	74.45	78.73
2000년 이후	26.26	27.35	30.21	55.75	58.61	76.82	80.92

주: 1)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

가. 형성기

가족형성기는 결혼에서 첫 자녀 출산까지의 젊은 부부만의 생활기간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다. 즉,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39년이 소요되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09년이 소요되어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첫 자녀의 출산시기는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확대기 및 확대완료기

확대기는 한 가족의 전체 출산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07년이 소요되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86년이 소요되어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자녀출산기는 짧아지고 있다. 확대완료기는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25.33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5.54

년으로 추정되었다. 확대기의 단축은 출산력 저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와 출산간격의 단축으로 출산완료시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확대완료기의 연장은 출생아 수의 감소 및 출산간격 단축으로 막내아 출산이 빨라지는 반면, 자녀의 초혼연령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표 10-3〉 가족주기 각 단계별 기간[1)]

(단위: 년)

결혼년도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해체기	전체
1979년 이전	1.39	3.07	25.33	3.07	15.19	3.15	51.20
1980~89년	1.33	3.27	25.13	3.27	14.29	4.81	52.10
1990~99년	1.34	2.86	25.54	2.86	16.90	4.28	53.78
2000~03년	1.09	2.86	25.54	2.86	18.21	4.10	54.66

주: 1)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 초혼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다. 축소기 및 축소완료기

축소기는 자녀의 결혼시작 시점부터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축소기는 확대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짧아져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07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2.86년으로 추정되었다. 축소완료기는 자녀를 모두 떠나보낸 후 노인부부만이 남는 빈 둥지시기로, 최근에 결혼한 젊은 부인일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15.19년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18.21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축소기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수 감소로 모든 자녀가 결혼을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도 그만큼 짧아지는 것이며, 축소완료기의 연장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향후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부만의 가구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해체기

가족해체기는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3.15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

혼한 부인들은 4.10년이었다. 해체기는 결혼년도별로 볼 때 일관된 증가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나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추세이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남은 생애를 보낼 확률은 여자가 더 높고, 또 평균수명의 연장은 홀로 남은 여자의 생활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앞으로 여성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1979년 이전 결혼한 부인들은 51.20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 결혼한 부인들은 54.66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 년 동안 3.46년 정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그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기간의 연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산업화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 42.8%에서 2004년 49.8%로 7.9%포인트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15~19세는 1980년에는 34.4%이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낮아져 2004년에는 11.0%로 23.4%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는 여성의 교육기간 연장으로 대부분의 여성이 이 기간동안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20~24세는 1980년에 53.5%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 66.1%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60.8%를 보였다. 25~29세는 1980년에는 15~19세 보다 낮은 32.0%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으며,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1990년까지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30~34세 연령층은 1990년까지는 25~29세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25~29세 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10-4〉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연령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15~19세	34.4	21.1	18.7	14.5	12.4	11.0
20~24세	53.5	55.1	64.6	66.1	60.9	62.5
25~29세	32.0	35.9	42.6	47.9	55.7	63.7
30~34세	40.8	43.6	49.5	47.6	48.6	50.3
35~39세	53.1	52.9	57.9	59.2	59.1	58.8
40~44세	56.7	58.2	60.7	65.7	63.7	65.4
45~49세	57.3	59.2	63.9	60.6	64.7	62.6
50~54세	53.9	52.4	60.0	58.8	55.2	56.1
55~59세	46.2	47.2	54.4	54.1	51.1	49.4
60세 이상	16.9	19.2	26.4	28.7	30.1	28.3
전체	42.8	41.9	47.0	48.4	48.6	4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이는 여성의 가족주기 중 가족형성기의 시발점인 결혼과 자녀 출산 및 자녀 집중 양육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5세 이후에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50세 이후부터 점차 낮아진다. 이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따라 노동시장을 퇴출하였다가 육아기 이후 재진입하는 전형적인 M자형 유형임을 의미한다.

2.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는 1980년 46.2%에서 1990년 50.4%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4년 39.4%에 머물고 있다. 중학교 졸업의 경우는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약간 감소하여 2004년 41.0%에 이른다. 고등학교 졸업은 연도별로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1980년 43.1%에서 2004년 53.0%로 9.9%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대학교 이상 졸업은 198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980년에 비해

16.0%포인트 증가하였다(62.6%). 이는 전체 여성 평균 경제활동참가율(49.8%)보다 12.8%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교육수준의 상승과 함께 경제활동참가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비교할 경우 연도에 따라 성별 차이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주24)

〈표 10-5〉 교육수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교육수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초등학교 이하	46.2	45.9	50.4	47.1	44.6	39.4
중학교 졸업	33.0	32.8	38.2	40.7	42.2	41.0
고등학교 졸업	43.1	42.1	47.5	50.2	49.5	53.0
대학교 졸업 이상	46.6	50.6	57.2	60.0	60.7	62.6
전체	42.8	41.9	47.0	48.4	48.6	4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제 5 절 기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방법

가. 분석자료주25)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로 분석대상은 15세 이상 기혼여성 중 초혼유배우부인 9,6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24)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76.4%이었으며, 1990년에는 74.0%, 2000년에는 74.2%, 2004년에는 74.8%로 동일 연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각각 33.6%포인트, 27.0%포인트, 25.6%포인트, 25.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연보).

주25) 본 연구의 자료는 조사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참가여부(취업자 여부)라는 정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역동적인 측면에서의 자료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분석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나. 분석방법

가족주기 단계별 취업 부인과 비취업 부인간의 개인특성 및 가족특성을 비교하고,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종속변수로는 부인의 취업여부를, 그리고 독립변수로는 부인 개인특성변수, 가구관련 변수, 자녀관련 변수, 취업관련 변수, 가족생활 관련 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부인의 취업여부는 비취업 (0), 취업 (1)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더미변수화 하거나 실제 변수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부인의 개인특성 변수인 거주지역은 읍·면부 (0), 동부 (1)로, 부인의 연령은 실제 연령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이상 (1)로 하였다. 자녀관련 변수인 추가자녀 희망여부는 비희망 (0) 희망 (1)로, 그리고 6세 미만 자녀수 유무는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가구관련 변수로는 가족유형, 총가구원수, 가구소득원 수, 가구소득액, 자가소유 여부를 사용하였다. 이 중 가족유형은 확대가족 및 기타는 (0), 핵가족은 (1)로 하였으며, 총가구원수와 가구소득원 수, 가구소득은 실제의 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가소유 여부는 전세, 전·월세 및 기타 등이 포함된 비자가는 (0)으로, 자가는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취업관련 변수로 부인의 혼전 취업여부와 남편 취업여부는 비취업은 (0), 취업은 (1)로, 그리고 남편의 임금근로자 여부는 (0) 비임금근로자, (1) 임금근로자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표 10-6〉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독립변수	정의
부인 개인특성 변수	- 거주지	(0) 읍·면부 (1) 동부
	- 부인연령	실제 연령(세)
	- 부인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자녀수관련 변수	- 추가자녀 희망여부	(0) 비희망 (1) 희망
	- 6세 미만 자녀 유무	(0) 없음 (1) 있음
가구특성 변수	- 가족유형	(0) 확대가족 및 기타, (1) 핵가족
	- 총가구원수	실제 가구원 수
	- 가구소득원 수	실제 가구소득원 수
	- 가구소득액	실제 가구소득(만원)
	- 자가소유 여부	(0) 전세, 월세 및 기타, (1) 자가
취업관련 변수	- 부인혼전 취업여부	(0) 비취업 (1) 취업
	- 남편 취업여부	(0) 비취업 (1) 취업
	- 남편 임금근로자 여부	(0) 비임금근로자, (1) 임금근로자
남편 개인특성 변수	- 남편연령	- 실제 연령(세)
	- 남편교육수준	(0) 중학교 이하, (1) 고등학교 이상
가족생활 관련 변수	- 가사분담 형태	(0) 전통적 형태, (1) 비전통적 형태
	- 시부모의 신체적 도움여부	(0) 도움 안받음, (1) 도움 받음

남편의 개인특성 변수로 남편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부인의 특성과 동일하게 연령은 실제연령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0), 고등학교 이상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이외 가족생활 관련 변수로 가사분담 형태와 시부모의 신체적 도움여부를 사용하였다. 이 중 가사분담형태는 전통적인 가사분담 형태는 (0), 비전통적 가사분담 형태는 (1)로, 그리고 시부모의 신체적 도움여부는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는 (0), 받은 경우는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본 분석을 위한 가족주기 단계는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형성기는 결혼~첫째아 출산까지로 본 분석에서는 현재 출산자녀가 1명도 없으면서 현재 임신중이거나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인은 모두 이 단계에 포함하였다. 확대기는 첫째아 출산~막내아 출산으로 출산경험은 있으나 현존자녀는 없는 경우이면서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인들과, 현존자녀가 1명 이상이면서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인

들은 이 단계에 포함하였다.

확대완료기는 막내아 출산~자녀결혼 시작까지의 기간으로 본 분석에서는 출산을 완료한 경우로 자녀가 1명도 결혼하지 않은 부인을 포함하였다. 축소기는 자녀결혼 시작~자녀결혼 완료까지로 자녀가 1명이라도 결혼한 부인은 이 단계에 해당된다. 축소완료기는 자녀결혼 완료 이후~배우자 사망시까지이나 본 분석에서는 자녀가 모두 결혼한 부인은 이 단계에 해당된다.

2. 주요 분석결과

가.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지역별 분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확대완료기에 73.0%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축소기, 확대기 순으로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도 확대완료기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읍·면부 보다는 동부의 비율이 더 높고, 축소기와 축소완료기의 비율은 동부보다는 읍·면부가 더 높아 도시지역에 농촌지역보다 젊은 층의 부인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0-7〉 기혼여성의 지역별 가족주기 단계별 분포

(단위: %)

지역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계(수)
전국	4.7	8.6	73.0	11.2	2.5	100.0(9,605)
동부	5.0	8.6	75.2	8.9	2.2	100.0(7,864)
읍·면부	3.0	8.5	63.1	21.4	4.0	100.0(1,741)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나.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별 특성

분석대상의 가족주기 단계별 특성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동부 거주비율이 높으나 특히 젊은 층으로 구성된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에서 높다.

평균 연령은 40.7세로 형성기 부인들은 28.3세인데 비해 축소완료기 부인은 55.3세로 가장 높은 연령층이다.

교육수준은 전체의 71.0%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이며, 형성기와 확대기 부인들은 각각 98.2%와 96.5%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이었으나, 축소기와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각각 18.1%와 24.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축소기와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타 가족주기 단계의 부인들에 비해 고령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존자녀수는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확대기 부인들은 1.3명에 불과하나 확대완료기 부인들은 2.1명, 축소기 부인들은 2.7명으로 축소기 부인들의 현존자녀수가 가장 많았다. 추가자녀희망률은 형성기와 확대기만이 각각 83.8%, 65.7%로 높았고,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은 전체 27.5%로 확대기(89.4%), 확대완료기(25.5%) 순이다. 핵가족 비율은 전체 82.1%이었으며, 형성기의 비율이 가장 높고, 축소완료기의 비율이 가장 낮다.

가구규모를 나타내는 평균 가구원수는 확대완료기 부인들이 가장 많아 4.0명 정도이었다. 한 가구의 소득원 수는 축소기와 축소완료기에 가장 많았다. 이는 축소기와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취업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아 가구내의 소득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확대완료기 부인들의 경우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가소유율은 연령이 높은 축소기와 축소완료기 부인들이 다른 주기단계의 부인들 보다 높아 각각 85.8%와 83.9%이며, 형성기는 32.0%에 불과하다.

〈표 10-8〉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별 특성

특성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동부지역 거주율(%)	88.2	82.1	84.3	65.2	71.5	81.9
부인 평균 연령(세)	28.3	30.4	40.2	53.4	55.3	40.7
부인 고등학교 이상 학력(%)	98.2	96.5	75.9	18.1	24.5	71.0
평균 현존자녀수(명)	-	1.26	2.06	2.65	1.26	1.88
추가자녀 희망률 (%)	83.8	65.7	0.4	0.2	0.0	9.9
6세 미만 자녀 있는 비율 (%)	-	89.4	25.5	0.1	0.0	27.5
핵가족 비율(%)	88.0	82.8	86.5	81.3	71.9	85.3
평균 가구원 수(명)	2.2	3.5	4.0	3.1	2.5	3.7
평균 소득원 수(개)[1]	1.2	1.3	1.4	1.5	1.6	1.4
평균 가구소득(만원)[1]	273.1	264.5	305.3	207.4	163.6	285.9
자가소유율(%)	32.0	40.0	65.4	85.8	83.9	64.4
혼전 취업률(%)	88.4	89.8	76.5	39.0	30.7	72.9
남편 평균 연령(세)	31.4	33.3	43.4	57.9	59.7	44.0
남편 고등학교 이상 학력(%)	96.0	96.2	83.2	37.1	47.7	78.9
남편 취업률(%)	96.0	96.1	94.5	78.9	69.4	92.3
남편의 임금근로자 비율(%)	84.2	75.5	67.0	37.1	33.5	64.3
비전통적 양육 및 가사분담 형태 (%)[1]	18.2	9.4	5.5	5.3	7.4	6.5
시부모로부터 신체적 도움 받은 비율(%)[2]	11.9	26.0	15.1	12.4	12.9	16.0

주: 1) 남편과 부인이 모두 돈벌고,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담당 또는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담당
2) 신체적 도움은 간병/수발, 집안청소/세탁, 시장보기/식사준비, 손자녀 돌보기, 산후조리, 농사일/가게일 및 기타 등임.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혼전 취업경험률은 젊은 층으로 구성된 형성기와 확대기 부인들이 각각 88.4%와 89.8%가 경험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의 부인들의 혼전 취업률은 점차 낮아져 축소완료기 부인이 가장 낮아 30.7%이었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형성기가 31.4세로 가장 젊고, 축소완료기 59.7세로 가장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편의 고등학교 이상 학력 비율은 약 79%이었으며, 확대기, 형성기에 속하는 부인의 남편이 타 가족주기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 남편의 취업률 역시 형성기와 확대기 부인들의 남편이 높았으며, 축소기 부인 남편의 경우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남편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형성기 8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확대기

75.5%, 확대완료기 67.0%, 축소기 37.1%, 축소완료기 33.5% 순으로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 점차 낮아졌다. 비전통적인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축소완료기를 제외할 경우 형성기가 가장 높은 비율(18.2%)이었고, 그 다음 주기단계는 점차 낮아져 축소기는 5.3%에 불과하다. 시부모로부터의 신체적 도움주26)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확대기에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26.0%), 그 다음은 확대완료기(15.1%), 축소완료기(12.9%) 순 이었다.

부인들의 취업여부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형성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기단계에서 취업부인들 보다는 비취업 부인들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확대완료기까지는 취업부인이 높으나 축소기 이후는 비취업부인이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수준은 형성기와 확대기는 취업부인이, 그리고 확대완료기 이후는 비취업부인의 비율이 높았다.

현존자녀수는 비취업부인보다는 취업부인이 더 많았고(취업부인: 1.9명, 비취업부인: 1.8명), 확대완료기 이후 모두 취업부인의 현존자녀가 더 많았다. 추가자녀희망률은 취업부인은 8.7%인데 비해 비취업부인은 11.0%이었으며,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비율도 취업부인은 19.1%, 비취업 부인 35.8%로 자녀가 부인의 취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유형이 핵가족인 경우는 비취업 부인이 88.2%로 82.4%인 취업부인보다 높았으며, 각 주기단계별로도 모두 비취업 부인이 높았다. 가구규모를 나타내는 가구원수는 비취업부인의 경우 취업부인 보다 더 많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평균 가구소득원 수는 부인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취업부인들이 더 많았으며, 가족주기 단계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자가소유율은 형성기와 확대기 및 확대완료기는 비취업 부인들이 높았으나 축소기 및 축소완료기는 취업 부인이 높았다. 혼전 취업경험률은 축소완료기를 제외한 전체 주기단계에서 비취업 부인보다는 취업부인들이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취업부인의 남편이 45.0세, 비취업부인 남편이 43.0세로 취업

주26) 신체적 도움은 간병/수발, 집안청소/세탁, 시장보기/식사준비, 손자녀 돌보기, 산후조리, 농사일/가게일 및 기타 등임.

부인 남편의 연령이 더 높았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은 비취업부인 남편의 교육수준(85.0%)이 취업부인 남편의 교육수준(72.7%)보다 높은 편이었다. 남편의 취업률은 확대완료기를 제외한 주기단계에서 모두 취업부인 남편의 취업률이 높았으며, 남편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취업부인 남편보다 비취업부인 남편의 비율이 높았으며(취업부인: 56.3%, 비취업부인: 72.3%), 가족주기 단계별로 차이를 보여 형성기에서는 취업부인 남편이 비취업부인 남편보다 비율이 높았고, 확대기 이후는 취업부인 남편보다 비취업 부인 남편의 비율이 높았다.

비전통적 양육 및 가사부담 형태에 있어서는 취업부인이 10.1%인데 비해 비취업부인은 2.8%로 취업부인이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로부터의 도움은 비취업부인보다 취업부인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주기 단계별로도 모두 같은 양상이었다.

〈표 10-9〉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 및 취업여부별 특성

특성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취업부인						
동부지역 거주율(%)	90.7	80.4	78.8	48.4	55.0	75.2
평균 연령(세)	28.4	31.1	41.0	53.2	54.6	41.6
고등학교 학력(%)	98.4	97.6	69.3	12.3	18.3	64.3
평균 현존자녀수(명)	-	1.3	2.1	2.7	1.5	1.9
추가자녀 희망률 (%)	88.5	63.6	0.3	0.3	0.0	8.7
6세 미만 자녀 있는 비율(%)	-	81.8	17.7	0.2	0.0	19.1
핵가족 비율(%)	87.8	78.4	83.4	79.4	66.1	82.4
평균 가구원 수(명)	2.1	3.5	3.9	3.0	2.5	3.7
평균 소득원 수(개)[1)]	1.2	1.3	1.4	1.5	1.6	1.4
평균 가구소득(만원)[1)]	320.0	323.2	317.3	202.0	162.3	300.0
자가소유율(%)	27.3	35.1	63.9	86.4	85.5	63.6
혼전 취업률(%)	93.9	93.9	71.7	41.3	27.3	73.1
남편 평균 연령(세)	31.0	33.9	44.3	57.8	59.5	45.0
남편 고등학교 이상 학력(%)	96.7	97.3	77.8	28.3	33.0	72.7
남편 취업률(%)	97.1	96.6	93.8	86.3	80.7	92.9
남편의 임금근로자 비율(%)	84.8	71.4	58.9	28.5	19.3	56.3
비전통적 양육 및 가사분담 형태(%)[1)]	29.7	19.9	8.5	6.5	11.8	10.1
시부모로부터의 신체적 도움 받은 비율(%)[2)]	13.5	33.0	19.2	15.9	21.9	19.7

〈표 10-9〉 계속

특성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비취업 부인						
동부지역 거주율(%)	85.3	83.1	90.0	86.3	85.0	88.5
평균 연령(세)	28.3	30.0	39.4	53.5	55.8	39.8
고등학교 학력(%)	98.0	95.8	82.7	25.4	29.5	77.6
평균 현존자녀수(명)	-	1.3	2.0	2.6	1.0	1.8
추가자녀 희망률(%)	78.0	66.8	0.5	0.0	0.0	11.0
6세 미만 자녀 있는 비율(%)	-	93.5	33.4	0.0	0.0	35.8
핵가족 비율(%)	88.2	85.3	89.7	83.8	76.7	88.2
평균 가구원 수(명)	2.2	3.5	4.0	3.2	2.4	3.7
평균 소득원 수(개)	1.2	1.3	1.4	1.6	1.6	1.4
평균 가구소득(만원)	217.8	231.4	292.9	214.3	164.7	135.6
자가소유율(%)	37.3	42.7	66.9	85.0	82.7	65.2
혼전 취업률(%)	81.9	87.4	76.3	36.1	33.6	72.7
남편 평균 연령(세)	31.8	32.9	42.6	58.1	59.9	43.0
남편 고등학교 이상 학력(%)	95.1	95.7	88.6	48.4	60.0	85.0
남편 취업률(%)	95.1	95.8	95.2	69.7	59.4	91.8
남편의 임금근로자 비율(%)	83.4	77.8	75.2	47.7	45.1	72.3
비전통적 양육 및 가사분담 형태(%)1)	4.4	3.6	2.5	3.8	3.8	2.8
시부모로부터의 신체적 도움 받은 비율(%)2)	9.8	22.2	11.2	7.8	3.2	12.5

주: 1) 남편과 부인이 모두 돈벌고,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담당 또는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담당
2) 신체적 도움은 간병/수발, 집안청소/세탁, 시장보기/식사준비, 손자녀 돌보기, 산후조리, 농사일/가게일 및 기타 등임.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다. 분석대상 기혼여성 및 남편의 취업양상

1)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현 취업률

본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률을 보면, 축소기에 취업률(55.7%)이 가장 높았으며, 확대기에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 이 외 축소완료기(55.0%), 확대완료기(45.4%), 그리고 축소기(44.3%)의 순으로 비취업률이 높았다.

가족주기 단계별 취업률은 자녀출산 전인 형성기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기인 확대기

의 비취업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기혼여성의 비취업은 자녀양육 부담에 의한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0〉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여부

(단위: %)

현 취업여부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취업	54.6	35.8	50.6	55.7	45.0	49.9
비취업	45.4	64.2	49.4	44.3	55.0	50.1
계(수)[1]	100.0(449)	100.0(826)	100.0(7.014)	100.0(1,071)	100.0(242)	100.0(9,602)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2)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직종 및 종사상 지위

취업부인의 직종을 보면, 형성기 부인은 사무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 확대기는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확대완료기는 서비스 및 판매직이, 그리고 축소기와 축소완료기는 농·임·어업 종사율이 가장 높았다. 즉, 전문직 및 준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은 젊은 층으로 구성된 형성기, 확대기 및 확대완료기의 부인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축소기는 농·임·어업직과 판매·서비스직, 기계·장치 조작 및 기능직 순으로, 축소완료기는 농·임·어업과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및 기타 순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0-11〉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현 취업직종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직종[1]						
전문직 및 준전문직	24.6	33.1	15.4	2.5	2.8	15.1
사무직	41.0	27.4	8.6	1.2	0.9	10.3
서비스 및 판매직	26.2	24.0	40.6	29.0	33.9	37.3
농·임·어업직	1.2	4.1	8.8	39.0	37.6	12.5
기계·장치 조작 및 기능직	4.5	5.1	12.2	7.7	4.6	10.6
단순노무직 및 기타	2.5	6.4	14.4	20.6	20.2	14.2
종사상 지위[1]						
고용주	1.2	3.4	3.4	1.3	0.9	2.9
상용고	65.6	49.3	27.3	11.2	9.2	28.2
임시·일용직	22.1	19.6	27.7	21.6	22.0	26.0
자영업자	4.9	9.8	16.8	16.8	13.8	15.7
무급가족종사자	6.1	17.9	24.9	49.0	54.1	27.2
계(수)[2]	100.0(244)	100.0(296)	100.0(3,539)	100.0(596)	100.0(109)	100.0(4,784)

주: 1) 취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종사상 지위는 형성기, 확대기 부인들은 상용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확대완료기는 임시·일용직이, 그리고 축소기와 축소완료기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자녀출산,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부인들이 일정기간이 지나 가사나 자녀양육 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되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할 경우 이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재진입하는 경우와 남편이나 기타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3)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 이유, 향후 계속 취업의향 및 어려움

각 주기단계별 부인들의 취업이유는 생활에 보탬이 가장 높은 비율(72.9%)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자녀교육비 충당(11.9%), 사회적 성취·자아발견, 및 자기

발전(11.3%) 순이었다. 가족주기단계별로는 형성기와 확대기 및 확대완료기는 생활에 보탬을 위해 취업하는 경우는 축소기 이후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사회적 성취, 자아발견 및 자기발전을 위해 취업한다는 비율은 축소기 이후 단계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10-12〉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부인의 취업이유

(단위: %)

이유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생활에 보탬	66.8	68.9	71.0	86.1	89.0	72.9
자녀교육비 충당	-	5.5	14.7	4.9	0.9	11.9
노후대책 마련	1.2	2.4	1.9	4.5	3.7	2.3
시간이 많아 지루하므로	4.1	1.7	1.3	1.0	1.8	1.5
사회적 성취, 자아발견, 자기발전	27.9	20.8	10.9	3.0	4.6	11.3
기타	-	0.7	0.2	0.5	-	0.2
계(수)[1]	100.0(244)	100.0(293)	100.0(3,515)	100.0(597)	100.0(109)	100.0(4,758)

주: 1) 현 취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현 취업부인들의 향후 계속 취업의향은 생활에 보탬을 위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축소기 이후 주기단계의 부인들이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생활에 보탬을 위해 취업한다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확대완료기 부인들도 향후 계속 취업희망 비율(90.0%)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출산을 완료하고 자녀양육도 어느 정도 완료한 부인들로서 이들의 취업에 장애요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자녀출산을 시작해야 하는 형성기 부인과 자녀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확대기 부인들은 현 취업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다른 주기단계의 부인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13〉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부인의 향후 계속 취업의향

(단위: %)

계속여부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예	88.9	87.8	90.0	90.6	92.7	90.0
아니오	8.2	9.2	5.7	5.4	4.5	6.0
모르겠음	2.9	3.1	4.2	4.0	2.7	4.0
계(수)[1]	100.0(244)	100.0(294)	100.0(3,510)	100.0(594)	100.0(110)	100.0(4,752)

주: 1) 현 취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현 취업부인 중 89.7%가 가정생활과 일을 병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 사항을 보면, 가사부담이 46.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부담이 26.2%,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17.0%, 그리고 부부간의 공유시간 부족과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제도 등이 각각 4.2%이었다.

〈표 10-14〉 가족주기 단계별 현 취업부인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상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이유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어려운 점 있다는 비율	73.8	98.0	91.4	83.7	81.5	89.7
문제점						
자녀양육 직장생활 부담	1.7	57.5	28.8	4.1	2.3	26.2
가사부담	55.0	16.7	43.6	78.0	76.1	46.9
부부간의 공유시간 부족	31.1	2.4	2.8	4.7	2.3	4.2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	-	23.0	20.0	3.1	-	17.0
노부모 부양	0.6	0.3	1.5	2.5	10.2	1.7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제도 및 기타	11.7	-	3.4	7.6	9.1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1]	(180)	(287)	(3,194)	(487)	(88)	(4,236)

주: 1) 현 취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이를 가족주기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기에는 가사부담(55.0%)과 부부간의 공유시간 부족(31.1%),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제도 등(11.7%)의 순이었고, 확대기에는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부담(57.5%),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23.0%), 가사부담(16.7%)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확대완료기는 가사부담(43.6%), 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부담(28.8%), 자녀와의 공유시간 부족(20.0%)을 지적하였으며, 축소기와 축소완료기 기혼여성들은 가사부담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각각 78.0%, 76.1%나 되었다. 이외에 축소기 기혼여성들은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제도 등(7.6%)을 지적한 반면, 축소완료기 부인들은 노부모 부양(10.2%),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제도 등(9.1%)을 지적하여 가족주기 단계별 차이를 보였다.

4) 가족주기 단계별 향후 비취업 이유

현재 비취업중인 부인들의 향후에도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 때문이 가장 높은 비율(37.9%)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24.7%), 건강상(23.0%), 그리고 가사일 때문에(4.6%) 등의 순이었다. 가족주기 단계별로는 형성기는 자녀양육 때문에 42.7%, 일하고 싶지 않아서 21.3%, 가사일 때문에 12.0%, 이외 남편 및 시댁식구의 반대 10.7%나 되었다.

확대기에는 자녀양육 때문이 85.5%로 다른 가족주기단계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확대완료기는 자녀양육 때문에 40.7%, 일하고 싶지 않아서(25.0%), 건강상 이유(20.2%) 등이 주요 이유이었다.[주27] 축소기와 축소완료기는 각각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축소기 46.1%, 축소완료기 50.0%), 그 다음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이었고, 특히 축소기 기혼여성의 경우 축소완료기 기혼여성의 거의 2배나 되었다.

주27) 여성부 조사결과(2005)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이 취업하지 않는 이유는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전념을 위해서가 49.1%, 일은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23.0%로 72.1%가 자녀양육과 가사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여성부, 2005).

〈표 10-15〉 가족주기 단계별 현 비취업부인의 향후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이유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일하고 싶지 않아서	21.3	7.8	25.0	35.1	18.6	24.7
건강상 이유로	5.3	0.6	20.2	46.1	50.0	23.0
일자리 찾는 방법을 몰라서	1.3	0.0	3.3	5.6	5.8	3.4
자녀양육 때문에	42.7	85.5	40.7	3.8	12.8	37.9
가사일 때문에	12.0	1.1	4.7	4.4	4.7	4.6
남편 및 시댁식구의 반대로	10.7	3.4	3.9	1.6	3.5	3.7
기타	6.7	1.7	2.3	3.4	4.7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1]	(75)	(739)	(1,502)	(319)	(86)	(2.161)

주: 1) 현 비취업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5)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 남편의 취업직종 및 종사상 지위

기혼여성 남편의 직종은 기계·장치·조작 및 기능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29.0%), 그 다음은 전문직·준전문직(22.4%), 서비스 및 판매직(18.1%) 순이다. 가족주기 단계별로는 형성기는 전문직·준전문직 비율이 가장 높았고(30.5%), 사무직(24.7%), 기계·장치·조작 및 기능직(22.8%) 순이었으며, 확대기는 전문직·준전문직과 기계·장치·조작 및 기능직이 각각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서비스·판매직(20.4%), 사무직(17.9%) 순이었다. 확대완료기는 기계·장치·조작 및 기능직(30.7%), 전문직·준전문직(23.3%), 서비스 및 판매직(18.4%), 사무직(14.5%) 순으로, 그리고 축소기와 축소완료기는 농·임·어업직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는 전체적으로 상용고가 47.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9.9%), 임시·일용직(12.3%), 그리고 고용주(10.4%) 순이었다. 가족주기 단계별로는 형성기, 확대기 및 확대완료기 부인의 남편은 상용고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축소기 이후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0-16〉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 남편의 현 취업직종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직종[1]						
전문직 및 준전문직	30.5	27.8	23.3	9.1	11.3	22.4
사무직	24.7	17.9	14.5	3.4	7.1	14.1
서비스 및 판매직	16.7	20.4	18.4	14.6	15.5	18.1
농·임·어업직	1.4	2.4	6.3	30.9	28.6	8.5
기계·장치 조작 및 기능직	22.8	27.8	30.7	23.1	17.9	29.0
단순노무직 및 기타	4.0	3.8	6.9	18.8	19.6	7.9
종사상 지위[1]						
고용주	5.1	9.1	11.6	5.7	5.4	10.4
상용고	69.9	57.7	48.2	20.0	27.4	47.0
임시·일용직	12.7	11.9	11.1	21.3	15.5	12.3
자영업자	12.3	21.1	28.8	51.8	51.8	29.9
무급가족종사자	0.0	0.3	0.3	1.2	0.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32)	(792)	(6,606)	(845)	(168)	(8,843)

주: 1) 취업중인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6)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 남편의 직장유형

기혼여성 남편의 직장유형은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48.8%, 중소기업 26.5%, 대기업 14.1%, 그리고 공무원·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10.6%이었다. 가족주기 단계별로는 형성기는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38.5%), 확대기이후는 개인사업체 및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축소기의 경우 71.2%나 되었다.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과 대기업 근무자는 형성기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다.

〈표 10-17〉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 남편의 현 직장유형[1)]

(단위: %)

구분	형성기	확대기	확대 완료기	축소기	축소 완료기	전체
공무원, 정부투자·출연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15.5	12.1	10.8	6.5	5.3	10.6
대기업(300인 이상)	19.0	18.0	15.1	2.6	4.7	14.1
중소기업	38.5	29.1	26.4	19.7	21.3	26.5
개인사업체 및 기타	26.9	40.7	47.8	71.2	68.6	4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31)	(793)	(6,603)	(844)	(169)	(8,840)

주: 1) 취업중인 남편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라.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형성기

가족형성기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소득과 부인의 혼전 취업여부, 가사분담 형태, 시부모의 도움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인이 취업할 가능성은 높아지고($p<.001$), 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부인이 취업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 외 가사분담 형태가 비전통적일수록($p<.001$), 시부모의 신체적 도움을 받을수록($p<.05$) 부인이 취업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거주지역과 부인과 남편의 개인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가구관련 변수인 가족유형, 총가구원수, 가구소득원 수, 주택소유 여부, 그리고 남편의 취업관련 특성은 가족형성기의 기혼여성의 취업결정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확대기

자녀출산기인 확대기에 속해 있는 부인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6세 미만 자녀유무, 가족유형, 총가구원수,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혼전 취업여부, 남편 임금근로자 여부, 가사분담 형태, 그리고 시부모의 신체적 도움 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p<.001), 핵가족일 경우(p<.01), 가구원수가 많을 경우(p<.05), 자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p<.001), 그리고 남편이 임금근로자일 경우 부인의 취업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 양육이 절대 필요한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아직까지 자녀양육 부담이 부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부인의 취업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표 10-18〉 가족주기 단계별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B	S.E	B	S.E	B	S.E
거주지	-.049	.364	-.434	.237	-.670***	.093
부인 연령	.023	.045	.042	.040	-.011	.012
부인 교육수준	-.971	1.138	.210	.667	-.445***	.107
추가자녀 희망여부	-	-	- -.305	.192	.272	.463
6세 미만 자녀 유무	-	-	-1.229***	.339	-.864***	.087
가족유형	-.672	.693	-1.124**	.370	-.458***	.114
총가구원수	-.170	.400	-.397*	.161	-.056	.042
가구소득원 수	-.071	.312	.329	.186	-.084	.054
가구소득(만원)	.009***	.001	.006***	.001	.002***	.000
자가소유 여부	-.340	.289	-.749***	.213	-.326***	.068
혼전취업 여부	1.226*	.478	1.458***	.413	.283***	.080
남편 연령	-.058	.044	.004	.037	.003	.012
남편 교육수준	-.493	.684	.477	.570	-.561***	.122
남편취업 여부	.418	.778	.053	.523	-.123	.163
남편 임금근로자 여부	-.100	.403	-.468*	.232	-.653***	.073
가사분담 형태	2.255***	.442	2.230***	.351	1.504***	.157
시부모 도움여부	1.050*	.438	.586**	.211	.562***	.097
상수	-.155	2.430	-1.799	1.644	2.469***	.474
-2 Log likelihood	399.460		745.909		6167.142	

〈표 10-18〉 계속

변수	축소기		축소완료기	
	B	S.E	B	S.E
거주지	-1.550***	.356	-1.996	1.772
부인 연령	.101	.056	-.513*	.255
부인 교육수준	-.216	.442	2.821	3.214
추가자녀 희망여부	-	-	- -	-
6세 미만 자녀 유무	-	-	-	-
가족유형	-.967*	.397	-9.952	5.092
총가구원수	-.295	.161	-3.993	2.203
가구소득원 수	-.062	.218	-3.487*	1.533
가구소득(만원)	.003*	.001	-.001	.004
자가소유 여부	.722	.452	-2.042	2.237
혼전취업 여부	.222	.295	3.196	2.041
남편 연령	-.099	.052	.173	.238
남편 교육수준	-1.392***	.355	-2.352	1.910
남편취업 여부	-.229	.482	5.177*	2.340
남편 임금근로자 여부	-.657*	.324	-6.141*	3.0944
가사분담 형태	1.415*	.589	6.055	3.777
시부모 도움여부	.316	.508	4.268	8.244
상수	3.145	2.380	39.737*	19.166
-2 Log likelihood	316.817		33.094	

주: * p<.05, ** p<.01, *** p<.001
자료: 2003년「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자료 재분석

이외 가구소득이 많을수록(p<.001), 혼전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p<.001), 비전통적인 가사분담 형태일 경우(p<.001), 시부모의 신체적 도움을 받는 경우(p<.01), 부인의 취업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확대완료기

확대완료기는 자녀의 출산을 완료하였으나 자녀가 1명도 결혼하지 않은 단계로서 이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주지역, 부인의 교육수준, 6세 미만 자녀유무, 가족유형,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혼전 취업여부,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임금근로자 여부, 가사분담 형태, 시부모 도움여부 등 이었다.

거주지의 경우 동부에 거주하는 부인일수록(p<.001),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p<.001) 부인이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6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유형이 핵가족일 경우, 자가를 소유한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이 취업한 경우, 그리고 남편이 임금근로자일 경우 부인이 취업할 가능성은 낮았다. 즉, 동부에 거주하는 고학력층 부인들의 경우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 모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6세 미만의 자녀양육은 자녀를 돌보아 줄 대리양육자가 없거나 마땅한 대리양육 기관인 보육시설을 찾지 못한 핵가족 기혼여성의 경우 취업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편의 개인특성인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결혼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아직까지 동질혼의 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인도 학력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부인이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주28] 남편이 임금근로자일 경우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고, 부인이 저연령층으로 출산기나 자녀양육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외 가구소득액이 많을수록, 혼전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비전통적인 가사분담 형태인 경우, 그리고 시부모의 신체적 도움을 받을 경우 부인의 취업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축소기

축소기는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 시기

주28)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에서의 기대소득이 증가하고 취업기회도 많아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몇 가지 상반되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교육수준도 높아 고소득 가구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은 순수한 소득효과를 가져와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이도록 작용할 것임. 둘째, 고학력 여성일수록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고 자녀교육에서의 생산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것이 여성자신의 시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감소시킴. 셋째, 일정 기간의 경력단절을 거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 내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단순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2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만이 허용될 가능성이 큼. 이 경우 여성의 높은 학력수준은 기대소득(expected market wage)은 낮은 상태에서 의중임금(reservation wage)만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활동참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황수경, 2003).

에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 가족유형, 가구소득, 남편 교육수준 및 남편의 임금근로자 여부, 가사분담 형태 등이다.

이 시기에는 부인의 개인적인 특성 즉, 연령이나 교육수준보다는 가구특성이나 배우자 특성에 의해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핵가족일 경우 부인이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 부인의 취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가구소득이 많을 경우, 그리고 비전통적인 가사분담 형태일 경우 부인이 취업할 가능성은 높았다.

5) 축소완료기

이 단계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후 부부만이 남는 시기로서 부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인 연령, 가구소득원 수, 남편 취업여부, 남편의 임금근로자 여부 등이다. 즉, 부인의 연령이 많을수록($p<.05$), 가구의 소득원 수가 많을수록($p<.05$), 그리고 남편이 임금근로자일수록($p<.05$) 부인이 취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남편이 취업중일 경우($p<.05$) 부인의 취업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으로 구성된 축소완료기 남편의 직종은 농·임·어업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따라서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남편이 단순노무직이면서 부인도 단순노무직 종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주29)]

제 6 절 논의 및 시사점

최근 한국 기혼여성의 가족주기의 특징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재생산 기간의 단축 및 자녀출산 완료시부터 자녀의 출가시까지의 기간 연장 등을 들 수 있으

주29)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 남편이 농·임·어업직일 경우 부인도 동일 직종인 경우는 79.5%나 되었으며, 남편이 단순노무직일 경우 부인도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46.3%이었음.

며,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부부만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의 변화와 함께 기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출산, 양육, 자녀교육 등의 가사부담으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노동시장에서의 일(market work)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일(non-market work)을 선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가사부담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될 경우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됨으로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은 남성과 달리 가족 및 가구의 특성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여성이 경제활동참가율이 달라지며, 또한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확대기 또는 확대완료기의 경우 이들 자녀들을 돌보아 줄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현저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주기단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출산 전인 형성기에는 가구소득과 혼전 취업여부, 가사분담 형태, 시부모 도움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는 확대기에는 자녀관련 변수로 6세 미만 자녀유무가 유의하였으며. 가구특성으로는 가족유형, 총가구원수,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혼전 취업여부, 남편 임금근로자 여부, 가사분담 형태, 시부모의 도움여부가 부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확대완료기에는 거주지역, 부인 교육수준 등의 개인특성과 6세 미만 자녀유무, 가족유형, 가구소득, 자가소유 여부, 혼전 취업 여부,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과 임금근로자 여부, 가사분담 형태 및 시부모 도움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축소기는 거주지역, 가족유형, 가구소득,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 임금근로자 여부, 가사분담 형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축소완료기에는 부인연령과 가구소득원 수, 그리고 남편의 취업여부 및 임금근로자 여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기혼여성이 자녀양육에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 기혼여성의 시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양

육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하게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황수경, 2003). 또한 자녀의 집중양육기를 지난 확대완료기에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그리고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축소기 이후에는 자녀의 결혼비용 등 가구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단계로 부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가족주기단계별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가족주기단계별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형성기는 여성에게 가족내에서의 주부의 역할이 새로 부가되어 미혼시절과는 달리 가치관이나 생활패턴이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이 없어 가족 내 역할로 인한 여성의 실질적인 시간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어 여성자신이 경제활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배우자의 부인 취업에 대한 인식이 부인의 경제활동의 참여 및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형성기에는 배우자의 기혼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사분담에 대한 근대적 사고를 가진 경우 부인의 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가 요구된다.

확대기와 확대완료기와 같은 자녀양육기 기혼여성들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6세 미만 자녀로서 이 단계의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모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 시간대의 탄력적 운영,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실시 및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외 확대완료기의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임금근로자일 경우 부인의 취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높은 교육수준과 임금근로자일 경우 고소득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인 취업의 확률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취업의 높은 기회비용, 취업에 대한 높은 기대, 높은 요구임금, 기혼여성 근로자에 대한 낮은 노동 수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들을 위한 고용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이들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축소기와 완료되는 축소완료기의 기혼여성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이들에 적합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였던 일시적인 경력 단절이후 다시 재 진입하려는 기혼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동시장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된다.

축소완료기를 제외한 전체 가족주기에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인의 취업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점차 사회적 성취나 자기발전 등의 이유로 취업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력 활용 차원에서 이들 고소득의 고학력 기혼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 대부분의 가족주기 단계에서 근대적인 가사분담 형태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양성평등 차원에서 부부가 자녀양육 등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11장 자녀양육 실태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분석

제 1 절 자녀양육 관련 이론적 배경

1. 자녀양육 관련 이론

가. 모성양육과 탁아서비스

자녀양육과 애착에 관련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은 자녀의 원만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동을 어머니가 양육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반드시 어머니가 아니어도 질 높은 탁아 서비스는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관한 초기연구의 대부분은 부모와의 애착형성[주30)]이 중요한 발달과업인 기간동안에 탁아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부모와의 강제적 분리의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자간의 애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탁아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탁아시설의 이용경험은 아동들에게 부모로부터 적절한 독립성을 경험시켜 주며 부모로부터의 분리경험이 부모-자녀관계의 애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 가족가치관 관점에서 보면 성장과정에서 아동이 모성 등 가족과 맺는 유대감, 소속감, 애정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체적, 정신적

주30) 애착이란 특정대상에게 접근을 유지하고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려는 행동임. 이는 영유아기에 모-자간에 형성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유아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 Bowlby(1958)는 인격형성 과정에서 모성적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와 영아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또한 어머니와 아동 모두의 만족과 행복감이 충만된 상태의 인간관계를 결여한 아동의 상태를 「모성적 양육상실」 또는 「모성박탈」(Maternal Deprination)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였음.

성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아기에 어머니가 떨어지지 않고 잘 보살펴주어야만 이러한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며, 이렇게 잘 형성된 애착은 다음단계에서의 사회성발달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자율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Liberman, 1977; Esterbrook & Lamb, 1979; Mainr & Cassidy, 1988).

그러나 특히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여성취업이 증대되면서 애착 형성이나 아동발달에 있어서 같이 지내는 시간만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관점이 등장하게 된다. Kadusin & Martin(1888)은 1970~80년대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들을 검토하고 여성의 취업이 아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모의 취업이 자녀의 독립심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애착의 형성은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하므로 취업자체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Clarke-Stewart & Fein, 1983). 취업모 자녀에게 있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의 애착관계 만큼이나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진경, 1991). 따라서 부모에 의한 양육에 대한 찬반 논의보다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논쟁은 OECD 선진국들이 육아휴직의 확대 장착으로 영아의 양육을 부모가 직접 담당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 모두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나. 자녀양육의 사회화 당위성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녀양육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사회적, 경제적, 가족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아동의 양육은 부모와 더불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 사회육아는 필연적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권, 아동의 이익 최우선, 차별금지 등 아동의 권리보장 사상에 기초한 아동복지적 접근이 강조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1989년에 채택된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보육의 사회화의 당위성은 발전적 아동복지의 시각,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참여 욕구의 증대,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취업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되었으나(이혜경, 1991), 최근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의 활용과 인적 지원개발이 중요한 이미를 갖게 되었다(서문희 외, 2004). 1990년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들은 보육서비스의 공급증가나 보육비 지원 등이 취업모의 고용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도구임을 밝히고 있다(Sleebos, 2003).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중임금을 낮추었을 때 시장참여가 늘어날 수 있고, 시간 집약적인 양육을 휴가나 사회화 방식을 통해 지원해 주었을 때, 시장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최은영, 2004). 출산력도 보육지원의 영향을 받는데 OECD 국가의 경우 영아보육 서비스 이용률 1% 증가시 출산력이 0.01명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Sleebos, 2003). 최근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육아지원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약 38%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D'Addio & Mira d'Ercole 2005).[주31)]

다. 자녀양육 사회화 유형

보육의 사회화에 대한 접근 방법은 이념과 보육정책에 대한 논의로 나타난다. 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감독 등에서의 국가의 개입 정도 및 시장의 개입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분류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김종해(1993)는 Esping-Anderson이 제시한 이념에 기초한 자유주의형, 보수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의 3가지 복지국가 분류를 그대로 보육제도에 적용하여 육아책임, 문제원인, 급여대상, 급여수준, 보호자 비용부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주32)]

주31) 근로형태의 다양화(15%), 보육의 확대(38%), 아동양육비 감소(아동수당 등 47%)를 병행할 경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50명으로 증가 가능하다고 분석하였음.

주32) 자유주의형은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빈곤취업모 우선으로 최저수준인 양적 선별주의적 보육제도이고, 보수주의 모형은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피용자 및 취업모 우선이고 급여수준은 계층에 따른 차이를 두는 양적 보편주의를 취하는 국가모형이고, 사회민주주의적 모형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질적 보편주의에 입각한 보육의 사회책임을 강조함.

OECD에서는 OECD 국가들의 보육 지원 접근방식을 공공제공방식, 책임공유방식, 자유방임방식의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제공형은 북유럽국가들처럼 시설설치부터 운영을 주로 국가가 책임지는 유형이고, 책임공유형은 독일, 스페인처럼 부모와 정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유형이다. 자유방임형은 자녀보호를 기본적으로 가정의 책임으로 보는 유형으로 미국이나 호주를 예로 들고 있다(OECD, 1999).

한편으로 Pollard(1991)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liberal), 보수주의(conservative), 사회주의(socialist),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의 4가지 이념 분류를 적용하여 시설보육과 가정 중심 보육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유주의적 입장은 부모의 선택과 아동 및 가정의 차이를 존중하고, 보수주의적 입장은 가정보육을, 사회주의적 견지에서는 보육시설을 중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회 재생산적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유형에 동일하게 지원하고 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였다.

2. 보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육서비스의 질은 아동발달에 긍·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Masse & Barnett(2003)는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비용-효과성 분석 연구에서 양질의 서비스는 이들 아동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정부투자 $4당 $1의 환원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보육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 인지 및 사회성 발달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애착관계의 형성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기재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결과들은 보육교사와의 애착관계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대치할 수는 없지만, 교사와의 애착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Barnas & Cummings, 1994). 보육교사와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영아는 보육시설에 생활하는 동안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전인적 아동발달에 초석을 마련한다. Howes et al.(1993)의 연구에서 보육교사와 애착관계가 안정적인 경우의 영아는 다른 영아들과의 놀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래집단 내에서도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보다 성취 지향적으로 성장한다고 밝혔다.

둘째,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준다. 특히 발달적 자극이 부족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학습경험이 인지발달에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mey, 1992; Raynolds, 1999). 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서는 기관형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의 지능지수가 하락되는 경우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적었다(Golden et al., 1988). 또한 양질의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나 인지능력이 질적 수준이 낮은 보육시설의 아동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하였다(Scarr & Thompson, 1994).

셋째, 사회성 발달은 유아의 전반적인 생활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지적 능력과 활동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보육기관을 종일제로 이용한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많이 나타낸 반면 놀이 활동에 있어 비참여적 행동이나 방관자적 행동은 적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Schindler, 1998; Field, 1998; 이영, 1990).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Bates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과 연령 그리고 가족환경 요인을 통제하고 보육교사와 부모가 보고한 문제행동 기록을 비교한 결과,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이 공격성, 분노, 충동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매개변수로 이용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협력성이 증가하였고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박윤정, 1995; 양연숙, 2000).

이상과 같이 결과는 보육서비스와 아동발달과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보육서비스의 확충보다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한 보육시설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양질의 보육환경은 아동이 인지발달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활동을 제시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은 열악한 가정환경이 유발할 수 있는 발달장애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자녀보육 관련 선행연구

자녀보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보육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육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보육비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가. 보육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구특성

보육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유형과 가구소득을 들 수 있다. 가구형태, 특히 가족 내에 친·외조모 등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에 보육시설의 이용률 및 이용시간을 떨어지며 영아에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다. 우리 경우도 취업모의 영아는 조부모에 의한 양육지원 비율이 매우 높다(서문희 외, 2002, 2005).

가구의 소득수준도 보육시설 이용 등과 관련성이 있다.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비공식부분 보육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Piecyk et al., 1999).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공식보육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영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비혈연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이 이용하지만 혈연에 의한 보육은 저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다(서문희 외, 2005).

또한 양육 및 보육 형태는 지역과 관련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Atkinson(1994)은 도시에서 가정내 보육을, 농촌에서는 친인척에 의한 보육을 더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보육비율은 지역별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조부모 중에서도 도시보다 읍면에서 동거조부모에 의한 보육비율이 높고 도시는 비동거 조부모애 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서문희 외, 2005)

2) 모의 특성과 보육 방식

모의 특성 중에서는 여성의 취업, 근로의 유연성, 근무시간, 교육수준,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의 가치 등이 보육 유형에 영향을 준다. 아동보육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취업이다. 취업형태가 안정되고 취업시간이 길수록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보육시간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 조사 결과 보육아동 중 46.6%의 모가 취업중인 것으로 조사되다(이미화 외, 2005). 그러나 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취업모 아동 중 영아는 25.8%, 유아는 50.4%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미취업모 아동 각각 6.0%, 31.6%보다 월등하게 높다. 또한 아동전체 보육시간 평균은 7시간 20분인데, 모가 취업상태인 아동은 평균 8시간 4분, 비취업모의 아동은 6시간 29분으로 차이를 보였다(서문희 외, 2005).

보육유형에 대한 부모선택의 제약조건으로는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여 취업여부뿐 아니라 근무형태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모가 오후나 밤에 일을 하는 경우 가정내 보육을 비롯한 비공식보육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비공식 보육이 어려운 상황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은 상쇄된다고 하겠다.

보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도 가정내 보육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Brown-Lyons, 2001). 가정내 보육은 인간적 유대감, 문화 및 종교적 유사성, 인생이나 보육에 대한 유사한 견해 등을 선호할 경우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보육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모가 아동의 인지 및 사회발달에 강조하며 기관보육을 하는 부모는 전문성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비공식부분의 보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은 친숙함에 가치를 둔다(Butler et al., 1991).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설보육을 선호하고 비공식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Piecyk et al., 1999). 비공식 보육 중에서도 친인척 외 가정내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친인척 보육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났다(Casper, 1997)

3) 아동의 특성

아동 변수 중에서 보육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아동의 연령이다. 아동의 연령이 3세 미만이면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이웃에 의한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게 되고 3세 이상이면 시설보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만 3세 미만인 자녀일 경우 교육보다는 안전 및 보호활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는 가정적 분위기가 부족한 보육시설 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안전·교육면에서의 불신이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0).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에는 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게 때문에 방과후 아동에 대해서도 단순보호를 위한 가정내 보호를 선호한다고 한다(Morgan, 2001).

가정내 보육이용은 형제자매수와도 관련성이 있어서 미국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가 두 명 이상일 때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ICHD, 1997). Hofferth et al.(1991)의 연구에서도 가족외 사람에 의한 가정내 보육 가정의 평균 아동수는 1.5명으로 조사되었고 친인척 보육 가정의 평균 아동수는 1.37명으로 조사되었다.

나. 보육교육서비스 결정요인

전국자료를 이용한 보육교육서비스 결정요인 분석은 「2000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서문희 외, 2001)과 「200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서문희 외, 2004)이 있다. 이 두 분석은 가구, 모 및 아동특성 등 유사한 독립변수와 서비스 유형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 자료 분석결과는 거주지역은 읍·면부에 살수록 3세아 보육이용이 높

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가구유형이 3·4세대인가 하는 점은 2세아 보육시설 이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친인척에 의한 보육 이용률에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한다. 가구소득은 많을수록 3세 이상아의 기관 이용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학원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이용한다. 모의 학력은 중학이하이냐 아니냐하는 기준은 가구소득과는 반대로 3세 이상 아 중 모(母)의 교육수준이 중학 이하이면 그 이상인 가정에 비하여 보육시설을 더 이용하고 학원과 유치원을 덜 이용한다. 한편 대학졸업은 유치원과 친인척은 더 이용하지만 선교원과 학원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모의 결혼상태는 유배우는 유치원을 이혼·별거·사별 모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한다. 취업모의 자녀는 보육시설, 선교원 및 친인척에 의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서 미취업모의 자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은 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연령은 0~2세아의 보육시설, 3세 이상 아의 유치원 및 학원 이용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3세 이상 아의 보육시설 및 선교원 이용과 친인척에 의한 보육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년 자료의 분석에서 나타난 특성은 2000년 자료의 분석결과에 비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구소득이다. 연도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중 대리양육서비스별 서비스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모(母), 그리고 아동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가구소득은 보육시설 이용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유치원과 학원 및 친인척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이용이 높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3세 이상 아의 기관 이용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학원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이용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2002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치원과 학원 이용은 가구소득과 유의한 정

(+)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보육시설 이용은 소득계층별 차별이 없지만 유치원과 학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보다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이 소득변수가 보육시설 이용이 미치는 유의성의 변화는 보편적 보육개념의 확산과 더불어 보육시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보편적인 기관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자녀양육의 변화

1. 사회변화와 자녀양육

자녀양육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산업화, 핵가족화 등 사회와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변모되어 왔다. 농경사회, 확대가족 속에서의 자녀양육은 주로 어머니와 친조모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농경사회, 부계중심의 확대가족 속에서 여성은 엄청난 가사노동과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아동 양육의 일정 부분이 자연스럽게 친조모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수유 및 양육과 직접 관련된 일은 어머니가 담당하고, 친조모들은 주로 아동의 놀이 및 초보적인 기본습관을 들이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유안진, 1990).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가족은 노동력의 재생산 및 소비기능만을 하게 되고,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구조로 변모하게 되면서 가족내에서 성별 역할구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남성은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여 소득을 올리고 여성은 가정 내 가사활동과 육아를 전담하는 일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녀양육은 어머니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가정내 이분법적인 역할구분에 커다란 의식변화가 오게 된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당연시되었던 가족 내 자녀양육기능이 약화되면서 다른 양육지원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개인적, 기업적 차원에서 점점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유아의 경우는 아동발달 및 초등학교 준비라는 다른 시각에서 보편적으로 접근되었다. 인적자원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선진국들 여러 나라가 만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그 연령을 4세, 3세로 낮추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교육은 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보육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GDP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의료비 및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보육의 사회화는 출산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여성취업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이 높은 국가 모두 공보육체계가 잘 갖추진 국가임(Meyers & Gornick, 2003)이 그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2.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현황

2004년 말 현재 보육시설수는 25,319개소이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던 1991영 3690개소에 비하면 크게 증가되었고, 보육아동 수도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여 1991년도 89,441명에 비하여 2001년은 93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용비율은 2002년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증가된 것이다. 영아는 10.1%에서 19.3%로 증가하였고, 유아는 28.4%에서 41.1%로 증가하였다.(그림 11-1 참조).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54만명이므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약 147만의 아동이 제도화된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아동대비 비율로 보면 0세는 5.3%에 불과하고 아동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만5세아는 78.9%가 된다(표 1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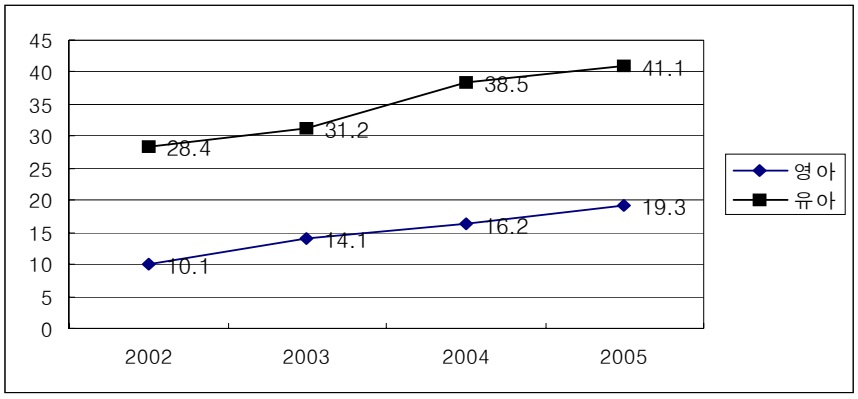
〈표 11-1〉 영유아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 명)

구 분	총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보육시설(A)	924,599	25,225	79,885	176,140	230,737	218,063	194,549
유치원(B)	541,603	-	-	-	74,824	176,963	289,816
이용아동 (C=A+B)	1,466,202	25,220	79,885	176,140	305,561	395,026	484,365
전체아동(D)	3,158,538	479,102	478,115	479,029	513,930	594,759	613,603
이용률(C/D)	46.4%	5.3%	16.7%	36.8%	59.5%	66.4%	78.9%

자료: 여성가족부, 2005년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04.

〔그림 11-1〕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변화 추이: 2002~2005년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녀양육지원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 영역에 맡겨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교육 수단 중 보육시설, 유치원은 제도화된 기관이고 이외 학원, 선교원 등 비공식부분 기관과 친인척, 이웃, 보육모등 가정 내 보육제공자에 의한 보육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치원 16.5%,[주33] 보육시설 27.9%이고 이외 타 기관 및 개인서비스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 영아는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14.6%인데 혈연 이용률은 21%로 기관보

주33) 유치원 이용률은 반일반이 18.0%, 종일반이 2.8%임

다 혈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다. 유아도 반일제 미술학원과 선교원 등 유사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율이 16%가 된다.

〈표 11-2〉 모(母)의 취업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1)]

(단위: %, 명)

구분	영아				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전체
기관	28.5	9.8	50.0	14.6	90.6	80.8	80.4	84.3	56.8
보육시설	25.8	6.0	50.0	11.2	50.4	31.6	37.3	38.9	27.9
유치원	0.3	0.1	-	0.2	23.2	29.6	29.4	27.2	16.5
선교원	0.7	0.2	-	0.3	3.2	2.8	2.0	2.9	8.3
반일제이상학원	0.3	0.3	-	0.3	12.2	14.4	11.8	13.4	1.9
일반 학원	0.3	0.1	-	0.2	15.1	13.8	11.8	14.3	8.7
기타	1.3	3.1	-	2.6	4.1	6.0	-	5.1	4.1
혈연	61.9	8.6	-	21.8	36.8	5.3	82.6	19.9	21.0
동거조부모	22.8	3.7	-	8.9	17.0	3.2	66.7	10.6	9.9
비동거조부모	34.6	3.8	-	11.7	16.7	1.5	8.0	7.5	9.2
친인척	7.0	1.6	-	2.	3.8	0.7	11.7	2.1	2.4
비혈연	9.6	0.3	-	2.7	2.5	0.1	3.9	8.1	1.7
(수)	(302)	(864)	(2)	(1,171)	(682)	(1,053)	(51)	(1,792)	(2,962)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서문희 외,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취업모의 영아는 보육시설 25.8%를 포함하여 28.5%가 기관을 이용하고 혈연, 비혈연 등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율이 71.5%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육시설이 취업모 영아보육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의 경우는 비혈연으로부터의 지원은 상당수가 기관이용과 함께 이용하는 중복이용이지만 36.8%로 미취업모 5.3%에 비하여 높다. 또한 반일제 이상 학원 15.9%, 친인척 13.9% 및 선교원 2.6%로 주요한 보육·교육 수단임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기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자녀의 사회성 발달 28.4%, 전인적 발달 28.2%로 56.6%가 아동 발달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대리보호는 27.5%이다. 이외 초등학교 준비 12.7%, 예체능교육 2.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1-3〉 현재 이용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선교원	전체
전인적 발달	24.7	35.6	24.9	29.3	28.2
초등학교 준비	5.2	24.1	16.7	5.2	12.7
예체능 특기교육	0.4	1.4	14.7	-	2.9
부모대신보호	40.2	12.8	16.7	17.2	27.5
사회성 발달	29.0	26.1	26.5	46.6	28.4
기타	0.5	-	0.4	1.7	0.4
계(수)	100.0(821)	100.0(486)	100.0(245)	100.0(58)	100.0(1,610)

주: 빈도수 분포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자료: 서문희 외, 『2004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용 이유는 기관별로는 차이를 보이는데 대리보호가 이유인 비율이 어린이집 40.2%이었고,[주34] 유치원은 12.8%로 중 유치원이 대리보호 기능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유치원은 전인적 발달을 지적한 비율이 35.6%로 높았고, 초등학교 준비라는 비율이 24.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초등학교 준비라는 응답이 16.7%이었지만, 예체능 특기교육의 비율이 14.7%로 다른 기관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았다.

제 3 절 미취학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가. 분석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3~5세아의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육시설 이외에도 유치원이 어느 정도 보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사설 학

주34) 2002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자의 이용이유로 가족 중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비율이 34.3%이었음.

원이나 선교원 등 보육교육 유사기관이 있고, 이외에 친인척에 의한 보육 및 친인척 이외의 이웃 보육모나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가정내 보육 등 다양한 아동보육 수단과 대체 및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적으로 한 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 서비스의 유형을 결정한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인 보육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유아휴직과 더불어 공보육 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의 경우 시장경제 및 비공식보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공보육 기회의 차이는 보육의 질이나 보육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육의 질에 대한 개념이 일치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보육의 질은 공식보육이 비공식보육보다 높은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비공식보육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하기보다는 보육제공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주로 편의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공보육이 취약한 국가로 시장영역의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유형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특정 사회 속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부모가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가는 부모나 가족 및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한 가정에서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하여 특정 서비스를 보육·교육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하는 데 관한 것이다. 보육·교육서비스의 선택에는 보육시설 등 보육·교육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 기능,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소요비용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체인력이 있는지 등의 아동 가정의 특성, 취업 등 모의 특성 및 연령과 같은 아동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별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차이를 밝혀서 각 서비스의 이용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아울러 이들 보육·교육서비스이용에 대한 소요 비용과 이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파악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나. 분석목적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 중에서 특정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규명하고 서비스에 따른 차이를 밝힘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모의 특성 및 아동특성을 규명한다. 즉, 거주지역, 가구형태, 가구소득 등 가구특성, 모의 연령, 학력, 결혼상태, 취업여부, 취업형태, 소득 등 모의 특성 및 아동의 성과 연령 등 특성별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보육·교육서비스별 이용률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출산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 종전 분석 결과와 연도별 비교를 실시하여 이용요인의 변화를 파악한다. 둘째, 보육·교육서비스별 소요비용을 분석하고, 소요비용이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이용행태의 변화를 추정하고 앞으로의 정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가. 분석자료

본 분석은 '2003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심층분석으로 보육관련 자료 중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관련 자료이다. 「2003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보육관련 문항은 한 가구에 대하여 초등학교 이하 연령 아동 3명까지를 대상으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을 조사하였고, 아동 각각에 대하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최대 3가지까지 응답하도록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 중 본 장에서 활용한 것은 미취학아동이며, 아동 개인단위 및 기구단위의 두 가지 형태로 이용되었다. 가구단위 자료는 15~49세 기혼여성 중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에 대한 자료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15~49세 기혼여성 중 35.3%가 5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었다(표 11-4 참조).

〈표 11-4〉 15～49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별 0～5세 자녀수 백분율 분포

(단위: 천원, 명)

자녀수	영아	유아	영유아
없음	85.2	82.5	73.1
1명	13.1	15.3	18.3
2명	1.6	2.1	8.1
3명	-	-	0.4
계(수)	100.0(9,7370)	100.0(9,737)	100.0(9,737)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

이들 영유아수는 모두 가구 3,775명이다. 이들 영유아 개개인을 중심으로 개인단위 분석 자료가 구성되었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표 11-5>와 같다.주35) 동 조사에서는 미취학 아동 각각에 대하여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최대 3가지까지 복수 응답하도록 조사하였는데, 두 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각각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자로 중복하여 간주하였다.

〈표 11-5〉 분석대상 미취학 아동 연령 특성(2004. 5. 30 기준)

(단위: %, 명)

연령	아동수	백분율
0세	511	13.5
1세	521	13.8
2세	603	16.0
3세	644	17.1
4세	621	16.5
5세	699	18.5
6세 이상	173	4.6
계(수)	3,775	100.0

주35) 보육통계나 보육시설 입소 및 아동연령별 반 편성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을 모두 6세 미만아로 표기하는 것임. 그러나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 5월 30일을 만 연령 산출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산출 기준인 3월 1일 이후부터 5월 30일 사이에 만 6세가 된 아동이 있게 됨. 또한 일부 취학이 늦어져 7세인 아동도 미취학 아동으로 그 이하의 연령 아동과 동일한 보육·교육서비스의 대상이므로 본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나. 분석방법

1) 서비스 결정요인 분석

먼저 이용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에 관련 변수는 본 출산력 조사 1차 분석결과(김승권 외, 2004)와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서문희 외, 2002)와 「2004년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요구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본 분석에 이용가능한 조사자료 중에서 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독립변수는 거주지역, 가구특성 변수로 거주지역, 가구형태, 주택유형, 주택소유여부, 가구소득, 모의 특성변수로는 학력, 결혼상태, 취업유무, 부의 학력, 그리고 아동 변수로는 연령이다. 한편 종속변수는 각 서비스 이용여부이다. 보육·교육서비스는 영아는 조부모 등 가족, 아웃탁아보등 비혈연 등 비공식부분이 있고, 기관으로는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및 선교원 등의 4개 기관이 주를 이룬다. 본 분석에서는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다루었는데, 영아는 보육시설과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였고, 유아는 4개 기관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유아도 혈연 및 비혈연에 의한 보육이 있지만 대부분 기관 이용과의 중복 이용임을 감안하여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독립변수에 의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및 분산분석 검증을 실시하였고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 중 노미날 변수는 더미화하였다.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최고로 높은 것이 모의 교육수준과 부의 교육수준으로 .568이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평균값은 <표 11-6>과 같다.

〈표 11-6〉 가구특성별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거주지역	1=동부, 0=읍·면부	.833	.37318
가구유형	1=3~4세대, 0=기타	.153	.36013
주택형태	1=아파트, 0=기타	.507	.500
주택소유	1=자가, 0=기타	.495	.500
가구소득	연속변수	266.7	139.4
부의 학력	1=중학 이하, 0=고등학교 이상	.349	.477
모의 학력	1=대졸 이상, 0=대졸 미만	.235	.424
모의 결혼상태	1=유배우, 0=이혼 별거 사별	.965	.184
모의취업상태	1=취업, 0=미취업	.331	.471
아동 연령	연속변수	2.834	1.79
종속변수			
보육시설 이용	1=이용, 0=미이용	.218	.413
유치원 이용	1=이용, 0=미이용	.248	.432
학원 이용	1=이용, 0=미이용	.142	.350
선교원 이용	1=이용, 0=미이용	.021	.143
친인척 이용	1=이용, 0=미이용	.181	.385
비혈연 이용	1=이용, 0=미이용	.021	.142

2) 보육교육비용 분석

보육교육비용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는 소요되는 비용 및 비용 지불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아동연령,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이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독립변수에 의한 보육·교육비용의 집단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 분석 및 분산분석 검증을 실시하였다.

3.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보육서비스 이용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짐은 익히 질 알려진 사항이다. 0세아 등은 비공식부분의 서비스를 선호하고 2세부터 보육시설 이용이 많아지다가 4세가 되면 감소하고 대신에 유치원 이용이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또한 유아와 영아는 그 이용 동기에 차이가 있다. 영아는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유아는 아동발달을 목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행태가 다르므로 이들은 한꺼번에 다룰 경우 유아와 영아의 서로 다른 성격이 상쇄되거나 수가 적은 영아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유의한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보다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을 구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우리나라 영아는 보육시설 이외에 조부모 등 혈연에 의한 보육 비율이 높고 이웃탁아모 등 비혈연에 의한 지원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사용된 가구, 부모 및 아동 관련 변수별 보육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된 10개의 독립변수 영아 보육시설 이용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가구 유형과 모의 취업, 모의 교육수준, 모의 유배우 상태 및 아동연령이다.

모가 취업중이고 유배우자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을 경우, 3.4세대가족이 아닐 경우, 핵가족일 경우에 영아 보육시설 이용이 확률이 높다. 가구소득은 분석한 3종류의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보육시설 이용자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다.

가족, 친인척에 의한 양육지원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가구유형, 주택유형, 모의 취업, 모의 교육수준, 모의 유배우 상태, 부의 교육수준이다. 모가 취업중이고 유배우자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보육시설 이용과 같지만, 부와 모의 대졸 이상 교육수준, 아파트 외 주택, 3.4세대일 경우에 혈연의 지원이 받은 차이를 보인다.

비혈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택유형이 아파트, 모와 부의 교육 수준 대졸 수준 및 모의 취업이다. 가구소득은 비혈연 이용가구의 소득 평균이 500만원 이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높다. 한 가지 이해하기 어

려운 점은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가 자가에 비하여 비혈연 이용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소수 상위계층이 경우는 주택 자가 여부 변수로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표 11-7〉 제 특성별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차이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	친인척	비혈연
전체		12.0	23.7	3.4
(수)		(1,635)	(1,635)	(1,635)
지역	동부	12.0	21.5	3.4
	읍·면부	12.2	16.7	1.3
	χ^2(df)	.01(1)	3.1(1)	.001(1)
가구유형	3~4세대	8.0	48.6	2.0
	기타	12.7	15.7	3.6
	χ^2(df)	4.5(1)*	140.1(1)**	1.7(1)
주택유형	아파트	11.1	17.3	4.4
	기타	12.9	24.2	2.3
	χ^2(df)	1.1(1)	11.9(1)**	5.1(1)*
주택소유여부	자가	11.6	22.0	2.3
	기타	12.3	19.7	4.2
	χ^2(df)	.2(1)	1.2(1)	4.5(1)*
모취업여부	취업	26.6	49.8	12.0
	미취업	7.0	10.7	0.4
	χ^2(df)	112.9(1)**	288.7(1)**	127.7(1)**
모교육수준	대졸 이상	12.6	24.0	7.5
	대졸 미만	11.8	19.4	2.0
	χ^2(df)	.16(1)	5.0(1)*	28.2(1)**

〈표 11-7〉 계속

구분		보육시설	친인척	비혈연
모의 혼인상태	유배우	11.7	20.4	3.5
	기타	23.3	34.1	-
	χ^2(df)	5.3(1)*	4.9(1)*	1.5(1)
부의 교육수준	대졸 이상	14.0	25.5	5.6
	대졸 미만	10.9	19.2	2.2
	χ^2(df)	3.4(1)	4.3(1)*	13.5(1)*
아동연령	0	1.4	22.9	2.0
	1	6.9	20.2	4.4
	2	25.4	19.2	3.6
	χ^2(df)	169.9(2)**	2.3(1)	5.1(2)
가구소득 평균(SD)		295.2(177.1)	318.5(132.4)	501.2(205.2)
	F	26.6**		

주: # p< .1, * p<.05, ** p<.01을 의미함.

다음으로 0~2세아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표 11-8>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결정요인을 보면 핵가족보다는 3·4세대 가족이, 거주지역이 읍부가 동부에 비하여, 모의 특성은 이혼·사별·별거가 유배우에 비하여, 취업이 미취업에 비하여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은 어릴수록 보육시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ald 값은 연령, 모 취업, 혼인상태, 가구유형의 순이고, 특히 연령과 모 취업의 값은 매우 높다. 유사한 2000년 출산력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가구소득, 학력이 낮은 경우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분석은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친·인척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영아 연령이 어릴수록, 모가 취업상태일수록, 읍면보다는 동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3·4세대가구 일 때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모의 배우자가 없을 때와 주택이 아파트 이외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유의도 .05 수준에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Wald 값으로 보면 취업과 핵가족이 차이를 가져오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확

대가족일 때와 모의 배우자가 없을 때 모두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배우자 없는 모을 지원하는 친·인척은 친정식구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친·인척에 의한 보육은 사용된 변수 중에서 모의 취업상태와 소득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이외 변수들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의 Wald 값은 모두 34로 유사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종속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10가지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친인척 보육, 보육시설, 비혈연의 순으로 높았다.

〈표 11-8〉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B	SE	Wald	Exp(B)
보육시설				-
거주지역(1=동)	-236	.246	.972	1.266
가구유형(1=3·4세대)	-1.070**	.302	12.543	.343
주택유형(1=아파트)	-.106	,186	.326	.899
주택소유(1=자가)	.111	.185	.361	1.118
가구소득(연속변수)	-.000	.001	.126	1.000
모의 학력2(1=대졸 이상)	-.250	.246	1.031	.779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1.722**	.459	14.086	-.179
모의 취업상태(1=취업)	1.634**	.193	71.758	5.127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340*	.217	2.453	1.405
연령(연속변수)	1.588**	.155	105.209	4.894
Constant	-3.408			
log likelihood X2	885.8	R2=.162		
혈연				
거주지역(1=동)	.951**	.224	17.989	2.587
가구유형(1=3·4세대)	1.900	.197	92.877	6.688
주택유형(1=아파트)	-.303*	.155	3.801	.739
주택소유(1=자가)	-.210	,164	1.648	.810
가구소득(연속변수)	.000	.001	.201	1.000
모의 학력2(1=대졸 이상)	.232	.204	1.297	1.261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835*	.408	4.196	.434
모의 취업상태(1=취업)	2.403**	.169	203.079	11.061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110	.187	.347	1.116
연령(연속변수)	-.332**	.090	13.615	.717
Constant	-2.112			
log likelihood X2	1221.2	R2=224		

〈표 11-8〉 계속

구분	B	SE	Wald	Exp(B)
비혈연				
거주지역(1=동)	-.284	.436	.425	.753
가구유형(1=3·4세대)	-.814	.558	2.127	.443
주택유형(1=아파트)	.343	.341	1.014	1.409
주택소유(1=자가)	-.332	.363	.834	.718
가구소득(연속변수)	.005**	.001	34.770	1.005
모의 학력2(1=대졸 이상)	.662	.426	2.414	1.938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3.854	14.168	.074	47.175
모의 취업상태(1=취업)	2.868**	.491	34.151	17.610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268	.421	.407	.765
연령(연속변수)	.092	.195	.225	1.097
Constant	-10.761			
log likelihood X2	303.8	R2=.098		

주: # p< .1, * p<.05, ** p<.01을 의미함.

<표 11-9>는 이상과 같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변수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우선 영아보육은 모의 취업이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은 늘고 비혈연에 의한 보육은 감소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 일반주택 거주가 보육시설과 친인척 지원을 더 많이 받으며, 동지역에서는 친인척 이용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야 비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이 가능하다. 2000년 자료 분석과 비교하여 보육시설 이용에서 가구유형은 유의성이 없어졌는데 이는 외가 등 별거하는 조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9〉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요약

구분	보육시설	친인척	비혈연	2000년 보육사설
거주지역(1=동)		++		
가구유형(1=3·4세대)				--
주택유형(1=아파트)	--	-		
주택소유(1=자가)				
가구소득(연속변수)			++	
모의 학력(1=대졸 이상)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	-		
모의 취업상태(1=취업)	++	++	++	++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연령(연속변수)	++	--		++

나. 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이용에 대해서도 영아와 마찬가지로 선정된 독립변수들이 기관 이용여부에 차이를 가져오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11-10>은 가구, 부모 및 아동 관련 변수별 보육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제시된 10개의 독립변수 영아 보육시설 이용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지역, 주택유형, 주택소유, 모의 취업, 모의 교육수준, 아동연령이다.

〈표 11-10〉 가구특성별 미취학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선교원
전체		29.3	42.9	23.9	3.1
(수)		(2,137)	(2,137)	(2,137)	(2,137)
지역	동부	26.2	44.5	25.1	3.0
	읍·면부	44.2	35.0	18.6	3.6
	χ^2(df)	46.5(1)**	11.0(1)**	7.0(1)**	.4(1)
가구유형	3,4세대	33.0	40.2	16.8	4.3
	기타	28.6	43.4	25.2	2.9
	χ^2(df)	2.6(1)	1.1(1)	10.8(1)**	1.8(1)
주택유형	아파트	26.1	49.0	26.2	3.5
	기타	32.5	36.6	21.7	2.7
	χ^2(df)	10.6(1)**	337(1)**	6.0(1)*	1.3(1)
주택소유여부	자가	25.9	47.7	26.6	2.8
	기타	33.0	37.5	20.9	3.5
	χ^2(df)	13.0(1)**	223(1)**	9.5(1)**	.8(1)
모의 취업여부	취업	35.7	45.9	22.0	2.5
	미취업	25.2	41.0	25.2	3.4
	χ^2(df)	27.2(1)**	6.0(1)*	2.9(1)	1.4(1)
모의 교육수준	대졸 이상	22.2	57.5	28.4	3.3
	대절 미만	31.5	38.6	22.6	3.0
	χ^2(df)	15.1(1)**	55.0(1)**	6.8(1)**	.1(1)
모의 혼인상태	유배우	29.0	43.3	24.4	3.2
	기타	36.0	32.7	12.4	1.1
	χ^2(df)	2.0(1)	3.2(1)	6.8(1)**	1.2(1)
부의 교육수준	대졸 이상	23.8	53.2	30.5	3.0
	대절 미만	32.2	37.4	20.5	3.2
	χ^2(df)	16.7(1)	49.4(1)**	26.6(1)**	.6(1)
아동연령	3	34.8	21.6	9.6	4.4
	4	31.1	42.4	19.9	3.7
	5	21.9	58.9	36.2	2.0
	6	18.7	59.3	42.4	.6(1)
	χ^2(df)	54.3(3)**	211.2(1)**	167.8(3)**	10.6(3)*
가구소득 평균		266.1	298.0	248.1	233.8
(표준편차)		(117.0)	(139.2)	(117.0)	(85.5)
	F	F=9.8**			

주: # p< .1, * p<.05, ** p<.01을 의미함.

유치원은 보육시설 이용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지역, 주택유형, 주택소유, 모의 취업, 모의 교육수준, 아동연령 이외에 부의 교육수준도 대졸을 기준으로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변수들의 방향성을 차아가 있다. 학원은 모 취업변수 이외에 모든 변수가 잡단간애 차이를 나타냈다. 선교원은 아동연령에서만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소득변수는 유치원 이용자가 가장 높고, 선교원 이용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원은 종전 분석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학원의 개념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주36)

다음으로 3~5세아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표 11-11>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보육시설 이용 결정요인을 보면 거주지역이 읍부가 동부에 비하여, 모의 취업이 미취업에 비하여 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도 많을수록 보육시설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Wald 값은 연령, 모 취업, 거주지의 순이다. 가구소득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 자가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아직도 중산층 이하가 보육시설을 선호함을 반영하였다.

유치원 이용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모의 학력수준이 대졸이하보다는 이상일 때,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 경우가 유의도 .01 수준에서, 그리고 주택이 아파트이고 자가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유의도 .05 수준에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비하여 유치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점을 잘 나타낸다. 이는 종전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주36) 「2004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와 비교하여 학원 비용이 보육시설 이용보다 낮은 것은 학원을 반일제 이상 학원과 특기 중심의 학원을 모두 포함하여 비용이 저렴한 특기학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표 11-11〉 유아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B	SE	Wald	Exp(B)
보육시설	**			
거주지역(1=동)	-.639**	,127	25.499	.528
가구유형(1=3·4세대)	.027	.146	.034	1.027
주택유형(1=아파트)	-.044	.107	.171	.957
주택소유(1=자가)	-.276**	.105	6.877	.758
가구소득(연속변수)	-.001	000	2.524	.999
모의 학력2(1=대졸 이상)	-.274	.155	3.113	.761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219	.249	.773	.804
모의 취업상태(1=취업)	.558**	.106	27.498	1.747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138	.134	1.060	.871
연령(연속변수)	-.385**	.054	50.849	.680
Constant	1.638			
log likelihood χ^2(df)	2377.8	R2=.068		
유치원				
거주지역(1=동)	.220	.133	2.746	1.246
가구유형(1=3·4세대)	-.010	.143	.005	.990
주택유형(1=아파트)	.258*	.103	6.305	1.294
주택소유(1=자가)	.237*	.100	5.573	1.268
가구소득(연속변수)	.002**	.000	18.956	1.002
모의 학력2(1=대졸 이상)	.455**	.140	10.481	1.567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102	255	.160	1.107
모의 취업상태(1=취업)	.054	.103	.275	1.056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189	.124	2.314	1.208
연령(연속변수)	.689**	.052	173.924	1.991
Constant	-4.396			
log likelihood χ^2(df)	2545.3	R2=139		
학원				
거주지역(1=동)	.199	.157	1.598	1.220
가구유형(1=3·4세대)	-.357*	.175	4.161	.700
주택유형(1=아파트)	.020	.118	.029	1.020
주택소유(1=자가)	.254*	.115	4.881	1.289
가구소득(연속변수)	.000	.000	.756	1.000
모의 학력2(1=대졸 이상)	-.022	.156	.020	.978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723**	.341	4.490	2.060
모의 취업상태(1=취업)	-.226	.118	3.643	.798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492**	.139	12.464	1.635
연령(연속변수)	.718**	.060	144.358	2.050
Constant	-5.233			
log likelihood χ^2(df)	2092.3	R2=.097		

〈표 11-11〉 계속

구분	B	SE	Wald	Exp(B)
선교원				
거주지역(1=동)	-.216	.324	.444	.806
가구유형(1=3·4세대)	.753*	.337	4.983	2.124
주택유형(1=아파트)	.448	.274	2.672	1.565
주택소유(1=자가)	-.299	.269	1.234	.742
가구소득(연속변수)	-/002	.001	2.484	.998
모의 학력2(1=대졸 이상)	.301	.365	.666	1.352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1.800	1.290	1.947	6.048
모의 취업상태(1=취업)	-.281	.286	.963	.755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084	.339	.062	.919
연령(연속변수)	-.407**	.144	8.040	.665
Constant	-3.057			
log likelihood χ^2(df)	564.9	R2=.011		

주: # p< .1, * p<.05, ** p<.01을 의미함.

유아학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연령과 아동 부의 학력이 유의도 .01 수준에서 유의하다 또한 모의 유배우 상태, 핵가족, 주택이 자가일 때 그리고 모가 미취업인 경우에 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보다는 아니지만 모의 생활 여건이 비교적 좋을 때 자녀를 학원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런데 학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대신에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과 한두 가지 특기교육을 받기 위하여 이용하는 학원은 그 성격이 다른데, 여기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선교원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확대가족일 경우에 이용할 확률이 높고, 그 이외 변수는 의미있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교원 이용자가 대부분 종교가 이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통한 설명력도 .011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의 4가지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에서 10가지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친인척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선교원의 순이다. <표 11-12>는 이상과 같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2000년도 자료 분석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1-12〉 영아 보육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요약

구분	2003년 자료 분석				2000년 자료 분석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선교원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선교원
거주지역(1=동)	--				-			
가구유형(1=3·4세대)			-				-	
주택유형(1=아파트)		+		-	na	na	na	na
주택소유(1=자가)	--	+	+		na	na	na	na
가구소득(연속변수)		++			--	++	++	
모의 학력(1=대졸 이상)		++	++			++	--	--
모의 결혼상태(1=유배우)			++		--	++		
모의 취업상태(1=취업)	++				++		--	+
부의 학력1(1=대졸 이상)			++					
연령(연속변수)	--	++	++	--	--	++	++	-

주: +, -는 p<.05, ++ -- 는 p<.01을 의미함.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어촌에서 조시보다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핵가족이 학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두 분석 결과가 동일하다. 가구소득의 경우 유치원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2000년 자료나 2003년 자료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은 2000년 자료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이 이용이 많다는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본 분석에서 이러한 유의성이 없어졌고, 학원은 고소득 위주의 이용으로 나타났었으나 이러한 유의성이 없어졌다. 이는 보육시설이나 학원 이용이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보편적 이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모의 학력 변수는 대졸 이상이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다. 2000년 분석과 비교하여 학원은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선교원은 유의성이 없어졌다. 부의 학력 대졸 이상은 학원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모의 취업변수는 본 분석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원을 덜 이용하고 선교원을 더 이용한다는 2000년 자료 분석의 유의성을 나타나지 않았다.

4. 미취학 아동 보육·교육비용

2003년 출산력조사에서는 자녀양육비용을 조사하였다. 동 조사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료 수집이라기보다는 자녀양육비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동 조사상 특성과 한계를 반영하여 서비스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영유아에 소요되는 총 보육·교육비를 살펴보고자 한다.주37)

가. 보육·교육비 지불 여부

먼저 보육과 교육에 비용을 들이는 비용을 지출한다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65,5%이다. 그러나 이는 아동연령별로 차이기 많다. 아동 연령이 많아지면서 증가하고, 특히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연령별로는 0세아 33.4%로부터 연령과 함께 정적인 관계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0세아는 단지 9.6%만이 보육교육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세는 26.5%, 2세아는 53.4%로 증가하면, 3세아가 되면 84.1%로 증가하고 5~6세아는 96%에 이르게 된다.

〈표 11-13〉 연령별 보육·교육비용 지출여부

(단위: %, 명)

연령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전체
지불	9.6	26.5	53.4	84.1	92.5	96.1	96.0	65.5
미지불	90.4	73.5	46.6	15.9	7.5	3.9	4.0	3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60)	(464)	(547)	(579)	(573)	(642)	(151)	(3,416)

아동을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취업여부별로 보육교육비용 지불여부를 보면

주37) 동 조사에서 교육비는 유치원비를 의미하고 보충교육비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 학원 등이 포함된다. 보육료의 경우 교육비로 포함하였음.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교육비와 보충교육비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음.

전체적으로 취업모 자녀가 보유교육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미취업모에 비하여 4.8% 포인트가 높다. 아동을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보면, 영아는 취업모가 미취업모에 비하여 9.4% 포인트가 높고, 유아는 4.9% 포인트가 높다.

〈표 11-14〉 모(母)의 취업여부별 보육·교육비용 지출여부

(단위: %, 명)

연령	영아			유아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지불	28.9	38.3	31.2	90.3	95.2	91.4	64.3	69.7	65.5
미지불	71.1	67.1	68.8	9.7	4.8	8.6	35.7	30.3	3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16)	(355)	(1,471)	(1,510)	(436)	(1,946)	(2,624)	(791)	(3,416)

가구소득별로 보육교육비용 지불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99만원 이하인 가구 중 아동 보육교육비용을 지출한다는 비율은 49.7%로 과반수 정도이지만 250만원 이상은 이 비율이 70% 수준으로 증가한다.

〈표 11-15〉 가구소득별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출여부

(단위: %, 명)

구분	미지불	지불	계 (수)
전체	34.5	65.5	100.0 (143)
0~ 99만원	50.3	49.7	100.0 (287)
100~149만원	46.3	53.7	100.0 (594)
150~199만원	41.1	58.9	100.0 (675)
200~249만원	35.3	64.7	100.0 (526)
250~299만원	30.0	70.0	100.0 (455)
300~349만원	31.6	68.9	100.0 (184)
350~399만원	21.7	78.3	100.0 (274)
400~499만원	26.3	73.7	100.0 (221)
500만원 이상	26.7	73.3	100.0 (3,359)

〈표 11-16〉 가구소득별 영아 및 유아 보육·교육비용 지출여부

(단위: %, 명)

구분	영아			유아		
	미지불	지불	계 (수)	미지불	지불	계 (수)
전체	69.2	30.8	100.0 (1,450)	84	91.6	100.0 (1,913)
0~99만원	88.7	11.3	100.0 (62)	22.0	78.0	100.0 (82)
100~149만원	75.5	24.5	100.0 (143)	17.9	82.1	100.0 (145)
150~199만원	75.0	25.0	100.0 (271)	12.1	87.9	100.0 (323)
200~249만원	68.0	32.0	100.0 (310)	6.1	93.9	100.0 (358)
250~299만원	60.9	39.1	100.0 (230)	6.1	93.9	100.0 (295)
300~349만원	71.3	28.7	100.0 (174)	7.1	92.9	100.0 (281)
350~399만원	67.9	32.1	100.0 (56)	1.7	98.3	100.0 (128)
400~499만원	63.0	37.0	100.0 (108)	2.4	97.6	100.0 (166)
500만원 이상	55.2	44.8	100.0 (87)	8.9	91.1	100.0 (135)

<표 11-16>은 이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영아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11.3%부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하여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은 44.8%가 된다. 유아도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8.0%부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한다. 가구소득 350만원 이상에서 98%까지 높아지고 500만원 이상은 91.1%로 다소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에 따라 아동의 보육교육기회 자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보육·교육비 수준

<표 11-17>은 미취학아동 연령별 총교육비를 나타낸다. 영유아 전체 평균은 12만 5800원으로 조사되었다.[주38] 그러나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교육비용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영아는 0세아 1만 6100원, 2세아 4만 2000원, 2세아가 평균 8만 1300원이다. 유아는 3세아 13만 9300원, 4세아 18만 7700원, 만5세아 21만 1800원, 만6세아 22만 1700원이다.

주38) 이는 2000년 조사자료 분석결과인 13만원(서문희, 2001)보다 다소 낮은 금액임.

〈표 11-17〉 미취학아동 1인당 소요되는 총 보육·교육비

(단위: 천원, 명)

연령	전체			비용지불아동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500
0세아	16.1	72.0	460	167.5	170.7	44	500
1세아	42.0	109.5	463	158.6	164.0	123	940
2세아	81.3	113.8	547	152.6	115.9	292	710
3세아	139.3	100.5	579	165.7	87.4	487	550
4세아	187.7	124.3	573	203.0	116.7	530	820
5세아	211.8	126.0	643	220.5	120.8	617	900
6세아	221.7	142.8	151	231.3	138.0	145	1.060
전체	125.8	133.9	3419	191.8	121.1	2237	1.060
F		208.6			20.8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비용은 차이가 달라진다.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표>를 보면 0세아는 460명 중 10%미만인 44명만이 비용을 지불하지만 만 6세아는 151명 중 145명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이 지불하는 비용은 월 평균은 19만 1800원이고 아동연령별로는 0세아 16만 7500원, 1세아 15만 8600원, 만2세아 15만 2600원, 3세아 16만 5700원, 만4세아 20만 300원, 5세아 22만원, 만6세아 23만 1300원의 순으로 연령이 많아지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진다.

또한 표준 편차나 최대값을 보면 아동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0세아도 최대는 50만원, 1세아 최대 94만원 등이다.

<표 11-18>은 아동연령별로 구분하여 취업여부별로 보육교육비용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연령별 보육교육비용 차이를 비교해 보면 취업모는 아동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한 보육비용을 부담함을 나타냈다. 반면에 미취업모의 자녀는 아동연령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보육·교육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보육교육비용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현상이다(서문희, 2001).

각 세별로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모 자녀가 미취업모 자녀

보다 많은 보육교육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0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한편으로 보유교육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영아는 미취업모에 비하여 취업모가 많은 보육교육비용을 지불하지만, 유아는 비용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영아는 유의하지만 유아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영아는 보육교육 비용 지출여부나 지출할 경우 비용의 수준이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유아는 보육·교육비용을 발생여부는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일단 비용을 발생하게 되면 그 수준을 유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18〉 모(母) 취업여부별 연령별 월 총 보육·교육비

(단위: 천원, 명)

연령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전체
전체아동								
전체	16.2	420	82.8	139.3	187.7	211.0	221.6	125.6
미취업	14.6	316	74.4	118.9	168.5	191.0	198.6	113.5
취업	21.0	713	103.2	177.4	258.9	275.5	320.7	165.8
(수)	(460)	(463)	(547)	(579)	(573)	(610)	(151)	(3,416)
t	.2	12.1**	6.4*	23.6**	52.8**	58.4**	18.9**	64.8**

〈표 11-18〉 계속

연령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전체
비용지불아동								
전체	167.4	158.6	152.6	165.7	203.0	220.4	231.2	191.8
미취업	99.6	102.8	116.5	155.8	201.7	224.0	236.7	176.7
취업	240.7	262.7	211.8	183.4	205.4	215.5	223.7	238.1
(수)	(44)	(123)	(292)	(487)	(530)	(617)	(145)	(2,337)
t	8.8**	33.6**	54.9**	11.6**	.12	.75	.31	112.1**

주: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표 11-19>는 가구소득별로 보육교육비용 수준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증가한다. 99만원 이하인 가구 영아는 평균 1만원 수준이지만 400만원 이상은 8만원 이상이 되고, 유아는 각각 12만원, 26만원 수준이 된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보

아도 마찬가지이다. 99만원 이하인 가구 영아는 10만원 미만이지만 400만원 이상은 20만원 이상이 되고, 유아는 각각 16만원, 29만원 수준이 된다. 영아의 경우 이 두 가지 통계의 차이가 큰 것은 미지불 아동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11-19〉 소득수준별 아동구분별 월 총 보육·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아동			비용지불아동		
	전체	영아	유아	전체	영아	유아
전체	125.0	81.3	183.5	190.6	155.0	200.2
0~99만원	74.5	11.1	124.4	152.5	96.9	158.7
100~149만원	70.0	29.8	109.7	130.7	122.3	133.2
150~199만원	90.9	24.0	147.2	154.3	98.3	167.4
200~249만원	112.2	38.5	177.9	173.3	120.7	187.3
250~299만원	132.0	63.8	185.0	188.6	162.3	199.2
300~349만원	143.7	52.6	200.2	210.0	182.9	215.2
350~399만원	178.8	60.0	230.0	228.2	187.7	233.9
400~499만원	168.8	81.3	225.7	228.7	221.1	230.6
500만원 이상	205.1	110.2	266.3	280.5	246.2	291.6
(수)	(3359)	(1448)	(1,911)	(2,198)	(446)	(1752)
f	36.2**	10.4**	29.1**	31.0**	7.5**	25.6**

주: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다. 보육·교육비 및 비율

비용을 지불한다는 경우는 그 비용이 아동에 드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가구소득 대비 비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영유아에게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대한 비율을 보면 평균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비율은 아동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비율도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0세아는 33.4%이고 영아인 만2세까지는 50%미만인데 유아가 되면서 50%를 넘게 된다. 취학연령이 가까워지면서 취학 준비를 위한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교육비가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4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아동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비율도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표 11-20〉 아동연령별 1인당 소요되는 보육·교육비 비율

(단위: %, 명)

연령	총 소요비용 대비 비율			가구수입 대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아	33.4	24.8	43	5.8	5.6	43
1세아	36.2	20.9	121	6.1	5.5	117
2세아	45.1	19.2	288	6.0	5.0	284
3세아	50.0	15.9	481	7.1	7.8	478
4세아	55.0	14.4	528	8.5	6.8	514
5세아	57.2	14.5	610	9.7	10.8	603
6세아	58.3	13.4	143	8.9	4.6	142
전체	52.0	21.5	2172	8.0	8.0	2180

이러한 비율을 모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아동에 들어가는 총비용 대비 비율은 영유아 전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세까지는 취업모의 아동의 비용이 더 많은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1-21 참조).

다음으로 교육비가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미취업모는 8.3%, 취업모는 7.4%로 나타났다. 비용을 취업모 자녀가 다소 많지만 소득대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유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영아에게 까지만 유의한데, 그 방향성이 전체 통계와는 달리 취업모 자녀의 비율이 7-8%로 미취업모의 자녀 비율 3-5% 보다 높다. 그러나 영아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겠다.

〈표 11-21〉 모(母) 취업여부별 아동의 월 보육·교육비 비율

(단위: %, 명)

연령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6세아	전체
총 비용대비								
전체	33.3	36.2	45.0	50.0	55.0	572	58.3	52.0
미취업	23.0	30.9	40.0	48.1	54.0	579	59.2	51.6
취업	45.1	46.2	53.4	53.1	56.3	564	57.1	53.2
(수)	(43)	(121)	(288)	(481)	(528)	(610)	(145)	(2,215)
t	10.5**	16.9**	37.1**	11.2**	2.5	1.6	.8	3.4
소득대비								
전체	5.8	6.1	6.1	7.1	8.4	9.7	8.9	8.0
미취업	3.6	4.8	5.4	7.3	8.5	10.3	9.1	8.3
취업	8.1	8.5	7.3	6.7	8.3	9.0	8.7	7.4
(수)	(43)	(117)	(284)	(478)	(514)	(603)	(142)	(2,180)
t	7.8**	13.4**	10.5**	.7	.1	2.1	.3	4.7*

주: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가구소득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 비용 대비 비율이나 가구소득대비 비율 모두, 영아나 유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전체 아동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보육교육비용의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경향이고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한데, 유아보다는 영아에게서 그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반대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낮아진다. 특히 99만원 이하는 소득대비 약 32%를 보육·교육비용으로 지출하고[주39] 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4.6% 수준으로 낮아진다. 영아는 99만원 이하는 12%로 소득수준에 따라 점차 낮아져서 4%까지 낮아진다. 유아는 가구소득 99만원 이하는 31.9%이고 500만원 이상은 4.7%이다. 유아의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이나 소득계층별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99만원 이하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이 높은 것은 유아의 보편화된 특기교육 등 교육과 이에 따른 일정 규모의 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11-22 참조).

주39) 2000년 출산력자료 분석에서는 22%로 산출되었음.

〈표 11-22〉 월 보육·교육비 비율

(단위: 천원, 명)

구분	전체 비용대비 비율			가구소득대비 비율		
	전체	영아	유아	전체	영아	유아
전체	52.0	41.7	54.7	8.0	6.1	8.6
0~99만원	51.4	37.3	53.0	30.2	12.0	31.9
100~149만원	47.6	39.9	49.8	10.8	10.3	10.9
150~199만원	49.8	37.3	52.8	9.2	5.8	10.0
200~249만원	51.7	38.0	55.9	8.2	5.7	8.9
250~299만원	51.9	42.8	55.0	7.2	6.3	7.6
300~349만원	53.1	45.0	54.7	6.7	6.0	6.9
350~399만원	55.8	40.4	58.0	6.3	5.1	6.4
400~499만원	53.9	43.9	56.3	5.4	5.2	5.4
500만원 이상	54.4	52.9	54.9	4.6	4.0	4.7
(수)	(2,191)	(440)	(1,736)	(2,180)	(444)	(1,737)
f	3.7**	2.5**	3.5**	79.4**	5.1**	73.5**

주: *는 p<.05, **는 p<.01을 의미함.

제 4 절 논의 및 시사점

본 장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육·교육서비스 중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모 및 아동의 특성요인들의 규명하고,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규모와 총 양육비 및 가구소득 대비 비중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특정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변수별로 요약 및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유형은 2000년 자료분석과 비교하여 보육시설 이용에서 가구유형은 유의성이 없어졌는데 이는 외가 등 별거하는 조부모로부터의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가구소득은 유아의 경우 유치원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2000년 자료나 2003년 자료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은 2000년 자료 분석에서는 저소득층이 이용이 많다는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본 분석에서 이러한 유의성이 없어졌고, 학원은 고소득 위주의 이용한다는 유의성

도 없어졌다. 이는 보육시설이나 학원 이용이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보편적 이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비혈연에 의한 양육지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야 가능하다. 영아를 중심으로 비혈연에 의한 보육욕구가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정책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모의 취업은 영아보육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유아는 모의 취업변수는 본 분석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은 유아의 경우 모의 학력 변수는 대졸 이상이 유치원과 학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고, 부의 학력 대졸 이상은 학원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나 학력 등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차별적 이용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대안이 있는 3세 이상아의 경우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용 결정요인이 서로 상이하며 상호 대체관계임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상호 교육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차별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아직은 일정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취업모에게 있어서 보육시설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외에 아동연령이 높아지면서 보육시설 이용은 증가하고, 비혈연에 의한 보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 일반주택 거주가 보육시설과 친인척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동 지역에서는 친인척 이용이 높았다.

한편 비용은 가구소득수준별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가구소득에 따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영아는 99만원 이하 11.3%부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하여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은 44.8%가 된다. 유아도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이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78.0%부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증가한다. 가구소득 350만원 이상에서 98%까지 높아지고 500만원 이상은 91.1%로 다소 낮아진다.

또한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 규모는 평균 가구소득의 약 8%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아동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담하는 비

용도 많아지는 경향이다. 비용규모도 역시 가구소득에 따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반대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낮아진다. 특히 99만원 이하는 소득대비 30%를 보육·교육비용으로 지출하고 500만원이 넘으면 4.6% 수준으로 낮아진다. 영아의 경우 99만원 이하는 12%로 소득수준에 따라 점차 낮아져 4%까지 내려왔으며, 유아의 경우 99만원 이하는 31.9%이었고 500만원 이상은 4.7%이었다. 이러한 소득수준별 차이는 보육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에 따라 아동의 보육교육기회 자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회만이 아니라 보육교육내용에서도 차이가 남을 의미한다.

〔제4부 결론부〕

제1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제13장 결론

제 1 2 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제 1 절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전망

1. 가치관 변화전망

인구전환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치관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혼인가치관, 자녀가치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가치관, 가족부양을 포함한 가족가치관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치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산업화 이후 한국인의 가치관은 엄청난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인구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한국가족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장의 제1절에서는 제2장에서 제11장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치관 및 가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전망해 본다. 이는 본 장의 제2절에서 다루게 되는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전망'에 따른 대응방안을과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인구전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혼인가치관은 지금까지의 변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가치관의 변화가 지속되어 초혼연령은 계속 상승될 것이고, 이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은 현재 수준보다 현저히 확산될 것이며, 그리고 재혼에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긍정적 가치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자녀가치관은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선호가치관은 현재의 수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녀가치관의 약화는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며,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예외가 되지 못하여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가치관 약화의 수준이 시대에 따라 다소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자녀가치관은 향후에도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 수준은 과거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책임의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어 실제 자녀양육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부담은 자녀가치관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양성평등가치관의 확산으로 남아선호가치관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출생순위가 높은 자녀층에서의 성비불균형은 현재 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남아선호가치관은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부관계, 자녀관 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물론 연령, 교육수준, 양성평등의식 등은 시대흐름에 따라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남아선호는 약화될 것이나 저출산의 심각성이 지대한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부부 및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남아선호가치관의 불식은 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다.

셋째,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모두 취업에 대한 가치관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의 지속적 향상,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 자녀교육

비의 증대, 가구경제측면에서의 필요성, 가족생활의 질 향상 욕구 등으로 인하여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여성취업은 미혼과 기혼을 불문하고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미혼여성의 취업증대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는 소자녀관 형성과 관련성이 높다.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인구전환기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족 변화전망

한국가족은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며, 후기산업사회인 현재도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변화의 지속을 계속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러하듯이 가족변화는 경제수준,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가족복지정책의 양적 및 질적 수준 등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가족관련 가치관과 높은 상관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전술한 바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변화양상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라 하였기 때문에 한국가족의 변화도 지금까지의 변화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의 변화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미혼남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새로운 가족형성이 감소될 것이며, 반대로 미혼가정은 증대될 것이다.

이는 가치관 변화에서 기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가족형성에 요구되는 결혼기 미혼남녀의 직장안정, 적정 경제력 유지, 주거안정 등이 불안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저출산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미혼율의 증대, 초혼연령의 상승'임을 감안할 때 강력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혼가정이 증대되어 미성년자녀 양육문제, 가족기능 약화로 연결되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혼'을 장려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문제시(問題視)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혼가정이 가족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기능이 약화된 이혼가정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하면서도 다양화(多樣化)로 인하여 발생된 '기능약화 가정(機能弱化 家庭)'을 치유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가정의 경제적 약화, 자녀양육의 약화, 이혼가정 가족원의 심리적, 정신적 불안정 등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가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점진적 약화로 가족구조는 다양하게 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질(質)은 가족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구총소득이 낮은 경우,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낮았는데, 이는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공유시간, 가구경제수준, 가족주기 단계, 부부 성생활, 문화생활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었다. 특히, 노인가족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부부관계,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신체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낮았고,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기타 가족'은 농촌지역 거주, 부인연령이 높은 층, 남편 교육수준이 낮은 층,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였다.

그런데 인구전환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가족의 증가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며,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전망되므로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제거를 위한 노력이 가족형태에 따라 달리 접근됨으로써 가족관계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형태에 따라 매우 상이하였으며,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특성을 적극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만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의식주 수준을 비롯하여 건강수준, 가족간의 대화 및 친밀도, 가족원간의 갈등문제 해결,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과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부인의 취업상태, 남편 연령, 경제수준, 정서적 부양 상태, 가족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맞벌이 가족이 증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 가족문화가 잔존하고 있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서 오는 맞벌이 여성의 어려움은 그들과 가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인부부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부부관계, 문화 및 여가생활, 노인수발 보호 등이었고,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기타 가족'은 가족 건강수준을 비롯하여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중요한 것들의 성취도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그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제 2 절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1. 가족형성의 지원정책 강화

가족형성은 결혼을 의미한다. 인구전환기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의 중요성은 서구사회와는 달리 여전히 결혼제도를 통하여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모든 미혼남녀가 직업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결혼생활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취업의 기회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결혼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적극적 홍보·계몽 등의 시민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생활에 요구되는 주거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혼부부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의 기회가 보다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 미혼남녀의 결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주택, 주거복지서비스의 지원과 모기지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족형태를 불문한 가족기능 강화정책

향후 다양한 가족은 더욱 확산될 것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가족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약화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이혼의 증가와 함께 발생되는 이혼가족의 생활안정과 가족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이 갖는 특수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부모 가족에 대한 효과적, 효율적, 포괄적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이혼가정이 미성년자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자녀가 경험하는 교육 및 심리·정서적 발달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지재정의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모자가정 가구주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취업중인 모자가정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과 다양한 시간제 보육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자녀학습, 가사, 가족원 수발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혼가족의 가족생활과 구성원간의 상호 적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혼의 증가와 재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라 재혼가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재혼가족원의 가족생활 및 구성원간의 적응과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한 재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는 재혼가정의 부부와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전환기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될 노인가족의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가족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지원, 가족관계 증진, 건강보장 서비스 및 '건강한 삶' 교육, 노후 '행복한 삶' 교육, 통합적 여가문화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의

건강수준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즉, 건강한 노인을 위한 정책과 건강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정책이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가족을 위하여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며, 노인수발을 위하여 가정봉사원, 가사도우미 등의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내의 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며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가족 부양기능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거나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한다.

노인부양에 따르는 지출에 대한 세액소득공제제도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간병수당제도의 도입, 또는 금융 및 주택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들이 각종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부담이나 노령화에 따르는 의료서비스의 요구 증가는 부양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인부양 가족에 대하여 노인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제도의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부양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정보를 노인부양 가족원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과 정보제공서비스는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가족들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발전 장애요인 제거 방안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자아욕구 충족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족과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즉,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더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를 개선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결혼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장단점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결혼이 여성에게 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유익한 점을 주지만, 서구에서는 결혼의 유익한 점이 남녀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결혼이 여성에게 기피요인이 될 가능성이 서구사회보다 많으며, 이는 가정생활의 돌봄 노동과 가사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취업의 중단을 최소화 하고, 출산 후 재취업의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분만휴가,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양성평등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가족형태 및 혼인형태를 불문한 아동양육의 책임성 강화 방안

자녀가치관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으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녀양육에의 책임이 결코 가족만의 부담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형태 및 혼인형태를 불문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및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자녀양육은 부 또는 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한다.

모든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 시간과 경제력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실시하면서 지원대상을 중산·서민층까지 확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토록 한다. 아울러 공급이 미흡한 농촌과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특수보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학습의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취학자녀들이 방과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에 근거함과 동시에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서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방안에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인프라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따라서 전체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아동대상의 보호, 오락, 체육활동 지원, 학습지도, 생활적응지도 및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며,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부모-자녀관계와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이 있다. 재정절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임을 조직하고 부모모임 등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아~대학생까지 소요되는 전체 자녀양육비용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아동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자녀양육비는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유아 보육에 국한된 사회적 지원을 아동의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아

울러 자녀양육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재정의 과중한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세부담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및 부대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대학수학의 기회를 확대하여 빈곤의 세대전이를 차단한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질적 교육급여 지급을 교육비는 물론 학교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서비, 필기도구비, 과제물비 등이 포함된 수준으로 현실화하여야 하며, 용돈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성적 우수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대학진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는 재가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시설아동(보육원,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5.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방안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양성평등 및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으로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부부관계모형, 부모-자녀관계 모형 등 '적정 가족모형'을 제시하고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등을 실시한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과거의 수직적, 소유적, 종

속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인격적, 독립적 관계의 정착을 위한 가족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부부와 성인 자녀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3세대 간의 가족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가족원간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전통적 사고방식과 전통적 행위를 지양하고,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과 지위 등이 새롭게 정립되고, 배우자간 의사소통과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부교육이나 상담 등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이 지역사회내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혼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의 기술과 방식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노인부부,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을 활성화한다.

셋째, 기혼여성의 취업증대에 따른 가족내 여성역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 임신·출산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care services)를 대폭 확충한다.

기혼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및 가구경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증대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를 고려하여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돌봄 서비스를 사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한다. 특히, 임산부 및 출산여성과 노부모의 보호수발 및 부양 부담 등이 원활할 때 가능하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영유아 및 아동의 방과후 학습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여 주 담당자였던 여성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6. 가족친화적·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향후 나타날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회와 국민 개개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이는 가족친화적이고 양육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즉, 직장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근로자가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모두 중요시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조성되고 기업내규가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취업자들이, 남녀의 구별 없이 "직장의 노예"가 되어 취업과 자녀 양육 중 한 가지만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취업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휴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임신·출산과 관련 있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다.

인구전환에 따라 향후 한국사회는 여성의 인적자본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능력 있는 여성이 사회경제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성보호정책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모성보호정책은 보육정책과 함께 여성근로자의 자녀양육은 물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이다. 자녀출산에 따른 모성을 보호하고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모성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개별가족의 일로 간주되었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기능수행을 사회적 기능으로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3b).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시간 자율운영, 재택근무제도,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 등은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모성보호정책은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 가족형성, 자녀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우선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체 학교 및 사회 교육과정과 정보매체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그 대상이 전 국민이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교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 세대 젊은이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과 정보매체에서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극복을 위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한다.

서구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더군다나 어느 사회에서 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전환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이는 결혼·임신·출산을 결정하는 당사자는 개인 또는 개별부부이고 그들 자신의 몫이며, 사적(私的)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참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이다.

제 13 장 결 론

인구전환과 가족환경의 변화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변동과 함께 인구관련 사건들(events)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어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최근 사회문제도 대두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국민 개개인과 개별가족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큼 그 위력이 커지고 있음은 비단 인구전환기의 말미에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가치관의 변화는 단기간에 발생되는 것이 아닌 바, 이는 수많은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방향성을 전환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음에서 알 수 있다. 가치관 변화는 다른 영향요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족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인구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지속적 가치관 변화와 급격한 사회변동에의 적응을 위한 가족의 체질강화를 유도하고, 가족친화적 복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더군다나 과도한 복지재정지출은 국민의 세(稅) 부담을 과도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 효율적 가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족과 사회'가 분담하는 형태의 국가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의 기능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구현'은 복지재정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보선,「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고황경 외,『한국 농촌 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3.

공세권 외,『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권복순,「소외청소년을 위한 학교 재적응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권태환 외,「출산력변천의 과정과 의미」,『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권태환·김두섭,『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권태환 외,『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1995.

김두섭,「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지역별 격차」, 권태환 등,『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pp. 127-154, 일신사, 1997.

김두헌,『한국 가족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김명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제28권 3호, 1982.

김민자·김승권,「출산수준 결정요인의 분석 및 정책 방안」, 김승권 외.『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pp. 147-16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승권 외,『가족실태조사 척도개발 및 예비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김승권,「한국의 자녀양육 실태와 바람직한 정책지원 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창립세미나 자료집, 2005. 11.

김승권 외,『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a.

김승권 외,『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b.

김승권 외,『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a.

김승권 외,『가정복지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b.

김승권 외,『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김승권 외,『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김승권 외,『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a.

김승권 외,『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b.

김승권,「이상자녀수」,『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용역보고서, 2005a.

김승권,「자녀의 가치」,『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용역보고서, 2005b.

김승권,「우리나라 부인의 피임실패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논집』, 제12권 1호, pp. 119-44, 보건사회연구원, 1992.

김승권,「출산력 저하와 가족정책의 방향」,『보건복지포럼』, 제10호 pp. 20-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승권·곽혜경,「미혼남녀의 결혼 및 가족 가치관 실태와 과제」, 김승권 외,『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pp. 168-20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일현 외,「남아선호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 분석」,『보건사회논집』, 제10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김태헌,「저출산 수준과 강한 남아 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한국인구학』, 제16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3.

김태헌,「인구전망과 사회적 영향」,『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김태헌,「차별출산력의 변동과 그 요인」,『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김태헌,「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인구학』, 제16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3.
김태헌·이삼식,『출산력 저하의 원인-출산행태와 출산력 차이』,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김한곤,『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김한곤·이미경,「대구지역 경산부의 남아 선호의식 및 아들 낳기 노력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한국인구학』,제22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9.
김현지·주경미,「출산정책: 장래와 억제를 넘어서」,『현상과 인식』, 제28권 제3호 가을호, pp. 31-4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4.
문숙재·김재경,「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2.
변화순 외,「혼인상태」,『한국의 인구』, pp. 219-245, 통계청, 2003.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 2001.
보건복지부,『보육통계』, 2001. 3.
서문희 외,『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서문희,「보육비용 및 비용분담의 현황과 과제」,『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서문희 외,『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자격관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손현숙,「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의사결정 공동참여가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1.
여성부,『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2003.
여성한국사회연구회,『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1995.

윤주애, 「재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권 제 6호, pp. 105-139, 한국사회학회, 2003.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3호, 대한가정학회, 1984.

이기영 외,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3호, pp. 113-126, 대한가정학회, 1995.

이삼식,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일치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논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이성용, 「남아선호와 출산력간의 관계」, 『한구인구학』, 제26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3.

이시백, 「최근의 인구 및 출산력 동향과 국가사회발전」, 『보건학논집』, 제3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이시백, 「인구정책 전환기의 인구학적 취약 요인분석」, 『보건학논집』, 제3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4.

이연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와 가정 및 직장의 양립 방안」 pp. 250-291, 김승권 등,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03.

이용복·이소희,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제2호, pp. 95-113, 학국가족복지학회, 2005.

이종숙, 「확대기 가정의 가정생활만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임정빈, 「가치성행,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임정빈·고보선,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2.

장윤희,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1.
장현섭 외,『가족영역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전광희,「출산력 변화의 메커니즘」, 권태환 등,『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pp. 57-98, 일신사, 1997.
전광희,「출산력」, 김두섭·은기수·박상태(편),『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조남훈 외,『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조남훈 외,『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조남훈 외,『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조남훈,『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조남훈·서문희,『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조미환,「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조혜자·방희정,「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0권 제1호, pp. 95-112, 한국심리학회, 2005.
천혜정,「둘째자녀 출산희망에 대한 배우자 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분석」,『한국가정관리학지』, 제23권 제3호, pp. 25-33, 한국가정관리학회, 2005.
최경석 외,『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3.
최재석,『현대 가족 연구』, 일지사, 1985.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80~2000.
_____,『한국의 사회지표』, 1980~2000.
_____,『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_____, http://kosis.nso.go.kr/
_____,『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_____,『인구동태통계연보』, 1980~2000.
홍문식 외,『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홍문식,『저출산 시대의 인구문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홍성희,「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제2호, 대한가정학회, 1996, pp.71～84.

Andrews, F. M. & Withey, S. B.,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C.V. Mosby, 1974.

Arnold. Fred, "Measuring the Effect of Sex Preference on Fertility: the case of Korea", *Demography*, Vol.22, No.2, 1985, pp.280～288.

Atkinson A., "Rural and Urban Families's use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Vol.43, No.1, 1994, pp.16～22.

Baldwin, A.L., "Socialization &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Vol.19, 1948, pp.127～136.

Barro, Robert J. and Gary S. Becker, "Fertility Choice in a Model of Economic Growth", *Econometrica*, Vol.57, 1989, pp.481～501.

Beck. Urlich, *World Risk Society, Malden Mass: Polity Press*, 1999.

Becker, Gary S. & Robert J. Barro, "A Reformul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3, No.1, 1988, pp.1～25.

Becker, Gary S., Robert J. Barro & Tamura, "Human Capital,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 No.5, 1990, pp.12～37.

Becker, Gary S.,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pp. 209-231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d.), *Demograph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Berhhardt, Eva., "Is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Useful Concept for Demography?", pp.25～28 in Vienna Yearbook for Population Research. Vienna, Austria: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2004.

Boldrin, Michele and Larry E. Jones, "Mortality, Fertility and Savings Decision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Vol.5, 2002, pp.775～814.

Bongaarts, John & Robert Potter, Jr.,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Bowlby, J.,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39, 1958, pp.350～373.

Brewster, K. L. and Ronald Rindfuss, "Fertility and woma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5, 2000, pp.271～296.

Brown-Lyons, M., A. Ribertson & J. Layzer, "Kin and Kith-Informal Child Care: Highlights from Recent Research,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 2001.

Bumpass, Larry L., "What's Happening to the Family? - Interactions between Demographic and Institutional Changes", *Demography*, Vol.27, No.4, 1992, pp.483～498.

Bumpass, Larry L. and Minja Kim Choe.,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Family Life", pp. 19-38,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Burr, Wesley 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A 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2, No.1, 1978.

Burr, Wesley R, G. K. Leigh, R. D. Day, & J. Constantine,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Ⅱ, Ed Burr, W. R., Hill, R., Ney, F. I., & Reiss, E. L.,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Butler, J., N. Brigham & S. Schultheiss, "No Place like home: a Study of subsidized in-home and relatives child day care", Philadelphia, PA: Rosenblum and Associates, 1991.

Caldwell, J. C., *The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Campbell, T., "Environmental dilemmas and the urban poor", Leonard, H. J.(ed), *Environment and the Poor: Development Strategies for a Common Agenda*, Washington, 1989.

Campell, A., P. E. Converse, & W. L. Rod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m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76.

Casper, L. M., "What does it cost to mind our preschooler", U.S. Bureau of Census, *Current Population Survey Report*, No.52, 1995.

Chesnais, J. C.,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the European Union (EU-15): Facts and Policies, 1960～1997",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Vol.7, pp.83～101, Tokyo, Japan: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1998.

Chesnais, J. C., "Population History and Policy in France",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Koreana Hotel, Seoul, December 15～16, Hos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Affairs, 2005.

Chesnais, J. C.,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2, No.4, 1996, pp.729～739.

Cho, Nam-Hoon and Hyun-Oak Kim, An Overview of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A Summary Explanation.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2.

Cho, Nam-Hoon, and Lee Sam-Sik,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policy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to Issues of Ageing and Welfare, pp.144～268. Seoul, Korea: The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Korea, 2000.

Choe, Minja Kim and Kyung-Ae Park,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Forty Years of Policy-Behavior Dialogue", Paper presented at the XXV IUSSP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July 18～23, Tours, France, 2005.

Choe, Minja Kim, Consequences of Fertility Decline in The Republic of Korea: Policy Implication, East-West Center, United States of America, 1998.

Clarke-Stewart & Fein, "Early Childhoods Programs", P. M.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1, No.4, 1983.

Coleman, David, "Reproduction and survival in an unknown world: that drives

today's industrial populations and to what future?", *NIDI Hofstee Lecture Series*, No.5,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The Hague, 1998.

Coombs, L. C., "Prospective Fertility and Underlying Preference: A Longitudinal Study in Taiwan", *Population Studies*, Vol.32, 1979, pp.447~455.

D'Addio and Mira d'Ercole, forthcoming,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Paris. OECD, DELSA/ELSA/PG (2004) /REV2,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2005. 1.

D'Addio, A. and d'Ercote, Marco,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The Policy of Policy",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Koreana Hotel, Seoul, December 15~16, 2005. Hos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Affairs, 2005.

Das, N., "Sex Preference and Fertility Behavior: A Study of Recent Indian Data", *Demography* Vol.24, 1987, pp.517~530.

Davis, K.,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Vol.29, No.4, 1963, pp.345~366.

Elmen A.,C, P.E. Koren & K. H. Schultze, "From a Parent's Point of View: Mesyr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Final Report", Regional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rvices, Portland States Univ., 1999.

Esping-Andersen, "Welfare states without work: the impasse of labour shedding and familialism in Continental European social policy", pp.66~87 in G. Esping-Andersen,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National Adaptations in Global Economie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Esterbrooks M.E & Lamb, M.E.,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infant-mother attatchment and infant comprtence in initial encounters with peers", *Child Development*, Vol.50, 1984, pp.380~387.

Eun, Ki-Soo, "Understanding Recent Fertility Decline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Vol.1, Tokyo, Japan: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Folbre, Nancy,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New York: Routledge, 2004

Golini, Antonio,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 in some developed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Population), Vol.1, Tokyo, Japan: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Hayes, M. O. & N. Stinnett,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3, No.9, 1971.

Hoem, B. and J. M. Hoem, "The impact of women's employment on second and third births in Sweden", *Population Studies*, Vol.43, 1989, pp.47～67.

Hofferth, W. B., Kisker, E., et al., *The Demand and Supply of Child Care in 1990*, NAEYC, 1991.

Ihinger-allman & Pasley, K. M(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 Guilford, 1987.

Iwasa, Miho, "On the Contribution of the Changes in First Marriage Behavior and Married Women's Reproductive Behavior to the Recent Decline in TFR of Japan" Joint Eurostat-UNECE Work Session on Demographic Projections, Vienna, September 21～23, 2005.

Jun, Kwang-Hee, "The Transition to Sub-Replacement Fertility in South Korea: Implication and Prospects for Population Policy", *Journal of Population* Vol.3, No.1, pp.26～67, Tokyo, Japan: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5.

Kaneko, Ryichi, "Cohort Processes to the Lowest Fertility in Japan: Application of An Empirically Adjusted Coale-McNeil to the Estimation and Projection of Lifetime Measures of First Marriage and Birth", Joint Eurostat-UNECE Work Session on Demographic Projections, Vienna, September 21～23, 2005.

Kohler, Hans-Peter, Franscesco C. Billari and Jose Antonio Ortega,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8, 2002, pp.641～680.

Kwon, Tai-Hwan,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Korea's Demographic Transition", pp.1～26 in R. Repetto et al.(eds.),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Kwon, Tai-Hwan, "Exploring socio-cultural explanations of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pp.41～53, R. Leete and I. Alam (eds.), The Revolution in Asian Fertility, Oxford: Clarenden Press, 1993.

Kwon, Tai-Hwan,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nd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pp.39～64, A. Mason (ed.)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s in East Asia, East-West Center Occasional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123, Honolulu: East-West Center, 2001.

Lesthaeghe, Ron and Chris Wilson, "Modes of Production, Secularization, and the Pace of Fertility Decline in Western Europe, 1870～1930", pp.261～292 in A. J. Coale and S. C. Watkins (eds.), The Decline in Fertility in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Lesthaeghe, Ron,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An Explanation of Underlying Dim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 1983, pp.411～435.

Liberman, A.,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 Relation with attatchment and peer experence", Child Development, Vol.48, 1977, pp.1277～1287.

Main, M. & Cassidy, J., "Categories to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one mi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4, 1988, pp.415～426.

McDonald, Peter, "Gender Equal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6, No.3, 2000, pp.427～440.

McDonald, Peter, "Sustaining Fertility through Pubic Policy: the Range of Options", Population (English Edition), Vol.57, No.3, 2002, pp.417～446.

McDonald, Peter, "Theory pertaining to low fertility",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March 21～23, 2001.

Medley, M. L., "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 Sixty-Five Years and Olders", Journal of Gerontology, Vol.31, 1975.

Morgan, G.,K. Elliot, C. Beautte &S. Azer, "Non-Licensed Forms of Child Care in HOmes: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State Support", 2001, URL: http://ww.nccic.org/pubs/nonlic-wheelock.hyml.

NICHD, "Poverty and Patterns of Child Care", G. J. Duncan & J. B. Gunn Ed, Consequences of Growinh Up Poor, Russel Asge Foundation, 1997.

Ortega, Jose and Hans Peter Kohler, "Measuring Low Fertility: Rethinking Demographic Methods", MPIDR Working Paper WP 2002-2001, Max Plan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2002.

Orthner, D.K.,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37, 1975, pp.91～102.

Park, Chai Bin, "The Fourth Korea Child: The Effect of Son Preference on Subsequent Fertilit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Vol.10, 1978, pp.95～106.

Piecyk, J. B., A. Collins & J.L. Kreader, "Patterns and Growth of Child Care Voucher Use by Fanmilies Connected to Cash Assistance in Illinois and Maryland",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Columbia Univ., 1999.

Pollard June, "Ideology, Social Policy and Home-Based Child Care", Proceedings from the Child Care Policy and Research Symposium Occasional Paper No.2, Edited by Irene Kyle, Martha Friendly and Lori Schmidt, 1991.

Porter, T., Neiborhood, Neighborhood Child Care: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Talk about Caring for Other People's Children, Bank Street Colege of Education, NY, 1998.

Rahman, M. and J. Da Vanzo, "Gender Preference and Birth Spacing in Matlab, Bangladesh", Demography, Vol.30, 1993, pp.315～332.

Rallu, Jean-Louis and Toulemon, "Period Fertility Measures: The Construction of Different Indices and their Applications in France(1946-1989)", Population (An English Selection), Vol.6, 1994, pp.59～93.

Repetto, R. G., "Son Preference and Fertility Behavior in Developing Countries",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70, No.4, 1972, pp.70～76.

Rindfuss, Ronald R.,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134～143, N. O. Tsuya and L. L. Bumpass (eds.),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Ryder, Norman B., "Components of Temporal Variations in American Fertility" in *Demographic Patterns in Developed Countries*, Vol. 19, edited by Robert W. Hiorns, Symposia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Human Biology, London: Taylor and Francis, 1980.

Sheps, M. C., "Effect of Family Size and Sex Ratio of Preference Regarding the Sex of Children", Population Studies, Vol.17, 1963.

Sleebos,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2003.

Swedish Institute, "Childcare in Sweden", 2001.

Tsuya, Noriko O. and Minja Kim Choe, "Investments in Children's Education, Desired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pp.76～94,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Tsuya, Noriko O., Karen Oppenheim Mason, and Larry L. Bumpass, "Views of Marriage among Never-Married Young Adul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Van de Kaa, Dirk J., "The Idea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okyo, Japan: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Yount, K. M., R. Langsten, and K. Hill, "The Effect of Gender Preference on

Contraceptive Use and Fertility in Rural Egypt",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31, 2000, pp.290～300.

URL: http://www.si.se/eng/esverige/childcare.html

연구보고서 2005-12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The Age of Demographic Transition: Social Values, Changes in the Family, and Policy Implications

발행일 2005년 12월 일 값 12,000원
저 자 김 승 권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53-4 93330